

2014.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및 실행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 기 도

제 출 문

경기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성 주 인 연구위원
연구 원: 송 미 령 연구위원
 심 재 현 부연구위원
 권 인 혜 연구원
 정 문 수 연구원
 류 경 선 연구원

차 례

제1장 개요

1. 계획의 개요 · 3
2. 마을만들기 방향과 계획 목표 · 7
3. 계획의 방법 · 11

제2장 경기도 마을의 여건

1. 경기도 마을의 여건 · 15
2. 경기도 주민의 마을만들기 인식 · 25

제3장 국내의 마을만들기 동향

1.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 39
2. 광역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 68

제4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실태와 과제

1. 경기도 시·군의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 · 107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 126
3. 마을만들기 여건 및 역량 진단 · 141

제5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방향

1.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접근법 · 163
2.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과제 · 169
3. 추진 전략 · 171

제6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세부추진계획

1.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 183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추진 · 192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 199
4. 마을만들기 연관 사업의 융복합 연계 · 지원 · 202

제7장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방안

1.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운영 · 209
2. 마을만들기 상시 지원체계 구축 · 215
3. 마을만들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 224
4. 경기도 마을만들기 5개년 계획 추진 로드맵 · 228

제8장

정책 제언 · 233

부록1

경기도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1. 도시 지역(동 단위)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 241
2. 농촌 지역(읍·면 단위)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 245

부록2

경기도 사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표 · 248

부록3

경기도 주민 조사 결과 · 253

부록4

경기도 사군 공무원 조사 결과 · 259

부록5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

1. 생활환경과 장소 개선 · 268
2. 사회복지 확충 · 278
3. 소득경제 활성화 · 284
4. 마을 문화 창출 · 294

참고문헌 _____ 303

표 차 례

제2장

표 2-1. 전국 및 비수도권(광역시 제외)과 비교한 경기도 인구 특성	17
표 2-2. 전국 및 비수도권(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과 비교한 경기도 주택 특성	21
표 2-3. 농가 및 마을 단위 경제활동 참여 비율	22
표 2-4. 농어촌 마을의 경관 관리 실태에 대한 주민 인식	24
표 2-5. 주민조사 대상 지역	25
표 2-6.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27
표 2-7.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	28
표 2-8.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지도	28
표 2-9.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에 대한 인지도	29
표 2-10.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30
표 2-11. 마을만들기 예산 확대에 대한 의견	31
표 2-12. 마을만들기 참여 의향	32
표 2-13. 마을만들기를 통한 개선 과제(순위)	32

제3장

표 3-1. 지역공동체 유형별 사업 정의	43
표 3-2.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세부사업	48
표 3-3.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주요 내용	57
표 3-4.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59
표 3-5. 정부 부처별 정책의 목표와 특성	66
표 3-6.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체계	71
표 3-7.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발전 단계별 지원 구상	73
표 3-8.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75
표 3-9.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76
표 3-10. 인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내용	79
표 3-11. 충남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 계획	85
표 3-12.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 연도별 지원비 현황	97
표 3-13. 경기도의 기초생활권 유형별 시·군	102
표 3-14. 마을만들기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103

제4장

표 4-1.	경기도 시·군의 마을만들기 조례	107
표 4-2.	경기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2013년 현재)	109
표 4-3.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직체계	114
표 4-4.	안산시 지원센터 개최 마을포럼	117
표 4-5.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2013년)	121
표 4-6.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2013년)	122
표 4-7.	이천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2013년)	123
표 4-8.	시·군 자체적 마을만들기 사업/정책 여부 및 향후 지원확대 계획	124
표 4-9.	시·군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125
표 4-10.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126
표 4-11.	경기도 도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128
표 4-1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및 사업 내용	128
표 4-13.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융합 가능한 사업 현황	129
표 4-14.	경기도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31
표 4-15.	시범사업 종료 이후 시·군의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의향	138
표 4-16.	경기도 도시와 농촌 마을 DB의 세부 지표	146
표 4-17.	경기도 마을 진단 기준	158

제5장

표 5-1.	참여 의향 수준별 마을만들기를 통한 개선 과제(1순위)	173
표 5-2.	마을만들기 참여 주민의 범위	175
표 5-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광역단위의 역할	178
표 5-4.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필요성과 적합한 공간 단위	179

제6장

표 6-1.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절차	191
표 6-2.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분야 예시	193
표 6-3.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현황	203
표 6-4.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현황	204

제7장

표 7-1.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역할	212
--------	--------------------	-----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 1. 계획의 내용과 절차	12
---------------------	----

제2장

그림 2- 1. 인구 규모에 따른 경기도 시·군 분포	16
그림 2- 2. 시·군별 타 지역 출생 및 이주 인구 비율	18
그림 2- 3. 귀농·귀촌 가구의 시·도별 구성비(2012년)	18
그림 2- 4.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19
그림 2- 5. 부문별 자수감 상위 50위 시·군의 분포 현황	20
그림 2- 6. 경기도 농촌 경관의 문제 사례	23

제3장

그림 3- 1. 지역공동체정책의 중앙 단위 추진체계	40
그림 3- 2. 마을기업의 선정절차	46
그림 3-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절차	52
그림 3- 4. 사업 추진 유형 개편	53
그림 3- 5.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54
그림 3- 6.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실행 체계	56
그림 3- 7. 국토부의 도시재생 추진 협력체계	61
그림 3- 8.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비전	72
그림 3- 9.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89
그림 3-10. 전라남도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비전, 목표	92
그림 3-11. 제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비전	94
그림 3-12. 제주도 마을만들기 행정추진체계	96

제4장

그림 4- 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주요 활동	111
그림 4- 2. 공모사업 운영체계	112
그림 4- 3. 마을르네상스 소식지	112

그림 4- 4. 안산시 마을만들기의 행정-주민-지원센터 관계	114
그림 4- 5. 안산시 지원센터가 매개하는 지역거버넌스	115
그림 4- 6. 안산시 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116
그림 4- 7. 경기도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절차	131
그림 4- 8. 시범사업 대상마을 사업구역	132
그림 4- 9.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이후 지역의 변화	137
그림 4-10. 마을만들기 초기의 마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단계 모식도	141
그림 4-11. 경기도 마을 DB의 내용 구성	143
그림 4-12. 광주광역시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 사례	147
그림 4-13. 미국 Maryland, Howard County의 온라인 정보 제공	148
그림 4-14. 도시와 농촌 마을의 인구변화율 현황	149
그림 4-15. 도시와 농촌 마을의 고령화 현황	149
그림 4-16. 도시와 농촌 마을의 인구 천 명당 미취학 어린이 수	150
그림 4-17. 도시 마을의 경제 수준	151
그림 4-18. 농촌 마을의 경제 수준	152
그림 4-19. 도시와 농촌 마을의 주거 환경 비교	153
그림 4-20. 도시와 농촌 마을의 대중교통 접근성	153
그림 4-21. 도시와 농촌 마을의 생활 서비스 수준	154
그림 4-22. 도시 마을의 공원녹지 비율	155
그림 4-23. 농촌 마을의 의료시설 접근성	155
그림 4-24. 도시 마을 역량 수준	156
그림 4-25. 농촌 마을 역량 수준	156

제5장

그림 5- 1. 마을공동체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적 지원 개념	177
------------------------------------	-----

제6장

그림 6- 1. 거주 마을에서 추진한 권역사업 인지도	184
그림 6- 2. 역량 강화 활동의 유형	185

그림 6- 3. 시·군 마을만들기의 주민교육체계	189
그림 6- 4.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들	194
그림 6- 5. 농촌 체험마을 평가 결과 변화	202
그림 6- 6.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통한 융복합 사업 지원 결정 절차	205

제7장

그림 7- 1.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위상과 기능	210
그림 7- 2.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조직체계	213
그림 7- 3. 마을 DB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과정	221
그림 7- 4. 주민참여형 마을 정보 시스템 포털의 개념도	222
그림 7- 5. 진안군의 민관협력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225
그림 7- 6.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 로드맵	230

제8장

그림 8- 1.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체계(안)	234
그림 8- 2. 지역활동가 그룹 파트너십 사례(EU 리더프로그램)	236

개요 1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계획의 개요
2. 마을만들기 방향과 계획 목표
3. 계획의 방법

제1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1.

1.1.

□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증대

-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도하는 마을만들기가 지역사회를 개선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차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 마을만들기는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가운데 행정과 기업, 시민사회운동, 풀뿌리주민조직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더불어 협력하여 마을을 개선하는 활동이다.
 - 마을만들기가 지역 문제에 대응하여 사회와 경제, 문화 여건과 정주·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 대규모 도시·지역개발사업이나 행정 주도의 공공사업은 일상 생활공간에서 미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며, 지역공동체와 사회조직을 해체하는 상황까지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의 의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다.

□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발한 반면 지역별 편차가 큰 편

- 경기도는 수원시와 안산시의 여러 마을에서 이미 마을만들기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등 다른 시·도에 비해 주민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경험을 축적한 곳이 많다.
- 그러나 경기도 내 시·군별로 마을만들기 활동의 편차가 큰 편이다. 상당수 지역은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온 경험이 부족하며, 주민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관심 또한 높지 않은 실정이다.

□ 행정의 마을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둔 마을은 소수

- 농촌의 각종 체험마을 대상지로 선정된 곳에 예산이 투입되고 관련 사업이 진행되어 우수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마을들이 상당수 있다.
 - 정부 예산이 투입된 시설을 마을 차원에서 운영할 역량을 갖추지 못해 당초의 마을사업이 소수 주민들의 개별 활동으로 축소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 우수마을로 평가받더라도 예산이 계속 지원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해가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 주민이 스스로 역량을 높이기보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여 사업을 집행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그간 관행이었다.
 - 마을사업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할이 제한적이며 참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일부 리더 중심으로 일련의 사업이 진행되는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다.
- 결과적으로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인적 기반이 우수하고 주민 활력이 높은 편이지만, 지자체가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와 체계가 정비되지 못했다.
 - 마을공동체가 보유한 인적역량과 마을 자산은 풍부하지만, 지자체가 전반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 향후 마을만들기에 대한 광역 차원의 조정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

- 마을만들기를 정책화하고자 여러 중앙부처들도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이다.
 -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마을만들기와 공동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을 내놓고 있다.
- 부처별 마을만들기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광역 지자체의 총괄·조정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일선 지자체의 혼선을 줄이고 연계와 통합을 이루어 사업 효과를 높이는 작업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실제 이런 배경에서 서울, 부산, 전북, 충북, 충남 등 상당수 광역 자치단체들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등 관련 시책을 확대하고 있다.

- 경기도의 경우 타 시·도에 비할 때 시·군별로 마을만들기 추진 기반이 상이하여 기초 지자체 단위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도록 도 차원에서 역할을 발휘할 필요성이 특별히 높다.
 - 도시 또는 농어촌 등 비교적 균질적인 성격의 지역들로 이루어진 타 시·도에 비할 때 경기도는 다양한 지자체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시·군마다 마을만들기 역량 편차가 매우 커서, 도 차원에서 후발 시·군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 아울러 경기도가 고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이 공존하는 복합적 지역임을 감안하여 경기도 고유의 마을만들기 지원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 2013년부터 본격 추진하기 시작한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기계획이 필요
 - 도시와 농어촌 마을들이 안고 있는 현안들에 대응하고자 경기도에서는 마을만들기를 광역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12년 8월)하고 개정('13년 8월)하였다.
 - 마을만들기 전담팀을 지정하였으며,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주요한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하게 되었다.
 - 2013년에는 도시형(맞춤형 정비사업)과 농촌형으로 구분하여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융복합 지원체계를 갖추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 시범사업 추진 경험 등을 바탕으로 향후 마을만들기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조례에서 규정한 대로 향후 5년간 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마을만들기 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에 반영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만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지원 방안을 도출해야 하며,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과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에 대한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로서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 * 여러 사업 부서들과 지자체, 민간 부문 등을 연계하고 통합·조정을 이루는 기구로서 위원회 위상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 기존에 각종 마을개발사업을 시행한 지구들 중 상당수가 지속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경기도 차원에서 함께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여러 사업 부서들 간에 협력과 업무 연계를 통해 찾아야 할 과제이다.

- 도 차원의 체계적 마을공동체 지원 방안을 제도로 정립하는 것도 지원계획 수립 시 다루어야 할 사항이다.

1.2.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경기도가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수립된다.
- 지원계획의 목적은 2013년 시작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경험 등에 바탕을 두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경기도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마을만들기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지원계획은 경기도만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한 마을만들기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여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 데 초점을 둔다.

[참고]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내용: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7조

제7조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 방향
2. 시·군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원 계획
3. 민·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1.

□ 마을의 개념

- 마을은 주민이 얼굴을 맞대고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경제·문화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교차하는 장소이다.
- 마을은 대개 행정구역별로 구분된다고 인식되었으나, 실제로 이웃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교류하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공간적 영역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전통적인 자연마을과 행정 읍면동을 넘나들며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될 수 있다.

□ 마을만들기의 개념과 접근 방식

- 마을만들기는 주민들이 생활공간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고 마을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다.
 - 지역 쇠퇴와 경제 침체, 열악한 생활환경, 마을 문화와 정체성의 혼란, 공동체적 삶과 관계의 약화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 차원에서 직시하고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이다.
- 마을만들기는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면서, 행정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협력하는 관계적 활동이다.
 - 마을 대표나 소수 주민들이 주도하고 일반 주민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주민들 누구나 함께 하는 통합적인 활동을 지향한다.
- 마을만들기 활동은 다양한 입장과 견해들이 논의되고 수용되는 개방적 과정을 지향한다.
 - 주민들이 친밀한 관계와 신뢰, 규범을 자율적으로 형성하고, 공동체를 통해 호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제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마을만들기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마을 주민들이면 누구나 차이를 두거나 배제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마을의 사회적 관계를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노력도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다.

- 마을만들기는 정해진 결론이 없는 열린 과정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필요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자원들을 찾아서 마을의 발전 방향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활동을 추진하는 것을 지향한다.
- 이상을 종합하면 마을만들기 활동 과정에서 추구할 가치들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진다.
 - **[직접민주주의]** 주민 참여와 자치를 바탕으로 하여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 **[합리적 의사소통]** 시민이 공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논의하고 서로의 이견과 갈등을 조율하는 가운데 마을발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합리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경험한다.
 - **[관계망 형성]** 마을살이에 대한 공동협력을 통해 시민이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고 신뢰하며, 배려하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한다.
 - **[역량강화]** 마을의 내생적 자원과 역량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경험과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형성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지향점

- 경기도 마을만들기는 기존에 시행해왔던 마을 단위 사업과는 다른 차별성을 부각하는 데 초점을 둔다.
 - 행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기존의 마을 단위 사업과 대비할 때, 마을만들기의 의의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 따라서 행정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특정한 단위사업 추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발전을 위한 일련의 연쇄적인 활동을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돕는 방법을 모색한다.
- 경기도 마을이 지닌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의 마을공동체가 처한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경기도 마을이 놓인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 및 필요, 마을별 발전 정도를 반영하도록 한다.
 - 특히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경기도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마을 유형별로 차별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 상대적으로 저발전되고 침체된 마을이 스스로 활로를 찾고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 경기도 내 상대적으로 저발전되거나 근린쇠퇴에 직면한 마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마을만들기를 통해 돕는다.
 - 물리적 생활여건과 더불어, 공동체활동, 경제활력 증진에 대한 종합적 상황 이해 및 마을 내생적 역량에 의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원한다.
 - 주민들이 마을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연결하여 마을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 마을만들기 활동이 주민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도록 단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마을의 주민 역량 수준을 반영하여 마을공동체의 고유한 성장 과정에 가장 적절한 지원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경기도 마을별로 지닌 다양한 역량과 자원이 서로 순환되고 교류되도록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한다.
 - 도시와 농촌, 세대와 계층, 마을 간 교류와 협력의 기회가 자율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 마을 단위의 자치와 의사소통 역량을 증진하도록 지원한다.
 - 마을 단위의 참여와 자치 실현을 위한 자율적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여, 마을 내부의 이견과 갈등 상황에 대한 합리적 소통과 토론의 과정이 중시되도록 한다.

2.2.

▣ 경기도 마을만들기 여건 진단

- 경기도 도시와 농어촌 마을에 대한 유형별 실태 분석
- 주민과 공무원 인식 조사를 통한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 수요 파악
 - 경기도 주민과 시군 담당자들의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파악

□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과제 제시

○ 경기도 마을만들기 비전과 전략

- 경기도 정책 여건을 분석하여 경기도의 역할 및 과제 도출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을 통한 비전과 목표, 정책브랜드, 추진전략 제시

※ 경기도 마을만들기에 대해 주민자치조직과 사회단체, 민간기업, 행정 등 다양한 참여자들 간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서, 경기도 공동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

□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한 경기도의 민관협력 방안 제시

○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련된 다양한 참여자들의 책임과 역할

○ 시민사회의 공적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경기도청과 각 시·군 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 경기도 광역 행정의 역할

○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계획적 지원 방안

- 마을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적합한 단계별 지원 방안

- 시민사회와 주민, 행정의 공동협력을 통한 민·관 협력거버넌스 형성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 2013년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방안과 중장기 발전방안

○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설치와 운영

-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역할과 운영·관리 방안

○ 경기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과 공동의 협력

3.

3.1.

□ 관련 데이터 및 통계자료 분석

○ 경기도의 마을 여건 분석 및 마을 DB 구축

- 도시 및 농어촌마을에 대한 각종 통계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기도 전체 마을 여건 분석

□ 설문조사

○ 경기도 주민 및 시·군 공무원 설문조사

-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및 정책 수요

□ 국내·외 사례 조사

○ 마을만들기 추진 사례 수집 및 시사점 도출

- 다양한 현장 사례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 분야 발굴
- 광역 지자체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비교·분석

□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 학계 및 현장의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 인터뷰 및 자문회의 실시

□ 위탁연구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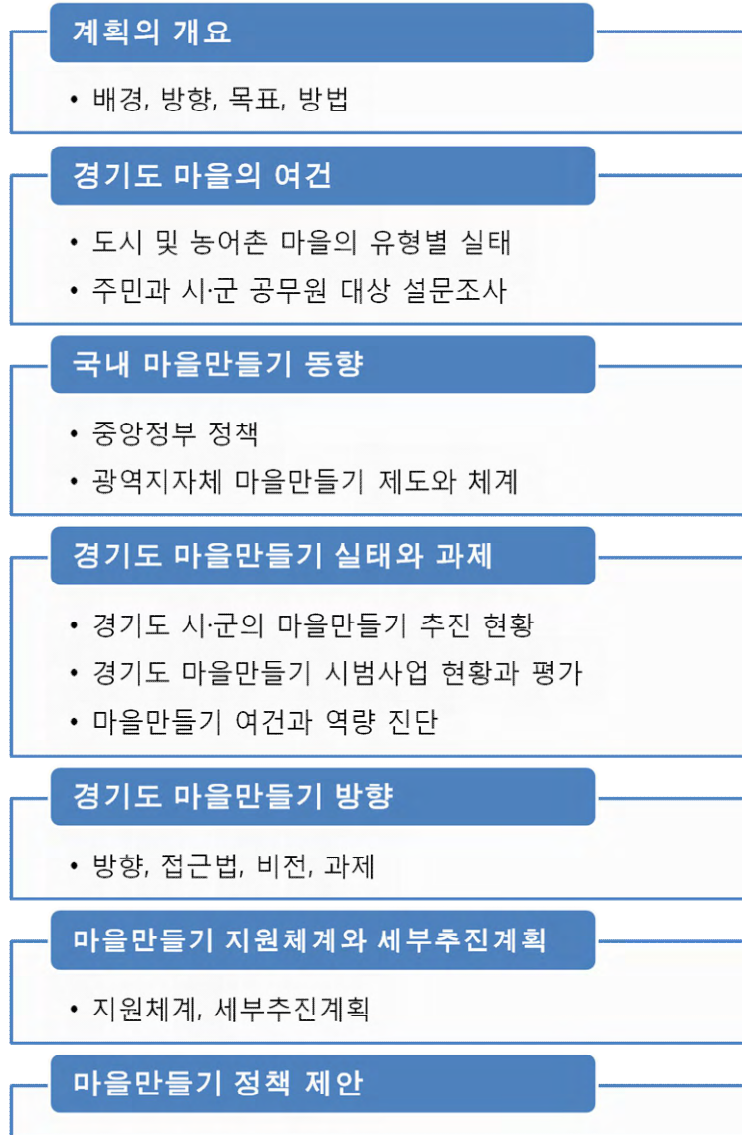
○ ‘경기도 마을만들기 여건진단 및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실태 분석’

- 위탁기관: (사)도시환경연구센터(연구책임: 이상문 교수)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경기도 도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실태 및 개선방안’

- 원고위탁: 김성주(도시·지역재생연구소 소장)

그림 1-1. 계획의 내용과 절차



경기도 마을의 여건 2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경기도 마을의 여건
2. 경기도 주민의 마을만들기 인식

여 백

제2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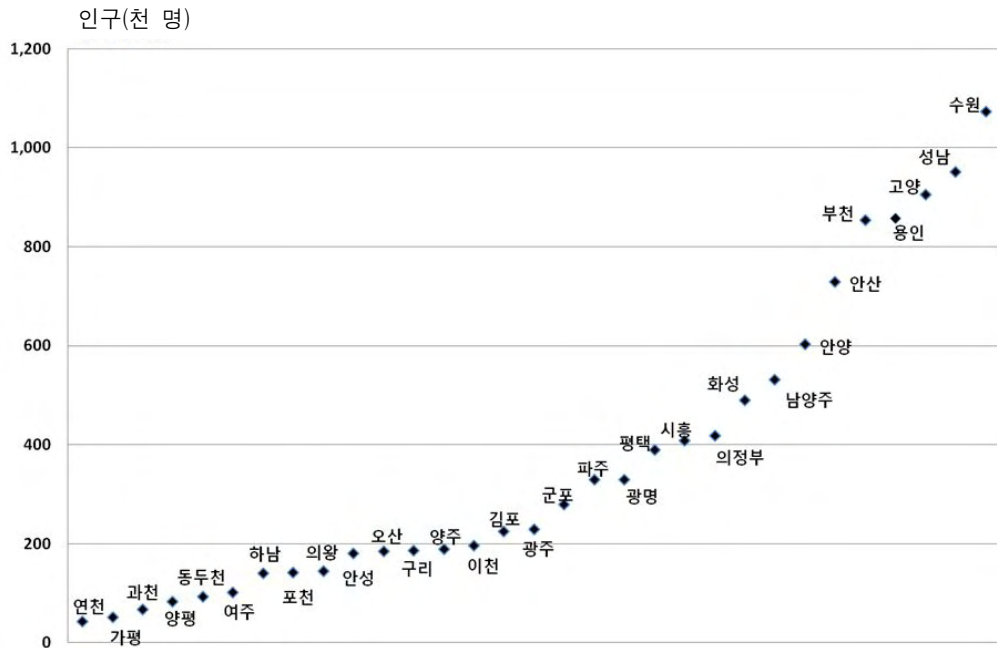
1.

1.1.

□ 개요

- 경기도의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100만 명이며 전국 인구의 23.3%를 차지하고 있다.
 - 경기도의 농촌 지역은 비수도권의 농촌 지역에 보다 젊은 연령층이 많아 활동성이 높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다.
 - * 경기도의 평균 연령은 도시인 동부에서는 전국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농촌지역인 읍부에서 2010년 기준으로 전국 읍부에 비해 평균연령이 2.5세가량 낮은 35.9세, 면부에서는 5세가 낮은 42.6세로 나타났다.
 - * 경기도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9.9%인 데 비해, 비수도권에서는 그 비율이 15.5%이다.
- 경기도에는 다양한 규모의 시·군들이 혼재하며, 그에 따라 마을 특성도 다양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그림 2-1).
 - 인구 100만 명 내외의 대도시급인 수원시, 성남시와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등 거점도시가 다수 존재한다.
 - 동시에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등 농촌 인구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지자체들도 상당수 있다.

그림 2-1. 인구 규모에 따른 경기도 시·군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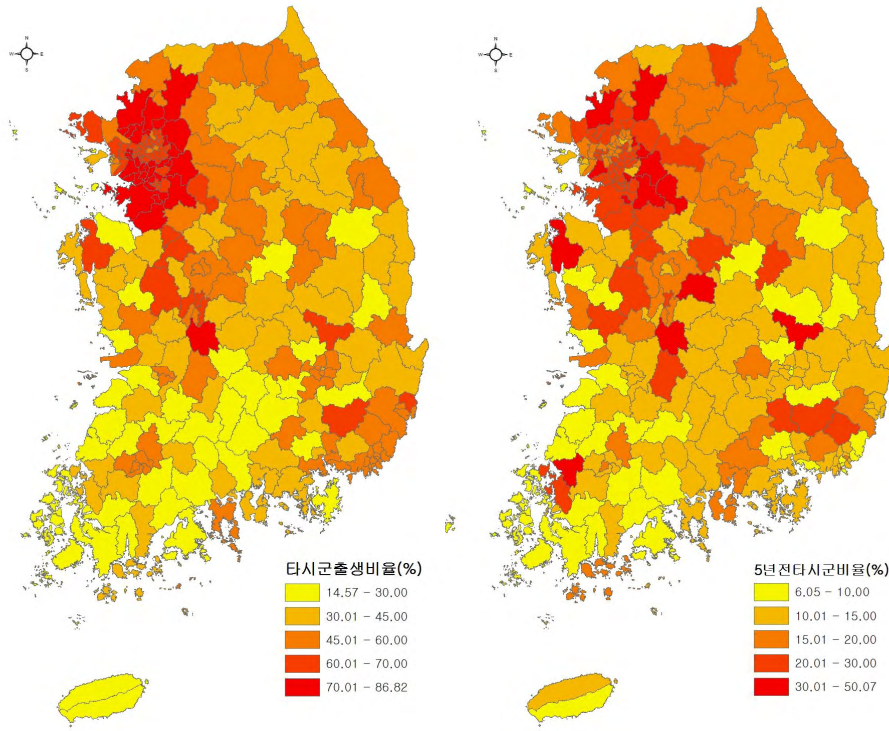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센서스(2010년)를 활용하여 재구성.

- 경기도 시·군들은 타 시·도에 비해 지역 외부로부터의 유입 인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젊은 층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편이다(그림 2-2).
 - 고령화, 과소화가 심화되는 대다수 비수도권 지자체에 비해 젊은 층이 다수 분포하는 등 지역발전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 고학력층, 전문직 종사자 등이 다수 거주하여 지역발전에 활용할 인적 자원도 풍부하다고 평가된다.
- 인구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도의 읍부, 면부, 동부 모두에서 인구가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비수도권은 동부에서는 인구 증가가, 읍부 및 면부에서는 인구 감소가 나타난다. 즉, 비수도권의 농촌은 이촌적 경향이 남아 있으나, 경기도의 농촌은 향촌적 경향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누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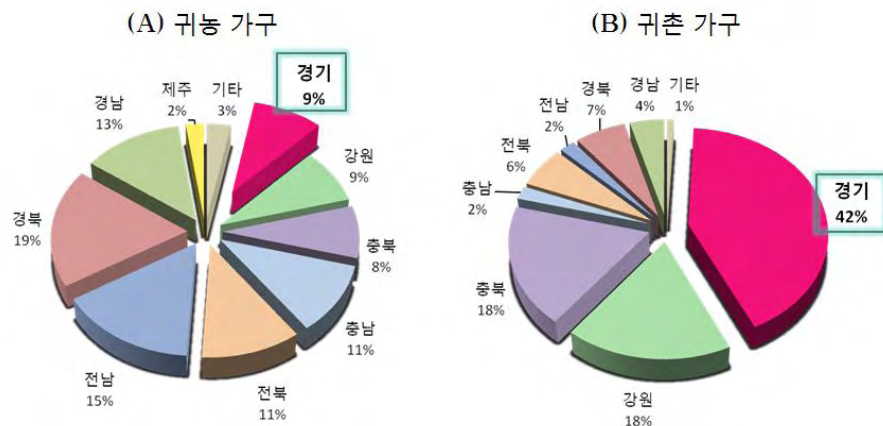
그림 2-2. 시·군별 타 지역 출생 및 이주 인구 비율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 2005, 2010)의 인구이동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

- 경기도의 상당수 농촌 지자체들은 도시민의 전원 거주 목적지로 각광받고 있어 은퇴연령층을 비롯한 유입 인구가 마을에 상당수 거주하고 있다.
-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학력층, 전문직 종사자가 농촌 마을로 이주하고 있는 점이 큰 강점이다.

그림 2-3. 귀농·귀촌 가구의 시·도별 구성비(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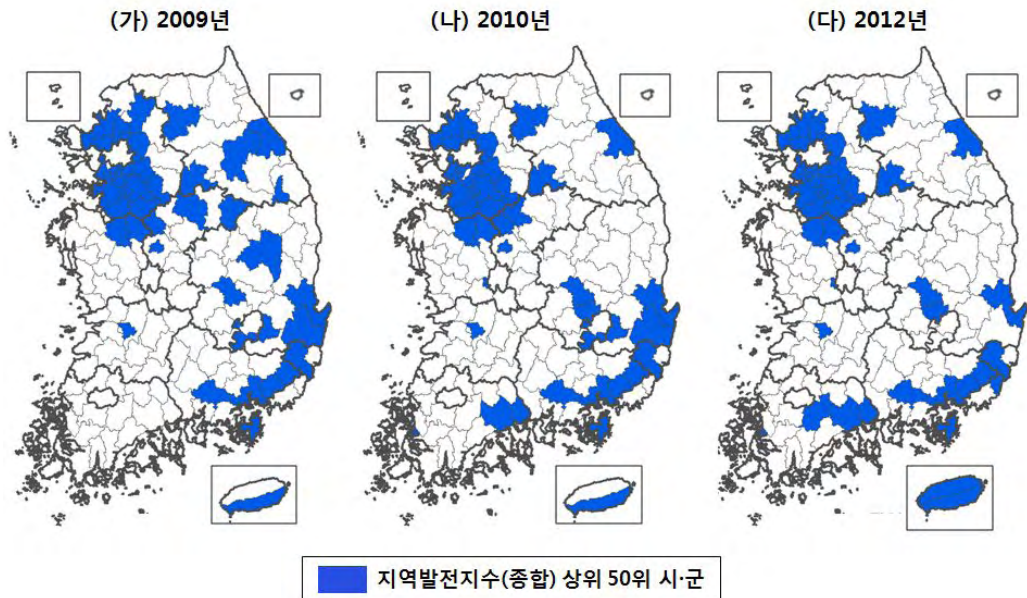


* 자료: 통계청 2012년 귀농·귀촌인 통계 조사 결과 재구성.

1.2.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작업하여 발표한 시·군별 지역발전지수(RDI) 집계 결과를 통해 경기도의 전체적인 발전 수준을 파악하였다.
 - 지역발전지수 집계 결과는 2009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동아일보 기획 기사로 발표된 바 있다(송미령 등 2012).
 - 지역발전지수는 ① 생활서비스, ② 지역경제력, ③ 삶의 여유공간, ④ 주민활력 등 4개 부문의 하위 지수로 구성되며, 20개 세부 변수를 통해 각 부문의 지수값을 도출한 것이다.
 - 종합지수에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한 부문 지수별 가중치가 반영되었다.
- 지역발전지수 상위권(50위권 이내) 시·군의 분포 현황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경기도 시·군의 상당수가 상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 2012년의 경우 상위 50위 지자체에 포함된 경기도 시·군은 절반을 넘는 26개로 집계되어 전반적인 생활 여건이 우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4. 지역발전지수 상위 50위권 시·군의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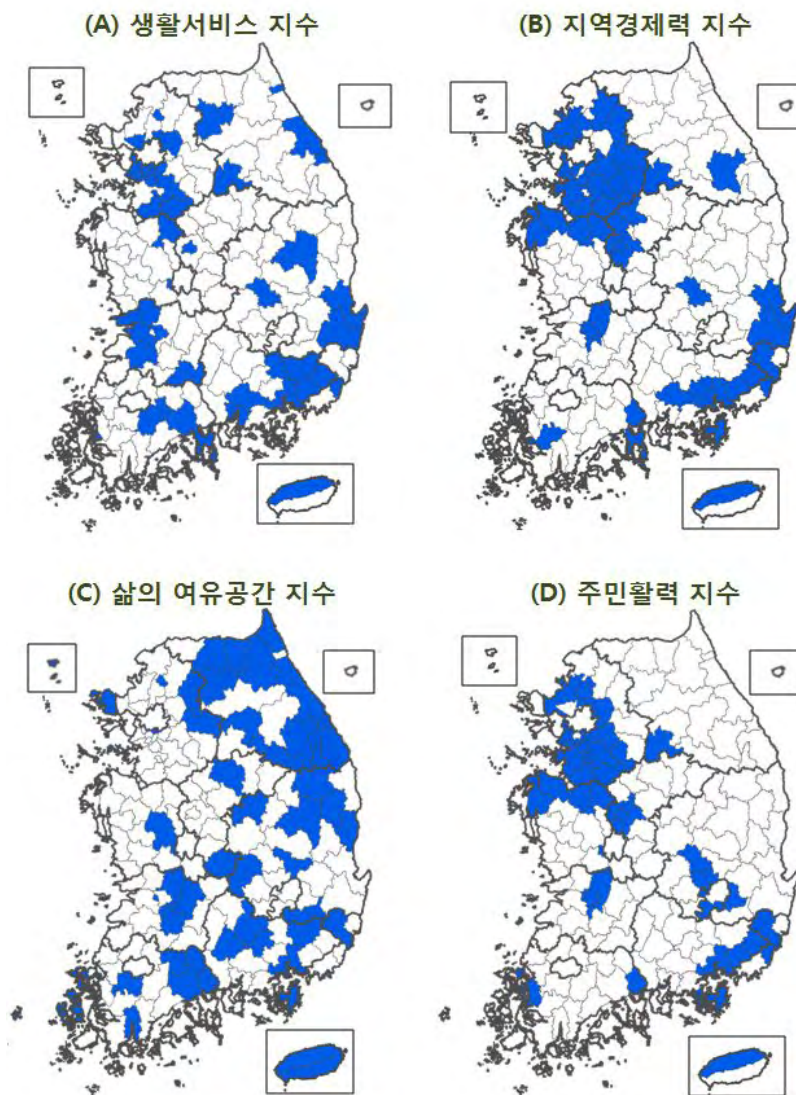


* 자료: 송미령 등(2012).

- 지역발전지수 상위권 시·군을 부문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도 경기도 지자체들은 생활서비스, 지역경제력, 주민활력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여건을 갖춘 것으로 파악된다.
 - 특히 지역경제력 지수 면에서 경기도 시·군의 대다수가 상위권에 분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 반면 삶의 여유 공간 지수에서는 일부 시·군을 제외하고는 상위권에 포함되는 경기도 지자체가 없었다.
 - 삶의 여유공간 지수를 구성하는 지표는 녹색휴양공간, 녹지, 문화·체육시설 등인데, 이러한 측면에서는 경기도 시·군의 대다수가 타 지역에 비해 좋은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 결과적으로 경제 활성화 정도나 주민 활력이 높으나 주민 행복에 기여할 삶의 여유 공간 부문에서는 경기도 지자체들이 해결할 숙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5. 부문별 지수값 상위 50위 시·군의 분포 현황



* 자료: 송미령 등(2012) 집계 결과 인용.

1.3.

□ 전반적인 주거 특성

- 전반적으로 볼 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에서는 아파트의 비중이 높다. 경기도 내에서는 동부와 읍부에서 아파트 비중이 높지만, 면부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다. 경기도의 주택 유형은 다른 지역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표 2-2).
 - 첫째, 경기도의 농촌지역인 읍부와 면부에서 다세대주택의 비율이 2010년 기준으로 비수도권 지역에 비해 약 2.8배에서 9.2배 가량 높다.
 - 둘째, 단독주택 비율이 타 지역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면부에서의 단독주택 비율은 2000년에는 61.3%에서 2010년에는 63.8%로 증가하였다. 면부의 아파트 비율이 비수도권에서는 2배 가량 증가한 반면에, 경기도는 약 1% 정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전국 및 비수도권(특별시·광역시 제외) 지역과 비교한 경기도 주택 특성

단위: %

구분	주택유형	전국			비수도권			경기도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2000	2005	2010
동부	단독주택	25.57	21.35	17.88	30.88	28.17	24.20	16.20	12.96	10.68
	아파트	57.50	61.28	66.55	58.02	62.50	68.38	64.15	68.01	72.58
	연립주택	8.51	4.37	3.75	5.12	3.97	3.16	11.91	4.92	4.28
	다세대주택	5.16	11.48	10.81	1.61	3.19	2.90	5.61	13.17	11.79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3.25	1.51	1.02	4.36	2.16	1.36	2.14	0.95	0.66
읍부	단독주택	49.29	43.21	37.06	56.43	52.15	47.28	28.53	22.99	18.05
	아파트	36.17	45.31	52.77	31.16	38.20	44.06	49.53	60.61	68.27
	연립주택	7.32	5.81	4.96	5.49	4.86	4.74	13.71	9.05	6.23
	다세대주택	1.82	3.48	3.90	1.07	2.32	2.40	4.39	5.93	6.54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5.40	2.19	1.32	5.86	2.47	1.51	3.85	1.41	0.90
면부	단독주택	82.03	82.71	79.07	87.00	85.82	82.30	61.29	66.14	63.79
	아파트	10.51	12.51	16.24	7.65	11.03	14.67	20.69	19.53	21.59
	연립주택	2.58	1.85	1.84	1.18	1.06	1.23	9.68	6.72	5.74
	다세대주택	0.85	1.35	1.51	0.39	0.70	0.66	3.26	5.03	6.4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4.03	1.58	1.34	3.79	1.39	1.14	5.09	2.58	2.42
단독주택	37.13	31.89	27.35	55.16	51.16	45.73	23.79	18.80	15.53	
아파트	47.73	53.04	58.96	35.51	41.43	47.93	56.56	62.87	68.26	
연립주택	7.42	4.16	3.63	3.81	3.20	2.88	11.77	5.53	4.63	
다세대주택	4.13	9.32	8.98	1.08	2.23	2.14	5.15	11.66	10.76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3.58	1.59	1.09	4.43	1.97	1.32	2.72	1.14	0.82	

*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0, 2005, 2010)를 활용하여 재구성.

□ 마을 단위의 집합적 활동

- 농가 경제 활동 다각화를 시도하는 농가 비율이 타 시·도보다 경기도에서 더 높다 (표 2-3).
- 이에 반해 마을(행정리) 단위 도농교류 활동 참여 비율은 타 시·도의 수준보다 낮다.
- 개별 가구 단위 활동은 타 지역보다 활발하지만, 마을 단위의 집합적 활동은 전국 평균 수준 이하로 평가된다.

표 2-3. 농가 및 마을 단위 경제활동 참여 비율

단위: %

구 분	활동 내용	경기도	타 시·도
농가 경제 활동 다각화 현황	■ 농업 관련 사업 경영 농가	16.2	12.0
	- 농축산물 직판장	3.0	2.2
	- 농축산물 직거래	9.9	6.9
	- 식당 경영	1.3	0.7
	- 농축산물 가공업	0.5	0.8
	- 농기계 작업 대행	2.3	2.0
	- 농촌관광사업	0.4	0.4
마을 단위 도농교류 활동 참여 현황	■ 도농교류 활동 행정리	19.2	20.0
	- 자매결연	12.0	12.4
	- 농어촌체험관광	3.8	3.7
	- 농림수산물 직거래	5.3	7.2
	- 농림수산물 직판장	2.0	1.8
	- 음식물 판매 및 숙박 제공	3.5	3.4
	- 주말농원 임대 및 분양	2.3	0.7
- 기타	1.0	0.8	

* 주: 1) 전체 농가 및 행정리 대비 경제 다각화 활동 및 도농교류 활동 참여 비율을 집계
 2) 각 활동별 복수응답으로서 세부 활동별 합계는 전체 참여 비율과 일치하지 않음
 3) 타 시·도는 광역시 소속 군 지역을 제외
 4) 농가단위 자료는 농업총조사, 마을단위 도농교류 활동은 농업총조사 지역조사 활용

□ 난개발로 인한 농촌 특성의 상실

- 도농복합지역이 다수 분포하는 경기도 시·군들에서 근교 지역의 난개발이 심해져 농촌다운 경관 및 자원 훼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2-6).
- 경기도의 도시 근교 및 농촌 지역에서는 공장이나 창고 같은 생산시설이 입지하고, 혼주화가 진행되어 경관이 훼손되는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노후 주택이 방치되는 등 기존 마을이 퇴락하는 가운데 귀촌·귀농 인구들의 유입되고 전원주택지가 분산 개발되면서 조화로운 토지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그림 2-6. 경기도 농촌 경관의 문제 사례



(2000년)

(2011년)

* 자료: 송미령 등(2002) 및 성주인 등(2011) 재구성

- 농식품부의 조사(2011년)에 의하면 타 지역에 비해 경기도에서 농촌 마을의 경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았다(표 2-4).
- 또한 농촌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주민 비율도 높았다.

표 2-4. 농어촌 마을의 경관 관리 실태에 대한 주민 인식

단위: %

구 분		응답자 거주 지역	
		경기도	타 시·도 (대도시 제외)
농어촌 마을의 경관 관리 상태	매우 잘 관리됨	1.8	1.0
	잘 관리되는 편	21.5	29.4
	보통이다	47.4	41.8
	잘 관리되지 않는 편	28.9	26.8
	전혀 관리되지 못함	0.4	1.0
	합 계	100.0	100.0
농어촌 난개발 문제 인식	전혀 문제없다	1.7	0.3
	그다지 큰 문제없다	5.2	9.7
	보통이다	28.8	33.2
	약간 심각하다	44.1	41.6
	매우 심각하다	20.1	15.1
	합 계	100.0	100.0

* 자료: 농식품부, 전국 도시민 및 농어촌 주민 조사(2011)를 활용하여 재구성.

2.

2.1.

- 마을만들기 및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책에 대한 경기도 주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한 항목은 ① 마을만들기 활동 및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 ② 마을만들기(도시)/마을사업(농촌) 참여 경험, ③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④ 거주 마을에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과 개선이 필요한 문제, ⑤ 마을만들기 참여 의향, ⑥ 마을만들기 정책의 예산 지원 방식 및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⑦ 마을만들기의 적정 공간적 범위, ⑧ 거주 지역/마을 특성, ⑨ 응답자 개인 특성 등이다.
- 경기도에 거주하는 30대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029명이 응답했다. 동 지역 응답자는 670명(65%), 읍·면 지역 응답자는 359명(35%)이다(표 2-5).
- 조사는 2013년 8월 24일부터 8월 29일까지 6일간 이루어졌으며, 조사 전문업체를 통한 전화조사(CATI: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했다.
-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 우선 조사 대상 지역을 크게 동 지역(도시)과 읍·면 지역(농촌)으로 구분했다. 동 지역은 마을만들기를 비교적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인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시

표 2-5. 주민조사 대상 지역

구분	해당 지역	응답 수(명)	응답 비율(%)
동 지역 (27개 시)	수원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등 경기도 시의 행정동 지역	670	65.1
읍면 지역 (15개 시·군)	파주시, 포천시, 김포시, 남양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군의 읍·면 지역	359	34.9
전 체		1,029	100

홍시에 대해 도시 규모에 비례하여 400명을 할당했다. 각 도시 내에서도 사업을 추진했던 동에서 더 많은 표본이 추출되도록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 읍·면 지역은 경기 북부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을 50%씩 할당했다.

2.2.

□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육아 및 교육환경 양호’, ‘문화 및 여가환경 양호’, ‘이웃 간 교류와 친목활동 활발’,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등 5가지 항목에 관하여 경기도 주민들이 거주 마을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했다.
- 각 항목에서 도시지역 주민과 농촌지역 주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다(표 2-6). 육아·교육 환경 및 문화·여가 환경의 측면에서는 도시지역 주민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이웃 간 교류와 친목활동,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측면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주민이 도시지역 주민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거주 마을에 대해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조사 대상 중 가장 젊은 연령층인 30대 주민의 긍정적 인식 정도가 항목 거의 모두에서 가장 낮았다.
 - 그 다음으로 젊은 연령층인 40대 주민들의 인식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두 번째로 낮게 나타났다.

표 2-6.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단위: 점

구 분		마을 애정과 자부심	육아 및 교육 환경 양호	문화 및 여가 환경 양호	이웃교류와 친목활동	마을문제 해결 과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
동 지역	30대	3.16	3.16	2.89	2.92	3.15
	40대	3.34	3.34	3.22	2.83	3.25
	50대	3.55	3.74	3.06	2.93	3.44
	60대	3.84	3.78	3.41	3.26	3.28
	70대 이상	4.01	4.07	3.60	3.75	3.91
	소계	3.57	3.63	3.22	3.08	3.42
읍·면 지역	30대	3.35	2.45	2.20	2.65	2.50
	40대	3.60	2.72	2.45	3.26	3.28
	50대	3.46	3.07	2.68	3.20	3.40
	60대	3.80	3.55	2.87	3.31	3.70
	70대 이상	4.05	3.73	3.19	3.60	3.93
	소계	3.73	3.26	2.81	3.33	3.55

* 주: 1) 각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조사
2) 짙은 음영 표시는 점수가 가장 낮은 경우

□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 및 인지도

- 경기도의 도시지역 주민 응답자 대다수인 92.8%가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 간에는 제법 차이가 있었다.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2-7).
-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서 농촌지역 주민의 참여 비율이 높지만, 참여 경험이 없는 농촌 주민이 절반에 가까운 46.0%였다.
 -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는 '모름/무응답' 비율이 31.8%로 상당히 높아,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의 비율도 높지 않았다.
- 도시지역 주민 중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이 있는 주민은 7.0%에 불과하며,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는 22.3%가 참여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주민에게는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2-7.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있다	7.0	22.3
없다	92.8	46.0
모름/무응답	0.1	31.8
전 체	100.0	100.0

- 마을만들기에 대한 경기도 주민의 인지도는 대체로 높지 않은 편이다.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에 도시지역 주민의 78.2%, 농촌지역 주민의 69.1%가 마을만들기를 모른다고 답했다(표 2-8).
 - 마을만들기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대체로 안다’ 및 ‘매우 잘 안다’)은 전체의 약 13%에 불과했다.
 - 특히 절반에 가까운 경기도 주민들은 마을만들기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 주민의 53.7%, 농촌지역 주민의 41.5%가 마을만들기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 도시와 농촌을 비교하면,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농촌지역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인지 비율이 다소 높다.
 - 농촌지역 주민은 13.4%가 대체로 알고 있고, 4.2%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도시지역 주민 중에서 대체로 알고 있다고 한 경우는 9.4%,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경우는 1.5% 정도였다.

표 2-8.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전혀 모른다	53.7	41.5	49.5	부정	75.0
잘 모른다	24.5	27.6	25.6		
보통	10.9	13.4	11.8	보통	11.8
대체로 안다	9.4	13.4	10.8	긍정	13.2
매우 잘 안다	1.5	4.2	2.4		
전 체	100.0	100.0	100.0		

□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에 대한 인지도

-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경기도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에 대해 조사 주민의 83.2%가 부정적(‘전혀 모른다’ 및 ‘잘 모른다’)으로 응답했다(표 2-9).
 - 응답 주민의 57.1%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고, 26.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 도시지역(85.5%)과 농촌지역(79.1%) 모두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모른다는 비율이 농촌지역에 비해 도시지역에서 6.4%p 더 높았다.
 -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도시지역(61.2%)이 농촌지역(49.6%)보다 10.6%p 이상 더 많았다.
- 조사 주민의 10% 정도만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대체로 안다’ 및 ‘매우 잘 안다’). 도시지역(8.5%)에 비해 농촌 지역(13.9%)에서 인지도가 다소 더 높았다.

표 2-9.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에 대한 인지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전혀 모른다	61.2	49.6	57.1	부정	83.2
잘 모른다	24.3	29.5	26.1		
보통	6.0	7.0	6.3	보통	6.3
대체로 안다	7.0	11.1	8.5	긍정	10.4
매우 잘 안다	1.5	2.8	1.9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에 전체 조사 주민의 58.2%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8.2%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표 2-10).
 - 필요하다는 응답 중 36.5%는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21.7%가 강한 필요성

(‘매우 필요’)을 나타냈다.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공통으로 ‘대체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했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두 번째 순위로 ‘보통’(26.9%)이라는 의견이 많은 반면, 농촌지역은 ‘매우 필요’(25.3%)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2-10.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체 (N=1,029)		
전혀 불필요	2.1	1.7	1.9	부정	8.2
대체로 불필요	6.6	5.8	6.3		
보통	26.9	21.4	25.0	보통	25.0
대체로 필요	36.6	36.5	36.5	긍정	58.2
매우 필요	19.7	25.3	21.7		
모름/무응답	8.2	9.2	8.6	모름/무응답	8.6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 예산 확대에 대한 의견

-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을만들기 예산을 더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다른 분야의 지출을 더 줄이더라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 자원과 예산을 더 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근접한 47.5%가 찬성했다(표 2-11).
- 도시지역 주민의 42.5%가 찬성한 반면, 농촌지역 주민은 이보다 많은 수준인 57.4%가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 도시지역의 경우 ‘보통’(34.8%) 의견이 가장 우세했으나, 농촌지역은 ‘대체로 찬성’(39.8%)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도 도시지역이 11.6%인 데 비해, 농촌지역은 17.0%로 5.4%p 더 높았다.
- 농촌지역에서 7.8%의 응답 주민이 마을만들기 예산 확대에 반대한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14.8%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표 2-11. 마을만들기 예산 확대에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매우 반대	3.9	1.4	3.0	부정	12.3
대체로 반대	10.9	6.4	9.3		
보통	34.8	27.6	32.3	보통	32.3
대체로 찬성	30.9	39.8	34.0	긍정	47.5
매우 찬성	11.6	17.0	13.5		
모름/무응답	7.9	7.8	7.9	모름/무응답	7.9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의향

-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의향(‘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와 관련하여 조사 주민의 79.2%가 참여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표 2-12).
 - 경기도 전체적으로 ‘가급적 참여하겠다’(61.5%)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15.0%)거나 ‘기획·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2.7%)는 적극적 수준의 참여 의향은 17.5%였다.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 간에 희망하는 참여 수준은 다소 차이가 났다. 도시지역(64.2%)의 경우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농촌지역(56.5%)보다 8%p 정도 더 많다. 한편,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농촌지역(23.7%)에서 도시지역(10.3%)에 비해 두 배 이상 더 많이 응답되었다.
- 한편 응답자의 17.5%가 ‘관심이 없다’고 답하는 등 적지 않은 수의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 특히 도시지역(18.7%)의 경우 1/5에 가까운 주민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농촌지역은 15.3%였다.
-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들도 소수 있었다. 전체 설문응답자 중 도시지역은 4.2%, 농촌지역은 1.7%가 마을만들기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다.

표 2-12. 마을만들기 참여 의향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이다	4.2	1.7	3.3
관심이 없다	18.7	15.3	17.5
가급적 참여하겠다	64.2	56.5	61.5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0.3	23.7	15.0
기획과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	2.7	2.8	2.7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를 통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

- 마을만들기를 통해 개선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살고 계신 마을에서 다음 중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에 대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상이한 순서로 나타났다(표 2-13).
- 도시지역의 경우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18.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고, 그 다음으로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14.8%),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11.9%),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10.7%) 등이었다.

표 2-13. 마을만들기를 통한 개선 과제(1순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	14.8	18.7	16.1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10.7	14.5	12.1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	18.7	8.9	15.3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	11.9	10.6	11.5
문화, 여가 여건 개선	11.5	12.5	11.9
마을경관과 자연환경 가꾸기	8.8	8.1	8.6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6.0	4.2	5.3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	9.6	9.7	9.6
모름/무응답	8.1	12.8	9.7
전 체	100.0	100.0	100.0

- 농촌지역에서는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18.7%),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14.5%) 등 두 가지가 유사한 비율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여가 여건 개선’(12.5%),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9.7%) 등이었다.
-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는 도시지역(6.0%)과 농촌지역(4.2%)에서 모두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복원과 과제가 주민들에게는 아직까지 그리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 마을만들기의 참여 경험과 정책 인지도는 낮지만, 필요성과 참여 의향은 높은 편

- 분석 결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마을만들기에 참여한 경험이나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상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의 필요성과 참여 의향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점이다.
- 도시지역 주민은 대다수인 92.8%가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이 없었다. 농촌지역 주민의 경우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서는 참여 비율이 높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46.0%의 주민이 참여 경험이 없었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주민의 49.5%는 ‘전혀 모른다’, 25.6%는 ‘잘 모른다’ 등 75.1%가 부정적으로 답했고, 10% 정도만 경기도 지원정책에 대해 알고 있었다(도시 8.5%, 농촌 13.9%).
-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민의 58.2%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 중 36.5%는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21.7%가 강한 필요성(‘매우 필요’)이 있다고 인식하였다.
-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 주민의 79.2%가 참여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 ‘가급적 참여하겠다’(61.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15.0%)거나 ‘기획·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2.7%)는 적극적 수준의 참여 의향은 17.5%였다.
- 특히, 타 분야의 지출을 줄이더라도 마을만들기 예산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 주

민의 절반 정도(47.5%)가 지지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42.5% 주민이 찬성한 반면, 농촌지역 주민은 이보다 높은 57.4%가 찬성했다.

- 도시지역의 경우 ‘보통’(34.8%) 의견이 가장 우세했으나, 농촌지역은 ‘대체로 찬성’(39.8%) 의견이 가장 높았다.

- 상기의 분석 결과를 볼 때 현재까지 경기도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참여 경험이 그리 많지 않고 경기도 정책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마을만들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참여하고 싶은 의향도 제법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적거나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상대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해 보고자 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주민들도 존재한다.

- 마을만들기에 참여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조사 주민의 약 20.8%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17.5%), 오히려 부정적으로 인식(3.3%)하고 있었다.

-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촌지역 주민의 7.8%, 도시지역에서는 주민의 14.8%가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 참여하겠다는 응답자라도 희망하는 참여 수준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가급적 참여하겠다’(61.5%)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15.0%)거나 ‘기획·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2.7%)는 적극적인 수준의 참여 의향은 17.5%로 나타났다.

-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적거나, 심지어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주민들도 결코 적은 비중은 아니다. 이처럼 마을만들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주민들은 마을만들기 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리거나 어렵게 얻은 동력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진다.

- 따라서 다수 주민들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러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새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어도 협조적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서는 마을만들기가 주민 일부가 소속된 특정 그룹이 추진하는 ‘그들만의 리그’로 비춰지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스스로 가꾼다는 마을만들기 방향에 동의하는 주민이라면 배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더 나아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마을’이라는 행정적·물리적 경계를 공고히 하기보다는, 보다 넓은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향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 보다 적극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의 직·간접적 경험과 교육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 마을만들기의 크고 작은 경험 축적과 관련 교육은 ‘가급적 참여하겠다’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참여 의향을 가진 주민들이 보다 적극적 참여자로 스스로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거주 마을에 대한 젊은 층 주민의 인식은 낮은 편, 인식과 행동 변화의 계기 필요
 -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육아 및 교육환경 양호’, ‘문화 및 여가환경 양호’, ‘이웃 간 교류와 친목활동 활발’,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 등의 항목을 통해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을 질문한 결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모두 전체 항목에 대해 30~40대의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 특히 거주 마을에 대한 애착 정도, 이웃 교류와 친목활동 정도, 마을 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정도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 농촌지역 주민이 도시지역에 비해 마을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 이웃 간 교류와 친목활동,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발전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측면에 있어 다소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 경기도는 유입 인구가 많고 젊은 계층이 다수 분포하여 타 지역에 비해 역동성이 크다는 점이 강점이지만, 보다 주도적·활동적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 갈 주체가 될 수 있는 젊은 층 주민들의 마을 인식은 낮은 편이다.
 - 따라서 이들 주민이 좀 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계기를 마련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 마을만들기가 경제적 목적만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복지, 문화예술 등 삶을 이루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유도하고 다양한 수준으로 참여시키면서 주민들의 역할을 확대해갈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각각의 방식과 속도로 전개하는 ‘주민자치’적 접근
 - 도시지역과 읍면 지역 간에도 시급히 필요한 마을만들기 활동 분야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나타났다.

- 도시지역의 경우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18.7%)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혔고, 그 다음으로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14.8%),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11.9%),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10.7%) 등이었다.
 - 농촌지역에서는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18.7%),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14.5%) 등 두 가지가 유사한 비율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응답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문화, 여가 여건 개선’(12.5%),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9.7%) 등이었다.
- 사군, 동, 마을 등 더 작은 공간 단위로 가면 지역에서 필요한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역에 필요한 활동뿐만 아니라, 동원할 수 있는 자원, 가능한 접근 방식 등도 각기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각 지역마다의 사이클(cycle)에 따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모색하고 고안해낸 방식으로 접근될 수밖에 없다.
- 따라서 마을만들기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면서 어떤 경직적 틀을 지우거나 일괄된 방식과 일정을 가지고 사업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마을만들기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자치 역량’을 높여가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 일회적 사업 추진에 그치던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을 추진하면서 지속발전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접근 가능하되 한 걸음 물러서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또한 조사 결과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주민들 모두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에 대해 그다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개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 상황이다.
- 그러나 마을만들기는 단순히 당장 지역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제적 활력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의 주인 의식과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지역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의 기반을 세우는 것이다.
 - 그러한 의미에서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추구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내의 마을만들기 동향

3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
2. 광역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여 백

제 3 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1.

1.1.

□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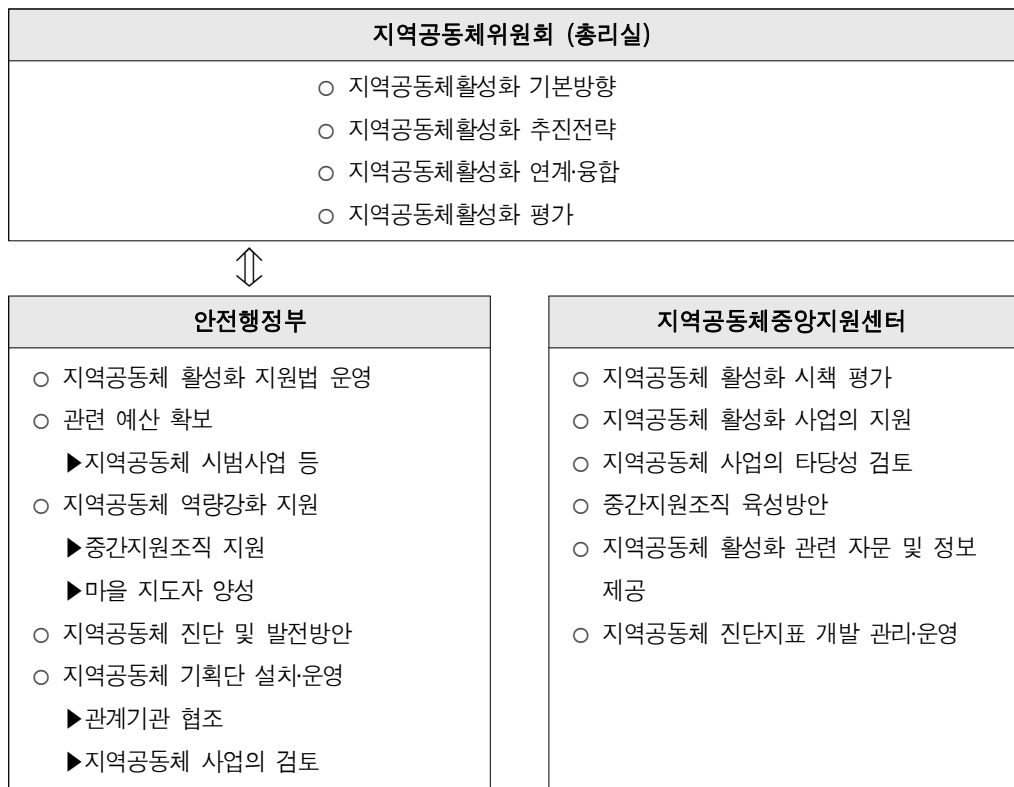
- 주민갈등과 취약계층의 소외, 낙후한 지역경제 등 지역사회에서 제기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주도의 지역발전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민·관협력과 나눔활동,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을 추진한다.
 - 민·관협력: 시민사회와 행정 간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 나눔활동: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나눔과 봉사의 문화를 확산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자원봉사, 재능나눔 활성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읍·면·동 행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여 민·관 협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한다.
-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주요 목표로 지역사회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들고 있다.
 - 지역사회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점간판과 공공화장실, 자전거길 개선을 위한 예산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을협의체 조직과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지역사회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프로 그램을 실행한다.

□ 마을공동체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

- 안전행정부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지역공동체 지원 종합추진체계를 구축한다.
 -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수의 마을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앙 단위에서 관련 부처들이 연계된 지역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공동체중앙지원센터에서 지원 업무를 담당토록 한다.
 - 주민 주도의 마을발전 추진체계를 강화하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제도를 마련한다.
 - 주민참여, 마을규범 수립, 리더 양성, 교육-컨설팅, 회계운영 투명성 등 마을사업 추진 단계별 표준운영방안(연계-융합지침)을 보급한다.

그림 3-1. 지역공동체정책의 중앙 단위 추진체계



* 자료: 안전행정부(2012).

- 마을진단지표를 개발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마을관리와 선정과정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 지역공동체 현황 지표(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표(통리 단위)를 구축하고, 지표 작성은 읍·면·동 사무소가 주관하여 주민 대표를 통해 조사표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1.1.1.

1)

□ 사업의 취지와 목표

- 안전행정부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공동체가 사회 양극화와 지역 위기로 파생되는 사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사회의 범죄와 실업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며, 지역특화상품 및 지역마케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공동체 차원의 생활자치를 확립하여 주민행복을 구현하고 지역사회가 지닌 사회자본이 신국가발전동력으로 창출되도록 지원한다.
- 이 사업은 읍·면·동의 주민자치 정착 및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현황 조사·DB 구축 등 지역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내생적인 성장을 추진하도록 다양한 마을발전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입법 추진

- 2013년 11월 28일 입법 발의된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은 중앙정부가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 법안에 따르면, 지역공동체는 통·리 또는 읍·면·동 단위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법안 제2조),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행위가 금지된다(법안 제5조).
-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공동체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법안 제6조), 5년 단위로 지역공동체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의무(법안 제11조)

1) 안전행정부(2013).

가 있으며, 지역공동체활성화에 관한 심의·점검·평가를 위한 지역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법안 제18조).

- 중간지원조직 설립 및 운영은 안전행정부에 ‘지역공동체중앙지원센터 설치·운영의 의무’(법안 제20조)를 제시하여 국가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설치와 사무위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은 지역지원센터를 설치·지정·위탁이 가능하도록(법안 제21조) 근거를 제시하였다.

□ 사업의 세부 내용

-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되고 있는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을 법적 근거로 하여 지역공동체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 중앙정부의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과가 전담부서가 되어 지역공동체를 지원하는 행정부서 사이에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조례를 제정하거나 정비하도록 제시한다.
-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연구포럼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학계를 비롯하여, 지역사회의 리더와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 지역공동체활동의 참여자들이 함께 협력하여 읍·면·동 주민자치회 정착, 마을발전사업 연계 추진,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 지역공동체의 기초현황 조사와 DB 구축을 통해 마을별로 공동체의 기초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DB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의 맞춤형 활성화 정책 개발에 활용한다.
 - 지역공동체DB를 통해 유형별 공동체 현황 정보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자체와 지역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 지역공동체별로 활동 성과를 공유하여 우수사례가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사례집 발간 등을 추진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혁신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한다.
- 시·도와 시·군에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한다.

- 지역공동체활성화 기금의 설치·운영도 추진하며, 시·군·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지역공동체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유형은 다음 <표 3-1>과 같이 8가지로 구성된다.

표 3-1. 지역공동체 유형별 사업 정의

공동체 유형	주요 활동 및 특징
지역산업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소득 선순환시스템 창출 - 향토산업 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공동체조직을 통해 활동 - 향토자원을 발굴하여 창업, 공동브랜드, 마케팅, 기술개발, 인력개발(교육훈련, 일자리 매칭), 네트워킹 추진
지역교육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주민의 생애경력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 학교교육, 사회교육, 문화·스포츠·취미·여가 자원봉사활동, 기업교육
지역복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공동체관계망을 형성하여 자율적인 복지협력네트워크 구성
지역안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가 직면한 재난·재해, 교통사고, 범죄 등 안전문제를 공동체 스스로 해결 - 공공시설물 설치·관리, 감시·단속, 긴급복구 등 미흡한 공공부문 보완
문화역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고유한 문화역사자원을 보전하여 장소 정체성과 자긍심을 창출 - 가옥, 거리, 상가 등 물리적 생활환경 및 고유한 유래, 역사사건, 민속, 전통산업, 생활 및 생산활동 등 무형적 속성 창출
다문화지원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밀집지구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유도
생활정비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 정비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마을테마 만들기, 담장정비, 문화·여가활동, 특화거리조성, 벽화사업 등
환경생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활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추진 - 환경생태보전형, 환경생태순응형, 환경생태개발형

* 자료: 안전행정부(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참고하여 보완.

< 2013년도 안전행정부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 경과 >

○ 추진근거와 부서

- 국정과제105-9: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활성화 모델 제도적 정착
- 국무조정실 주관 협업과제60: 다양한 마을공동체발전사업의 시너지 제고
- 추진부서: 지방행정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활성화과(서기관 2, 사무관 1, 주무관 1)

○ 추진상황

- 마을발전사업 연계·융합 사업시행지침 지자체 의견수렴(4월 5일)
- 지역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을 위한 수요조사(6월 26일)
- 주민행복마을공동체발전사업 추진매뉴얼 및 마을공동체지원조례안 배포(6월 28일)
- 제5회 지역공동체연구포럼 개최(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공청회)(8월 9일)
- 제1회 지역공동체우수사례발표대회(11월 16일)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안) 입법발의(11월 28일)
※ 발의자: 대표 윤재옥 의원(새누리행안위) 등 11인

○ 중점추진방향

- 지역공동체 정책 추진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 마련
 - * 안행부 전담조직(지역공동체과) 중심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 *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법 제정 추진(안행부), 조례 제정·정비 추진(지자체)
- 지역공동체 연구포럼 구성·운영
 - * 학계, 현장리더,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
 - * 읍·면·동 주민자치회 정착, 마을발전사업연계추진, 마을기업육성, 지역공동체활성화방안 연찬토론
- 지역공동체 기초 현황 조사 및 DB 구축
 - * 마을단위별 공동체 현황 DB 활용, 맞춤형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개발
 - * 유형별 공동체 현황 정보 공개·공유(지자체 홈페이지)
- 지역공동체 활동성과 공유 및 확산
 - *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사례집 발간 등 추진

1.1.2.

□ 사업의 취지와 목표

- 안행부의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경제적으로 자활하도록 지원하고, 마을 주민이 주도하는 경제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공동체 단결과 사업모델의 수익성, 기업의 공공성, 지속가능성의 추구를 실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 마을기업 지원 사업은 지역주민 주도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 안행부는 '13년부터 마을기업에 대해 신규지정은 5,000만 원, 재지정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중간지원기관을 통해 경영컨설팅과 마을기업 관계자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마을기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잠재적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창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 창출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 마을주민이 총사업비 이상으로 출자하고, 출자한 주민이 의사결정과정에 긴밀히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지역주민 5인 이상이 출자하고, 고용한 인력 가운데 70% 이상이 지역주민이어야 한다.
 -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법인 가운데 시·군·구 지자체에서 심사하여 마을기업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지정 후, 2년간 최대 8,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 (첫해 5,000만 원, 재선정시 3,000만 원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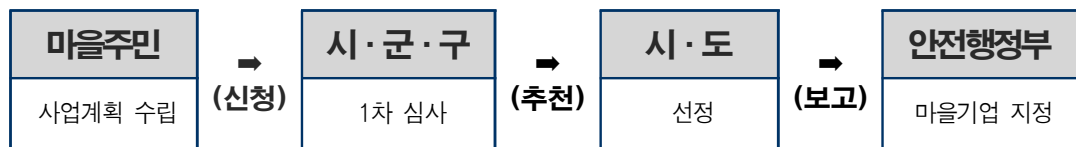
□ 행정의 역할

- 안행부는 마을기업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지침)을 수립하고, 광역·기초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기업을 마을기업으로 지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광역자치단체는 광역 차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마을기업에 대한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기초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지원 사업에 응모한 법인을 심사·선정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추천하고,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 협약을 체결하며, 마을기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사업의 세부 내용

- 마을기업의 사업대상은 지역공동체 주민들로 구성된 법인(협동조합, 주식회사 등)이다.
- 선정절차는 마을주민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면, 시·군·구 기초지자체가 1차 심사하여 추천하여, 시·도 광역지자체가 선정하여 보고하고, 안전행정부가 최종적으로 마을기업을 지정하게 된다.
- 마을기업은 2013년에 약 600개를 지정(신규 470개, 재지정 160개)하여 총 1,200여 개로 늘릴 예정이다.²⁾

그림 3-2. 마을기업의 선정절차



* 자료: 안전행정부 국민마당(2013.6.4).

1.1.3.

□ 사업의 취지와 목표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도서지역과 접경지역과 같은 특수상황지역에서 특산물과 경관, 문화, 역사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특화상품과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 특수상황지역에 문화와 의료, 여가, 생활편익시설이 집적된 거점형 지역공동체를 육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축한다.

□ 추진체계

- 지역리더와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전문가와 공무원이 협력하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 주도의 지역발전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한다.

2) 안전행정부 보도자료(2013.5.17).

- 분야별 전문가컨설팅그룹 구성, 농촌체험관광 사업화방안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의 추진주체는 주민·전문가·공무원이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구성된 마을협의체로서, 지역특산물 판매와 관광시설 운영 등의 사업이나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인프라개발사업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완료 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 마을공동체가 지역특산물판매시설과 관광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하도록 하여 지역 주민이 자립적으로 경영하도록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여 자생적 발전체계를 구축하도록 돕는다.
- 사업의 추진 내용
- 2014년의 총사업예산은 1,894억 원 수준으로 '13년 대비 5% 감축되었다.
 - 이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보조율은 '14년부터 국비 80%에 지방비 20%의 비율로 변경되었다('13년 이전의 국비보조율은 70% 수준).
 - 총사업예산의 5% 수준('14년 예산편성 기준 9,470만 원 가량)을 예산집행율을 고려하고, 외부평가에 의해 우수사업으로 지정된 곳 중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를 부여한다.
 - 2013년 현재 사업의 추진실적은 접경지역에 '평화생태마을' 20개소, 도서지역에 '찾아가고 싶은 섬' 25개소를 조성하였다.
 - '11년 15개소, '12년 20개소, '13년 10개소를 조성
 -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경관, 부존자원,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특색 있게 개발한 사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독창성과 타당성, 사업수립의 적정성, 스토리텔링 가능 여부
 -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민 참여를 추진하는지 여부
 - 타사업, 민자유치와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 여부
 - 지자체 차원에서 기본계획과 기존사업 연계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행정절차 확보와 지자체와 주민 등 지역사회 전반의 사업추진의지 여부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의 세부사업은 다음 <표 3-2>와 같이,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소득 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 사업으로 분류된다.

표 3-2.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세부사업

포괄보조사업	세부사업	사업내용(예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① 기초생활기반 확충	■ 도로, 상·하수도, 주택, 통신 인프라 구축 등
	② 지역소득 증대	■ 유통·가공시설, 농업기반시설, 농촌체험시설, 생태학습장 등 체험관광시설 등
	③ 지역경관 개선	■ 지붕·담장 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 보호수 정비, 경관·주택 정비 등
	④ 지역역량 강화	■ 주민교육·훈련, 홍보 및 브랜드 제고, 기본계획수립비 등 S/W 사업

□ 사업 내용

○ 접경지역의 ‘평화생태마을’ 사업

- 콘텐츠 개발사업: 역사소설의 배경장소, 전설·설화 등 스토리텔링
 - * 춘천시: 김유정 봄봄 스토리 빌리지
 - * 연천군: 임진강 너룻배 마을
- 건강치유프로그램 개발사업: 청정 자연생태 보유자원 이용
 - * 양구군: 자연생태 치유마을
 - * 인제군: 용늪 생태마을
- 주민소득 증대사업: 지역특산물, 관광자원, 청정 자연환경 활용
 - * 화천군: 만산동 산천어 마을
 - * 파주시: 친환경 웰빙 산채마을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지역경제 파급효과 창출
 - * 연천군: 임진강 너룻배 주민주식회사
 - * 철원군: 두루미 평화공동체 주식회사

○ 도서지역의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

- 콘텐츠 개발사업: 역사문화, 유적지, 근대유산 활용
 - * 강화군 교동도: 근대문화공간 조성
 - * 사천시 마도: 갈방아 소리 복원
- 지역 어메니티 개발사업: 자연경관, 생태관광

- * 웅진군 이작도: 바다 생태마을
- * 군산시 여청도: 철새 낙원의 섬
- 체험공간과 친환경 섬 조성사업
- 마을공동체사업: 특산품을 활용한 주민소득·일자리 창출
 - * 서귀포시 가파도: 친환경 보리 주민회사
 - * 강화 교동도: 섬마을 사랑공동체

1.1.4. . .

□ 사업의 취지와 목표

- 안행부의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사업’은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 주민자치회가 주도하여 지역안전을 관리하고, 지역복지활동을 위한 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주민이 스스로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 * 주민자치회는 지역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모델³⁾로 제시된다.
 - *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사무를 위탁받아 직접 수행하며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결정하는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사업의 세부 내용

- 시범실시 기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하고, 시범실시 결과 분석을 통해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2015년 이후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 주민자치회 유형을 7개로 분류하여, 각각 안전마을형, 지역복지형, 마을기업형, 도심창조형, 지역자원형, 평생교육형, 다문화어울림형을 제시한다.
 - 안전마을형: 광주 광산구 운남동 모델 등 지역 내 안전 유해 요소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안전관리 네트워크를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구축하고 지역 맞춤형 안전관리체계를 만드는 유형이다.
 - 지역복지형: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이 대표 모델로, 주민자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 내 산재된 복지재원을 발굴·배분할 수 있는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읍·면·동

3) 안전행정부 국민마당(2013.6.4).

단위의 사회복지 업무 과중에 따른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시된다.

- 2013년 전국공모사업으로 166개 읍·면·동 중에서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원시 행궁동 등 경기도 5개 지역을 포함하여, 31곳을 최종 선정하였다.

1.1.5. 4)

-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주민이 직접 마을 차원의 안전을 자율관리하면서, 안전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 주민이 스스로 마을안전지도를 작성하고, 마을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안전·위해요소를 분석하여 마을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안심마을 시범지역 지정 상황('13년)은 다음과 같다.
 - 시범지역 선정
 - * 마을당 5억 원씩 10개소에 총 50억 원 지원(특별교부세 명목)
 -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경기도 수원시 송죽동, 경남 거창군 북상면, 광주 남구 봉선1동, 부산 연제고 연산1동, 서울 은평구 역촌동 전남 순천시 중앙동, 충남 천안시 원성1동, 충북 진천군 진천읍
 - 사업내용
 - * 인프라 개선: 우범지역 소공원 조성, 골목길 보안등·반사경, 비상벨 설치, 언덕길 안전난간대 설치, 담장벽화사업, 비탈면 정비
 - * 프로그램: 주민안전교육, 안전프로그램 운영

1.2.

1.2.1.

□ 정책 취지와 목표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일반농산어촌지역인 117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소득과 기초생활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계획적 개발을 통해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며, 지역개발사업을 시·군·구 자율 혹은 시·도 자율로 편성하도록 포괄보조의 원칙에 따라 지원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더불어,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다.

□ 정책 내용 및 세부 사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과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신규마을조성사업’, ‘기초생활인프라정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나뉜다.
- 읍·면소재지종합정비: 읍·면소재지 지역거점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 3년간 읍소재지 지역에 100억 원, 면소재지 지역에 7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금액을 지원
- 권역단위종합정비: 마을경관 개선, 생활환경 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을 통해 농촌 정주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며, 유사한 특성과 과제를 공유하는 2곳 이상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정비하는 사업이다.
 - 3~5년간 50억 원 이내(국비 70%, 지방비 30%)의 사업금액을 지원
- 신규마을조성: 쾌적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농산어촌 지역에 새로운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 30억 원 이내의 사업금액을 단계적으로 지원
-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생활환경을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하며, 지역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시·군지역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초

생활환경과 문화·복지시설과 같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의 기초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는 사업이다.

- 지역창의아이디어는 20억 원 이하를, 시·군지역역량강화는 5,000만 원 이하의 사업금액을 지원

□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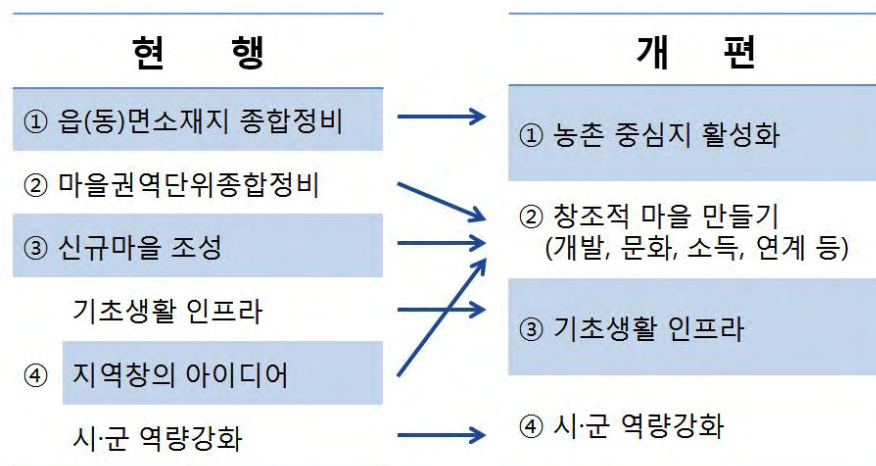
그림 3-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사업추진 절차



* 자료: 농식품부(2013).

- 포괄보조사업계획수립(시·군 심의) → 사업성 검토(농림축산식품부) → 예산 신청 → 예산 내시 → 사업 시행
 - 기초 시·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 광역 시·도, 농림축산식품부: 추진상황 점검
 - 농식품부: 모니터링 및 평가
- 2014년 이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개편 사항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창조적 지역개발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 기존 마을사업 등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통합·재편하고자 추진 중이다.
 - 지역의 역량 수준에 맞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각종 사업 완료 지구에 대해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 완료지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사업을 허용한다.

그림 3-4. 사업 추진 유형 개편



* 자료: 농식품부·KREI(2013).

그림 3-5. 마을 역량 단계별 지원 체계



* 자료: 농식품부·KREI(2013).

-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를 5,000~1억 5,000만 원으로 확대 및 차등화하여 마을 역량 진단과 주민 및 지자체 역량 강화, 중간지원조직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 사후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어촌 현장포럼도 확대한다.

1.2.2.

□ 정책 취지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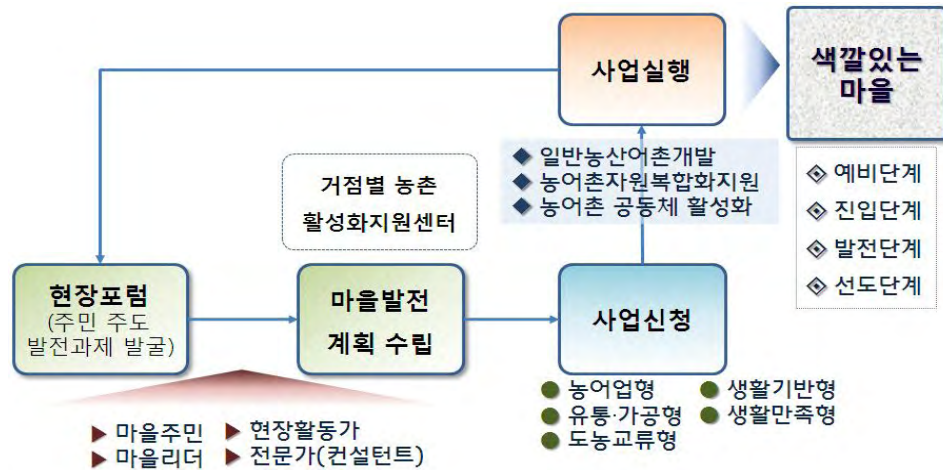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취지를 살려, 농어촌 마을이 지닌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마을, 총체적인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민이 찾고 함께 즐기는 마을을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은 인구감소, 고령화로 어려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농어촌을 도시민과 함께하는 미래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국민 운동이다.
- 목표는 '13년까지 3,000개 마을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색깔 있는 마을 1만 개를 발굴하여 육성한다.

□ 정책 내용

- 색깔 있는 마을은 마을사업의 성과, 주민역량, 마을의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전문가심의회를 거쳐 선정한다.
 - 농어촌 마을 관련 40개 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 향토산업육성,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도농교류활성화지원사업 등 마을 관련 사업과 교육, 홍보, R&D 지원사업, 2012년 사업비 약 2조 원)이 요건을 갖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에서 ‘색깔 있는 마을’ 중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확대한다.
- 대상 마을이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이나 마을자체사업으로 마을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는지 여부와,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취지(마을협의체, 현장포럼, 재능기부자 활용, 계획수립 등)를 실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된다.
-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 '12년에 핵심주체 10만 명을 선정하여 기초교육 10만 명, 전문교육 3만 명(마을리더 1만 5,000명, 기술리더 1만 5,000명)을 실시한다.
 - 도시민 참여 유도로 3만 명의 재능기부자를 확보하고('12년), 2만 명이 참여하는 도·농 연대를 구축한다.
 - 지역의 농어촌 현장포럼⁵⁾과 마을협의체와 같은 지역단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 농어촌 현장포럼은 농어촌 마을 및 권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과 역량을 분석·진단하여, 주민이 마을 및 권역의 특색있는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계획화하도록 지원
 - * 농산업, 도농교류, 지역개발 등 농어촌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인적 자원으로 구성되며,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 현장활동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
 - * 특히 현장포럼의 주축이 되는 농어촌 현장활동가(코디네이터)는 마을 및 권역의 자원을 분석하고 주민 역량을 진단하는 등 현장포럼 구성 및 운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

5) 농식품부 보도자료(2011.10.6) : 농식품부는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2011년 10월부터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농어촌 현장포럼’을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3-6. 현장포럼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실행 체계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추진

-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발의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으로 구성된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에서 농촌마을만들기 계획 수립
 - 농촌마을만들기 계획이 시·군의 지역개발 관련 계획에 반영되기 위한 요청 및 심의 절차 규정
 -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자체장)
 - 농촌마을만들기계획의 이행,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농촌마을의 경관 보전·관리·형성 등을 이행하기 위한 주민 간 농촌마을만들기협약 체결
 - 농촌마을만들기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농촌개발 관련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제도 도입
 - 농촌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 시·도 단위 농촌활성화 광역지원센터 설치(또는 지정) 및 농촌활성화 시·군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한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 설치 등

표 3-3.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법안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 정의 / 기본원칙
제2장 농촌마을만들기 계획 수립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만들기 주민협의체의 구성·운영 ■ 농촌마을만들기계획 ■ 마을계획의 시·군·구 계획에의 반영 ■ 농촌마을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 지원 ■ 농촌마을만들기협약 체결
제3장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 및 전문 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 농촌개발전문자격제도
제4장 농촌마을만들기 지원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마을만들기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 전담부서 설치 ■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 농촌마을만들기진흥원의 설치 ■ 농촌마을만들기기금의 설치·운영 ■ 농촌지역개발공간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농촌 재능기부 활성화 및 사회공헌 인증 등
제5장 보칙	

1.2.3.

□ 정책 취지와 목표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1년부터 발전가능성이 큰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19조의 3항에 근거하여, 농어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고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하여 운영되는 ‘농어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해 농어촌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 *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공동체가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마을단위 법인 등 기업 경영방식의 공동체 조직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

□ 정책 내용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은 각 시도별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여 발전가능성이 큰 공동체회사를 선정하여 제품 개발, 홍보·마케팅 비용에 재정을 지원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공동체 관련 교육, 컨설팅을 수행한다.

-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농어촌공동체회사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창업상담, 경영 컨설팅, 교육 등 공동체회사의 역량 강화와 홍보를 지원한다.
 - 운영 첫 해인 '11년에는 1억 3,500만 원의 운영 예산이 소요되었다.
-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은 개소당 최대 5,000만 원(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까지 지원하며, 매년 실적을 심사하여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 지원 첫 해인 '11년에는 54개소에 총 13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인건비 등 경상경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3년에는 국고 기준, 총 54개소(계속 12개소, 신규 42개소)에 대해 15억 원을 지원했다.
-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겸업·영세·고령농의 영농환경 개선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농촌공동체회사를 확대하고 6차 산업화와 연계하여 가공·유통·관광 일자리를 제공한다.
 - 지역의 복지 문제 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 100개소를 '17년까지 육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하였다.⁶⁾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하에, '14년부터 사회서비스 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를 육성할 계획이다.⁷⁾
 - '14년부터 사회서비스제공형 농촌공동체회사의 지원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자금사용 용도를 완화하는 등 농촌공동체회사 지원 사업을 개편하였다.

1.2.4.

□ 정책 취지와 목표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농어촌주택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 사업으로, 농어촌 어메니티를 증진하고 마을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6) 농식품부 보도자료(2013.10.2): 이러한 내용은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정책과제 중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및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과제의 일환이다.

7) 농식품부 보도자료(2014.2.6).

□ 기본 방향

- 이 사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과 준농어촌의 농어촌주택 개량, 마을기반시설 정비, 경관 개선
 - 기존 건축물의 공동생활주택 및 영유아시설 설치 시 우선지원
 -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심의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소득, 교육, 복지사업은 기존 사업으로 추진)
 - 주택개량이 필요 시 주택개량자금 우선 지원(융자 3%, 5년 거치 15년 상환)
 - 시범사업을 기간 내 완공하기 위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사업지구를 우선 지원

□ 정책 내용

-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13년과 '14년에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15년부터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 '13~'24년의 총 12년 간 1,004개의 마을 조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 * '13년~'14년 시범사업 4지구, '15년 이후 본사업 1,000지구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농촌마을리모델링 사업은 주민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마을주거환경과 경관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 주민은 주택을 신축개보수하고 정부는 공공시설, 기초인프라를 통합 지원하는 '주민참여형 마을통합개발방식'을 적용한다.
- 재정은 '13년부터 '24년까지 12년 간 총 1조 9,000억 원의 국고를 투입할 계획이다.

표 3-4.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합계
합 계	-	5,713	10,052	3,688,192	3,703,957
국 고	-	4,000	4,050	1,915,388	1,923,438
지방비	-	1,700	1,800	842,462	845,962
융 자	-	-	4,000	881,400	885,400
자부담	-	13	202	48,942	49,157

1.3.

1.3.1.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물리적 환경정비 위주의 도시개발정책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사회·문화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재생을 제시하였다.
 - 사업은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와 주민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면서,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H/W와 S/W를 연계한다.
 - '13년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시재생 관련 재원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 주민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생활인프라 확충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한다.
 - 공원, 녹지, 방범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인프라 조성에 대한 최저기준과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평가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지역격차를 해소하도록 유도한다.
 - 특히 지역사회에 '동네쉼터'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도시공원, 근린생활권 내 생활공원과 썸지공원 등 다양한 규모의 공원 조성에 역점을 둔다.
 - '생활공원 정비 5개년 계획'('14~'18)을 수립하였으며, '13년 12월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3.2.

□ 정책 취지와 목표

-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국가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의해 주민과 지자체, 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H/W와 S/W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과 지자체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 세부 추진체계

- 추진조직은 중앙정부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도시재생지원기구, 행정전담조직인 도시재생기획단을 설치하고, 지방에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이 협력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도록 했다.

그림 3-7. 국토부의 도시재생 추진 협력체계



* 자료: 국토교통부 웹사이트(http://www.molit.go.kr/USR/WPGE0201/m_35396/DTL.jsp)

1.3.3.

□ 정책 취지와 목표

-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은 도시 내의 기초생활권 중 도시활력증진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를 대상으로 불량하고 낙후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개량하여 자생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며, 포괄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이다.
- 이 사업은 도시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
 - ① 도시환경 개선
 - ② 주거생활의 질 향상
 - ③ 도시 활력 증진
 - ④ 지역 커뮤니티 복원

- 지역 특성에 조응하는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을 근거법으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 이 사업은 「균특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며, 지역개발사업을 시·군·구 혹은 시·도 자율로 편성하도록 포괄보조의 원칙에 따라 지원한다.
 - 기존에 정부가 추진했던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기초생활권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포괄보조금 사업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으로 편제되었다.
 - * 도서종합개발, 소도읍육성, 지표수보강개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어촌종합개발, 신활력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소규모용수개발, 주거환경개선, 개축지구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살고싶은도시만들기

□ 정책 내용

- 사업유형은 주거지재생, 중심시가지재생,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역량강화로 분류된다.
 - * 주거지재생: 열악한 주거지역의 거주환경 개선
 - * 중심시가지재생: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해 경제기반과 경관 개선
 - * 기초생활기반확충: 기초생활기반시설의 건설과 정비
 - * 지역역량강화: 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여 9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편성·기획하고 시행하도록 포괄보조금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 국가가 지자체에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면 지자체는 자부담 예산(50%)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 '13년에 57개 지자체에서 총 120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1,086억 원을 투입했다.
- 경기도는 현재 수원시의 ‘거북시장 조성 활성화 사업’을 비롯하여 다음의 시·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화성시, 남양주시

1.3.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의 취지와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노후화될 경우 추진하는 주택재정비사업으로서, 사업 과정의 비리를 예방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선 계획-후 개발’ 원칙에 입각하여 도시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다.

□ 사업 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한다.

1.4.

1.4.1. ()

□ 정책 취지와 목표

- ‘자연생태우수·복원우수마을’은 자연환경, 생태서식지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주민의 자발적 환경 보전 노력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환경을 보전·관리하고 전 국민적인 자연보전의식을 함양하도록 노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환경부가 관할한다.

□ 정책 내용과 세부 사업

- 이 사업은 ‘자연생태우수마을’과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 사업으로 구분된다.
 -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상태로 주민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거나 지역주민의 공동 노력을 통해 자연친화적 생활양식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다.
 - ‘자연생태복원우수마을’은 오염된 지역이나 생태계가 훼손된 지역을 자연친화적 공법 활용 및 지자체,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본래의 기능으로 생태계를 복원한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지원 방식은 광역 자치단체가 1차 심사하여, 중앙정부가 국가지정생태마을심사위원회(학계, 문화계, 언론계 인사로 구성)가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이 현장조사를 수행하여 최종 선정한다.
- 경기도에서는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성남시 탄천 지역이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다.
 - * 지동산촌마을은 지동산촌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곡 자연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은행나무와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촌마을로서, 야생화, 왜가리, 반딧불이 등 생물자원 보유

1.4.2. ()8)

□ 정책 취지와 목표

-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사업’은 어촌 주민이 마을자원 발굴과 마을발전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어촌발전에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가 관할한다.

- 어촌개발 패러다임을 국가·지자체 중심에서 주민 주도의 상향식 자율적 어촌발전 방향으로 전환하여, 주민 스스로 어촌의 특성에 맞는 특화어촌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행하고 있다.
- 자발적 주민 참여와 어촌의 통합적 발전을 추구하고자 2013년 5월 제정된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된다.

○ 사업의 목표는 어촌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이 보유한 수산물과 마을경관, 갯벌 등 고유한 자원을 바탕으로 어촌에 새로운 산업을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어촌지역의 경쟁력 있는 자원과 생활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주도의 지역맞춤형 사업을 발굴한다.

- 1차 산업 중심의 어촌개발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2차·3차 산업 개발을 포함하는 통합형 발전모형을 추구한다.

□ 사업 내용

○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선진농어촌 방문, 경관조성의 실행과정에 대한 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 2013년은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 공모사업으로 5억 원의 예산을 확보(어촌관광활성화, 민간경상보조)하여 8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 사업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6개 마을, 3억 7,500만 원), 한국어촌어항협회(2개 마을, 1억 2,500만 원)가 각기 담당한다.

○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역량강화 교육(24시간 내외)
- 주민주도의 마을자원 발굴 및 자원지도 만들기
- 마을가꾸기, 6차산업화 우수사례 마을 방문 및 선진사례 학습
- 마을화단 가꾸기, 경관개선 등 특화사업 실행 학습
- 특화어촌위원회 구성 지원

* 특화어촌위원회(어촌특화발전지원특별법 제27조 제1항):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마을 주민들이 어촌계·주민자치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설립한 법인

- 어촌특화발전 (예비)계획서 작성

1.5.

표 3-5. 정부 부처별 정책의 목표와 특성

부처	사업	목표	특성	적용범위
안전 행정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가 사회문제 자율해결 공동체 생활자치 확립 	SW중심	도시, 농어촌, 특수상황 지역
	마을기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취약계층 경제자활 주민 주도 경제활동 	SW 중심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서·접경지역 특화상품, 관광프로그램 개발 	HW/SW 통합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자치회 강화, 주민행정참여, 민관협치, 풀뿌리민주주의 정착 	SW 중심	
	안심마을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주도 안전관리, 안전공동체 구축 	HW/SW 통합	
국도 교통부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불량지역의 계획적 정비와 개량 도시환경개선, 주거생활향상, 도시활력증진, 지역공동체복원 	HW/SW 통합	도시
	주거지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지 거주환경 개선 	HW/SW 통합	
	중심시기지재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심시기지활성화, 경제기반마련, 경관개선 	HW/SW 통합	
	기초생활기반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기반시설 건설·정비 	HW 중심	
	지역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공동체와 거버넌스 구축 	SW 중심	
도시재생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지자체 주도로 종합적 도시재생 추진 	HW/SW 통합		
농림 축산 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소득·기초생활수준 향상, 어메니티 증진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특화발전 	HW/SW 통합	농어촌
	읍·면소재지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소재지 지역거점화, 지역균형발전 	HW/SW 통합	
	권역단위종합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 확충 	HW/SW 통합	
	신규마을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쾌적한 주거공간, 귀농귀촌 	HW 중심	
	기초생활인프라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생활환경, 문화 복지시설 종합정비확충 	HW 중심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개선, 활력창출 위한 국민운동 	SW 중심	
	색깔 있는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별 특색자원 활용, 주민역량강화 	SW 중심	
	농어촌공동체회사 육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통한 농어촌 지역 활력 증진 	SW 중심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시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거환경정비, 주택개량, 경관개선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농어촌 건설 	HW 중심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복원 우수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 자연환경, 생태서식지, 주민노력 증진 	SW 중심	도시, 농어촌
해양 수산부	어촌특화발전 역량강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 자원발굴과 마을발전계획 수립 	SW 중심	농어촌

- 중앙정부의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은 정책의 의도와 목표가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하고 있다.
 -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제시하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 정책과 사업들은 마을 정주지의 삶의 질 약화와 공동체 해체,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차원에서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 방책과 다양한 접근법을 담고 있다.
 - 정책 목표는 마을공동체의 복원과 활성화, 삶의 질과 정주환경 개선, 마을의 경제적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의 복지와 안전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 반면, 마을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화된 행정수단은 기반시설공급 중심의 개발사업이나 주민공모사업을 통한 예산지원과 평가라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들에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획일적으로 따라오도록 할 경우 기존의 하향식 지역개발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
 -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마을이 자율적인 의사소통과 네트워크 형성의 근거지가 되어 주민이 스스로 내생적인 역량을 형성하도록 창출하는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능동적인 공동체를 창출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동기 형성과 필요를 통해 자율적인 마을공동체의 형성을 지원하도록 행정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특히, 정부와 행정은 마을 외부의 개입과 통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공동으로 협력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계기들을 촉진하고 설득하는 참여자로 변화되어야 한다.
- 현재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정책이 기존 정부 주도의 지역개발정책과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점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서 역량지표에서 앞서 있는 마을을 선별 지원하여 마을의 사회 기반시설과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방식이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구조화될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발전된 마을의 환경과 여건은 더욱 열악해질 수 있다.
 - 성장과정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면, 사업비용과 행정지원방식에 대한 단계별 수준을 마을공동체 역량이 발전하는 과정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마을의 발전 방향이 행정이 제시한 목표를 일률적으로 따를 경우 마을만들기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이런 문제점을 고려하여 여러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을 조정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2.1.

□ 광역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

- 현재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 제도는 크게 지원조례 제정, 중간지원체계 수립, 지원 계획 수립, 행정체계의 개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광역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 조례

- 광역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조례는 서울시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를 비롯하여, 부산, 대전, 충남, 충북, 전북, 제주 등지에서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있다(표 3-6).

□ 광역 지자체의 중간지원조직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 주도 하향식 지원사업의 폐해를 극복하고 민관협력으로 공동체와 주민역량의 성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비롯하여, 서울시와 부산시, 대전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에서 중간지원조직을 수립하거나 진행 중에 있다.

- * 서울: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 * 부산: 부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 대전: 사회적자본 지원센터
- * 충북: (사)주민참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 * 전북: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 * 충남: (민관협력 지원 센터 개설 추진 중)

<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12.8. 개설) >

○ 예산규모)

- 22억 8,000만 원 배정('13년 기준)
- * '13년 예산계획상 13억 5,000만 원 배정
(운영비 3억 900만 원, 인건비 10억 4,400만 원)

○ 조직구성

- '13. 10. 현재 30명 규모
- 센터장
- 마을사무국, 경영지원실, 마을기획실, 마을지원실, 홍보협력실

○ 사업현황

- 예산사업 14개, 비예산사업 3개 수행('12년 기준)
- '13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예산: 19억 2,000만 원 배정

○ 세부사업('13년 총사업비 편성 9억 3,240만 원)

- ① 주민주도형 마을계획 수립지원 “우리마을프로젝트”(3억 8,000만 원)
- ②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1억 9,000만 원)
- ③ 마을공동체사례 발굴과 확산(8,500만 원)
- ④ 마을공동체 교육(1억 6,000만 원)
- ⑤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1억 1,000만 원)
- ⑥ 자치구 현장지원과 민·관 협력지원(비예산사업)

< 부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13. 5. 개설) >

○ 조직구성

- 센터장
- 지원팀: 교육개발, 연구평가, 마을모니터링, 회계관리
- 사업팀: 마을계획수립 지원, 활동가양성, 네트워크 구축 등

○ 역할

- ① 부산 마을만들기 사업총괄과 지원
- ② 주민, 활동가, 행정 간 종합적 중간지원과 마을네트워크, 지원체계 확립
- ③ 계획수립과 모니터링, 피드백

○ 세부사업

- ① 마을만들기 주체별 역량 강화 및 주민공동체 마을활성화 사업지원
- ② 마을만들기 통합 네트워크 구축
- ③ 마을만들기 통합 조사 및 모니터링

○ 공모사업 추진 방식

- ① 12~15개 마을 선정 후 100~300만 원 예산 지원(5인 이상 주민모임)
- ② 주민제안사업 지원(주민모임형성, 마을공동체, 마을계획수립)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09. 6. 개설) >

- 예산규모: 약 1억 1,000만 원
- 조직구성
 - 센터장
 - 현장지원국: 현장지원1/2팀, 교육조사팀
 - 사무국: 네트워크지원팀, 네트워크사업팀
- 역할
 - ① 민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 ② 향토산업마을 활성화
 - ③ 전북형 슬로시티 전략과 연계된 생활환경과 삶의 질 개선
 - ④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동 운영
 - ⑤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전북협의회 사무국 운영

□ 광역 지자체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 서울시의 '서울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를 비롯하여, 충남의 '살기좋은 희망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 기본 계획' 등이 수립되어, 광역지자체별 마을만들기의 개념 및 접근방식, 지원계획 및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및 비전을 구상하고 있다.

□ 행정체계

- 행정전담부서와 실·국 간 협의체는 광역지자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 서울은 시장직속기구로 서울혁신기획관실에 마을공동체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전북은 문화체육관광국, 제주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전담하고 있다.
- 서울과 제주는 개별 부서를 넘어 마을만들기 관련 부서들을 중심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마을만들기 융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표 3-6. 광역지자체 마을만들기 관련 지원체계

광역 지자체	지원조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행정체계		관련 계획 및 사업
			전담부서	협의회	
경기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12.8)	-	자치행정국 자치행 정과 마을만들기팀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경기도 마을만들 기 지원 계획
서울특별시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 등에 관 한 조례(2012.3)	서울시마을공동 체 종합지원센터 (2012.9)	서울혁신기획관 마 을공동체담당관 (시장직속)	서울시 마을공동 체 위원회	서울시 마을공동 체 기본계획
인천광역시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 (2013.5)	인천시마을공동 체만들기 지원센 터(2013.12)	안전행정국 자치행 정과 주민자치담당	-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마을만 들기 지원 등에 관 한 조례(2012.7)	부산시마을만들 기지원센터 (2013.5)	창조도시본부 창조 도시기획과	부산시 마을만들기위원회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확충조례 (2013. 2)	사회적자본지원 센터(2013.10)	자치행정과	사회적자본 확충 지원위원회	-
대구광역시	-	-	-	-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10.3)	-	도시디자인국 도시재생과	살기좋은 마을만들 기 위원회	
울산광역시	-	-	-	-	-
세종특별 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마 을공동체 만들기 지 원 조례(2013.7)	-	기획조정실 균형발 전담당관 도심활성 화담당	-	-
강원도	-	-	농축산식품국 농어 촌정책과 농어촌개 발담당	-	새농어촌 건설운 동 기본계획
충청남도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2012.12)	(지원센터 개설추진)	농정국 농촌개발과 행복마을팀	3농혁신위원회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충청북도	-	(사)주민참여도시 만들기지원센터 (충북대)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	함께하는 청풍명월 마을만들기 사업
전라남도	-	-	-	-	-
전라북도	전라북도 마을만들 기 지원 조례 (2009.12)	전라북도마을만 들기협력센터 (2009년)	문화체육관광국 삶의질정책과	-	-
경상남도	-	-	-	-	-
경상북도	-	-	-	-	-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 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 조례(2009.1)	-	특별자치행정국 자 치행정과 마을발전 지원팀	행정실무협의회	제주형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2.2.

2.2.1.

□ 배경

- 서울시는 주거지정책을 행정의 주도하는 도시개발 위주의 주택공급정책에서 주민이 참여하고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로 전환하였다.
 -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12년 1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12년 3월)
 - ‘서울시 마을공동체기본계획’을 수립(12년 9월)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3대 과제, 10대 전략 제시

그림 3-8.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비전

**사람 사는 재미가 있는 행복한 서울,
서로 돕고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서울**



* 자료: 서울시(2012).

□ 취지

-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공동체활동의 토대를 구축하면서 마을의 범위에서 복지, 경제, 문화 영역이 통합적으로 강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의 발전 과정을 단계화하여 각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내용을 달리하는 단계별 지원 방식을 제시하며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지원한다.

-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에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원하되, 지원센터의 운영은 민간에 위탁하여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형식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기본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마을 단위의 자율적인 활동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초기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을 강조하되,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주민 주도와 상향식 의사결정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표 3-7.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발전 단계별 지원 구상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단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기반이 미약할 경우 ■ 3인 이상 주민모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기반이 형성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기반이 활발할 경우 ■ 마을종합계획 수립 지원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모임 활성화 ■ 마을사업 발굴 ■ 마을일꾼 양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굴사업 구체화 ■ 1~2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 문화, 경제 영역에서 다양한 마을사업을 복합적으로 지원
예산지원	최대 150만 원 지원	최대 500만 원 지원	최대 2,000만 원 지원

* 자료: 서울시(2012).

□ 서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각 사업 실·국이 담당하되, 마을공동체담당관실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가 상시적으로 정책을 조율한다.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가급적 마을 단위의 사업을 직접 실행하기보다, 시청의 행정부처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고, 주민이 직접 수행하고 주도하도록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주민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 방식을 구축하였다.¹⁰⁾
 - 마중물 지원: 마을의 토대가 미약하거나 사회적 취약 계층이 모여 사는 마을의 경우 공동체활동을 처음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방식
 - 불쏘시개 지원: 마을활동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하는 방식

10) 유창복(2013).

- 다지기 지원: 마을활동의 프레임을 갖추고 다양한 마을의제가 동시에 전개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경우, 마을 차원의 종합적 계획 및 중장기적 전략을 세워 안정화된 자립토대를 다지도록 지원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다음과 같다.

①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체계적 지원

- 마을공동체 발굴과 단계별 육성
- 마을활동가 교육과 육성, 지원
- 주제별 마을사업 실행
- 마을 기록과 조사연구 지원
- 마을기업과 협동체 간 연대 활성화, 협동생활문화 확산

②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 협력거버넌스 추진

③ 자치구 지원센터의 역량강화

④ 마을공동체 문화 확산과 홍보

○ 행정전담부서는 ‘서울혁신기획관 마을공동체담당관’이며, 마을기획팀, 마을협력팀, 마을사업팀의 3팀으로 구성된다.

- 마을기획팀: 마을공동체 회복 시행계획 수립 및 법령·제도 개선,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업무협약의 등
- 마을협력팀: 실·국 부서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총괄 및 업무협약, 각종 지원사업 관련 협력 추진
- 마을사업팀: 주민제안사업 추진 및 사업선정심의회 운영 지원

○ 서울시는 행정 실·국 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청 행정 내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시는 행정과 지원센터가 조력하여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 지원센터가 행정과 위원회,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협력자들을 연결하고 공동의 협력과 협업을 모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 행정전담부서인 ‘마을공동체 담당관’에 민간 마을만들기 전문가를 특별 채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마을공동체 지원 예산 현황

- 서울시는 2013년 마을공동체사업을 통해 총 22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실제로 198억 원을 집행하였다.
- 예산 편성은 주민제안사업에 197억 원, 기반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할당하였으며, 이 중 지원센터 운영에 13.5억 원을 활용하였다.

표 3-8. 2013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

단위: 백만 원

연번	단위사업	예산액	연번	단위사업	예산액
주민제안사업		19,725	기반조성사업		2,478
1	다문화공동체 활성화	100	1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구축	110
2	상가마을공동체 활성화	300			
3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2,430			
4	부모커뮤니티 활성화	1,000	2	마을박람회 개최	179
5	공동육아 활성화	610			
6	청소년 휴카페(문화공간)조성	500			
7	마을기업 활성화	6,298	3	마을공동체 교육	307
8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2,088			
9	마을 북카페 조성	2,500			
10	마을미디어 활성화	615	4	마을공동체 사례발굴 확산	318
11	한옥마을공동체 활성화	73			
12	에너지자립마을 활성화	300			
13	안전마을 활성화	1,000	5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1,353
14	아파트마을공동체 활성화	1,301			
15	우리마을프로젝트	382			
16	청년마을활동 활성화(사업보류)	228	6	주민제안사업 현장조사 등	211
마을만들기 총 지원예산					

* 자료: 서울시(2013)를 활용하여 재구성.

표 3-9.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사업

분야	협력체계		사업명	사업취지	사업량	
	서울시청 담당실국	종합 지원센터			개수	사업당 지원액 (만 원)
경제공동체	사회적경제과	마을기업 사업단	마을기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30개	1년차: 5,000 2년차: 3,000
	일자리정책과	기획실	청년마을살이 워킹그룹	마을형 청년일자리 모델발굴 및 사업 지원	2개 그룹	
	소상공인 지원과	기획실	상가마을 공동체	상인, 주민, 이용고객의 공동체 형성	예비선정: 6~8개 본사업: 3~5개	300 5,000
문화공동체	문화예술과	마을지원실	마을미디어	미디어 제작, 활용 교육 및 전문가 양성		
	문화정책과 문화사업팀	마을지원실	예술창작소	문화예술 공간조성과 활동지원	13개	2,000
	행정지원과	마을지원실	북카페	생활밀착형 공동체 공간으로 조성	25개	조성비: 3,000 운영비: 2,000
	한양도성도감	마을지원실	한옥마을 공동체	한옥마을 및 한양도 성 인근 마을 가꾸기		프로그램: 500 시설조성: 2,000
주거공동체	도시안전과	마을지원실	안전마을	재난, 재해, 범죄 등의 예방 및 해결	지역맞춤형: 50개 서울형: 2개	1,000
	공동주택과	마을지원실	공동주택 마을공동체	아파트 마을공동체 사업 발굴, 확산	1차: 30개 2차: 20개	1,000 1,000
	녹색에너지과	마을지원실	에너지자립 마을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발굴, 확산	연속시범: 2개 연속일반: 5개 신규지원: 3개	6,000 4,000 1,000
돌봄공동체	출산육아 담당관	마을지원실	공동육아	가족-보육시설-지역 사회를 연계 돌봄	연속지원: 12개 신규(상반): 6개 내외 신규(하반): 6개 내외	300~4,000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마을지원실	다문화마을	내,외국인의 공존 및 화합 활동지원	12개	500
	아동청소년 담당관	마을지원실	청소년 휴카페	청소년과 지역주민 소규모 문화휴식 공간	20개	주민모임: 500 단체: 5,000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여성단체협력팀	주사팀	부모커뮤니티	자녀문제 해결을 위한 부모모임 지원	상반: 100개 내외 하반: 100개 내외	500
마을공동체 담당관실	마을기획실	주민제안사업	주민공동체 활동, 커뮤니티공간운영지원 마을축제		300~1500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우리마을 프로젝트	주민주도 마을계획 수립 지원	120개	500
			마을공동체 교육	마을공동체 강좌, 교육		

* 자료: 서울시(2013)를 활용하여 재구성.

□ 특성과 시사점

- 주민참여 공모사업에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손쉽게 참여하고, 행정이 평가·선정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와 성장을 배려하는 역할을 찾아가고 있다.
 - 공모사업 지원 기준을 마을 주민 3인 이상으로 낮추고, 접수 시기에 제한을 두지 않는 등 공모사업에 주민들이 손쉽게 접근하도록 배려한다.
 - 단순히 사업계획서 자체의 완성도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며, 마을 주민의 열의와 노력을 중시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필수교육 및 주민워크숍 참여 등을 지원 요건으로 명시한다.
 -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에 대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실패를 통한 경험이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장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 광역 지원센터가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육성하면서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인구 천만 인이 거주하는 서울이 마을공동체 단위의 활동을 지원하며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시민사회와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 집단을 지원 풀(pool)로 활용한다.
 - 기초 자치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구 차원의 행정역량과 협력거버넌스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 마을공동체 활동에 주민의 책임과 권한을 높여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직접 공모사업에 지원한 다른 마을을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책임과 권한을 높이고 마을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마을공동체 간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부수적 효과도 발생한다.
 - 주민공모사업에 일정한 자기조달비용을 부여하여 마을공동체에 대한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2.2.

□ 배경과 취지

- 인천시는 뉴타운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전면철거 도시재개발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미 형성된 주민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천형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와 제도를 구상하였다.

- 인천시 마을만들기의 동기가 된 만석동 팽이부리마을의 경우, 인천의 대표적 쪽방촌으로서 기반시설정비사업을 시도하면서 철거지역 주민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여 마을을 유지하고 역사적 단절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재정착을 시도하였다.

○ 인천 마을만들기의 이슈는 쇠퇴하는 원도심과 저층주거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맞추어져 있다.

- 신도심 개발의 결과로 쇠퇴하는 원도심을 신도심과 더불어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인천형 마을만들기 사업인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 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지원체계

○ 인천시가 '13년 5월,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한 이후, 현재 주무부서의 역할은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고 있다.

○ 인천시 마을만들기의 민관협력기구로서 ‘인천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에는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인천 마을만들기활동의 방향과 가치를 논의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가 '13년 12월 민간위탁으로 설립되어 마을기초조사와 마을만들기 사업 분석·평가,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등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 인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13년 9월 시행)은 총 43개 단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였다.

- 중구(3개), 동구(2개), 남구(4개), 연수구(5개), 남동구(4개), 부평구(3개), 계양구(4개), 서구(3개), 강화군(13개), 옹진군(2개)

○ 공모사업은 총 41억 원의 예산 규모로 주민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 지원항목: 인건비, 사업비, 활동비, 컨설팅비 등(임대료 및 관리비, 시설비 등은 지원 불가)

표 3-10. 인천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내용

공모 분야	사업 내용
주민공동체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실천 프로그램: 텃밭 가꾸기, 벼룩시장, 목공교실 등 ■ 역사, 문화·예술 등을 매개로 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주민교류 프로그램: 마을축제, 마을도서관/북카페 운영, 재능기부, 청소년 사랑방 ■ 돌봄·육아·복지 프로그램: 품앗이 돌봄/육아 등 ■ 기타 주민 공동체 형성에 해당하는 활동, 기타 사업 등
마을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보수, 쌈지공원 조성, 꽃밭, 안내시설, 녹지공간 조성 ■ 꽃길, 차없는 거리 등 보행환경 개선 ■ 벽화 그리기, 담장 허물기, 간판 정비 등 경관 개선 ■ 공가 리모델링,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 주거환경 개선 ■ 마을도서관, 북카페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기타 사업

* 자료: 인천시청(2013).

□ 특성과 시사점

- 인천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체계와 제도는 2013년부터 가동하여 아직 초기 상황으로 행정 주도의 하향식 전면재개발이 초래한 도시공동체의 해체와 단절에 대한 평가와 반성으로 시작했다.
- 인천시 행정은 장기적으로 마을의 발전단계에 따른 성장지원방식을 모색하고 있으나 현재는 주민공동체활동 지원과 마을환경 조성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는 '13년 12월 개소하여 활동 중으로 '14년 이후 보다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계획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2.3.

□ 배경과 취지

- 1998년부터 살기 좋은 농어촌 건설을 목표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강원도 자체 농업·농촌 정책 중 핵심적인 하나로 추진 중이다.
- 2000년대 중반 이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농업·농촌 관련 정책과 광역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의 방향이 주민주도와 상향식 내생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강원도가 추진한 '농어촌건설운동'의 경험이 부각되면서 국가정책의 형성과정에 취지와 방식이 반영되고 타 광역 지자체의 모델이 되는 등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의 방법을 통해 정신과 소득, 환경의 변화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 방법

- * 실사구시(實事求是): 마을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농촌과 마을의 문제를 해결
- * 자력갱생(自力更生): 주민의 내생 역량으로 마을을 개선하고 변화
- * 자율경쟁(自律競爭): 마을 간 공정한 경쟁으로 지역이 함께 발전

－ 이념

- * 정신: 의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벤처정신과 프런티어정신을 추구하여 전문가와 신지식인을 양성
- * 소득: 신소득작목 개발과 청정농수산물의 생산, 차별화된 품질로 고부가가치 창출 등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배가를 목표
- * 환경: 농어촌 생활환경과 경관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린투어리즘을 추진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체계와 제도¹¹⁾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어촌 지역에서 마을발전에 대한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이 높은 곳을 선정하여 마을사업예산을 지원하여 추진된다.

- － 2005년부터 '12년까지 강원도 내에서 30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각 마을당 5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마을 차원에서 예산활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다.

- '13년 현재 농축산식품국의 농어촌정책과 농어촌개발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04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다.

-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 시책설명회

- * 강원도 및 각 시·군 공무원이 마을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시책 설명회를 개최

－ 마을추진단 구성

- * 마을이장이 주축이 되어 마을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 자율로 소규모 마을정비사업 추진과 마을발전계획 구상

－ 시·군 우수마을 응모 및 선정

- * 각 마을추진단이 해당 시·군 우수마을에 응모
- * 해당 시·군 지자체는 시·군 우수마을을 자체 선발하여 강원도 우수마을 후보로 추천

11)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강종원(2006; 2010) 참고.

- 강원도 우수마을 응모 및 선정
 - *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중심으로 강원도 우수마을 선정단 구성
 - * 선정단은 각 시·군에서 추천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평가 및 현지실사를 진행하여 강원도 우수마을을 선정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최근 동향

- 새농어촌건설운동은 '12년부터 마을별 3억 원을 균등 지원하고 사업추진 2년 차에 실적을 평가하여 1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 '12년 이전의 기존 방식은 마을별로 5억 원의 사업비를 동등하게 지원하였지만, 마을 차원에서 사업 집중도와 차별성이 떨어지자 새로운 동기 부여의 필요성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2012년까지 총 310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2013년에 15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 '12년까지 강원도 1,676개 농어촌마을 중 19%인 310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여, 1,504억 원의 혁신역량사업비를 지원하였다.
 - 2005년 이후 매년 마을 지원 규모를 30개로 정하다보니, 지원 여건이 충족되지 않은 마을에도 각 시·도 간 안배 차원에서 선정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13년부터 15개 마을로 축소 지원하게 되었다.
-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가 축적되고 일정한 궤도로 진입하게 되면서 마을 선정·평가 방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시·군 지자체 차원에서 도에 추천하는 마을에 대한 사전 평가를 강화하여 문제 있는 마을을 사전에 여과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 사업 종료 이후의 사후관리지침을 강화하여 예산이 투입된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최근 변화된 사회 이슈와 트렌드를 반영하여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으로 취지를 전환하고 있다.
 -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형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중앙정부의 마을정책도 이러한 차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 강원도 마을도 영농조합법인 등 마을단위 기업형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마을이 공동운영하는 통합법인으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과

-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인식되어온 강원도 농어촌 지역에 마을의 소득기반 및 일자리 확충에 기여했다.
- 운동 초기, 마을들이 마을공용토지를 구입하는 데 예산을 활용하면서 생산시설, 체험관광시설 등 마을 단위의 공동사업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 그 결과 마을 주민의 사업역량과 자활의지가 형성되고, 마을 단위 사업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후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대거 선정되기도 했다.
- 최근 변화된 시대 조류에 맞추어 운동의 지속성과 농어촌의 산업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기업형 마을법인 경영체제와 제도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을 주요 발전모델로 고려하고 있다.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의미와 한계

-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발원하던 1998년 당시, 담론상으로만 존재하던 마을 단위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강원도 광역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계획하고 시도한 사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의식의 변화를 바탕으로 마을의 내생적 발전을 추동하고자 시도하였다.
 - 마을 단위의 내생성을 촉발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을 체계화하고 지속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강원도 농어촌 마을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고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취지와 지원방식은 강원도의 마을별 낙후한 정주 여건을 감안하여 주로 소득창출과 생산기반 확충, 인프라 정비 등 물리적 여건 및 경제적 활력 증진의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 전개되었다.
 - 최근 마을만들기 동향과 조응하여 경제적 활력 증진을 포함하는 종합적 사회계획으로 발전하도록 농어촌 지역의 사회, 문화, 정치적 측면에 대한 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 ‘강원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 수립·공표(2013년 9월 9일 공표)되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아젠다와의 보완·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성격은 광역 지자체가 주도한 하향식 사업으로서, 사업의 취지와 목표는 주민참여를 통한 상향식 마을 혁신을 들고 있지만,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사회운동으로서 마을만들기와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 행정 주도로 운동의 주요 목표와 아젠다를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발전방향을 경제활력 증진을 중심으로 하는 몇 가지 범주로 제한한 한계가 있다.
 - 마을 단위에서 주민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구상하는 창의적인 실험들이 계획되고 시도되도록, 그리고 그 실패와 성공의 과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행정이 마을 지원과 평가의 여지를 자유롭게 열어둘 필요가 있다.
 - 행정의 공공적 목표와 주민의 자율적인 모색과 실험을 창의적으로 조율하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

2.2.4.

□ 배경과 취지

- 충청남도는 3농혁신과 5대 전략과제의 일환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다.
 -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는 농어업인 주도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혁신하여 충남 농어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촌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정주지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희망마을 만들기’의 취지와 방식은 슬로건인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은 주민 주도의 맞춤형 지역공동체 마을의 단계별 육성’에 축약되어 있다.
 - 주민이 스스로 「마을발전계획」 수립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기 부여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마을의 내발적 발전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 충청남도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 관련성이 커서 농업정책과가 실무전담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농업정책과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의 정책수립과 사후관리, 중앙부처와 관련 실과, 시·군 마을사업 융·복합 연계 등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 충남도청 내에 마을만들기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간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만들기 지원 행정 통합, 관련 부서 간 논의와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도내 11개 관련 실·과장 간 ‘희망마을 만들기 융복합사업 협력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13.9)하였다.
- 충남도는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조례’를 제정('12.12)하여 충남의 마을만들기 브랜드로 ‘희망마을만들기’를 제시하였다.
 - 조례의 내용은 광역 행정 차원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 행정전담부서와 추진단, ‘희망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의 구성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 조례는 마을공동체 역량의 성장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역량에 따른 행정 지원의 방식과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 충남의 희망마을만들기 프로젝트

- 마을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 특성에 맞게 「융복합화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주민역량의 성장에 따라 ‘일반 → 새싹 → 꽃 → 열매마을’로 단계적 사업 지원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사업 경험이 없고, 주민 역량이 낮은 일반마을에 주민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강화하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을 지원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여 희망마을 단계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
 - 희망마을로 지정된 이후에 국·도비를 연계하여 소규모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의 달성 정도에 따라 보다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설계했다.
- 희망마을만들기와 별도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자치 구현을 목적으로 충남형 주민자치 실행계획도 수립하여, 주민자치를 비롯한 지역공동체 발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행정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주민자치 “4대모델 개발·보급”을 비롯한 5대 역점과제 제시
 - 주민참여증진조례 및 행복한동네자치지원조례 제정 추진

표 3-11. 충남의 살기 좋은 희망마을만들기 단계별 추진 계획

유형 분류	주민 역량 정도	마을 수(개)		핵심사업 전략	실천사업 (연계사업)		예산 투입	목표 (2014)
		4,279	100%					
일반 마을	초보수준	3,224	75%	기초적 동기부여	역량강화 리더육성	리더교육 역량사업	도·시·군비 지원	57% (감18%)
희망 새싹 마을	관심수준	561	13%	신규시책 사업 (1~2년)	소규모사업 (단기사업)	희망마을 녹색농촌	국·도비 연 계	21% (증8%)
희망 꽃 마을	진행수준	385	9%	기존사업 연계부여 (3~5년)	추진 중인 사업과 패키지화 (융복합화)	권역단위 종합개발 읍·면소재지 종합개발	국·도비 연 계	14% (증5%)
희망 열매 마을	형성수준	109	3%	성과분석 리모델링	활력사업발굴 (소득사업)	마케팅지원 경영분석	국·도비 연 계	8% (증5%)

* 자료: 충남넷(<http://www.chungnam.net/>)

2.2.5.

□ 배경과 취지

- 청주시 도시기본계획('2021청주도시기본계획및재정비', '00.9.~'01.12.)을 주민 참여로 수립한 이후, 청주시 마을만들기 활동에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 '청주시경관형성기본계획'(2002)의 일환으로 청주시 용암동(녹색마을만들기), 사창동 중문지구 등 마을에 행정 주도로 주민참여 방식의 마을만들기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주민협약을 수립하면서 도시형 마을만들기 활동의 초기 경험이 형성되었다.
- 청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을 주도했던 충북대학교 도시계획연구실을 중심으로 청주시 도시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단법인 형태인 '주민참여도시만들기주민센터'를 설립하였다.
-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되어 청주 도농통합시 출범을 앞두고 기존에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던 행정구역이 4개의 구로 재편되면서, 청주의 도시와 농촌 지역을 연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청주시와 청원군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지역발전계획을 구상하여, '12년부터 '13년 7월까지 100여 차례 주민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상황과 처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동 과제를 도출하였다.

- * '통합청주시 도시비전 만들기' 계획의 일환으로 주민제안경영대회를 개최('13.7.1)

- 청주시-청원군 경계지역에 위치한 부모산 주변에 위치한 마을들(청주시 강서1동, 청원군 강내면)을 연계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부모산 보호활동을 벌이고 부모산성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경험을 축적했다.

- * 비용은 행정 지원 없이 주민 부담(마을발전기금+독지가 기부)

- 충청북도는 청주시 도시 마을만들기 경험을 토대로 광역 차원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옥천군 등 기존 농촌 마을만들기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지역들과 관계 형성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충청북도의 광역 지원 제도와 체계

- 충청북도 '함께하는 청풍명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목적은 주민참여와 공동체복원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낙후된 마을의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 공모 방식은 마을조사 교육체험, 저탄소 녹색마을, 문화예술마을, 골목경제마을, 돌봄마을, 기타 유형으로 분류하여, 공동체프로그램과 시설 조성, 공간 조성 등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13년도 공모사업은 참가 자격이 체천시,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에 주소를 둔 7인 이상의 주민조직으로, 마을 단위 등록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다.

- 공모사업 예산은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총 2억 원을 배정하였다.

- 마을당 1,000만 원씩 15개 마을 공모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센터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다.

- 5개 시·군을 대상으로 각각 3개 마을을 선정하였다.

- (사)주민참여도시만들기지원센터는 충북도청에서 공식적인 업무 위탁이나 협약을 맺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충북 광역과 청주시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충북도청은 마을만들기 지역 공모사업 등 사업별로 충북 센터에 해당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다.

- 충북 센터는 청주시 도시만들기 활동의 경험과 성과를 도농통합시의 일원이 된 청원군을 비롯하여 충청북도의 각 시·군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각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관련 활동을 예산사업 지원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접근방식을 통해 전개하도록 돕고 있다.
- 광역 차원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을만들기 활동 지역의 경험과 지식이 연결되고 소통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 충북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요 이슈

- ‘청주시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는 쇠퇴하는 구도심에 위치한 중앙동의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8,000만 원 기금 조성(행정 예산 투입 없음)하여 빈 점포를 5년에서 10년의 임대료 고정 조건으로 신탁하여 도심재생을 유도하고 있다.
 - 현재 신탁업무센터가 관리하는 기존 점포의 75%가 입주해 있다.
 - 청주의 옛도움을 복원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수립 중이고, 도심 옛길 복원을 위한 테마사업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 충북 광역 차원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주시의 도시형 마을만들기 경험을 충북의 시·군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 특히 충북의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과 관련 단체들 간에 상호 신뢰를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공동 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2.2.6.

□ 배경과 취지

- 전라북도 마을은 전국 농산어촌의 일반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경제산업적 기반이 붕괴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면서, 거주민들의 생활 여건과 삶의 질이 하락하는 상황에 처하였다.
- 농어촌을 중심으로 쇠퇴한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전북의 시·군과 마을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 전라북도청은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면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통해 기초 시·군과 마을 차원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의 생활여건 개선과 삶의 질 증진에 초점을 두고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등 여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 전북도청의 마을만들기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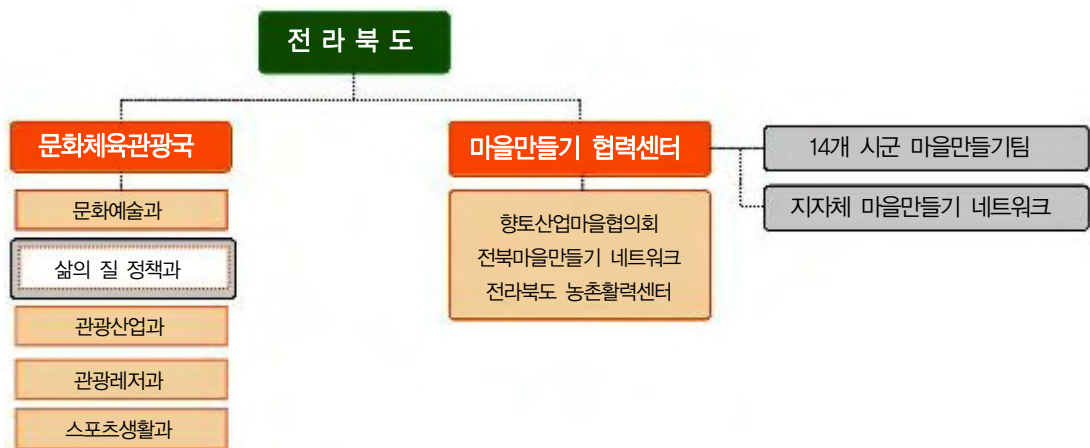
- 전라북도의 마을만들기는 전북도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한 ‘전라북도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증진하고,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전라북도 향토마을 조성사업’은 향토자원을 활용하여 소득 증대 및 공동체 육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전북형 슬로시티 조성사업’은 읍·면 마을공동체가 전통자원을 복원하고 활용하는 가운데,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성사업이자 주민이 추진하는 생활실천운동이다.
-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북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전북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 전북도청의 열악한 지방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을 재건하기 위해 물리적 개발보다 공동체 차원의 역량 강화와 활력 증진에 초점을 두고 마을만들기의 체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광역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지역개발을 추진하면서, 전북 곳곳의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연결과 조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2009년 12월 제정된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라 마을만들기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제도와 체계를 구성하였다.
 - 전북도청의 지방예산 중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광역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인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를 개설하였다.

- 조례에 전북 마을만들기의 기본 취지와 방향을 비롯하여, 주민과 행정의 역할, 협력센터의 근거와 기능, 업무 등을 명시하여 행정 및 센터가 안정적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 행정전담부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삶의질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인 협력센터와 연계 추진하고 있다.
- 전담부서에서 전북 슬로시티 및 삶의 질 업무 분야에 각각 민간전문가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마을만들기 지원 업무와 연계하도록 하였다.

그림 3-9.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



* 자료: 전라북도 웹사이트(<http://www.jeonbuk.go.kr>).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 전북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마을만들기 협력센터가 전북도청으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마을공동체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협력센터의 총예산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10억 원이며, 센터 자체 예산으로 4억 원,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비로 6억 원을 활용하고 있다.
 - 협력센터 사업예산 총 4억 원 = 국비 2억 원(포괄보조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상의 시·도 자율편성사업) + 도비 2억 원
 - * 센터 운영을 위한 경상비는 1억 1천만 원 수준에서 활용하고 있다.
 - * 협력센터는 전북 향토마을마을 조성사업 등 포괄보조금의 시·도 자율편성사업을 자체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다.
 - 협력센터가 활용하는 마을만들기 지원비는 총 6억 원 수준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도

비), 슬로시티 교육기관 사업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마을별로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협력센터의 역할은 광역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면서, 시민사회의 마을만들기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인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 협력센터의 주요 사업은 마을자원조사, 사업 진단·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마을 컨설팅 및 모니터링·교육, 활동가 발굴과 역량강화·네트워킹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마을 자원조사: '10~'12년 기간 중 총 300개 마을자원 조사, 150개 마을 발전계획 수립 지원
 - 사업 진단·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마을 컨설팅 및 모니터링, 교육
 - 활동가 발굴과 역량 강화, 네트워킹
- 전라북도가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는 도 자체 사업인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과 슬로시티 조성사업을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
 - 기존 전북도청에서 추진하던 마을 단위 지원 및 개발 사업을 함께 이양받아 추진하면서, 전북의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체험휴양마을 전북협의회 사무국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현황

- 전북의 '향토마을 조성 사업'은 차별화된 향토자원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복합사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소득을 증대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 * 전주시(5곳), 군산시(6곳), 익산시(7곳), 정읍시(5곳), 남원시(7곳), 김제시(7곳), 완주군(6곳), 진안군(8곳), 무주군(7곳), 장수군(6곳), 임실군(5곳), 순창군(6곳), 고창군(7곳), 부안군(7곳)
- '전북형 슬로시티 사업'은 느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지역공동체에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활동하여 농촌을 활력 있게 변화시키고자 추진하는 가치중심형 사업이다.
 - 이 사업은 '12년 8월부터 추진하기 시작했다.

- '13년 슬로시티 사업은 예비지구 13개소를 공모로 선정했다.
- 사업 선정 및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역리더 및 매니저 양성교육
 - ② 슬로시티 예비지구 선정
 - ③ 주민교육 및 지역공동체 운영
 - ④ 전복형 슬로시티 지정
 - ⑤ 슬로시티 지구활성화 사업 추진

2.2.7.

□ 배경

- 전라남도는 출생율 저하와 이농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악화되는 농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행복마을 사업은 전남 3농정책(농업·농촌·농업인)의 일환으로 전남의 기반산업인 농·수·축산업을 연계발전시키고 농민의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도의 역점사업이다.
 - 전남 3농정책은 '부자 되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 실현'을 목표로 삼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의료·복지·교육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전라남도 고유 정책이다.

□ 취지와 목적

- 전라남도 행복마을 사업은 이농이나 고령화로 공동화되는 마을을 통합하거나 신규 마을로 조성하여 활기있는 마을로 탈바꿈하도록 한다.
 - 귀농·귀촌인을 적극 유인하고, 생활환경과 정주환경을 정비하여 도시 은퇴자와 이주자가 생활하는 주거지를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그림 3-10. 전라남도 행복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비전, 목표



* 자료: 전라남도 행복마을 웹사이트(<http://www.happyvil.net/>).

- 농촌지역의 생활수준을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시켜 농촌의 젊은 세대가 이농하지 않도록 유인한다.
- 지역사회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마을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 주거환경 정비가 가능하고 생산과 소비의 지속되기 위해서는 농촌 마을공간을 일정한 규모로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기본적인 생산과 사회 활동이 유지되는 생활단위를 보호함으로써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고자 한다.

□ 성과와 시사점

- 참여정부 시기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살기 좋은 도시(마을)사업 이래로 현재 까지 중앙정부의 마을 지원정책과 연계하고자 노력했다.
- 한옥형 전원시범마을 조성 및 장성군 황룡행복마을 조성 등 한옥마을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개발사업을 통해 거주민 차원의 정주환경 개선뿐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꾀하였다.
 - 2005년 12월에 제정된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지자체의 신축보조금 및 용자 지원 혜택을 병행하고 있다.
 - 한옥마을로 지정되면 한옥 건축에 대한 공공 지원을 통해 개별 주택의 품질 개선과 마을 정비 효과를 누리게 되어 지역사회와 주민공동체를 유지하고 안정화하는 데 기여했다.
 - 한옥마을이 농어촌관광과 체류형 민박으로 활용되면서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2.2.8.

□ 배경과 취지

- 제주도는 전통적인 마을 자치조직과 공동체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으며, 마을 단위의 사회조직이 꾸준히 유지되어 왔을 뿐 아니라, 마을의 인구 규모가 내륙지역 보다 상대적으로 크고 농업과 관광산업 등 지역 기반산업이 발달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사회와 마을공동체의 내적 역량이 충실히 성장해온 지역이다.
-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뉴제주 운동'을 제시하였으며, 이 일환으로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한 주민역량과 지역공동체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 제주도는 2011년부터 마을만들기의 행정지원모델을 구성하여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2010년 2월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여, 살 만하고 활력 있는 마을을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한다.

그림 3-11. 제주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비전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3).

□ 지원체계

- 제주도는 '09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마을만들기 지원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 조례에 '마을단위의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마을단위 발전 계획 수립'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제주도의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전담부서는 '08년 3월 설치된 이래로, '13년 1월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 마을발전지원부서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광역 지자체 최초로 마을만들기 전담조직인 마을발전과를 운영하였다('11.1~'13.1).
- 제주도는 '07년부터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을 실시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출한 주민공동체 사업계획을 제주도가 심사하여 지원하는 공모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 제주도가 마을만들기 주민공동체 사업을 공모하고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주민자치센터가 해당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을만

들기 사업계획을 제출한다.

- 주민자치센터 특성화사업은 1년 단위 사업에서부터 매년 연차적으로 지속 추진하는 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 마을공동체의 단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5단계 행정지원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 (1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예비마을 육성

- * 1년 단위의 도 자체사업(읍·면·동 추진)으로 연간 15개 이내의 마을을 공모로 선정하여 마을당 1,000만 원(도비 90%, 자부담 10%) 지원
- * 인센티브: 사업추진 평가를 통하여 상위단계인 2단계 시범마을 선정 시 가점 부여

- (2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마을 육성

- * 1년 단위의 행정시 자체사업으로 연간 10개 마을을 공모하여 마을당 5,000만 원 수준(도비 90%, 자부담 10%)의 사업비 지원
- * 사업내용: 명소가꾸기, 환경개선, 소규모 소득창출사업 등
- * 인센티브: 사업추진 평가를 통하여 상위단계인 3단계 추진마을 공모선정 시 가점 부여

- (3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추진마을 육성

- * 1년 단위 도 자체사업으로 연간 5개 수준의 마을을 공모로 선정하여 마을당 1억 원 수준(도비 90%, 자부담 10%)의 사업비 지원
- * 사업내용: 지역특성 및 자원을 활용한 소득 및 일자리 창출사업 우선, 기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 * 인센티브: 사업추진 평가를 통하여 상위단계인 4단계 중앙지원사업 응모 시 가점 부여 및 행정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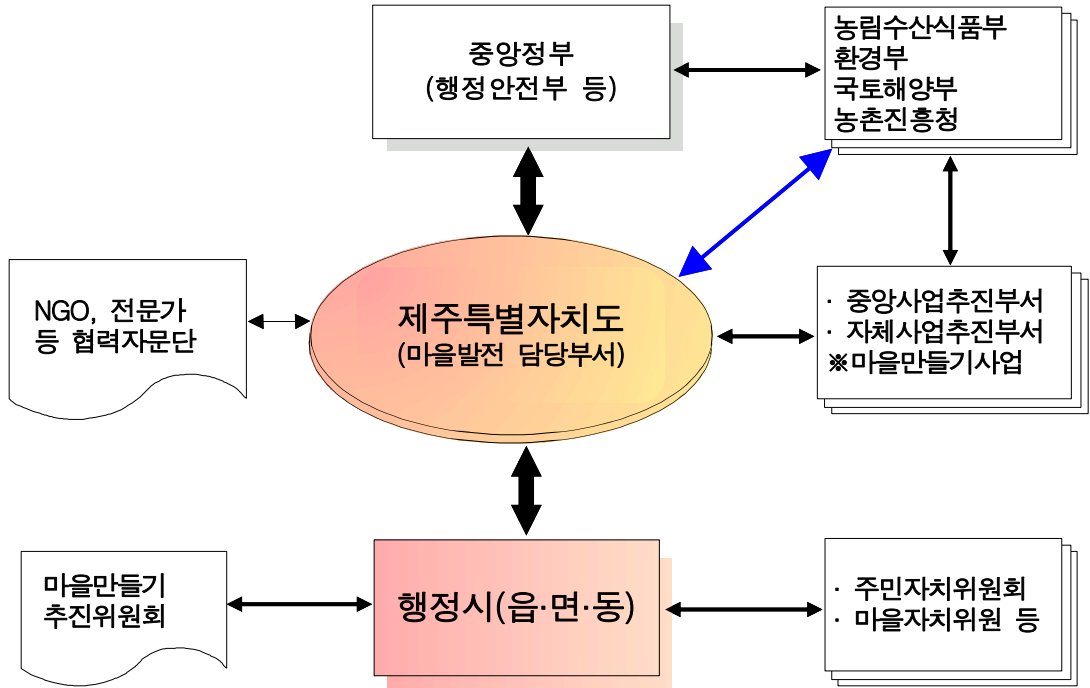
- (4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중앙사업 응모 추진마을 육성

- * 1~3단계 사업을 충실히 추진한 우수마을에 대하여 중앙부처 지원사업 응모 시 우선 추천 및 중앙 절충 강화
- * 사업선정 추진 시 전문가 컨설팅 등 적극 지원
예) 농촌마을 권역정비사업(농식품부), 농어촌체험휴양마을(농식품부), 마을공동소득창출사업(농식품부), 마을기업(행안부) 등

- (5단계)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 사후관리

- * 커뮤니티비즈니스 마을(1~4단계)로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된 마을에 대하여 운영 평가로 지속 발전하도록 대책 마련
- * 미흡한 마을은 추진조직 재정비, 전문가 멘토 지원

그림 3-12. 제주도 마을만들기 행정추진체계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3).

□ 제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 제주도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매년 12월에 수립하여 다음 연도 광역행정의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계획과정에서 마을만들기 전문가와 리더, 활동가들의 자문을 반영하고 있다.
 - 계획수립 시기: 매년 12월 익년도 지원계획 수립
 - 계획수립 주체: 제주특별자치도(전문가, 주민 자문)
- 마을만들기를 통해 마을의 장기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위해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제주도가 지원하고 있다.
 - 계획 수립 주체: 마을회를 비롯한 마을추진위원회
 - 계획의 내용: 마을계획의 비전과 목표, 마을 현황, 주민 역량강화, 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활성화, 문화공간 조성 등 주민 참여로 수립
 - 계획 수립 지원
 - * 마을단위 추진위원회 스스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의 컨설팅 지원 등 소요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 *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때 발전계획이 수립된 마을에 대하여는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주도가 마을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중앙정부의 마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한다.
 - 읍·면 1권역 사업 추진을 원칙으로 농어촌마을에 대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한다.
 - 제주시 한림읍, 추자면, 우도면, 서귀포시 성산읍, 동지역의 농촌진흥지역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유치하도록 노력한다.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확대: 20개 마을(기존 14마을)
 - * 기타 관련사업: 소득창출사업 등
- 마을의 마을만들기 추진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여 개선점을 발전적으로 보완하도록 지원한다.
 - 공동프로그램 개발,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소득 증대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한다.

표 3-12.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사업의 연도별 지원비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구 분	합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마을	지원액	마을	지원액	마을	지원액	마을	지원액	마을	지원액	마을	지원액
합 계	21	2,100	6	600	6	600	3	300	3	300	3	300
제주시	9	900	3	300	3	300	1	100	1	100	1	100
서귀포시	12	1,200	3	300	3	300	2	200	2	200	2	200

* 자료: 제주특별자치도(2013).

□ 제주도의 민관협력체계

-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모색한다.
 - 주민역량 강화: 워크숍, 토론회, 학습프로그램, 벤치마킹 등
 - 리더역량 강화: 리더아카데미 운영, 전문기관 교육참가 등
 - 전문가역량 강화: 포럼 운영, 국내 세미나 참가, 전문기관 교육 참가 등

- 지원: 예산 범위에서 주민워크숍, 전문가 컨설팅료 지원
- 제주도의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가 전문가 포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수렴 등의 의사소통채널을 확보하는 등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마을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및 주민의 기획·추진 역량 강화, 마을사업활성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 주민 스스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고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도록 도모한다.
- 행정실무 협의회 구성·운영
 - * 구성인원: 15명 내외
- 전문가 협력단 운영
 - * 운영인원: 50명 내외
 - * 참여대상: 학계, 유관기관, 연구기관, 경험자, 귀농귀촌인 등
 - * 주요기능: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아이디어 제공, 마을만들기 모니터링 및 정책 발굴 등
- 민간협의회 구성 운영
 - * 추진 마을 간 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정보공유 및 마케팅 강화로 마을 활성화 유도
 - * 대상마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농촌마을권역협의회,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 협의회 등
 - * 운영활성화: 공동프로그램 개발, 공동마케팅 활동 등

□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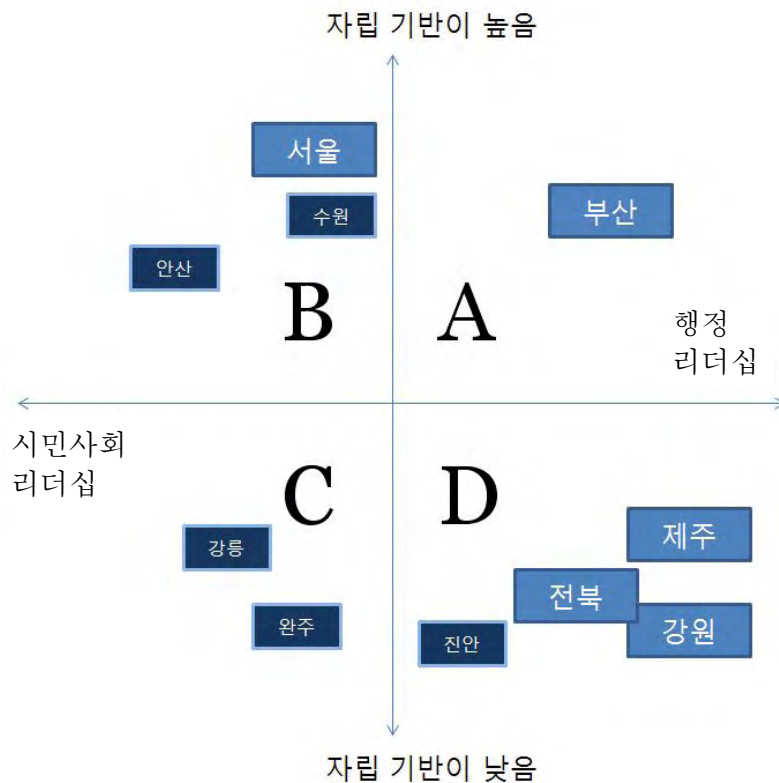
- 제주도 광역지자체에 마을발전 담당부서를 두고 행정시의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는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제주도는 주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통한 마을경제 활성화와 소득 증대의 차원에서 마을을 육성하고 있다.
- 제주도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지 않고, 제주도와 시·군 지자체가 협력하여 마을공동체의 사업경험과 주민역량에 따라 지원단계를 설정하여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다.
 - 지금까지는 지원기관별, 단위사업별 추진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으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어 왔으므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5단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1단계(예비마을) → 2단계(시범마을) → 3단계(커뮤니티 비즈니스 추진마을) → 4단계(중양사업 응모마을) → 5단계(사후관리마을)

2.3.

□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추진 유형

○ 전국의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구성 중인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를 개념적으로 범주화하기 위해 역량과 리더십에 관한 두 가지 축을 도입하여 살펴보았다.

- * 역량(자립 기반): 광역 지자체의 경제산업적 활력과 인적자원 등 지역사회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적 역량을 세로 축으로 설정
- * 리더십: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주도하는 주체를 시민사회와 행정 차원으로 구분하여 가로 축으로 설정



- * B분면: 서울을 비롯하여 수원, 안산 등 경기도의 대도시들은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고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가 많아 지역의 역량이 타 지역보다 발전한 광역 지자체로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협력적 리더십을 상대적으로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범주이다.
- * D분면: 강원과 전북, 제주 등 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 우세한 광역 지자체는 상대적으로 저발전된 지역인 동시에, 국가의 재정지원 및 지역개발정책 등 행정의 리더십을 통한 발전이 필요한 범주로 구분한다.

- B분면에 속한 광역 지자체의 경우, 기존에 잠재해 있으나 충분히 활용되지 않아 지역사회에 산재한 자원을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서로 매개하고 강화하면서 마을공동체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는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 광역 지자체는 지역사회가 보유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마을공동체의 변화와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체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모색할 필요가 있다.
- D분면에 속하는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역사회 내부의 미흡한 역량을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지역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 경우 광역 지자체는 기존의 산재한 국가 지원사업이 개별 시·군과 마을에 무분별하게 전개되지 않도록 광역 차원에서 총괄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광역 지자체의 역할

- 행정이 마을만들기 지원 방식을 주민과 지역사회의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 마을공동체 역량의 성장 과정에 따른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의 필요를 충족하도록 공공의 지원 방식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공공 지원의 초기 단계는 주민자치프로그램, 공동체사업 등 주민의 자율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 광역지자체는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중대규모 사업 실행의 필요성이 제기된 마을을 중심으로 각 사업의 여건과 목적에 맞는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연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도청 총괄조직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과 더불어, 민·관 거버넌스에서 공공의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공적인 논의와 의사소통, 합의 형성을 위해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참여해야 한다.
 - 마을만들기에 관계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이 마을별 필요 및 취지에 조응하도록 사업 연계 지원 과정에서 도청 부서 간 협력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수립을 총괄하는 동시에,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및 체계를 계획 의도와 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운영·관리할 책임을 부여받는다.
 - 광역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광역 단위 마을만들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시·군 차원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유기적인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하다.
 - 시·군 중간지원조직과 역할 배분과 관계 설정 문제가 제기된다.
 - * 전라북도 마을만들기협력센터의 경우, 진안군과 완주군과 같이 시·군 차원에서 활동하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지원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 지자체에서는 마을지원사업이나 컨설팅 등 시·군 사업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공동협력사업이나 네트워킹 등 배후지원을 통한 연계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 서울시는 광역중간지원조직인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의 주민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육성하면서, 동시에 장기적 전망으로 자치구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와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경기도형 마을만들기의 쟁점
- 경기도가 지닌 도농복합적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경기도형 마을만들기 브랜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시·군별로 마을만들기 역량 수준이 차별화되어 있고, 지역 여건이 상이한 특성을 감안하여 경기도형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 문화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 경기도 상황을 고려하여 마을공동체와 주민역량 형성을 돕는 사업 지원 방식에서부터,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경제적 여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장기적 계획 지원 방식까지 마을의 성장 과정에 따라 단계적 행정지원체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 문제 인식과 마을만들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초기 단계 역량강화 지원 방식을 놓고 경기도와 일선 시·군 지자체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어떻게 모색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한 마을공동체계획과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을 연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과정에서 경기도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성찰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중앙정부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도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 <표 3-13>과 같이 도시활력증진지역, 일반농산어촌지역, 특수상황지역 등 기초생활권 유형이 복합된 경기도 특성을 고려하여 부처 간 사업연계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3-13. 경기도의 기초생활권 유형별 시·군

부처	기초생활권 구분	해당 시·군	비고(도서지역)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지역(17)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
농식품부	일반농산어촌지역(7)	평택시, 양평군, 이천시, 안성시, 광주시, 여주군, 가평군	-
안행부	특수상황지역(7)	동두천시,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안산(풍도, 육도) 화성(제부/국화도)
국토부	성장촉진지역(0)	-	-

-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가 경기도에 마을만들기 문화와 활동양식을 형성·확산하고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역할과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지자체의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의 역할이 다양하게 모색되는데 점을 감안하여, 시·군과 효과적 연계와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 주민 역량이 아직 미약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당수 시·군에 마을만들기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다른 한편 경기도가 역할 범위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경우 시·군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활동을 지원하는 일부 지역의 경우 경기도와 시·군의 역할이 상충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광역 중간지원조직 설립의 필요성

- 향후 구체화될 광역 단위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그 위상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여 이를 경기도 차원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경기도 행정에서 마을 대상의 현장밀착형 지원 활동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 따라서 마을공동체 단위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체계는 기초 시·군 지자체에서 체계화하고 행정 지원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주요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의 역할을 단순 대행하거나 일선 현장을 지시·감독하는 위계

적인 기구가 아니라, 행정과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간 협력을 매개하는 가운데 유
연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간지원조직은 행정과 시민사회 간, 혹은 협력자 간,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제기되는 긴
장과 이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지역이 공동으로 당면한 의제를 논의하고, 합의하며,
협력하도록 매개하는 역할이 중요하게 부여된다.
-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도 차원의 중간지원조직 설립 시에 다양한 형태의 조직 모델을
고려해볼 수 있다.
 - * 공무원 중심 직영 및 필요시 외부의 전문가 부분 활용
 - *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일부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보완
 - * 민간전문가와 활동가가 중심이 되는 별도 지원기구를 설립
 - * 사업운영 등 일부기능에 민간·시민단체 혹은 대학에 위탁 운영
- 경기도청 마을만들기 실무부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 부서 간 연계 및 조정을
위한 상시적인 의사소통채널을 구축하는 등 행정 내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과
유관부서 간 효과적 연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14. 마을만들기 광역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역할		설명
공모사업 기획·관리	사업기획	■ 공모사업 기준 제시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관리·모니터링	■ 공모사업 마을 선정·관리·평가 및 모니터링
협력사업	마을협력	■ 마을만들기 지역 간 연계
	도농교류	■ 도시-농촌 마을 간 호혜적 사회·문화경제 교류
	권역 협력	■ 권역별 마을 간 연계·교류 활동 매개와 촉진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 마을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농촌활성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협력
전문가관리		■ 전문가-풀 관리 및 마을의 필요에 따른 전문가 연결
마을DB 관리·활용		■ 마을현황·자원 DB 구축 및 관리
시·군 역량강화 지원 사업		■ 기초-광역 협력센터 간 협력 및 역할분담 ■ 기초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역량 강화
기타	교육홍보사업	■ 마을만들기 마케팅 및 문화 확산

여 백

경기도 마을만들기 실태와 과제

4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경기도 시·군의 마을만들기 추진 현황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현황과 평가
3. 마을만들기 여건 및 역량 진단

여 백

제 4 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1.

1.1.

□ 기초 시·군의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 2013년 12월 현재, 수원시와 부천시, 안산시를 비롯한 경기도 15개 시·군에서 마을 주민공동체의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 기초 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주로 행정지원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마을만들기위원회 등 행정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체계를 조직하는 내용으로

표 4-1. 경기도 시·군의 마을만들기 조례

시·군	조례명	제정일시
수원시	■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2010.12
부천시	■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4
안산시	■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	2007.9
안양시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2013.9
남양주시	■ 마을가꾸기 지원 조례	2011.4
화성시	■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2012.7
평택시	■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발의 중)	2013.12
시흥시	■ 희망마을 만들기 조례	2010.1
양주시	■ 행복 마을 만들기 조례	2008.5
오산시	■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지원조례	2012.2
의왕시	■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2013.9
하남시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2011.5
과천시	■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13.8
가평군	■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평가조례	2005.6
양평군	■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2013.4

구성되어 있다.

- 마을만들기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하여, 마을공모사업에 대한 신청·평가·포상, 전담부서과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마을만들기위원회와 같은 민관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조례가 제정된 시·군 중 다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시행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공모사업 신청·평가·포상, 사업비 관리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운영·심의하기 위한 운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 마을만들기 전담 및 담당부서 현황

○ **[전담부서]** 경기도 시·군의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는 2013년 현재,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비롯하여, 성남시와 부천시, 시흥시에 설치되어 있다.

-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을 운영, 단장 외 6명의 전담인원으로 구성

- 성남시: 자치행정과에서 행복마을팀을 운영

- 부천시: 창조도시사업단 원도심지원과에서 마을만들기팀을 운영

- 시흥시: 주민자치과 마을만들기팀은 팀장 포함 3명의 전담인원으로 구성

○ **[담당부서]** 경기도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는 2013년 현재, 안산시 민간협력계 내의 마을만들기 담당팀을 비롯하여, 고양시, 남양주시, 이천시, 의왕시 등이 있다.

- 안산시: 자치행정과 민간협력계

- 안양시: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 고양시: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 남양주시: 참여소통과 시민참여팀

- 이천시: 평생학습과 자치학습팀

- 의왕시: 도시창조과 도시재생팀

- 양평군: 기획감사실 기획조정팀

□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

○ 경기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4-2>와 같다.

표 4-2. 경기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2013년 현재)

시·군	공모 분야	지원 규모(마을당)	사업 내용(사례)
수원시	공동체프로그램	200~500만 원 (92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문화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취약계층 커뮤니티활동 지원 - 마을 자원·특성 활용 행사비 지원 ■ 소규모환경개선(마을정원·텃밭가꾸기)
	시설공간조성	~4,000만 원 (31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녹지(마을정원·텃밭·생태공원) ■ 골목길환경개선(화단·벽화·테마거리) ■ 주거환경개선(침터·쌈지공원) ■ 공동주택커뮤니티(시설리모델링)
안산시	생활환경개선	500~3,000만 원 (8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거점 분리수거함, 화단 조성 ■ 놀이터 환경개선·지킴이단 활동 ■ 안전한 등교길 캠페인 ■ 숲속달팽이 체험학교
	공동체형성·복원	300~500만 원 (10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예술단 재능나눔 프로그램 ■ 에너지절약 마을만들기 주민참여교육
	주민동아리지원	150~200만 원 (12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규모 주민모임 활동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연극, 음악), 교육(어린이놀이) - 에너지절약
고양시	주민자유제안	500~2,500만 원 (34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소리보존, 기능인육성 지원 - 우리마을역사찾기, 역사신문 발간 - 청소년문화예술학교 운영 지원 ■ 공동체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극장, 카페, 재능기부합창단 ■ 생활환경개선: 벽화, 산책로
남양주시	주민자유제안	1,000~3,000만 원 (32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리모델링, 주민침터·화단 조성 - 어린이프로그램, 품앗이교실 운영 ■ 지역활성화(상가번영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거리조성, 정기공연 등
시흥시	주민자유제안	500~1,500만 원 (27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장터, 마을지도, 작은도서관 -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마을학교 운영 ■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천, 골목길, 등산로, 돌레길 정비 - 마을공원·놀이터 디자인 개선
이천시	주민자유제안	260~500만 원 (14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복지·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안내판, 이정표, 문패제작 - 등산로·정원 정비 - 이웃돕기(산수유비누판매)
성남시	공동체문화 생태·생활환경개선 지역활성화 도모	200~500만 원 (14개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문화 지역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신문, 미술심리치료, 스토리텔링 - 시장갤러리, 시장축제 ■ 생활환경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텃밭·화단 조성
양평군	주민자유제안	3,000만~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증대, 일자리창출

1.1.2.

□ 수원시 행정 제도와 체계

- 수원시의 마을만들기 전담부서는 수원시 마을만들기 추진단으로, 단장 외 6명의 전담인원으로 구성된다. 마을만들기 기획, 사업 추진, 홍보, 공모사업 운영, 지원센터 지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마을만들기 추진단은 행정조직체계상 일반부서가 아닌 제2부시장 직속 조직으로 운영된다.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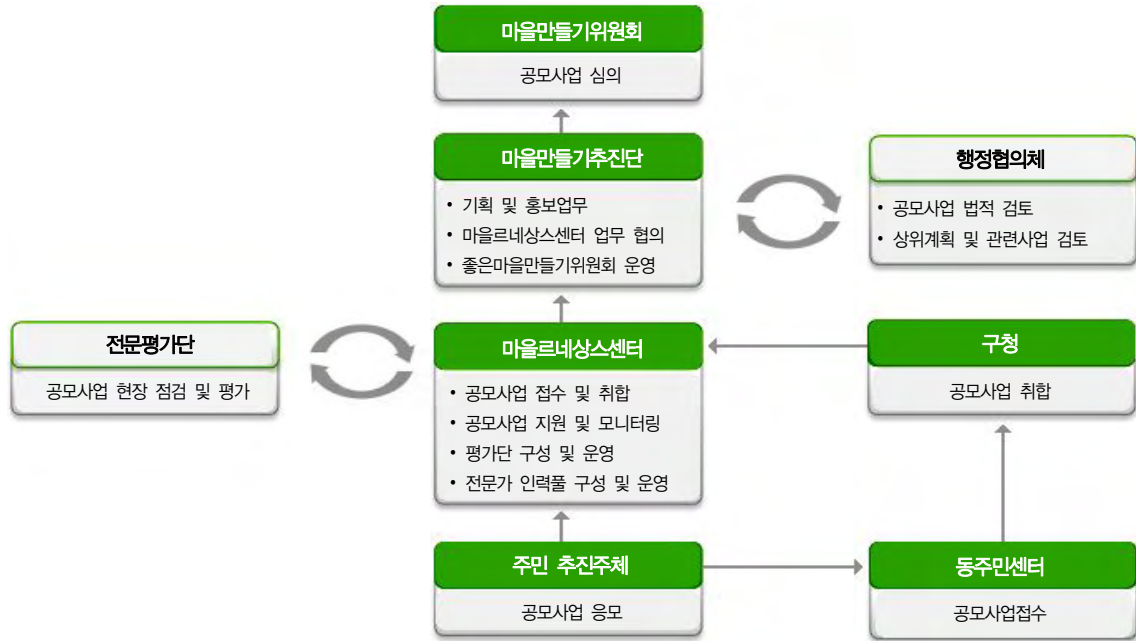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지난 개발정책을 반성하면서,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고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설립했다.
 - ‘마을만들기 조례’ 16~18조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를 개소했다.
- 마을만들기는 주민-행정-제3그룹(단체, 전문가, 학교, 기업 등) 등 세 부문 주체의 협력적 거버넌스에 의해 추진된다.
 -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참여자에게 정보, 교육, 프로그램 등을 비롯한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제공하는 통합적 지원활동을 수행한다.
- 마을르네상스센터는 ‘수원의제21’에서 위탁 운영한다.
 - 센터 운영, 마을학교 및 도시대학 운영 등 주로 주민 교육과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센터1팀, 공모사업 및 홍보 등을 담당하는 센터2팀으로 구성된다.
- 마을르네상스센터가 수행하는 주요 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연구회, 포럼, 워크숍 운영
 - 주민역량강화 사업: 마을학교, 도시대학 운영, 마을만들기 관련 교육
 - 공모사업 추진: 공모사업 접수, 지원 및 모니터링 등
 - 마을 자원 발굴 및 활용
 - 연구 및 홍보: 소식지 및 백서 발간, 마을만들기 동향 연구 등

그림 4-1.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의 주요 활동



- 지역의 마을만들기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위해 매월 1회 정기 마을포럼을 개최하고, 비정기적으로 마을회의를 개최한다.
 - 또한 블로그, SNS 등 온라인 네트워크 포럼을 운영한다.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마을학교’와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마을학교는 주민 스스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이 6~10명으로 한 팀을 이루어, 총 5주 동안 30시간(전문가 강의 6시간, 실습 22시간, 발표 2시간)의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팀이 조사·토의하여 과제물을 작성·발표하고 지도교수의 피드백을 거쳐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한다.
 - 도시대학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제외된 낙후 마을을 사례로 공동체 형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8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약 8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며, 도시계획 수립과정을 준용하여 현황 조사, 현황 분석, 계획 구상,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으로 강의·토론·발표 등을 진행한다.
-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시행을 위한 각종 업무를 담당한다. 공모 사업 접수, 지원 및 모니터링, 평가단 구성과 운영, 전문가 인력풀 구성·운영 등을 담당한다.
 -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공동체 프로그램, 소공간 중심의 하드웨어 사업, 공공시설을 포함한 환경개선사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추진한다.

그림 4-2. 공모사업 운영체계



- 마을르네상스센터는 마을만들기 홍보, 관련 연구활동도 수행한다.
 - 마을만들기 소식지, 웹진 등을 발간하여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 소개, 공모사업 추진 관련 정보 등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마을만들기 사례 조사 및 연구 동향 조사 등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마을만들기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림 4-3. 마을르네상스 소식지



* 자료: 마을르네상스센터(2012).

1.1.2.

□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 안산시의 마을만들기 활동은 2000년 무렵부터 시민사회와 마을공동체 주도로 시작되었다. 2005년부터 안산의제21의 분과활동 중 마을만들기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조례 제정과 지원센터 건립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 안산의제21 마을만들기 분과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안산 마을만들기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시민사회 차원의 협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2007년 1월 ‘안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같은 해 9월 ‘안산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가 제정·공포되었다.
- ‘안산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은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는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를 비전으로 삼고, ① 마을을 이끌어가는 주민리더 및 조직 키우기, ② 다함께 행복한 마을 공동체 만들기, ③ 사람의 삶을 배려하는 마을환경 가꾸기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안산시의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2008년 3월에 설립하여, 안산기독교청년회(안산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 ‘안산 마을만들기 시민단체 네트워크’ 구성원들이 지원센터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운영위원회 및 소위원회로 구성·운영된다.
 - 운영위원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3인, 시의원 3인, 전문가 3인, 시민네트워크 8인, 자치행정과, 사무국장 등 19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 소위원회는 사업분야, 교육분야, 전문분야로 세분되어 있으며, 센터의 운영위원, 관련 전문가, 지역 주민리더가 참여한다.
- 지원센터 사무국은 사무국장 외 2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3.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조직체계

운영위원회 (20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위원장: 유영대 안산YMCA 이사 • 운영위원(총 19명): 주민자치위원회 3인, 시의원 3인, 전문가 3인, 시민네트워크 8인, 자치행정과, 사무국장
		역할	격월 운영, 연 총 6회 회의 개최
소위원회	사업분야 (8인)	구성	센터운영위원7, 타지역전문가1
		역할	사업 기획에서 평가까지 마을멘토 담당
	교육분야 (8인)	구성	센터운영위원1, 지역전문가2, 지역주민리더2, 타지역전문가3
		역할	사업 기획에서 평가까지 마을리더교육 담당
	전문분야 (8인)	구성	센터운영위원2, 지역전문가4, 타지역전문가2
		역할	마을포럼, 마을디자인대학 담당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이다.
- 행정과 시민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매개한다.

그림 4-4. 안산시 마을만들기의 행정-주민-지원센터 관계



* 자료: 이현선(2013).

그림 4-5. 안산시 지원센터가 매개하는 지역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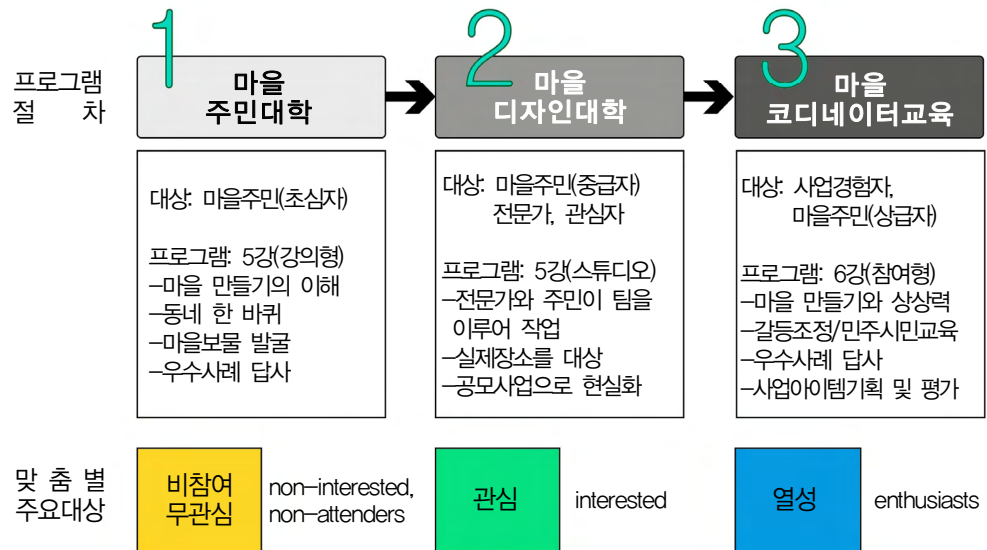


* 자료: 이현선(2013).

□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지원, 사업 지원, 조직 지원, 교류협력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한다.
 - * 교육지원: 주민대학, 디자인대학, 코디네이터 및 청소년 교육
 - * 사업지원: 주민공모사업, 아이디어 공모 기획사업, 외부협력사업
 - * 조직지원: 마을주민동아리, 청년서포터즈
 - * 교류협력: 포럼, 연구조사, 정책 네트워크
- 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총 3단계의 절차로 교육을 진행한다.
 - 1단계인 '마을 주민대학'은 마을 주민(초심자)을 대상으로 강의 형식(5회)으로 진행한다.
 - 2단계인 '마을 디자인대학'은 1단계를 이수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5주 동안 전문가와 주민이 팀을 이루어 작업하는 스튜디오 형식으로 진행한다.
 - 3단계인 '마을 코디네이터교육'은 사업 경험자와 1·2단계를 이수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형 강의 형식(6회)으로 진행한다.

그림 4-6. 안산시 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 체계도



* 자료: 이현선(2013).

- 안산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일반공모와 기획공모 사업으로 구분된다.
 - 일반 공모는 마을신문, 마을축제, 청소년 마을교육, 지역화폐 등 ‘공동체 의식 형성 및 복원’ 분야와 어린이놀이터, 마을정원, 생태학습장 등과 같은 ‘생활환경 개선’ 분야로 나뉜다.
 - * 심사는 지원 센터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안산시 운영위원회 심의로 의결
 - 기획 공모는 공동체 구성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마을 동아리 활동, 주민모임 구성 등을 지원한다. 행정구역상 같은 동에 살고 있는 5인 이상이면 참여 대상이 된다.
 - * 심사는 지원 센터에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
- 마을만들기 연구·홍보활동을 수행한다.
 - 2013년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지역과 마을만들기 현안에 관한 포럼을 개최하고, 공모사업과 연계한 연구를 비롯한 마을만들기 연구도 추진한다.

표 4-4. 안산시 지원센터 개최 마을포럼

2008년	제1차, 마을만들기 비전과 전략으로서의 마을계획 수립
2009년	제2차, 유럽의 비법정계획의 이해와 국내적용가능성 제3차, 주민참여형 마스터플랜-서울 성북구 삼선4구역 사례 제4차, 화정동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발표회 제5차, 일본 마을만들기의 특징과 운영실태
2010년	제6차, 마을만들기와 창작스튜디오 제7차, 다가구 주택지역 주차문제 해결과 마을만들기 제8차,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즈니스 제9차,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시 이야기
2011년	제10차, 단독주거지 쓰레기문제와 마을만들기 제11차, 뉴타운 정책의 새로운 대안, 서울시 휴먼타운 제12차, 쓰레기문제와 마을만들기2 제13차, 마을만들기 거점이 힘이다,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거점생산의 중요성
2012년	제14차, 단독주택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에 관한 토론회
2013년	제15차, 쓰레기 없는 마을만들기는 현재 진행 중

1.1.3.

□ 양평군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

- 양평군은 2011년부터 ‘읍·면 비전 2020 주민참여 지역만들기¹²⁾’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200여 개의 크고 작은 읍·면발전계획 사업을 군정에 반영하고, 공통 문화사업으로 골목 벽화, 10만 그루 나무심기를 추진하며, 삶의행복운동과 연계할 읍·면별 지역만들기 대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두고 있다.
- 2013년부터는 마을만들기를 본격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양평군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양평군은 기존 ‘양평군 지방행정의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양평군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조례’를 통합하여 2013년 4월 17일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12) 양평군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가리켜 ‘지역만들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이 조례는 ‘양평군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양평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함으로써 양평군과 주민이 신뢰를 기반으로 협동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 주민참여 및 마을만들기를 위한 군과 주민의 책무,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역할,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군의 사업 지원,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 양평군은 마을만들기 업무를 담당할 행정 전담부서나 별도의 지원센터를 두고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기획조정팀)에서 지역만들기 담당자 1명(非전담)이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기존에 기획감사실과 총무과에서 각각 운영되던 지역만들기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하도록 조정되었다.
- 양평군은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2013년 10월에 ‘양평군 주민참여위원회’를 발족하였다.
 - 위원장은 부군수이고, 25명 이내의 주민참여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간사(1명)는 기획조정팀장이 맡는다.
 - 위원은 공모제 등 공개적 절차를 거쳐 주민, 사회단체 관계자, 각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다양한 부문의 인사를 군수가 위촉한다.
 - 양평군 주민참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조례 제10조)
 - *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 *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 * 읍·면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 지역 만들기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 * 생활공감정책¹³⁾ 공모제안의 심사에 관한 사항
 - * 그 외 군정 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 또한 각 읍·면별로 지역만들기위원회를 구성하였다.¹⁴⁾
 - 지역만들기위원회는 3개 분과에 각 10여 명으로 이루어지며, 읍·면당 30~50명 규모로 구성된다.

13)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14)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읍·면 주민참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마을만들기 지원 활동

- 2013년에는 ‘전국에서 단 하나뿐인 특성과 콘텐츠 등을 갖춘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인 “양평군 행복공동체 지역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6개 마을을 선정·지원하였다.¹⁵⁾

< 참고: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 >

- ‘물맑은 양평농촌나드리’((사)물맑은양평농촌나드리)는 양평군 ‘농촌체험마을 네트워크’로서, 양평군 체험마을들 간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양평 농촌관광을 알리고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06년에 사단법인을 설립
 - * 양평농업기술센터 3층에 위치
 - * 2011년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제2011-37호) 및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공동체회사로 지정
 - * 2013년 상반기 협동조합으로 전환
- 양평에 위치한 농촌체험관광 마을의 운영 지원을 수행
 -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포털기능을 수행
 - 양평농촌관광 포털사이트(www.ypnadri.com)를 운영하고, 파워블로거 홍보단과 여행 관련 블로그 및 카페 홍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홍보
- 각 마을의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체험관광테마를 조성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 20여 개 마을 각각의 체험프로그램 나열이 아니라, 4계절별 핵심테마 1~2개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마케팅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동마케팅 전략
 - 가령, 봄에는 딸기 따기, 여름에는 물놀이, 가을에는 각종 열매 수확, 겨울에는 썰매 타기 등 대표 테마를 정해 체험객을 모집하고, 그 외 프로그램은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 도시민 체험객 증가: ('06) 535명 → ('12) 4만 명
 - * '12년도 매출액 11억 원 ('11년 대비 28% 증가)
- 농·특산물 직거래 등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소득 증대 활동도 전개
- 개별 마을에 체험관광 관련 컨설팅 지원, 마을주민 교육 등도 하고 있음
- 양평군에서 사무실 운영비 등 연 1억 원을 지원
- 수익의 10%는 공공기금(새마을)으로 적립해 둬, 그 외 운영비 등을 제하고 난 수익은 연말에 마을주민에게 기여도에 따라 배분

* 자료: 양평군(2013).

15) ‘양평군 주민참여 및 지역만들기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지역 공동체 의식 기르기를 통한 주민자치 기능 강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의 지역 만들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① 읍·면 발전계획에 따른 사업
- ②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 대상은 12개 읍·면의 마을 또는 단체이며, 공모 분야는 다음과 같다.
 - * 지역경관 조성: 간판, 산책로, 공원, 상징물 설치 등
 - * 역사·문화 재생: 마을축제, 전통거리조성, 특산물 개발 등
 - * 일자리·소득 창출: 마을기업 육성, 농산물전시장, 체험마을, 공동작업장
 - * 대상(1개 사업) 1억 원, 최우수상(1개 사업) 7천만 원, 우수상(1개 사업) 5천만 원, 장려상(3개 사업) 3천만 원 등 총 3억 1천만 원의 사업비 지원
- 양평군은 공모사업 이외에도 각 읍·면 단위로 1~2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 읍·면(읍·면 지역만들기 실무추진단)에 각각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 2013년에 각 읍·면에서 벽화그리기, 화단 조성, 바람개비 설치 등을 추진했다.
- 상기와 같은 지원사업 외에 마을만들기를 지역에 홍보하고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양평군은 읍·면별로 이장, 새마을회, 지역만들기 위원회, 참여 희망 주민 등을 대상으로 ‘위풍당당 어르신 교육’, ‘장&장 리더십 교육’ 등의 교육 지원을 진행한다.

1.1.4.

□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실행하게 하여 주민 사이에 서로 소통하고, 마을에 대한 관심과 고민, 애정을 갖게 하기 하며, 동시에 마을만들기 교육과 연계하여 주민의 동기 부여를 꾀하기 위해 추진하는 주민공모사업이다.
- 2013년 사업은 총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통해 ‘공동체 문화만들기’를 비롯한 4가지 사업 유형을 구분하고, 14개 마을을 선정하여 진행했다.
 - 성남시 공모사업의 4가지 유형
 - * 공동체 문화만들기: 9개 마을
 - * 쾌적한 생태환경조성: 2개 마을
 - * 생활환경 정비 및 개선: 2개 마을
 - * 지역활성화 도모: 1개 마을

표 4-5. 성남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2013년)

사업명	마을	사업내용
마을신문만들기	장미현대입주사대표회의	마을신문제작(프로그램강사로 지원)
힐링문화 카페	느티마을사랑	미술심리치료가 매개가된 주민소통
물레방아 테마 미술 작품전	이매물레방아	물방아골 예술 거리 만들기
어르신 식사섭기	성남시행복마을만들기리더	어르신들에게 월1회 점심대접
종합운동장 활용	종합운동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종합운동장을 공동체장소로 활용 풍물교실, 영화제 등
열린중원 문화광장	열린중원문화광장추진위원회	문화체험으로 문화소의 해소
지역명사 스토리텔링	정보톡, 힐링톡	지역명사의 스토리텔링
운중천 카페거리 조성사업	운중천문화거리조성위원회	노천카페거리조성, 천변 음악연주회
붓들마을 사랑꿈 텃밭가꾸기	붓들마을6단지 꿈너비	텃밭분양 주민공동체
향기있는 논골 마을만들기	단대동 논골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 외3개 단체	논골쉼터, 꽃식재
신흥동도시생활농부 공동밥상	신흥동르네상스	노후주택 옥상텃밭 조성
사랑의 '원마을'	성남함께하는주부모임외 5개 단체	시장활용 동네공동체와 지역활성화
왕눈이의 등지 1호점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양짓말	마을게시판 운영으로 행복한 거리조성
숫골마을시장	신흥상인회 동네쟁이	시장활용 동네공동체와 지역활성화

□ 고양시 '자치공동체' 사업

- 고양시 '자치공동체' 사업은 역사문화경제공동체 활동 및 생활 환경정비 등 주민 욕구에 부합하여 고양시민의 자긍심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주민의 관심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자치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 역사문화 등 '고양600년 기념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자원과 특성을 반영하여 시민,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의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013년에 4억1,5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5조, 제12조의2)를 근거로 34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 사업기간: '13년 5월~11월
 - 주민자치위원회 16개, 주민조직 14개, 상인단체 2개, 아파트 1개, 직능단체 2개

□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자치를 통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활동의 자율적인 사업을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 '13년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총 27개 마을(기존 마을 9개, 신규 지정 마을 18개)을 지원하였다.

표 4-6. 시흥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2013년)

구분	사업명	마을명	해당동
신규	아이러브 신천천	시흥사랑	대야동
	세대가 함께하는 쾌적한 마을 만들기	하우,여우고개	
기존	뱀내장터길조성사업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신천동
신규	삼미공원, 자연과 문화의 숨을 입다	삼미시장 내 삼미공원	
신규	마을에서 놀자! 소래문화마을 만들기	소래문화마을	신현동
기존	이음문화재 지킴이 사업	나눔자리문화 공동체	
신규	학미산술내음길 사업	학미산술내음길사람들	매화동
기존	미산 경신!마을학교공동체	희망 경신사람들	
신규	양지산 진입로 개선사업	매화동 주민자치	목감동
기존	아이들이안전한목감동 마을만들기	목감 아사모	
신규	주민과 기업인이 함께하는 공동체 마을만들기	월곶동 마을	군자동
기존	구지정 마을이야기	구지정 마을	
신규	도일시장 마을공동체만들기	거모2구역 도일시장	정왕본동
신규	스토리있는 벽화와 함께하는 분리수거로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정왕본동 마을만들기추진단	
신규	다문화로 소통하는 통통마을만들기	통통마을	정왕1동
	동네야 마실가자	정담은 마을	
기존	온가족이함께하는 희망골목만들기	희망마을 서포터즈	정왕2동
신규	삼성래미안의 참새방앗간	시화삼성아파트	
	담장연 국화마을만들기	시화영남3단지 아파트	
신규	백년이웃 소통의 길	정왕2동 주공4단지	정왕4동
신규	더나기(더하고 나누는) 마을만들기	송운마을 건영2차	
기존	休·樂·通 도시 농장	정왕4동 주민자치위원회	연성동
	늬내바람길 따라 온 동네가 '만남터-배움터'	늬내바람길 사람들	
신규	함께만들자행복한함현마을	함현마을	연성동
신규	화통한 참이슬	참이슬 평생학습 마을학교	
기존	ECO-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숲속마을 1단지아파트	능곡동
신규	건강한 능곡 만들기	능곡 늬내향	

□ 이천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

- 이천시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는 마을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천시와 이천시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 ’13년 공모사업은 창전동과 대월면을 비롯한 14개 마을에 300~5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급하였다(총사업비 5,300만 원).

표 4-7. 이천시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2013년)

해당 읍·면·동	사업명	지원금(천 원)
창전동	EM을 활용한 친환경마을 만들기	4,900
대월면	해룡산 자전거 테마공원 만들기	4,900
관고동	도편으로 빛는 우리 마을	4,900
중리동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마을가꾸기	3,900
호법면	미래형 전원마을 호법 만들기	3,100
설성면	전통과 이야기가 숨 쉬는 달빛 마을 만들기	3,900
모가면	평생학습을 통한 마곡산 이정표 만들기 사업	3,900
장호원읍	시가 있는 백족산 늘솔길	3,295
율 면	주민과 함께하는 벽화 그리기	3,050
부발읍	예쁜 마을 만들기“문패 달아드려요”	3,400
백사면	산수유 향기는 사랑을 싣고	2,812
증포동	전통을 배우고 익히는 장이 익어가는 마을 만들기	2,900
마장면	해월리 마을안내판 제작 및 문화마을 만들기	2,900
신둔면	정개산 신문면목길 조성	2,600

1.2. .

- 경기도 시·군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⁶⁾ 결과, 전체 응답자의 34.2%가 시·군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일반시의 경우 39.3%, 도농복합시와 군의 경우 28.3%가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16) 경기도 시·군의 마을만들기 업무 유관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114명이 응답하였다. 공무원 조사표는 <부록 2>, 조사 결과는 <부록 4>에 제시하였다.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기초지자체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을 향후 더욱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은 약 29%였으며, 일반시(29.5%)와 도농복합시 및 군(28.3%)에서 상당히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향후 확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44%로 가장 높았는데, 2014년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내년도의 정책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응답으로 짐작된다.
- 그러나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4%에 그쳤고,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약 23%로 나타났다.

표 4-8. 시·군 자체적 마을만들기 사업/정책 여부 및 향후 지원확대 계획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체 (n=114)
시·군 자체적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정책 여부	있음	39.3	28.3	34.2
	없음	24.6	35.8	29.8
	잘 모름	36.1	35.8	36.0
	합 계	100.0	100.0	100.0
향후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확대 계획	확대할 계획	29.5	28.3	28.9
	확대 없음	4.9	3.8	4.4
	현행 유지	24.6	20.8	22.8
	불확실	41.0	47.2	43.9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의 마을만들기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추진하는 데 충분한 기반을 갖지 못해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시·군이 겪는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23.0%), 중앙부처 사업 난립으로 인한 시군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연계 부족(22.1%), 담당자 업무 부담 증가(19.5%), 현장 활동가 및 지도자 부족(19.5%)의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지자체 유형에 따라 마을만들기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에 차이가 있었다.
- 일반시 지역은 주민 무관심(26.2%)과 공무원 업무 부담(21.3%), 현장활동가와 지도자의 부족(21.3%)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농촌 특성이 강한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응답자는 중앙부처의 각종 사업이 난립하고 시·군 부서 간 연계가 부족한 점(30.8%)을 답한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주민 무관심(19.2%)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볼 때, 앞으로 일선 시·군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또한 마을만들기 추진 시 겪게 되는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4-9. 시·군 마을만들기 추진과정의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체 (n=113)
마을만들기 업무 추가로 인한 담당자 업무부담 증가	21.3	17.3	19.5
마을만들기 현장활동가 및 지도자 부족	21.3	17.3	19.5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	26.2	19.2	23.0
중앙부처 사업 난립으로 시·군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연계 부족	14.8	30.8	22.1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예산 부족	13.1	11.5	12.4
기타	3.3	3.8	3.5
합 계	100.0	100.0	100.0

2. 가

2.1.

2.1.1. ()

□ 도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기존 도시정비사업은 수익성 위주의 대규모 개발과 전면철거 방식으로 인해 지역의 역사성, 장소성 소멸, 지가 양등 및 주택시장 불안, 세입자·저소득층 주거 불안 등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 최근 경기도는 뉴타운지역을 해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후주거지에 대한 새로운 정비수법으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도입하였다.
 - 추진 경위
 - * 2012.9: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 2013.3: 1차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 2013.4: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지역 1차 8개 지역 확정
 - * 2013.8: 2차 지역 선정을 위한 평가 실시
 - * 2013.10: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 추진지역 2차 2개 지역 확정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전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에 주민 주도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표 4-10.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구분	내용	대상구역	특례
가로주택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도시조직과 저층주거지의 가로 경관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만㎡미만의 4m초과 도로가 통과하지 않는 구역 ■ 기존 세대 수 20세대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부대복리시설 기준완화
주거환경 관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전용·1종·2종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 중 노후 주거지에 대해 공공이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형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1종·2종 주거지역 중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 시설을 공공에서 설치

- * 주거환경관리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
- * 뉴타운사업 실효·해제: 23개 지구 213구역 → 13개 지구 109구역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부문의 마을만들기 지원 사업이 다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참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 경기도가 계획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마을만들기 기법을 부분 도입한 것이다.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 내용

- 뉴타운 및 재개발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주거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을 정비하고자하는 주민협의체와 사회적 협동조합, 혹은 해당 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시장·군수가 응모할 수 있다.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호 규정에 적합한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 선정된 대상 지구 현황은 <표 4-12>와 같다.
- 지역공모 방식으로 10개 지역을 선정하여 개소당 1억 원을 지원한다(도비 30%, 시비 70%).
 - 계획 수립이 완료되는 2014년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 그 밖에 이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목록은 <표 4-13>에 제시하였다.
- 심사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마을만들기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에서 도시재생(도시·건축)과 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9인으로 구성하여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선정하였다.
- 주요 사업 내용은 도로·주차장·공원 등 정비기반시설과 마을회관·경로당·어린이집 등 공동이용시설의 정비·개량·확충, 기타 담장허물기, 가로변 입면개선, 광고물 정비 등이다.

표 4-11. 경기도 도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타운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연과 소규모 기반시설정비제도의 도입(주거환경관리사업, 2012.8)에 따른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방안 모색
사업 신청 가능 대상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호 규정에 적합한 지역
사업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협의체, 사회적 협동조합, 시장·군수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 ■ 방법용 CCTV, 그린파킹 등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개소 내외: 개소 당 1억 원(도비 30%, 시·군비 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표 4-12.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지구 및 사업 내용

사업지구명	지역 특성	사업 내용
시흥시 은행지구	뉴타운 해제지역	주차공간, 녹화사업, 담장허물기, 경로당, 마을기업 등
남양주 군장마을	일반주거지역	커뮤니티센터, 담장펜스정비, 쌈지공원, CCTV 등
시흥시 거모지구	재개발 해제지역	마을회관 리모델링, 쌈지공원, 간판정비, 가로등 등
수원시 매산지구	재개발 해제지역	골목길정비, 마을주차장, 소공원, 소방시설, 경로당 등
의왕시 금천마을	일반주거지역	소공원, 주차장, 도로개설, CCTV, 꽃길조성 등
성남시 단대지구	일반주거지역	소공원, 주차장, 마을회관, 옹벽그리기, CCTV 등
평택시 신장지구	뉴타운 해제지역	주차장, 쌈지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빈집정비 등
평택시 안정지구	뉴타운 해제지역	공용주차장, 도로개설, 골목길정비, 빈집정비 등
오산시 오산동	뉴타운 해제지역	오미장터 활성화와 연계한 주거지 재생
안양시 관양동	재개발 해제지역	송유관도로정비, 학의천 연계, 주차장 등

< 참고: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

○ 추진 배경 및 절차

-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신설되자 이에 발맞추어 기존의 물리적 재생 중심의 휴먼타운에 사회·경제적 재생 개념을 포함시켜 ‘서울시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확대
- 물리적 재생과 사회·경제적 재생을 통합하여 마을공동체 정비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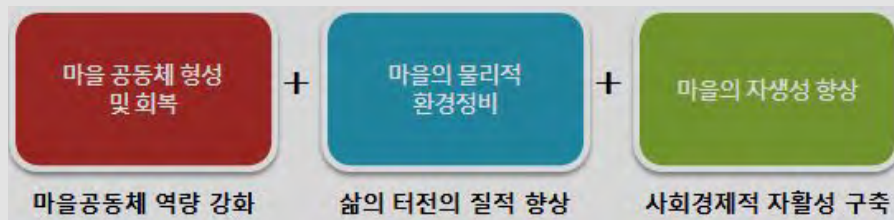
< 서울시 재생사업의 목표 >

표 4-13.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과 연계·융합 가능한 사업 현황

사업명	2012년		재원 구성	소관 부처
	사업 현황	사업비(억 원)		
마을기업육성	111개	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50% ■ 도비 15% ■ 시·군비 35% 	안전행정부
그린빌리지사업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설치)	31개 마을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50% ■ 도비 6% ■ 시·군비 14% ■ 자부담 30% 	산업통상자원부
쌈지공원조성사업	72개소	7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비 30% ■ 시·군비 70% 	-
석면슬레이트 처리비지원	274도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30% ■ 도비 35% ■ 시·군비 35% 	환경부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552호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비 80% ■ 도비 6% ■ 시·군비 14% 	국토교통부
주택개량자금용자	-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주택기금 100% 	국토교통부

2.1.2.

□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경기도 농어촌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마을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과 소규모 실천사업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특히 농어촌 부문의 사업은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 사업 외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공동체성’을 강조한다.
 - 도시 부문이 현행 정비사업의 낮은 재정착률과 개발포기지역의 슬럼화 등을 극복하기 위해 물리적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과 차이가 있다.

□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대상지역 및 주체

-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 17개 시·군의 농어촌 지역이며, 주민, 시·군,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한 마을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내용

-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마을 단위의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5년 이상의 중·장기계획) 및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한다.
 - 시범사업 소요 예산은 총 7억 원이다.
- 계획 내용으로는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관 조성, 역사·문화 재생, 일자리·소득 창출 등의 단일 혹은 복합 추진이 가능하다.
 - 특히 농촌 부문의 사업으로는 비물리적 사업, 소득창출 사업이 가능하다.
- 도시형과 농촌형 시범사업을 비교해 보면, 대체로 농촌 부문의 마을만들기가 도시 부문에 비해 사업 범위가 더 포괄적이다.
 - 도시 부문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물리적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 중심¹⁷⁾인 반면, 농촌 부문의 사업으로는 경관, 역사·문화 재생,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사업이 가능하다.
-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 지원부서 담당자(2인) 및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중 민간 전문가(3인 내외)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의 심사평, 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17) 도시 부문도 행정안전부 연계사업으로 일자리 창출사업이 가능하지만 직접적인 사업 대상은 아니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통해 총 17개 대상마을 중 10개 마을(지역)¹⁸⁾이 선정되었다.

그림 4-7. 경기도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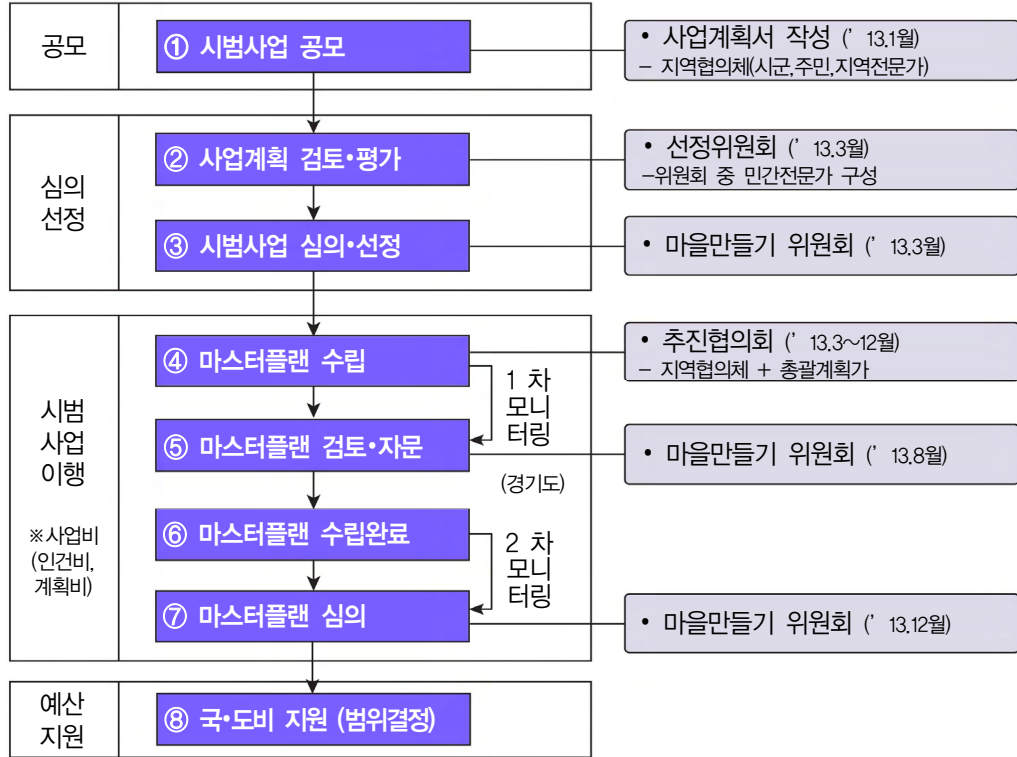


표 4-14. 경기도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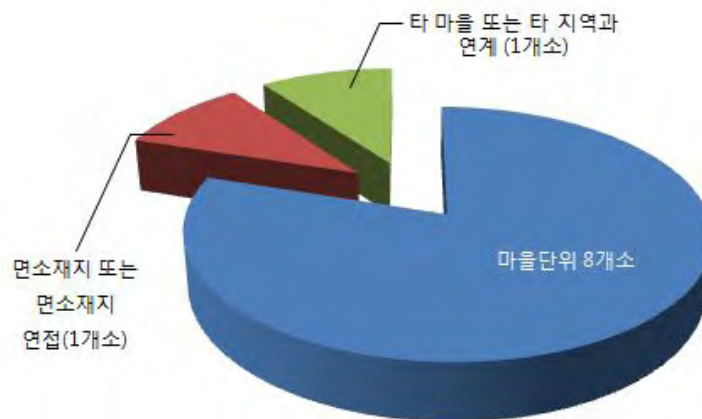
배경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마을만들기
사업 신청 가능 대상 마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중에서 농어촌 지역이 포함된 17개 시·군에 속한 마을로서, 주민 스스로 사업추진 의지가 확고하고 주민 참여가 활성화된 마을
사업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주민,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의 문제점 개선과 마을 특성 홍보 ■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관 조성, 역사·문화 재생, 일자리·소득사업 등의 단일 또는 복합 추진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당 70백만 원(도비 100%) - 지역협의체 운영 등 공동체형성비(1천만 원 내외) - 종합마스터플랜 수립비(5년 이상 중·장기, 4천만 원 내외) - 소규모사업비(2천만 원 내외)

18) 용인시 샫갯골 마을, 안산시 풍도 어촌체험마을, 안성시 유별난 마을, 파주시 만우리 마을, 양주시 초록지기 마을, 포천시 울미연꽃마을, 광주시 오전리 마을, 남양주시 슬로우시티 한음마을, 양평군 서종마을, 여주군 이든 마을 등 총 10개 마을이 선정되었다.

□ 농촌형 시범사업 대상 마을의 특징

- 경기도 농촌마을만들기 10개 시범마을은 마을에서의 비농가(신규 전입자) 비율, 농촌의 물리적 특성 등 사회·경제적 여건이 제각기 다르다.
 - 농촌적 성격이 강한 곳은 주로 쌀, 소규모 밭작물 등 농작물 재배 중심의 농산업을 기반을 두고 있다.
 - 농촌성이 약화되고 도농복합적 특성이 강해진 마을의 경우는 물리적인 농촌 자원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새로운 자원 발굴이 필요한 상황이다.
- 사업 주체로는 ‘농가 중심으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경우’, ‘농가의 일부만 참여하는 경우’, ‘비농가(신규 전입자)의 일부가 참여하는 경우’, ‘소수의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법인을 중심으로 일부 농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마을사업 추진 시 소수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이 마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 비농가(신규 전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는 마을사업 추진 시 신규 전입자-원주민 간 갈등 또는 농가-비농가 간 갈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 소수 주민이 마을사업을 추진하고, 심지어 사유화하는 경우는 마을사업의 공공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제기된다.
- 사업 구역은 ‘마을 단위’, ‘면소재지 또는 면소재지와 연결한 공간단위’, ‘다른 마을 또는 다른 지역과 연계된 공간 단위’ 등으로 볼 수 있다.
 - 시범사업 대상지는 마을 단위가 9개소, 면소재지 또는 면소재지와 연결한 공간 단위가 1개소, 다른 마을 또는 다른 지역과 연계된 공간 단위가 1개소로 구성된다.

그림 4-8. 시범사업 대상마을 사업구역



- 농촌지역에서는 생산이나 가공 등의 이유로 사업 대상지가 공간상의 마을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가령, 품목 생산지와 가공지가 다른 지역인 경우, 품목 생산지가 타 지역 마을까지 걸쳐 있는 경우 등이 있다.
- 경기도의 농촌마을은 도시지역의 외연 확대와 도시 시설의 입지, 외지인 이주에 따른 공동체성 해체 등의 이유로 마을 공동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 마을의 공동 공간(공동 자산) 보유 여부는 사업 추진 시 사업 시설 등의 개인 사유화 문제와 관련된다. 예컨대, 공동 공간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사유지에 공공 시설이 조성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사유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시범사업 내용으로는 소득 창출, 공동체 형성, 도농 교류, 품목 활용(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공간 조성 등이 있으며, 다수의 시범사업이 수도권 인구를 고려한 ‘도농 교류’, 또는 작목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가공·유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2. 가

2.2.1. ()

□ 추진 과정상의 한계

- 첫째, 사업 대상지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사업 대상지는 뉴타운사업이나 재개발사업 해제 지역, 노후주거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민 참여를 통해 추진이 가능한 지역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미비하게 제시되어 있는 실정이다.
 - 도시계획시설(도로 등) 확충이 사업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의 문제 해결 역량 강화, 삶의 질 개선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주거지 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 기획이 필요하다.
- 둘째, 법정도시계획의 경직성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기존 법정계획 및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거환경관리사업 요건에 열거된 항목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지역 특성과 의견을 반영하여 유연하게 진행하기 어렵다.
 - 주민이 참여하여 마을 여건을 이해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필요를 실현하는 데 마을공동체계획이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유연함이 요구된다.

- 맞춤형 정비사업의 소요 사업비에 대한 설득과 협의가 관건이다.
 -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에서 주민들은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사업비까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 특히 재개발, 뉴타운사업 해제 지역의 경우, 맞춤형정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현재 사업비 지원 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시·군과 주민 차원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 주민 동의 과정 없이 추진될 경우 발생할 사회갈등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 뉴타운사업 해제 등으로 주민 갈등의 여지가 잠재해 있는 상황에서, 일부 시·군에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사업 추진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일부 주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 경기도가 주민 역량강화에 대한 장기적·전략적 기획을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 애초 사업 의도는 ‘마을공동체 확립 계획’(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마을 순환경제 생태계 마련 등)의 연성계획과 ‘정비 계획’이라는 물리적 계획의 통합적 추진을 강조한다.
 - 반면 마을공동체 확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10개월은 공동체 복원과 주민 역량 성장, 지역 문제 해결 등에 소요되는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도출하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가치와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투표와 현장 견학, 전문교육을 실시했으나, 지역사회 전반에 관심을 환기하고 참여도를 높이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지역사회가 주민 참여와 문제 해결 역량을 자율적으로 증진하도록 교육하고 설득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도시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맞춤형 정비사업)의 평가

-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은 주민참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도시부문 마을만들기를 위한 첫 시범사업 사례라는 의미가 있다.
 - 다만 국가가 주민 참여를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개선사업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비지원을 비롯한 실행과정이 구체화되지 못하고 경기도도 자체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 특히,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수많은 마을 단위로 전개되는 공동체활동을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효율적이지 않다.
 - 경기도가 계획 소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취지에서 일반적인 마을만들기사업 기법을 부분적으로 도입한 의의가 있

지만, 그 목적과 사업 내용을 볼 때 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목표로 두는 마을만들기사업의 접근방식과는 다소 상이한 개념으로 출발하였다.

-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2013년 하반기 2차 사업을 평가해 볼 때, 사업에 대한 주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경기도 자체의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여지가 있다.
 -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도시문제 해결의 큰 과제임을 밝히고 있다.
 - 주민참여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계획비 지원사업으로서 맞춤형정비사업은 경기도의 대표적 도시재생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다.
 - 도시재생사업을 바로 도입하여 지원받기에는 현재 맞춤형정비사업의 내용이나 대상지 선정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이나 앞으로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사업의 취지와 목표를 조정하고, 사업 실행 방안도 이러한 방향에 맞게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
 - *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최근 평택 안정지구 등 맞춤형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번 정비계획 수립을 도시재생사업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 * 사업비 확보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일부 지자체는 경기도의 맞춤형 정비사업을 통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2.2.2.

□ 추진 과정상의 한계

-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마을만들기 현장포럼’의 인적·조직적 기반이 불충분하다.
 - 경기도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은 ‘마을만들기 현장포럼’이 구심점이 되어 마을의 사업계획을 검토·평가하고,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마을사업의 추진을 지원하였다.
 - 현장포럼을 위탁 운영해온 경기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마을별 상황과 여건, 마을공동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적절한 사업방향과 지원책을 제시해줄 만한 추진기반과 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 마을 주민 스스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여 발전시키도록 장기적 주민역량 강화의 관점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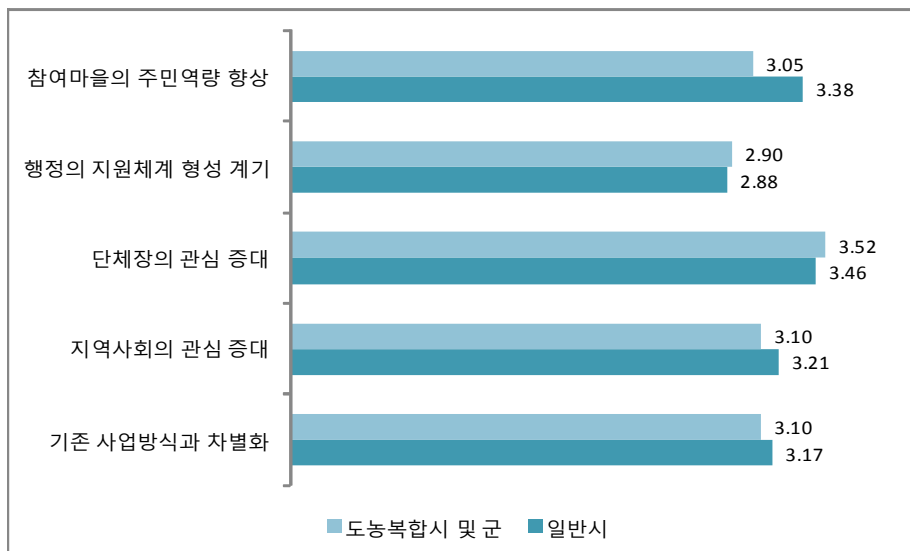
- 마을만들기 현장포럼의 애초 의도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주민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일부 사업 추진 준비가 불충분한 마을의 경우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사업 준비를 위해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주민 교육과 선행사업 탐방, 마을멘토링 등을 통해 주민 역량을 착실히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범사업 대상마을 선정 과정에서 마을 역량 파악과 현황 조사가 미흡하다.
- 가령, 마을사업 추진 여부에 따른 사업 경험 및 사업 추진 조직이 실제 존재하는가에 대한 판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 존재 여부, 실제 활용 가능한 마을 자원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맞도록 주민 참여, 주도의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현재 전문용역업체에 마을기본계획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사회 전반의 관심과 참여를 보장하거나, 계획에 대한 공동체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기 힘들다.
 - 특히 용역업체 중심으로 수립한 마을계획은 현장포럼을 통해 주민들이 도출한 사업 아이디어를 수정,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중대규모의 국가예산을 요구하는 사업계획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마을공동체의 자율역량 강화와 거리가 멀다.
- 시범사업 전반(사업 선정·시행·평가·개선·피드백)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다.
- 사업의 각 단계별 추진주체가 달라지지만 체계적·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 대상지는 경기도에서 선정하고, 현장포럼은 시·군 및 경기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위탁운영하여 마을 간 협약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소규모 사업 시행은 시·군 및 마을에서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한다.
 - 대상 마을 선정 이후에는 경기도가 각 단계별로 추진주체와 업무 협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사업의 전체 흐름을 관리할 만한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 시·군에 따라 담당 부서도 농업·농촌 관련 부서를 포함한 농정 및 농업정책과, 도시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으로 각기 다르다.
- 시범사업은 주민 역량의 성장 과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제각기 다른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적합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마을사업 경험이 낮은데도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의 경우, 용역업체에 무리하고 과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거나, 마을공동체의 현재 역량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¹⁹⁾

- 경기도는 다양한 농촌마을들이 자신의 특성과 역량 수준에 맞추어 가장 적합한 사업 목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광역과 기초 지자체에서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모, 현장포럼 운영,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등 사업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간 경험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 한편,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마을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기초 단위의 지원조직에서 각 마을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마을사업 준비와 지속적 운영을 위한 일상적 지원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2.2.3. 가

-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들의 종합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통’(3점)에 해당하는 점수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만 ‘행정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형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동의 정도가 낮았다.

그림 4-9.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이후 지역의 변화



- * 주: 1) 5점 척도(5점: 높음, 1점: 낮음)로 조사한 결과의 평균값을 집계
 2)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참여 시·군을 대상으로 공무원 응답 결과를 집계

19) 전문업체는 사업 신청,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등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민을 대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거나,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 분석 없이 그대로 반영하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

- 경기도 시·군 공무원 조사²⁰⁾ 결과를 통해 파악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영향을 <그림 4-9>에 제시하였다.
- 시·군 유형에 따라 항목별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기존 사업 방식과 차별화’, ‘지역사회의 관심 증대’, ‘참여 마을의 주민역량 향상’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시 응답자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응답자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 특히 참여 마을의 주민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시·군 유형에 따라 점수 차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 반면 ‘단체장의 관심 증대’, ‘행정의 지원체계 형성 계기’ 항목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의 응답자가 일반시보다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에서는 마을만들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주민역량 강화,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기존 사업 방식과의 차별화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 시·군 공무원 조사 결과,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수의 시·군이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적극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23.0%, ‘경기도의 예산 및 행정 지원 확대를 전제로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41.6%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경기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시·군 참여 수요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일반시의 응답자들은 경기도의 지원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의 응답자들은 경기도 지원이 확대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시범사업 종료 이후 시·군의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의향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 체 (n=113)
적극 참여할 예정	27.9	17.3	23.0
도의 예산·행정 지원 확대 시 참여	37.7	46.2	41.6
도 사업에 참여 않고 시·군 자체 사업 추진	6.6	3.8	5.3
향후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 결정	23.0	32.7	27.4
기타	4.9	0.0	2.7
합 계	100.0	100.0	100.0

- 그동안 추진한 시범사업에 한계점도 있었지만, 경기도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여 마을만들기 시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한다면, 일선 시·군들도 지속적으로 사

20) 공무원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4>를 참고.

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3.

- 그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향후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의 과제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 현장에 밀착된 지원 방안 마련과 광역 지자체 역할 정립
 - 농촌형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의 경우 협성대학교의 경기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총괄계획가 및 퍼실리테이터가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등 마을의 계획 수립 과정을 지원했지만, 도시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 역할을 하지 못했다.
 - 농촌형 시범사업과 같이 현장포럼을 운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현장에 밀착하여 지속적으로 마을만들기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 경기도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는 마을만들기 과정을 현장 밀착형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경험에서 알 수 있다. 현장에 밀착하여 주민들과 꾸준히 상호작용을 이루면서 상시적으로 마을만들기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 따라서 광역 단위가 아닌 기초 단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만들기 지원 주체가 확보되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광역 지자체가 기초 시·군이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더불어, 광역 단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병행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 ▣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 연계
 - 향후 일선 시·군과 마을들이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호응해서 참여하도록 하려면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시범사업과 같이 계획 수립과 소액 사업비가 투입되는 단계에서는 지방비만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사업 참여 마을이 확대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한 지구에서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나가는 단계가 되면 도비와 시·군비만으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따라서 마을만들기의 본격적 확산 단계에서는 마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야의 국비 사업을 효과적으로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작업이 필요하다.
- 각종 중앙부처 사업들이 실·과별로 다양하게 추진되는바, 경기도 도정 차원에서 통합과 조정을 통해 적합한 사업을 마을만들기 대상 지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단계적 지원체계 확립

- 2013년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마을만들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마을들이 대규모 사업비 지원을 기대하고 참여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 향후에는 형식적으로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역량이 부족한 마을이 아니라, 충분한 역량 수준을 갖춘 마을 또는 역량 수준은 높지 않더라도 마을만들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극적 참여 의향을 가진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마을을 선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그 일환으로 마을만들기 지원 원칙을 경기도 차원에서 정립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채택한 단계적 지원 시스템을 경기도 여건에 맞도록 도입하는 작업이 요청된다.
 - 마을만들기는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 획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이 선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 따라서 경기도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 자율적 활동을 촉발하고 참여 마을들이 단계적으로 역량을 강화해나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일정 역량 수준에 도달한 마을들에 한하여 중·대규모 사업비를 지원하는 원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위의 원칙에 맞추어 마을 선별의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필요하며, 그러한 차원에서 경기도의 마을 여건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이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3절에서는 경기도 마을 DB 구축 작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3.

3.1. DB

3.1.1. DB

□ 경기도 마을 DB의 개념

- 마을만들기의 초기 단계에서 마을의 현황을 주민 스스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계획 수립 초기에 <그림 4-10>과 같이 마을이 지닌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 마을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마을의 기초현황을 파악하여, 주변의 다른 마을과 비교하여 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행정은 주민이 마을 정보에 손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통계자료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정확한 자료를 얻기란 쉽지 않다.
 - 주민이 다양한 마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키도록 마을DB 구축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0. 마을만들기 초기의 마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진단 단계 모식도



□ 경기도 마을 DB의 목적

- 경기도 마을 DB를 구축하는 의의는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 마을만들기의 기본 개념은 행정이 마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한 마을 여건 및 역량 분석을 통해 경기도 마을의 현 위치와 문제점을 인식하여 마을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초 자료를 생성한다.
- 경기도 마을 DB는 경기도 차원의 마을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 자료 생성을 목적으로 한다.
 - 주민들에게 제공된 마을 정보 외에도 도 차원에서 DB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것을 통해 경기도 마을의 전반적인 현황을 쉽게 인지하도록 한다.

3.1.2. DB

- 마을의 정주 여건과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인구학적 지표, 경제적 지표, 주거 및 생활환경 지표, 지역 역량 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역의 역량은 지역의 경제 역량, 물리적 시설 역량, 공공서비스 제공 역량, 지역의 민간조직 역량, 개인 역량 등으로 구성된다.²¹⁾
 - 지역의 발전 정도 및 잠재 역량은 시설·서비스 수준과 연결된 삶터, 경제적 기회와 고용 수준의 일터,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의 쉼터, 공동체적 유대의 장인 공동체의 터로 측정하고 평가가 가능하다.²²⁾
 - 농촌 마을의 정주환경은 주민 건강 및 삶의 질, 인적자원 구성, 산업경제기반, 생활여건 및 환경자원, 정주기반 기본시설 등으로 구성된다.²³⁾
- 경기도 마을 DB도 선행 연구들의 관점과 유사하게 인적자원 부문, 물리적 주거 환경 부문, 지역 경제 부문, 생활여건 부문, 마을 역량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한다(그림 4-11).

21) 이영아(2009).

22) 송미령 등(2012).

23) 김대석 등(2010).

그림 4-11. 경기도 마을 DB의 내용 구성



3.1.3. DB

□ 마을의 여건과 역량을 담은 DB

- 경기도 마을 DB는 크게 마을의 여건과 역량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된다.
 - 마을 여건은 인구 부문,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 지역 경제 부문으로 측정되며 마을 역량은 다양한 마을의 사업 경험이나 마을 내 결성된 조직체 활동의 수로 측정된다.
 - 마을 여건 부문에서는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마을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볼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하며, 마을 역량 부문에서는 마을의 주민들의 역량 수준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한다.

□ 도시와 농촌을 구분한 DB

- 경기도는 도시성이 강한 지역과 농촌성이 강한 지역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 기준으로 마을 역량이나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하기 힘들다.
 - 마을 현황은 정주지의 사회·경제·문화·공간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대적 스펙트럼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DB는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 구축한다.

- 도시형 마을DB는 가용한 통계자료에 한계가 있어 공간범위를 동 단위로 구축한다.
 - 도시부는 자연취락 중심의 농촌부와 달리 마을의 범위나 마을만들기 추진 단위를 공간적으로 국한하기 힘든 특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 마을만들기 활동가들의 활동 범위와 주민조사 결과를 볼 때 마을공동체로 인식하는 범역이 주로 ‘동’이라는 점을 파악하였다. 도시부의 마을 개념은 추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 보고서에서는 도시부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DB를 동별로 구축하였다.
- 농촌형 마을 DB의 공간적인 범위는 읍·면 및 행정리 단위를 가진 복합적인 DB형태로 구축한다.
 - 농촌 마을의 개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가장 기초적인 정주 단위 및 공동체 단위인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여건 및 역량을 진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중 일부는 마을 단위로 공표되지 않기 때문에 읍·면 단위의 자료를 활용한다.

3.1.4. DB

- 인구 부문의 세부지표는 <표 4-16>과 같이 마을의 인구 변화를 대표할 수 있는 지표인 인구변화율 지표와 고령화율 지표, 인구 천 명당 미취학어린이 비율이 포함된다.
 - 도시형 DB 및 농촌형 DB에서는 주민 설문 조사 결과 마을만들기 활동 시 개선해야 할 문제 중 인구 부문에 관련한 사항으로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부문이 상위로 집계되어 고령화율 및 미취학 어린이 수를 지표로 포함하였다.
- 지역 경제 부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경제 기반이 다름에 착안하여 지표를 달리 구성하였다.
 - 도시형 DB에서는 업무 및 사업 지역 면적(km²)과 총사업체 수 등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의 잠재력 정도를 파악하였고, 농촌형 DB에서는 작목반 등 경제조직 결성 수, 판매시설 및 가공시설 보유 정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에서는 주거 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와 생활환경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 도시형 DB에서 주거 환경은 30년 이상 노후 주택 비율을 지표로 구성하여 마을의 주거 낙후 정도를 파악하였다. 생활환경에서는 접근성 지표로 마을 내 대중교통정류장 수를 사용하였고, 생활서비스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로 음식·숙박·도소매업 사업체 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도시 지역에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공원녹지

비율 지표를 선정하였다.

- 농촌형 DB에서는 도시형 DB와 달리 주거 환경을 나타내는 지표로 5년 이하 경과 신규 주택 비율을 사용하였다. 이 지표를 사용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노후주택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변별력이 적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경기도 농촌은 귀농·귀촌의 무대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때문에 새로운 주택이 다수 생성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에 주거 특성 변수로 5년 미만의 신규 주택 비율을 채택하였다. 농촌 마을에서는 접근성 지표로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사용하였고, 또한 주요 생활서비스 시설이 읍·면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접근성 지표를 사용하였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녹지 비율이 높기 때문에 공원녹지비율 지표를 사용하기보다는 의료서비스 시설의 접근성을 생활환경 부문의 지표로 사용하였다.
- 마을 역량 부문은 마을만들기를 수행할 수 있는 주민 역량을 의미하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통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을 수립하고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배양시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도시형 DB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경험과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수, 도시 정비사업 경험 수를 사용하였다.
 - 농촌형 마을 DB에서도 도시형 마을 DB와 마찬가지로 마을의 사업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성과인 마을사업 수상 경험을 마을 역량 지표로 사용하였다. 또한 도농교류 경험을 마을 역량 지표로 포함시켜 마을이 외부 도시 지역과 상생 발전하려는 노력도 마을 역량 지표로 포함시켰다.

표 4-16. 경기도 도시와 농촌 마을 DB의 세부 지표

부문	도시형 DB	집계 단위	농촌형 DB	집계 단위
인구 부문	인구변화율* ((2010년 인구-2005년 인구)×100/2005년 인구수)	행정동	인구변화율* ((2010년 인구-2005년 인구)×100/2005년 인구수)	읍·면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총인구)	행정동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총인구)	읍·면
	인구 천 명 당 미취학어린이 수 (8세 미만 어린이 수×1000/총인구)	행정동	인구 천 명 당 미취학어린이 수 (8세 미만 어린이 수×1000/총인구)	읍·면
지역 경제 부문	업무 및 상업 지역 면적(k㎡)	행정동	작목반 등 조직체 결성 수	행정리
	총사업체 수	행정동	마을 내 판매시설 및 가공시설 보유 정도 (재래시장, 공판장 또는 위판장, , 농수산물집하장, 농수산물도소매센터산지유통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 농수산물가공처리장, 저장고 등이 마을에 있으면 각 1점을 부여)	행정리
주거 및 생활 환경 부문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 (30년 이상 경과 주택수/총주택수)	행정동	5년 이하 신규주택비율 (5년 이하 경과 주택수/총주택수)	읍·면
	대중교통접근성 (정류장 수)	행정동	대중교통접근성 (총대중교통 운행횟수)	행정리
	음식숙박도소매업사업체 수	행정동	읍·면소재지까지 이동시간(분)	행정리
	공원녹지비율 (공원녹지면적×100/총면적)	행정동	의료시설접근성 (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 종합병원, 약국이 마을 내 있으면 각 2점, 소재지에 있으면 1점 부여)	행정리
마을 역량 부문	마을 만들기 사업 경험 수	행정동	마을사업 경험 수	행정리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수	행정동	도농교류 수	행정리
	도시 정비사업 경험수	행정동	마을사업 수상 경험	행정리

* 주: 각 시기별로 동·읍·면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통계자료로 인구변화율을 산출할 수 없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의 집계구 단위에서 2010년 기준으로 동·읍·면을 조정하여 인구변화율을 산출함. 이러한 이유로 2012년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사용하지 않음.

3.1.5. DB

- 마을의 문제점 인식과 발전 방향을 논하기 위해 사용된 국·내외 마을 DB 사례를 살펴보았다.
 - DB 제공 사례를 보면 사용자 친화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 구조를 추구하고 있었다.
- 국내 마을 DB 관련 사례: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행정지도(그림 4-12)
 -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보유한 각종 통계 자료를 지도로 표시해 안전, 사회복지, 대중교통, 교육, 문화 등 205개 주제의 GIS 정책지도를 제작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도시의 발전과정, 행정 현황, 사회·경제적 특성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고, 자신들의 마을 현황을 비교 할 수 있다.
 - 광산구의 행정지도는 2013년 통계청상 및 2013년 으뜸행정상 수상 사례이기도 하다.
- 미국 Maryland, Howard County(그림 4-13)
 - “your county. your plan.” 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2030년 카운티 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림 4-12. 광주광역시 GIS로 그리는 광산구 행정지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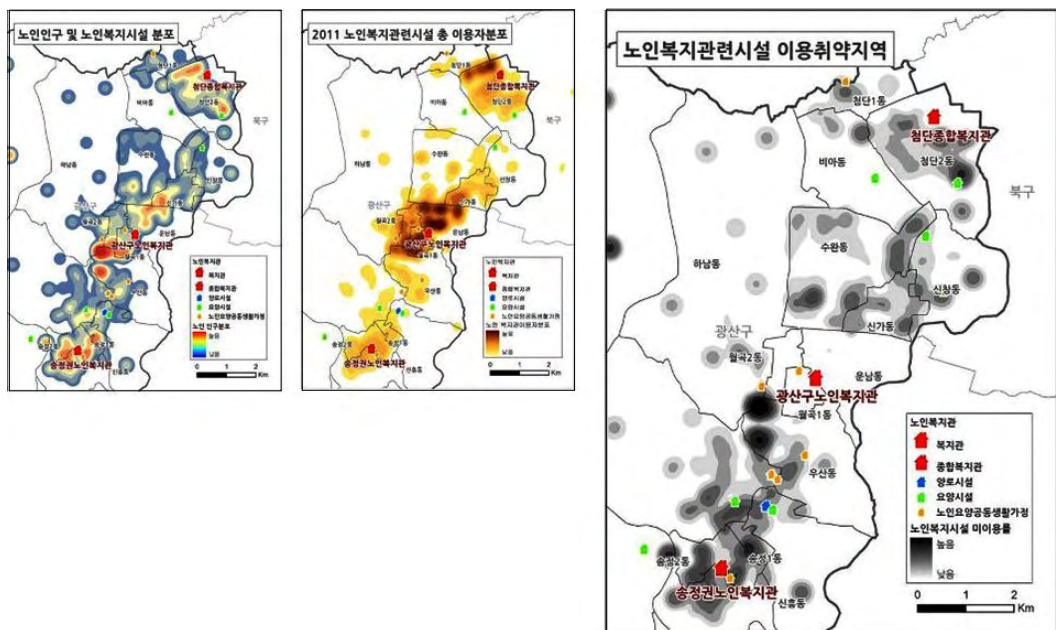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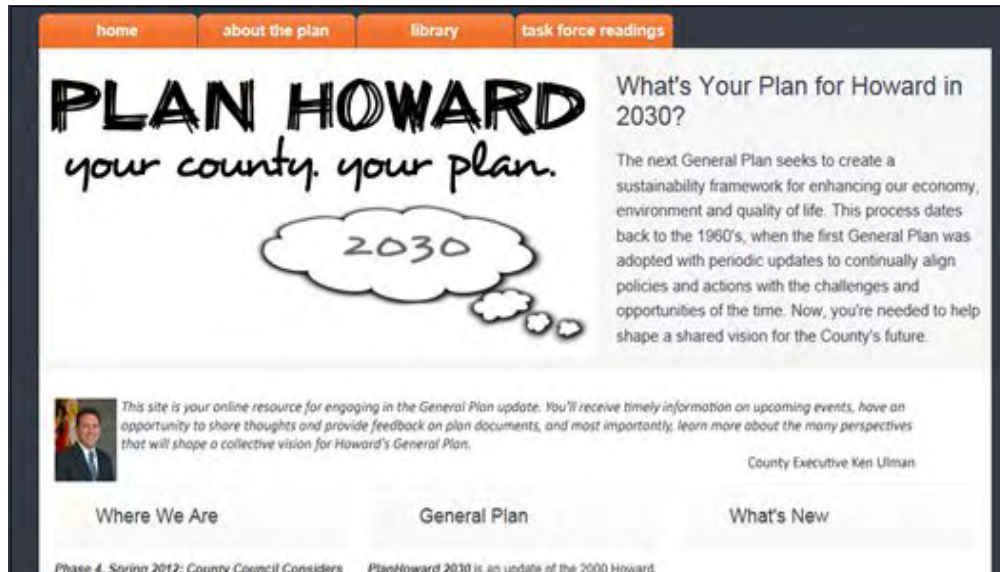


그림 4-13. 미국 Maryland, Howard County의 온라인 정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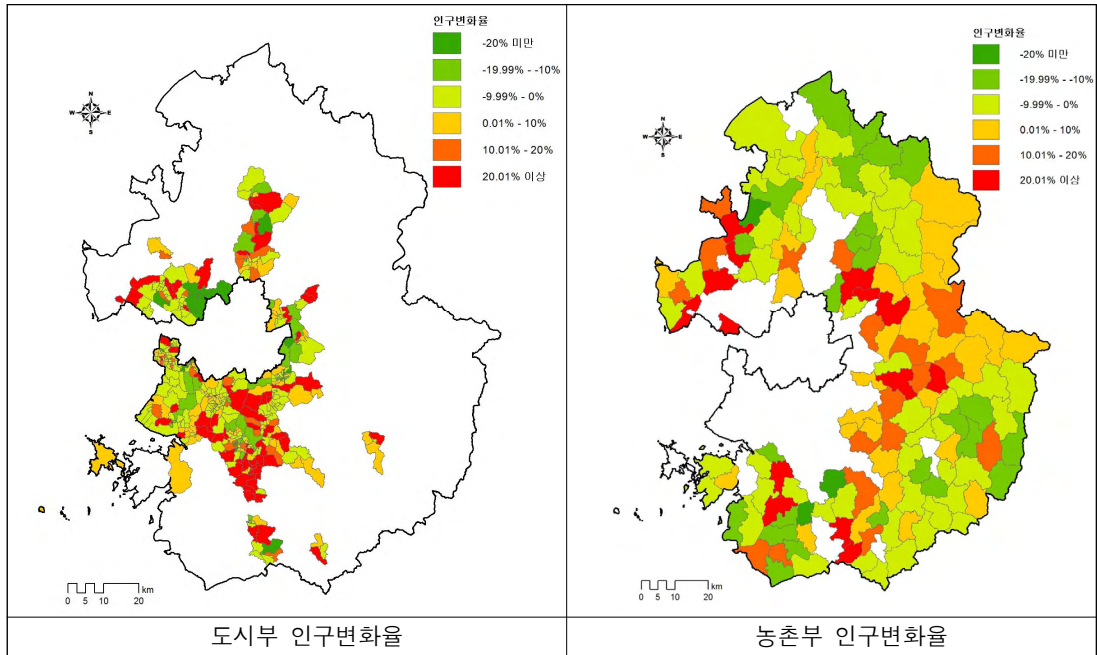
* 자료: Howard County (<http://www.howardcountymd.gov/Home.aspx>).

3.2. DB

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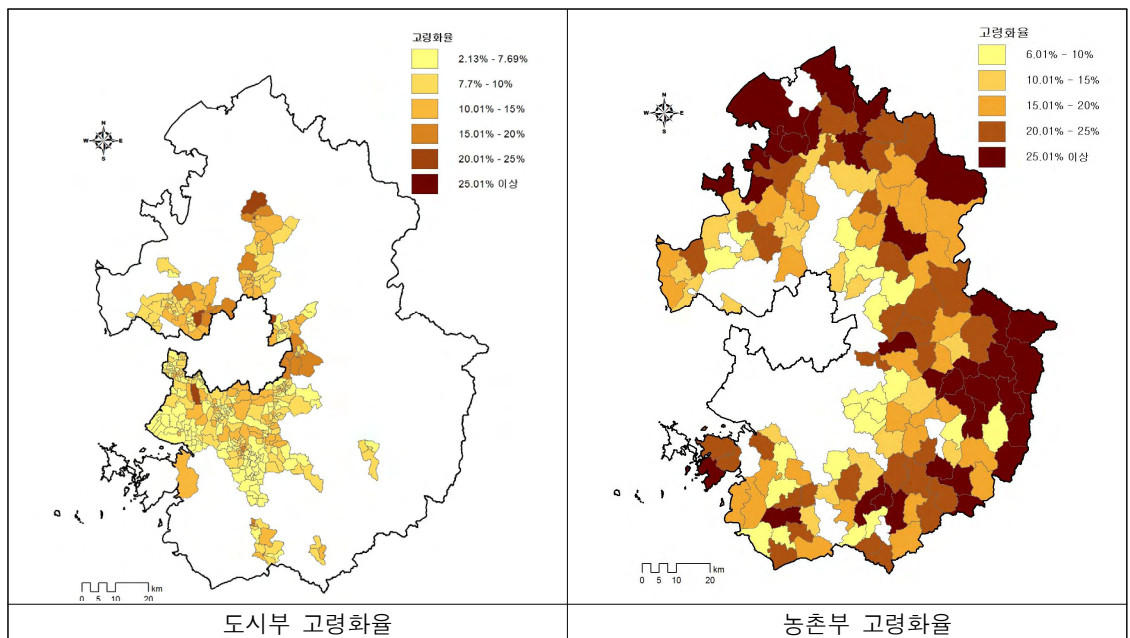
- 경기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마을 DB를 활용하여 도시부와 농촌부로 나누어 지도화 하였다(그림 4-14).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도시부의 인구 변화는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경기 남부에서는 성남, 용인, 화성 일대의 동지역에서 급격한 인구 상승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 양주, 동두천 일부 동과 고양시의 외곽 지역에 인구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부의 인구 변화는 지역별로 차별성이 더욱 두드러지는데, 경기 동부 지역일대와 파주시의 농촌 지역에서 인구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에서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많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차별적으로 인구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4-14. 도시와 농촌 마을의 인구변화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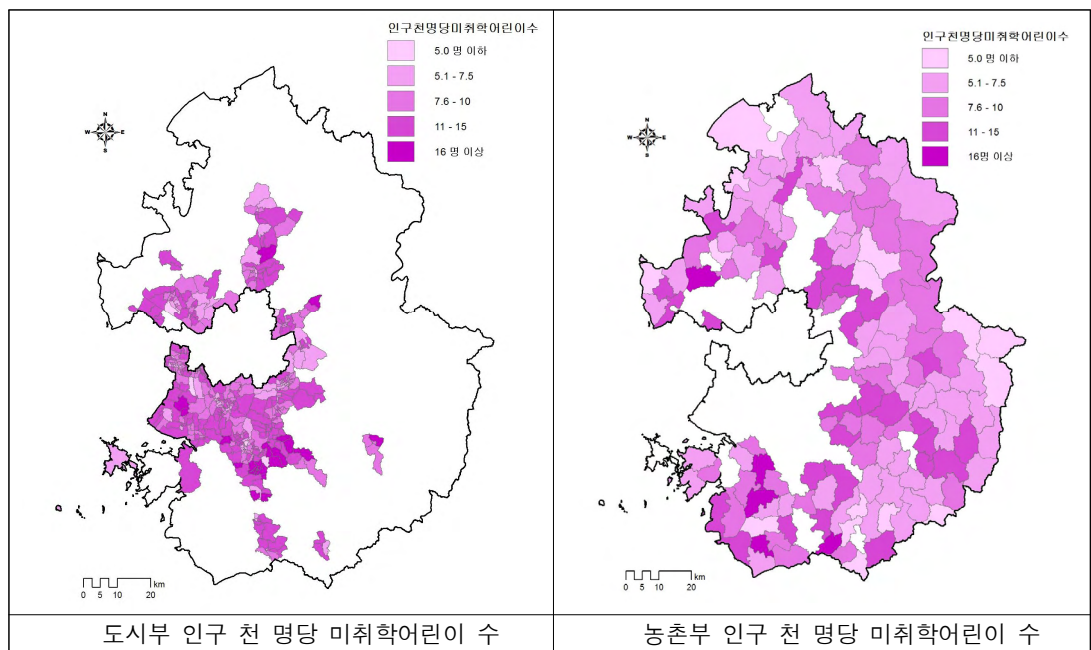
- 경기도의 인구학적 특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고령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농촌부가 도시부에 비해 고령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15).
- 도시와 농촌을 종합해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동쪽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고령화 정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4-15. 도시와 농촌 마을의 고령화 현황



- 경기 남부의 도시들에서는 고령화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젊은 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특히 읍·면부에서도 서울 근교로 갈수록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볼 때 근교 지역에서 젊은 연령대가 거주하며 서울 및 도시지역으로 통근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 경기도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시 선호하는 사업²⁴⁾인 육아·교육 부문의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사용된 인구 천 명당 미취학어린이 수를 보면 도시부에서 그 수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도 도시 근교에 위치할수록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4-16).

그림 4-16. 도시와 농촌 마을의 인구 천 명당 미취학 어린이 수



3.2.2. ()

- 경기도 마을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부에서는 업무 및 상업지역 면적과 총사업체 수 지표를 사용하였고, 농촌부에서는 각종 작목반, 판매시설, 가공시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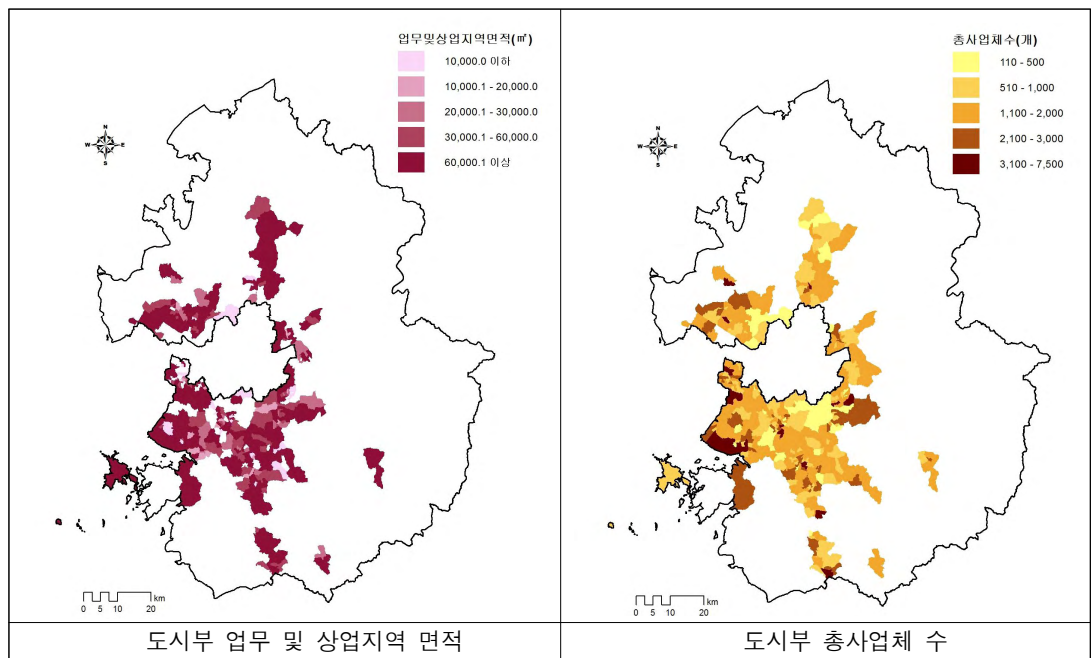
24) 경기도 주민들을 통한 마을 만들기 활동 분야 조사 결과 범죄 및 치안 문제,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 시설 정비 다음으로 육아, 교육 복지 서비스 개선이 마을만들기를 통해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

마을 보유 유무를 집계하였다.

- 농촌부의 데이터는 지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리 단위의 자료를 읍·면으로 재집계하여 표현하였다(그림 4-17).

- 경기도의 행정동 수준에서 업무 및 상업지역 면적의 분포와 총사업체 수의 분포는 매우 유사한 패턴을 지닌다. 이러한 경제 활동 지표들이 높은 지역들은 주로 주거지의 특성보다는 상업이나 업무 활동이 우세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림 4-17. 도시 마을의 경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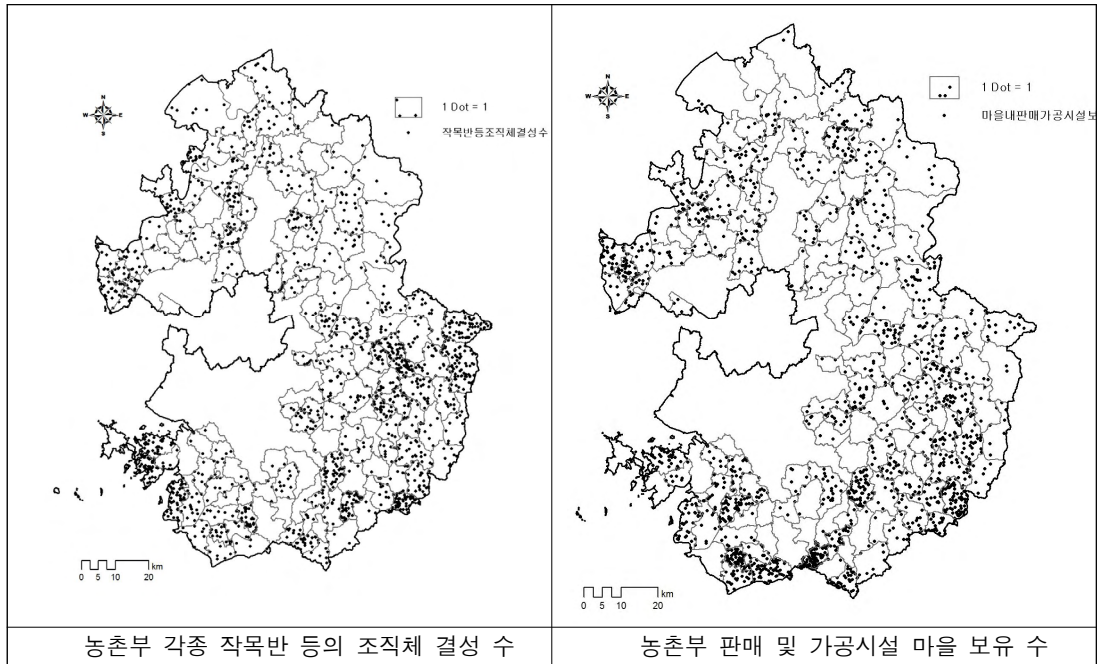


- 경기도의 농촌 마을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생산 및 판매 활동에 관련되는 조직 및 시설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경기도 농촌 마을에서는 다음과 경제 수준 특징들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4-18).

- 농촌 지역에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위한 조직 및 시설은 경기 북부보다 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그 중에서도 마을 작목반 등 생산 조직은 경기 동쪽 지역과 서쪽 해안가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며, 판매 및 가공시설은 경기 남부의 평택, 여주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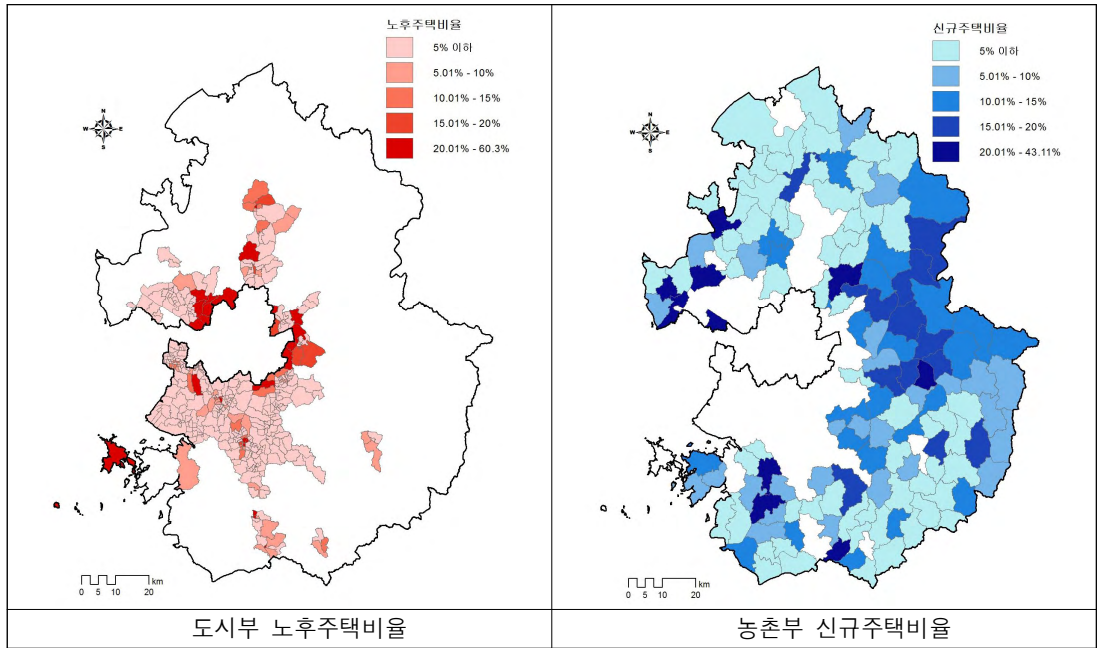
그림 4-18. 농촌 마을의 경제 수준



3.2.3.

- 주거 및 생활환경 부문은 도시부에서는 행정동 수준으로, 농촌부에서는 읍·면과 행정리 수준으로 다르게 집계하였으나, 여기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도시와 농촌을 행정동·읍·면 수준으로 재집계하여 지도화하였다.
 - 행정리 자료 중 대중교통운행횟수는 읍·면별로 합산하여 지도화하였고, 읍·면소재지 접근시간, 의료시설 접근성 등은 읍·면별로 평균을 내어 지도화하였다.
- 도시와 농촌 마을의 주거 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도시부에서는 전체 주택 대비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을, 농촌부에서는 전체 주택 대비 5년 이하 신규주택 비율을 산출하여 <그림 4-19>와 같이 지도화하였다.
 - 도시부에서는 하남, 성남, 고양시 같이 서울에 근접할수록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촌부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높았던 경기 동부 지역에서 신규주택이 많이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해 보면 경기 동부의 농촌 마을은 원주민과 귀농·귀촌을 통해 새롭게 유입된 주민 간에 다양한 교류 혹은 갈등 발생이 예상된다.

그림 4-19. 도시와 농촌 마을의 주거 환경 비교



- 도시와 농촌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접근성이 좋은 마을과 좋지 않은 마을이 균집으로 분포한다(그림 4-20).
- 대중교통서비스는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여 투입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의 최소 수준이 충족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생활여건이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0. 도시와 농촌 마을의 대중교통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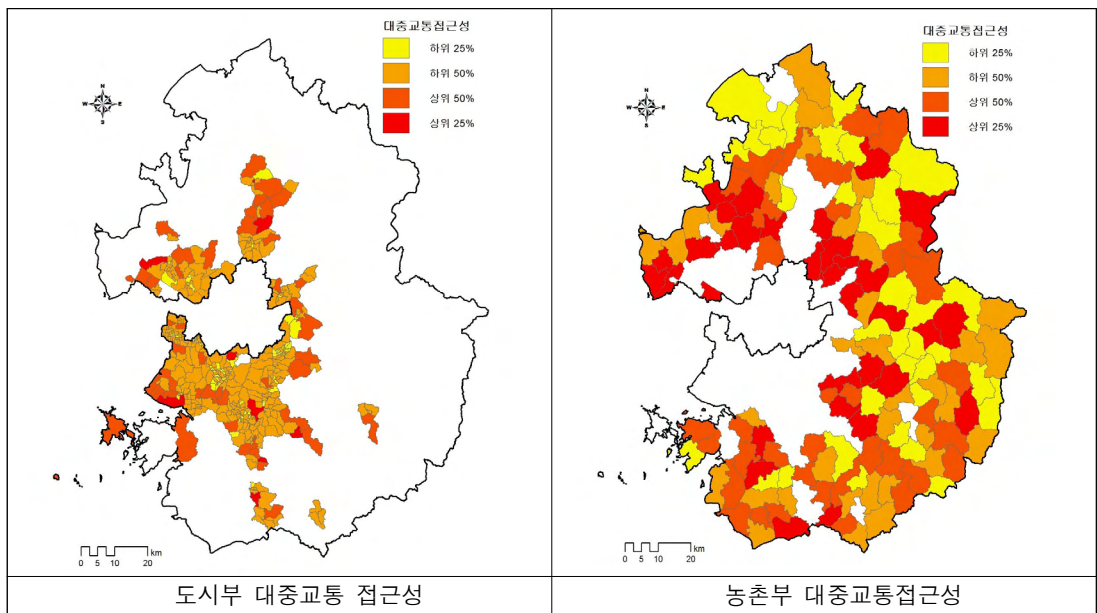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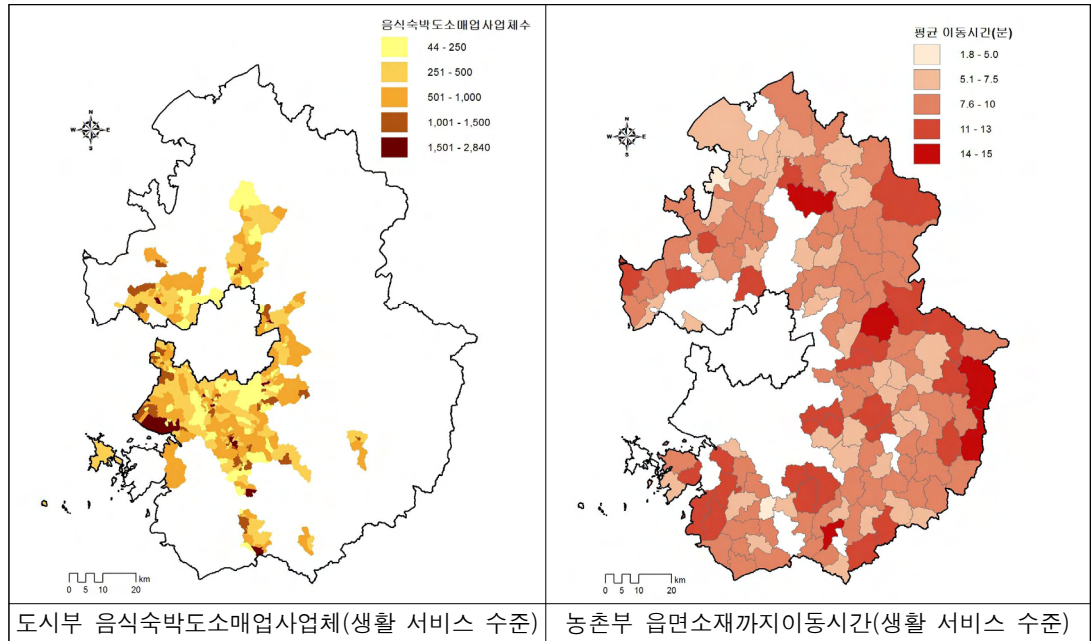


그림 4-21. 도시와 농촌 마을의 생활 서비스 수준



- 도시와 농촌 마을의 생활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도시부에서는 음식·숙박·도소매업 사업체 수를, 농촌부에서는 생활편의시설들이 입지해 있는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시간을 분석하였다(그림 4-21).
- 도시 지역에서 쾌적한 마을 환경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전체 행정구역 대비 공원녹지 면적 비율을 산출하였다(그림 4-22).
 - 경기 남부에 비해 경기 북부의 도시 지역이 공원녹지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도시 일원의 마을들이 녹지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산출되었다.
- 농촌의 보건·의료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의료시설로 부터의 이동시간 자료를 사용하여 마을별 의료 수준을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읍면으로 집계한 결과 <그림 4-23>과 같은 분포를 보였다.
 - 의료서비스 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은 가평군 북면, 포천시 소흘읍, 평택시 안중읍, 화성시 봉담읍 및 향남읍, 안성시 공도읍 내에 있는 마을들로 나타났다.

그림 4-22. 도시 마을의 공원녹지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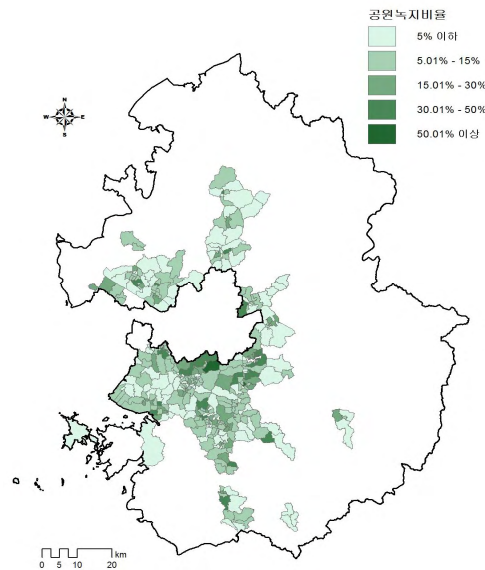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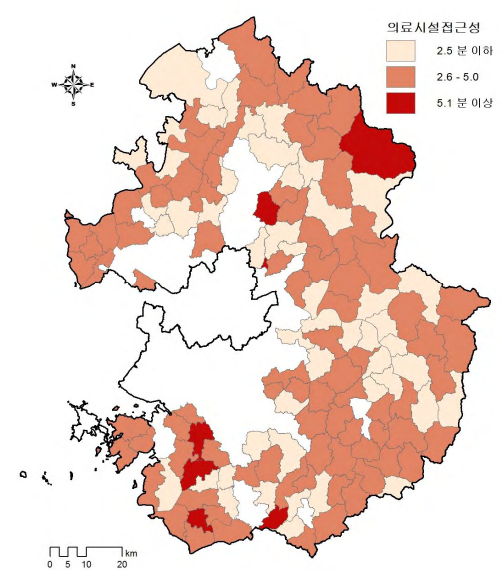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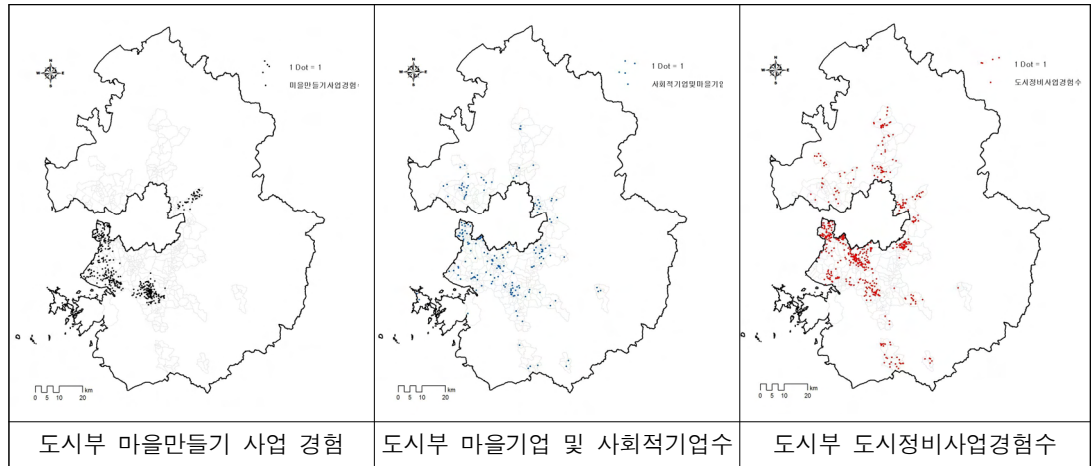
그림 4-23. 농촌 마을의 의료시설 접근성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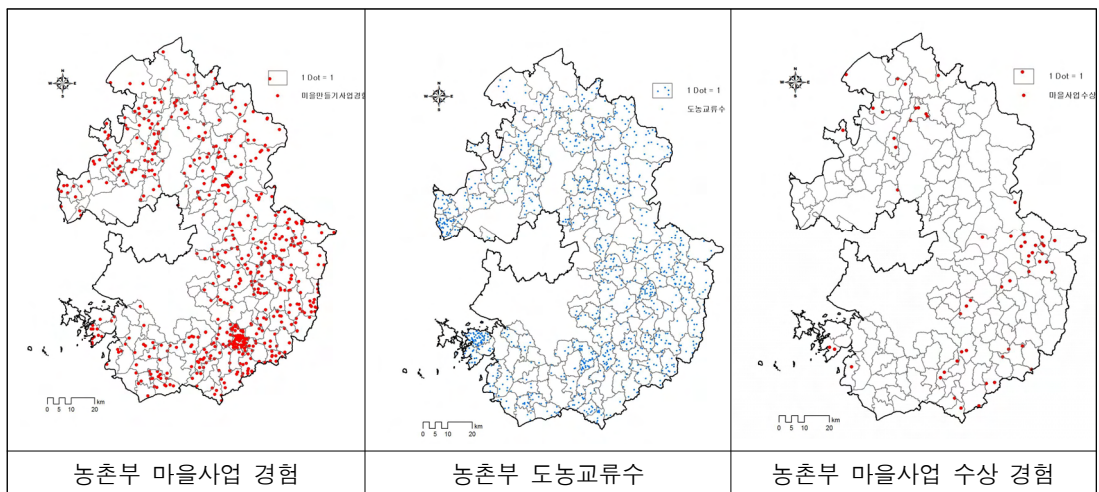
- 마을의 역량은 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즉,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해 낼 수 있는 힘은 마을 주민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이 참여했고 노력했는지 여하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마을 역량 부문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는 마을의 사업 경험과 다양한 마을 활동을 통해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도시 마을 역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3가지 지표는 <그림 4-24>에서 보는 것 같이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수, 도시정비사업 경험 수이다.
 - 도시 지역에서 마을만들기는 몇 개 시에서 선도적으로 수행해왔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 마을 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분포는 경기 북부의 도시 지역보다 경기 남부에서 더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도시정비사업경험 역시 경기 북부 지역보다는 남부의 도시지역에서 더 많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24. 도시 마을 역량 수준



- 도시부의 마을만들기 경험과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분포, 도시정비사업 경험 수를 비교해 보면 모두 유사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즉, 마을의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곳이 역량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농촌 마을 역량 수준은 <그림 4-25>에서 볼 수 있듯, 마을사업경험, 도농교류 유무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을사업 수상 경험은 당연히 마을사업이 진행되었던 마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나, 우수한 성과를 올린 마을은 그 역량을 발판삼아 다른 사업 수행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마을의 역량 측정 지표로 조사하였다.

그림 4-25. 농촌 마을 역량 수준



- 경기도 농촌에서는 <그림 4-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을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수행되었다. 하지만 마을사업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마을사업을 수행했다라도 마을의 사업 경험과 추진력에 따라 그 성과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3.

- 도시와 농촌 마을을 진단하는 것은, 마을 DB의 개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절대적인 평가의 대상으로 마을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현 상태가 다른 마을들과 비교하여 어떠한지를 분석하는 개념이다.
- 현재 마을의 현황은 각 지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마을과의 비교를 통해 현 마을의 위치를 살펴보기 힘들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 경기도 마을의 평균적인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지표의 상위 25%값과 평균값을 제시하여 경기도 마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 단, 도시형 DB에서는 고령화율, 노후주택비율의 경우 그 값이 작을수록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 또한 농촌형 DB에서는 고령화율, 읍·면소재지 이동시간, 의료시설 접근성의 경우 값이 작을수록 양호한 것을 의미한다.
- 이전에 살펴보았듯 경기도 마을은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의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표 4-17>과 같이 동부 지표와 읍·면부 및 행정리에 관련한 기술 통계 자료를 제시하였다.
- DB를 통해 계산된 각 지표의 평균값과 상위 25% 값은 다음과 같다.
 - 평균 값 이상을 가진 마을은 각 지표의 현황이 경기도 평균 상태보다 양호한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 상위 25% 값은 경기도 마을의 중 상위 25%에 속하는 임계값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 수치보다 높은 마을은 경기도 마을의 여건과 역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것이다.

표 4-17. 경기도 마을 진단 기준

구분	부문	세부지표	집계 단위	지표 평균 값	상위25% 이상 지표값	평균 이상 마을 개수	평균 미만 마을 개수	마을 합계	
도시형 DB	인구 부문	인구변화율	동	14.93	16.01	106	293	399	
		고령화율	동	8.94	10.08	161	238	399	
		인구천명당미취학어린이 수	동	10.27	11.66	195	204	399	
	지역 경제 부문	업무 및 상업 지역면적(km ²)	동	0.11	0.14	121	278	399	
		총사업체 수	동	1,352.01	1,682.00	165	234	399	
	주거 및 생활 환경 부문	노후주택비율	동	4.45	0.0	109	290	399	
		대중교통접근성	동	69.09	92.00	149	250	399	
		음식숙박도소매업사업체 수	동	560.78	676.00	153	246	399	
		공원녹지비율	동	10.10	12.75	134	265	399	
	마을 역량 부문	마을만들기사업경험수	동	1.03	1.00	90	309	399	
		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수	동	0.48	1.00	134	265	399	
		도시정비사업경험수	동	1.38	2.00	144	255	399	
	농촌형 DB	인구 부문	인구변화율	읍면	5.01	9.39	45	93	138
			고령화율	읍면	19.64	13.32	69	69	138
			인구천명당미취학어린이 수	읍면	10.27	11.66	34	104	138
지역 경제 부문		작목반등조직체결성수	행정리	0.41	0.00	942	3,098	4,040	
		마을내판매가공시설보유	행정리	0.44	1.00	1,099	2,941	4,040	
주거 및 생활 환경 부문		신규주택비율	읍면	8.58	11.66	52	86	138	
		대중교통접근성	행정리	60.61	60.00	1,009	3,031	4,040	
		읍·면소재지이동시간	행정리	8.67	5.00	1,964	2,076	4,040	
		의료시설접근성	행정리	3.23	2.00	1,794	2,246	4,040	
마을 역량 부문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수	행정리	0.14	0.00	465	3,575	4,040	
		도농교류수	행정리	0.30	0.00	775	3,265	4,040	
		마을사업수상경험	행정리	0.01	0.00	40	4,000	4,040	

- 도시 마을 중 4개 부문 12개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상인 마을은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개 부문 11개 지표에서 모두 평균 이상으로 나타난 마을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으로 분석되었다.
 - * 율천동의 경우 ‘2013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경연대회’에서 수상
 - * ‘밤밭축제’ 등 마을 축제 등을 개최하고, 지역주민, 새마을협의회, 마을만들기 협의회 등이 연합하여 율천지하차도 화단 조성 사업 등 다양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 중
- 농촌 마을 중에는 4개 부문 12개 지표 평균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행정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 하지만 3개 현황 부문(마을 역량 제외)에서 평균 이상을 만족하는 마을은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양평군 양평읍 오빈리, 창대리 등으로 나타났다.
 - 위 마을 중 마을 역량 부문에서 3가지 지표 값 중 하나라도 평균 이상을 포함하는 마을은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김포시 양촌읍 유현리로 나타났다.
- 이러한 마을 DB의 기술 통계자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
 - 첫째, 경기도 마을의 전반적인 여건 및 역량을 파악하여 마을만들기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 둘째, 통계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개별 마을이 경기도 전체 마을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즉, 마을 DB를 사용하여 아래 제시한 참고자료와 같이 마을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하여 마을의 기본적인 사항을 마을 계획 수립 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A마을의 현황 >

[마을 구성원의 변화와 특성]

- * A마을이 속한 진접읍은 지난 5년(2005-2010)간 인구가 92.3%이나 증가한 지역으로 급속한 구성원의 변화가 있던 지역임
- * 고령화율은 8.47%로 경기도 농촌 마을 중에서도 상위 25%에 들어갈 정도로 낮은 노인 인구 비율을 지님. 서울 근교라는 위치 특성상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됨
- * 이렇게 젊은 층이 많아 인구 천 명당 미취학어린이도 14.55명에 달하고 있어 마을에 유년층도 다수 분포함
- * A마을은 도시에 있는 마을의 인구 특성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마을로 판단할 수 있음

[마을 경제 특성]

- * A마을의 농업 관련 경제 특성을 보면 작목반과 마을 내에 판매가공시설을 보유할 정도로 양호한 경제 환경을 지니고 있음
- * 인근 주변 마을과 비교해 볼 때도 우위에 있으며 경기도 전체 농촌 마을의 경제 활동 수준보다도 높은 편임

[마을 주거 및 생활환경 특성]

- * A마을이 속한 진접읍의 최근 5년 이내 신규 주택 비율은 35.55%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도시 지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임
- *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총 운행 횟수는 420회로 평기도 농촌마을 평균인 60.61회보다 7배나 더 많은 횟수를 보임
- * 읍면 소재지로의 접근성은 10분, 각종 의료시설로의 평균 접근성은 4분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생활환경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준은 아님

[마을 역량 특성]

- * A마을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도농교류 등을 수행한 적이 없음. 향후 마을만들기를 수행한다면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마을 종합 분석]

- * A마을은 행정구역 상 농촌 마을로 구분 되나 인구·사회·경제·주거 등의 특성을 보면 급속하게 도시화가 진행된 마을로 판단할 수 있음
- *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전통적 농촌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을 문제 보다는 대도시 근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마을 주민간의 유대감 부재, 급속하게 변모하는 공간 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됨
- * 따라서 A마을은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농촌적 특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내용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마을만들기 방향

5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방향과 접근법
2.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비전과 과제
3. 추진 전략

여 백

제 5 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1.

1.1.

- 마을만들기는 기존의 정부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접근이며, 주민 자치 실현에 초점
 - 기존에 추진해온 정부 지원 마을사업들과 차별화를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며, 새로운 이름의 마을사업을 신설하는 것과는 선을 긋는다.
 - 주민이 행정의 지원에 의존했던 관행을 극복하고 삶터에서 자율적, 능동적인 활동을 모색한다는 점이 마을만들기가 갖는 차별성이다.
 - 주민이 마을의 여러 사안들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제반 문제에 대응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주민 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지향점이다.
 - 일회적인 사업 추진으로 멈추던 기존 관행을 벗어나 주민들이 마을의 생활여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활동을 자율적으로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 마을만들기는 주민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박한 활동에서 출발하여 높은 단계의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지향한다(상자글 참조).
 - 마을만들기에는 왕도가 없으며, 주민들의 경험 축적과 학습 과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단기 성과 도출을 지향하는 기존 마을사업들과 구별된다.
 - 따라서 마을공동체가 내부의 자산과 역량을 활용하여 내생적 발전을 추구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정의 역할도 사업 선정과 집행 과정의 직접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관계적인 관점에서 마을공동체를 육성하고 조언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 마을공동체의 단계적 성장 과정 >

- **[마을공동체 형성기]** 소수의 주민과 마을 리더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의 방향을 모색하고 공동체 활동을 실험하는 단계
 - 소수의 주민들이 주도하여 모임을 구성하고 마을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출발
- **[마을공동체 성장기]** 마을공동체에 자치조직이 구성되어 참여 주민이 늘어나기 시작하고, 초기 활동의 경험이 축적되어 점차 성과가 가시화
 - 소수 지도자와 활동가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자치적인 주민 조직이 구성되면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조직적인 기반을 형성하기 시작
 - 이를 바탕으로 주민 사이에 사회적 교류와 상호작용이 증가하며, 사안별로 행정가와 전문가가 활동에 결합하여 마을 발전 방향을 지원
- **[마을공동체 안정기]** 다양한 마을공동체 활동의 성공 경험이 마을 구성원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주민 자치 조직에서 다양한 중·대규모 사업을 마을 자체의 조직과 자원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역량을 형성
 - 다양한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예: 공동 육아, 공동체카페, 골목가꾸기, 친환경놀이터, 평생배움터, 생협운동, 사회적 일자리, 협동조합 등)가 구성되면서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동
 - 시·군 지자체는 개별 마을자치조직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며, 중앙정부와 광역 시·도 지자체의 중·대규모 지원사업을 마을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임
- **[지역공동체 발전기]** 마을 단위 정주공동체에서 출발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지역사회의 연계협력 네트워크로 진화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
 -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유사한 문제를 공유하는 다른 마을과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되고 마을공동체 간의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공동체 발전에 대해 성찰하기 시작
 - 농촌의 읍·면 별, 도시의 자치구에서 권역 마을만들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도농교류, 로컬푸드, 권역사업 등 여러 마을의 공동노력과 지역순환체계를 통해 마을 간 협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확대

□ 마을만들기를 통해 경기도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

- 경기도는 유입 인구가 많고 젊은 계층이 다수 분포하여 타 지역에 비해 역동성이 크지만 주민들이 마을에 갖는 애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 농촌 지역의 경우도 도시민의 정주공간으로 부각되고 있어 고령화와 과소화 문제를 겪는 타 시·도와 달리 활력이 높다.
 - 반면, 인구 유동성이 높은 탓에 거주하는 마을을 삶의 터전이라 여기며 애착을 갖고 살아가는 주민 비율은 그만큼 높지 않은 실정이다.

- 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력이 타 시·도보다 우위에 있지만, 문화와 여가, 환경 등을 포함한 삶의 질은 경제력 수준에 비해서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된다.
- 이런 한계에 대응하여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지역에 자긍심을 갖고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마을만들기가 경제성장이나 소득개발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예술, 생활여건과 같이 생활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
- 개방적인 현대사회에 맞게 열린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며, 다양한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
 - 마을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
 - 계층, 연령 등이 상이하지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스스로의 힘으로 가꾼다는 방향에 동의하는 주민이라면 제한 없이 마을만들기 과정에 참여하도록 개방해야 한다.
 - 읍·면·동 행정구역을 포함한 일정한 공간 범위 안에 거주하는 주민들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현장 활동가, 외부 전문가 등이 교류하고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네트워크 까지도 마을만들기 과정에 포함토록 한다.
 - 특히 농촌의 경우 전통적인 정주공동체에 머무르지 않고 마을 네트워킹을 통해 새로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시도가 요구된다.
 - 농촌에서 마을 단위의 전통적 영농 공동체 특성은 약해지고 있으며, 인구 구성이 다변화하고 있다. 귀농·귀촌인이 다수 분포하며, 비농업 종사자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이 경기도 농촌이다.
 - 따라서 폐쇄적인 마을 공동체를 벗어나 다양한 배경을 가진 주민들이 함께 활동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단일 마을에 한정짓지 않고 인접한 마을 간 혹은 공동의 목표를 둔 여러 마을 간 네트워킹을 통해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사회 활동을 추진하는 새로운 마을만들기 모델을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한 행정의 노력 병행
 - 경기도 마을공동체가 자율적 노력과 내재적 역량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도록 경기도와 기초 지자체,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 특히 마을만들기 과정을 통해 민관협력에 기반한 지역발전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관점이 요구된다.

□ 도농복합지역이라는 경기도 특성에 부합하는 마을만들기 모델 창출·확산

- 경기도에는 순수한 의미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도 있지만,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된 러번(Rurban)지역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 도시적인 경관이 우세하지만 농지나 산지가 곳곳에 분포하며 영농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농어촌과 같은 경관적 특징을 보이지만 인근 도시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민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전형적인 농업지역과는 상이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도 있다.
- 경기도는 도시와 농어촌이 혼재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도농복합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데 특히 주력할 필요가 있다.
 -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이루어진 마을만들기의 경우 지역 특성에 따라 도시나 농어촌 어느 한 쪽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 결과 도농복합형 마을만들기의 사례는 축적되지 못한 상태이다.
 - 타 지역에서 활발히 시도하지 않았던 도농복합형 마을만들기의 사례를 경기도에서 본격적으로 발굴하고 바람직한 모델을 확산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 도농복합형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읍면 소재지 정비, 도농연계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주민협정을 통한 주거환경 정비, 로컬푸드 및 도시농업 육성 등과 같은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상자글 참조).
 - 이러한 유형의 활동들을 중소도시의 외곽지역, 소도읍 또는 면 소재지 지역, 근교 마을 등 다양한 유형의 마을에서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도농복합지역 마을만들기의 대표적 유형과 사례 >

- **(농어촌 소재지 정비)** 전통적 문화·역사 자원 등을 지닌 농어촌 소재지 거리를 특색 있게 정비
 - 일본 오부세정 소재지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방 정원 만들기 및 전통 가로 정비
- **(문화복지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등에 필요한 문화·복지서비스를 도·농 연계를 통해 제공
 - 이탈리아 볼로냐시 교외에서는 농장을 활용하여 도시 거주 장애인들이 농작물 재배, 음식 준비 등에 참여하는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일본 도쿄도 쿠니타치시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와 농협이 공동으로 고령자를 모집해 야채 재배 등 영농활동을 하는 ‘푸른하늘 데이서비스사업’ 시행
- **(주민협정에 의한 주거환경 정비)** 농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러번지역에서 주민협정으로 환경 정비
 - 일본 고베시의 시가화조정구역 일부를 공생존으로 설정하고 주민협의회가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하여 경관협정지역을 지정·관리 / 일본 하마마츠시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주민 동의를 거쳐 토지이용협의회를 설립하고 마을만들기 방침을 책정
- **(로컬푸드 기반 도농 연계)** 로컬푸드 생산 농가를 조직하여 도시지역에 파머스마켓 등 매장 설립
 - 원주시 체험마을과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여 새벽시장 운영 / 완주군의 농가들로 구성된 로컬푸드 협동조합에서 전주시내 직매장을 설립, 운영
- **(도시농업 육성)** 도시 내 농지를 도시민에게 영농활동·여가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
 - 일본 도쿄도 히노시는 「농업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농업과 함께하는 마을만들기를 위해 농지 정비, 농산물 직매소, 시민농원, 고령자 복지농원 등을 설치

1.2. 가 (Two Track)

□ Track1: 경기도 마을 전체에 마을만들기 문화를 전파·확산

- 마을만들기의 철학이 경기도 일선 시·군들과 현장에서의 사업 추진 시 자리를 잡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 관련 교육·홍보 등을 통해 마을만들기 문화를 확산한다.
 -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지역사회에 놓인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마을을 개선하는 중요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마을만들기 교육 추진에 역점을 둔다.
-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주민들의 역량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 각종 사업 지원 방식을 조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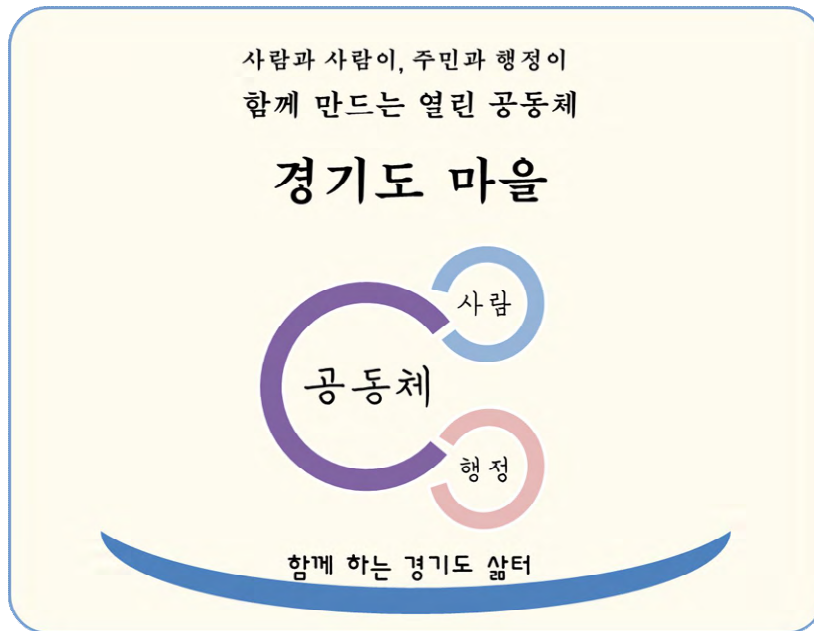
- 경기도 행정은 기초 지자체가 마을공동체들의 구체적인 상황과 여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면서, 각 공동체가 놓인 고유한 상황과 여건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마을공동체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

- 이런 점에서 경기도는 개별 마을공동체의 성장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초 지자체의 행정역량 강화계획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데 주력한다.

□ Track2: 도 차원의 공모사업 연계를 통한 성공사례 창출과 확산

-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으로 역량과 의지 있는 마을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 및 경기도 마을 성공 사례를 창출한다.
 - 마을공동체의 역량 형성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는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별 지원 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 공동체 차원으로 조직된 주민 의지와 역량, 마을 자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기도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 정부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정책을 경기도 마을의 고유한 상황과 여건을 반영하여 각 실·국 간 협의와 협력으로 융복합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둔다.
- 경기도 행정 차원에서 잠재적 역량을 갖춘 마을공동체의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체계와 제도를 확립한다.
 - 경기도는 경기도 마을별 사회, 경제, 인구통계학적 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DB화하여 각 마을이 처한 상황과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면서, 마을의 여건에 대한 유형화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2.



2.1.

- [삶터] 경기도 마을만들기는 삶터를 매개로 주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지향한다.
- [주민 참여] 지역공동체의 일원이자 자치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주민이 생활공간의 제반 사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행정 지원] 주민 행복 실현을 목표로 삶의 질 제반 영역을 포괄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행정에서 수행한다.

2.2.

3

9

- 지속가능한 행복삶터 만들기
 -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마을 발전모델 발굴·확산
 -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형성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영역 다각화

-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공동체 만들기
 -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이루는 마을만들기
 -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마을만들기
 - 마을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마을만들기 외연 확대

- 융복합 행정지원체계 만들기
 - 마을의 성장과정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방안 마련
 -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체계적 분석·관리방안 수립
 - 시·군 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의 역할 제시

3.

3.1. 가

▣ 지역 여건에 맞는 특성화된 마을 발전모델 발굴·확산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다양한 유형의 마을이 혼재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서 기초 지자체가 주관해서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방향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 타 시·도와 달리 도시 또는 농어촌 및 도농복합지역 등 다양한 마을 유형별로 확산 가능한 마을만들기 방향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화된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각 지자체들이 개발하도록 한다.
- 경기도 차원에서는 마을 특성에 따른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마을만들기 사례집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
 - 경기도 주관으로 마을만들기 경진대회 등의 방식으로 마을 간 선의의 경쟁과 상호학습을 유도하고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한다.
- 특히 이때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기존 마을개발사업에서 벗어나서 마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현안들에 주민들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활동 모델을 발굴토록 한다.

▣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순환경제 형성

- 도시와 농촌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서 마을만들기를 도농교류 활동 확산의 기회로 활용한다.
 - 도농교류형 마을만들기 모델을 개발하여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 마을과 농촌 마을을 적극적으로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도시와 농촌의 마을이 함께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지자체들이 연계하여 직거래 활동과 농촌 체험, 직거래 시설 설치 등의 사업 아이টে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 농촌 마을은 광범위한 배후 시장에 접근 가능하게 되고, 도시민은 믿을 수 있는 먹을거

리를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도시와 농촌이 연계된 보다 넓은 범위의 순환경제 형성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 참고: 로컬푸드를 매개로 한 완주군과 전주시의 상호 협력 >

- 완주군과 전주시는 로컬푸드 분야를 상생협력사업의 아이템으로 설정, 전주 65만 소비자와 3천여 완주 생산 농가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
 - 일반 소비자 대상 직매장과 학교 대상 공공급식센터 설치
 - 사회적기업을 통해 제철 먹을거리를 꾸러미 형태로 회원 가구 1천여 호에 직접 공급(연 매출 8억원 규모)
 - 직매장과 농가레스토랑, 농촌체험이 결합된 도농상생 신문화공간 조성 추진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동영역 다각화

- 마을만들기가 소득사업이나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심으로 협소하게 진행되지 않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현안들을 포괄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지향한다.
- 농촌의 경우 기존 마을개발사업이 주민 소득 창출 목적의 아이템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서는 활동 분야를 더욱 다변화하여 문화, 여가, 경관 개선 등으로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하여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는 주체 양성을 마을만들기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아이디어도 시도해볼 수 있다.
- 도시 마을만들기를 통해서는 그동안 역점을 두어온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 분야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상점거리 활성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같은 활동들이 그에 해당한다.

- 참고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참여의향 정도에 따라 ‘적극 참여 의향층’²⁵⁾과 ‘일반 응답자층’²⁶⁾으로 구분하여 두 그룹의 주민들이 응답한 개선 과제를 비교해보면 기존 사업보다 다변화된 영역으로 마을만들기 활동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 도시 지역의 마을만들기 ‘적극 참여 의향층’의 경우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정비 문제뿐 아니라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를 중요한 과제로 응답한 주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농촌의 마을만들기 ‘적극 참여 의향층’의 경우 타 집단에 비해 마을경관과 자연환경 가꾸기,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 등과 같이 소득개발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마을만들기 과제로 제시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 참여 의향 수준별 마을만들기를 통한 개선 과제(1순위)

단위: %

구 분	동 지역		읍·면 지역	
	적극 참여 의향층	일반 응답자층	적극 참여 의향층	일반 응답자층
주거환경과 기반시설 정비	20.7	13.9	15.8	19.7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16.1	9.9	17.9	13.3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	17.2	18.9	8.4	9.1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	9.2	12.3	9.5	11.0
문화, 여가 여건 개선	10.3	11.7	11.6	12.9
마을경관과 자연환경 가꾸기	8.0	8.9	11.6	6.8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10.3	5.3	3.2	4.5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	5.7	10.1	13.7	8.3
모름/무응답	2.3	8.9	8.4	14.4
합 계	100.0	100.0	100.0	100.0

* 주: 적극참여의향층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와 ‘기획과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로 응답한 경우, 일반응답자층은 그 외로 응답한 경우임.

25)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와 ‘기획과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로 응답한 경우

26)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이다’, ‘관심이 없다’, ‘가급적 참여하겠다’로 응답한 경우

3.2.

□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이루는 마을만들기

- 행정에 의존해온 기존 마을사업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를 지향한다.
 - 마을 현안을 발견하고 대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주민들 스스로의 자각이 전제되어야 마을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다.
 - 현 시점에서는 마을만들기 인식 수준이 높지 않은 주민들이 다수이므로 행정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마을만들기 교육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 마을만들기가 소수 리더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다수 주민들의 참여와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도록 유도한다.
 - 역량 있는 리더들의 역할에 따라 사업 성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많은 주민들이 마을만들기 과정에 주체로 참여하고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단기적 사업 성과 도출에 집착하기보다는, 주민들의 중장기적인 마을만들기 역량을 형성토록 하는 데 보다 역점을 둔다.
 - 특히 경기도 광역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눈앞에 성과를 내놓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그보다는 역량 강화 활동의 지속적인 수행을 지원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저변을 구축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마을만들기

- 지역공동체 발전 방향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구성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한 공간 범위를 마을만들기 추진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농촌의 경우 지나치게 행정리나 자연마을 단위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온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한 범위의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 참여 범위도 기존 토박이 주민이나 농가 중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귀농·귀촌인이나 비농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합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한다.
 - 또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간지원조직이나 현장 활동가 구성원들이 마을만들기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도시뿐 아니라 농촌에서도 그런 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표 5-2. 마을만들기 참여 주민의 범위

단위: %

동 지역(N=670)		읍·면 지역(N=358)	
참여 주민 범위	응답비율	참여 주민 범위	응답비율
같은 아파트단지 혹은 인근 골목에 사는 주민들까지	25.4	같은 자연마을 주민들까지	15.1
		같은 행정리 주민들까지	11.7
같은 행정동에 사는 주민들까지	26.9	같은 읍·면 주민들까지	22.6
같은 도시 주민들까지	9.7	같은 시·군 주민들까지	3.6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누구나	31.2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누구나	32.7
모름/무응답	6.9	모름/무응답	14.2
전체	100.0	전체	100.0

* 주: 농촌 주민 응답 중 1개 '기타' 응답('아파트별로')을 제외한 결과

□ 마을 간 네트워크 형성으로 마을만들기 외연 확대

- 지역공동체의 여건 변화를 반영, 개별 마을에만 한정하지 않고 마을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새로운 방식의 마을만들기 모델을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 농촌의 경우 읍·면 중심지 단위의 공동체 활동 육성 필요성이 제기되는바, 배후 마을들을 연계한 읍·면 단위 마을만들기를 소재지를 무대로 하여 추진한다.
 - 충북 옥천군 안남면에서는 면에 속한 마을들이 모두 참여하여 구성된 안남면 지역발전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전개한다.
- 읍·면·동을 단위로 하는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사업 기조에도 맞추어 마을 연계 활동을 추진한다.
 -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참고: 옥천군 안남면의 주민 참여를 통한 소재지 활성화²⁷⁾ >

- 안남면은 12개 행정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인구가 1천5백 명에 불과하나 배후 마을들을 연계한 지역공동체 활동이 면 단위에서 활발히 수행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어머니학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지역개발, 교육·문화, 여성·복지·환경 등의 분과별로 활동을 추진
- 주민 대표 조직인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각종 지역발전의 의사결정을 위한 대의기구 역할 담당
 - 각 마을 대표를 포함, 36명으로 구성되는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2007년부터 안남면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 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과 권역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동호회 모임도 활성화되고 있으며, 면민 체육대회나 작은 음악회 같은 행사를 개최할 때 다양한 지역 단체들이 준비 과정에서 참여
- 2011년부터 소재지 마을이 중심이 되는 권역사업을 시행 중
 - 이는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역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면 주민의 의사에 바탕을 둔 사업 아이템 발굴을 통해 안남면 배후 마을과 소재지를 포괄하는 발전 방향 모색을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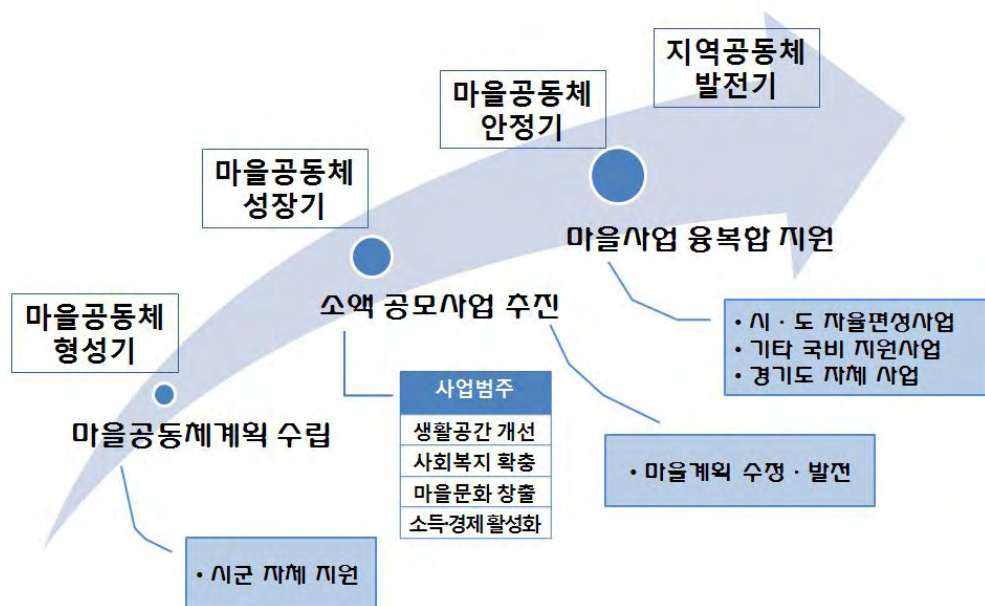
3.3.

▣ 마을의 성장 과정을 고려한 단계적 지원체계 구축

- 마을만들기 과정에서 주민들의 역량 수준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하는 체계를 수립한다.
 - 마을의 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 지원을 하여 사업 성과가 떨어지고 비효율을 낳는 문제를 양산하지 않도록 한다.
- 마을의 공동체 성장 과정은 마을공동체 형성기(1단계)에서 출발하여, 마을공동체 성장기(2단계), 마을공동체 안정기(3단계), 지역공동체 발전기(4단계)의 성장 단계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적합한 지원책을 연결하도록 한다(그림 5-2 참조).
- 마을만들기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곳에 대해서는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기 보다는 마을의 문제 발견과 중장기비전 설정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에서 유도해야 한다.

- 그리고 이때는 각 시·군이 중심이 되어 마을공동체 형성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마을별 주민모임과 공동체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한다.
 - 필요시 마을 차원의 발전계획 수립을 유도하고 및 소액 활동비 지원 등을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어 마을 역량이 성숙되는 단계에서 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 시·군 단위의 역량 강화 사업을 거쳐서 마을공동체 역량이 일정 수준에 오른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도 차원의 소규모 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을만들기 역량이 충분한 수준으로 갖추어진 마을에 대해 중·대규모의 국·도비 사업을 융복합 지원토록 한다.

그림 5-1. 마을공동체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적 지원 개념



- 마을만들기 역량 단계별 체계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경기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 특히 <표 5-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

책사업들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는 상황에서 난립한 사업들을 도 단위에서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공무원 조사 결과).

-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 내 각 사업부서 간 협력·조정을 통해 마을 발전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정부 및 도 사업을 융복합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표 5-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광역단위의 역할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체 (n=113)
도 자체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사업 강화	19.7	28.8	23.9
중앙부처 정책난립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 사업예산 통합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24.6	28.8	26.5
도 차원의 교육, 홍보, 전문가 지원, 컨설팅 등 배후지원 강화	18.0	19.2	18.6
시·군 주도의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주력	37.7	21.2	30.1
기타	0.0	1.9	0.9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 역량강화를 위한 광역의 역할 정립

-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시·군 지자체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둔다.
 - 시·군별로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 경험이 상이하고 역량 수준에서도 편차가 커서 일률적인 역량 강화 지원 방안 도출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 수원시, 안산시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들과 달리, 다수 시·군들은 개별적으로 마을만들기협력센터를 운영하거나 주민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지원할 여건이 안 되는 실정이다.
 - 특히 도시 지역에 비해 농촌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을 받아 마을 활동을 추진해왔고, 주민들의 역량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자체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도 차원에서는 마을만들기협력센터 설립을 통해 역량 수준이 낮은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둔다.

- 공무원 조사 결과, 도시 지역인 일반시에 비해 도농복합시나 군 지역 공무원들일수록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보통’ 의견까지 포함). 일반시(11.5%)에서는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응답 비율을 기록하였다(표 5-4).
- 시·군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원센터 설립을 개별 시·군보다 경기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도농복합시 및 군 지역의 경우 도 단위 지원센터에 대한 응답 비율이 약 39%로 상당히 높다. 일반시의 경우 ‘도 단위’ 응답 비율은 약 28%, ‘개별 시·군 단위’ 응답 비율은 약 36%이다.

표 5-4. 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필요성과 적합한 공간 단위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체 (n=114)
지원센터 설립 필요성	전혀 불필요	6.6	1.9	4.4
	대체로 불필요	4.9	0.0	2.6
	보통	18.0	28.3	22.8
	대체로 필요	42.6	43.4	43.0
	매우 필요	27.9	26.4	27.2
	합 계	100.0	100.0	100.0
지원센터 설립 시 적합한 공간단위	모두 불필요	4.9	5.8	5.3
	경기도 광역 단위	27.9	38.5	32.7
	개별 시·군 단위	36.1	21.2	29.2
	복수 시·군 단위	6.6	7.7	7.1
	도와 시·군 동시 필요	23.0	26.9	24.8
	기타	1.6	0.0	0.9
	합 계	100.0	100.0	100.0

□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체계적 분석·관리체계 구축

- 경기도 행정에서 마을 여건과 주민 역량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DB를 구축한다.
 - 다양한 현황 지표가 바탕이 되는 마을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경기도 및 기초 시·군,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객관적 근거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다.

- 마을 DB 구축의 단위로 도시 지역은 '동'을 기준으로 하며, 농촌 지역은 '행정리'를 기준으로 구축한다.
- 이러한 마을 DB를 바탕으로 마을진단지표를 발전시켜 향후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려는 마을공동체 주민과 해당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 마을 역량 진단과 자원, 사회·경제 특성 등의 자료로 진단 지표를 개발한다.
 - 사업의 모니터링과 성과 관리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참여 마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보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세부추진계획

6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 추진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
4. 마을만들기 연관 사업의 융복합 연계·지원

여 백

제 6 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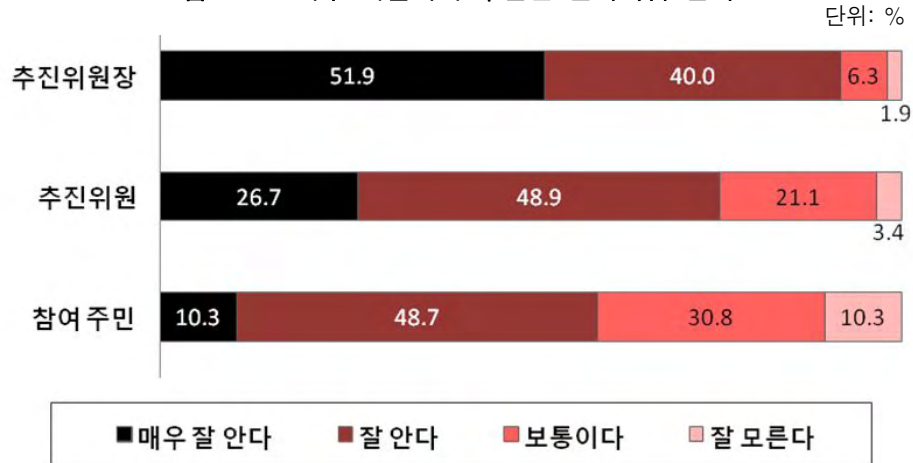
1. .

1.1.

- 주민 역량 강화 과정이 배제된 소수 리더 중심, 행정 주도의 마을사업 추진 문제
 -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존 마을사업 등과 연계하여 각종 주민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왔지만, 실질적인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에는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 각종 교육이 일방향의 집체교육 중심으로 진행되며,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까닭에 교육 성과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한정되는 점도 문제이다.
 - 리더를 포함한 일부 사업 주도층 중심으로 참여자가 제한되어 일반 주민들의 역량 형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 참고로 농촌진흥청의 주민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읍·면 주민들의 각종 사회교육 참여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연도별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
 - * 연도별 각종 사회교육 참여 주민 비율 변화 추이
(’06년) 29.6% → (’08) 27.2% → (’10) 26.3% → (’12) 18.4%
 - 내실있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부재와 형식적인 주민 참여로 인해 기존 정부 지원 사업의 상당수는 리더 중심의 제한된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와는 거리가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 참고로 농식품부의 권역사업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거주하는 마을에서 시행한 권역사업 내용에 대한 인지도에서 일반 주민과 마을 리더 집단 간에 편차를 보이고 있다.

- 이러한 문제들은 각종 마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얻고 지속 가능하게 이어지는 데도 제약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림 6-1. 거주 마을에서 추진한 권역사업 인지도



* 자료: 성주인 등(2012) 재구성.

□ 마을만들기와 연계한 실질적인 역량강화활동 지원의 필요성

- 지역사회의 역량 수준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활동은 교육·훈련, 학습조직, 컨설팅, 토론회·포럼 활동 등 다음의 여러 형태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²⁸⁾
 -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방식에 따라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 ‘교육·훈련’
 - 학습자들이 집단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지식·정보를 획득하며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학습조직’ 활동
 - 마을만들기활동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직접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인 ‘컨설팅’
 - 마을공동체의 의제를 논의하고 발전방향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수립하는 ‘토론회·포럼’ 활동
- 지금까지 주로 이루어진 역량강화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집체교육이나 형식적인 견학, 외부전문가가 주도하는 컨설팅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결과 주민이 각종 교육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역량을 자기주도로 개발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강화활동 내용을 다변화하며,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28) 김정섭 등(2009).

그림 6-2. 역량 강화 활동의 유형

역량 강화 활동	역량 강화 활동 내용
교육·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자의 의도에 의해 설계된 방식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학습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자들이 집단적이고 주도적으로 관련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며 스스로 학습해 나가는 활동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만들기활동의 진행과정에서 제기되는 특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컨설턴트가 직접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인 '컨설팅'
토론회·포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공동체의 의제를 논의하고 발전방향과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토론회·포럼' 활동

* 자료: 김정섭 등(2009).

- 경기도는 시·군 별로 마을만들기 활동 추진 경험이 상이하고 역량 편차도 크기 때문에 일률적 방식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각 시·군의 여건과 상황에 맞추어 지원방식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 수원, 안산 등과 같이 자체적으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를 확대해온 지자체들과 달리 대다수 시·군들은 개별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과 주민 역량강화사업을 실행할 여건이 미흡하다.
 - 도시 지자체에 비해 농촌 지자체는 정부의 정책사업 지원을 받아 마을 활동을 추진해왔고, 주민들의 역량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자체적으로 주민역량 강화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 기초 자치단체가 지역의 마을공동체의 상황과 여건을 파악하고 이에 맞추어 지원하는 행정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경기도의 각 시·군 중에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역량을 강화하고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지자체에 우선순위를 두어 지원한다.
- 기초 자치단체가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제도를 내실화하고 자체 행정역량을 강화하도록 경기도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1.2.

□ 기본 방향

- 경기도는 시·군 대상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지자체별로 마을만들기 주민교육 실시, 시·군 단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운영, 마을 단위의 마을공동체는 계획 수립 지원 등 기초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행정지원 제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 실제 공모사업 시행은 경기도의 예산 확보 상황과 기초 지자체의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진행한다.
- 시·군이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 마을공동체계획에 마을 여건과 상황 검토, 마을 자원 조사, 주민 수요, 마을의 미래와 비전, 발전 방안, 주민 조직 구성과 공동의 노력 등을 담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한다.
- 경기도청은 시·군의 마을만들기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
- 시·군의 행정 역량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거버넌스와 협력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1.3.

□ 시·군 여건에 맞는 주민 역량강화사업 지원

- 경기도는 마을만들기 문화가 마을공동체에 확산되도록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의 추진 주체를 시·군이 맡도록 하는 것은 지역 여건에 맞는 마을만들기 활동 방향을 주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 이러한 방향의 역량 강화 사업은 보다 현장에 밀착해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광역보다는 시·군 단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 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적합한 민간주체와 중간지원조직을 파트너로 선정하여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을 담당

- 시·군의 주민 교육사업 담당 주체는 시·군별 여건을 감안하여 전문성과 현장 활동

경험을 갖춘 단체·조직에서 주관을 하도록 한다.

- 경우에 따라 행정에서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나 주민과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민간 주체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 민간단체나 중간지원조직, 컨설팅업체 등이 교육사업의 주체 역할을 하도록 지자체별로 사업을 위탁 한다.
 -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나 시민사회단체가 이미 구성되어 관련 활동 경험을 지닌 지역에서는 해당 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을 주관토록 할 수 있다.
 - 지역 내 민간단체의 활동 기반이 취약한 곳은 기존 민간 컨설팅업체들 중 일정한 요건을 지닌 곳에 위탁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하다.

□ 공모 방식으로 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선정

- 시·군에서 작성한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참여 시·군을 선정하는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 시·군의 주민교육체계에 대한 예산 지원은 대략 경기도가 2~3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여 시·군 예산과 공동 부담하여 시·군 당 5천만 원 내외의 수준에서 진행하도록 한다.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군들이 각자 처한 여건에 맞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마을만들기 지원 제도와 경험이 자체적으로 축적된 시·군은 그에 걸맞은 단계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한다.
 - 마을만들기 시행 초기단계인 지자체의 경우 기초적인 저변 구축을 위한 활동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 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필요시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시·군들과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 일반농산어촌에 속한 시·군의 경우 시·군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적인 마을 역량강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인접 시·군들이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역량강화활동을 공동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도시 지자체와 농어촌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연계협력사업 방식으로 주민 역량 강화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 정읍시와 고창군의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사례와 같이 생활권을 공유하는 복수 시·군에서 단일한 교육 기관을 선정하여 통합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참고: 메이플-스톤 공동체지원센터 사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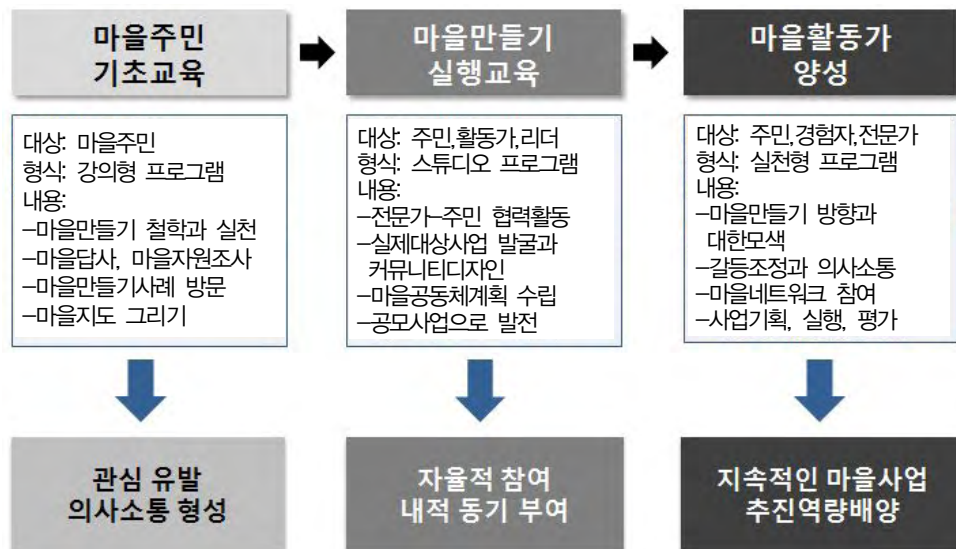
- * 2013년부터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정읍시와 고창군이 공동 설립하여 운영
- * 읍·면·동 순회 '살기 좋은 우리 동네 만들기' 교육 실시
- * 2014년부터 정읍·고창 마을만들기 지역창안대회 개최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

□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후속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연결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

- 시·군 단위의 교육 프로그램이므로 현장에 밀착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도록 한다.
 - 유무형의 다양한 마을자원과 주민역량을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개선하고 성장시키는 주체로 발전하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한다.
 - 주민교육체계는 실제 활동과 괴리된 죽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어내도록 생동하는 지식을 전달한다.
 - 행정이 동원하는 집체교육을 탈피하여 마을 현장에서 주민의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한다.
-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주민들이 후속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지식 전달에 치우친 일회성 교육사업을 벗어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마을공동체의 장기적 발전에 따른 마을주민의 의식 계발을 염두에 두고 각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 형식과 내용을 제시한다.
 - 마을공동체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는 계기로 발전하도록 한다.
 -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과 운영, 시·군 행정전담조직의 역할 부여, 민관협력적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구축 등의 기회가 되도록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차원의 중장기적인 마을만들기 역량 형성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 세부 교육프로그램은 마을별 역량 수준과 발전 단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 마을만들기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다수 주민들의 참여하에 기초교육 단계부터 실시하도록 한다.

- 어느 정도 역량이 형성되기 시작하면 마을공동체계획 수립 등을 통해 공모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돌입한다.
- 이러한 과정과 병행하여 정부지원사업 여부를 떠나 마을만들기활동의 지속 기반을 마련하도록 마을활동가 양성을 추진한다.

그림 6-3. 시·군 마을만들기의 주민교육체계



* 자료: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2013). 재구성.

<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내용 >

- 마을환경·자원조사와 마을공동체계획 수립 지원
- 권역별 마을만들기 사업 연계 추진
- 마을 지도자와 주민, 지방공무원 대상 마을만들기 교육
- 주민동아리, 마을위원회, 주민자치조직 등 풀뿌리주민조직 지원 사업
- 마을만들기활동과 연계된 도·농 교류와 귀농·귀촌사업 지원
- 시·군 마을만들기 협력·추진 네트워크 구성
-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설립과 운영
- 시·군 차원의 마을만들기 관련 홍보·교육 사업 추진

□ 마을공동체계획 수립 지원

- 시·군 지자체가 마을단위의 마을공동체계획을 주민 스스로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 주민은 참여의식과 책임의식, 자치역량을 갖추어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소비자가 아니라

마을만들기의 적극적인 협력자이자 실행자로서 역할하도록 배려한다.

- 주민이 마을공동체의 비전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비전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실행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한다.

○ 마을공동체계획이 마을만들기의 취지와 동기에 부합하도록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계획의 수립 과정은 마을 주민 전반의 관심을 환기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하며, 참여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
- 계획 수립은 일방적인 전달과 지시가 아니라, 호혜적이고 상호소통적이어야 하며, 함께 참여하여 공동의 합의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즐거운 협력의 과정으로 기획되어야 이후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될 수 있다.
- 계획의 결과는 미리 예정되어 있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논의, 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변화 가능하도록 과정에 열려 있어야 한다.
- 계획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논의에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받지만, 구성원 간에 합의하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수행해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

○ 마을공동체계획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인 논의와 합의형성과정을 통해 마을 공동의 협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치적 협약과 규범을 제시하는 협력계획이다.
-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발전방안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통해 제시하는 종합적 사회계획이다.
- 마을이 놓인 상황과 여건을 마을공동체의 자율적이고 내생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시·군 행정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과 협력 방안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계획이다.
- 국가정책과 법제도 등 국가 주도 하향식 지원체계에서 필연적으로 내재할 수밖에 없는 경직성과 위계성을 보완하도록 유연하고 수정 가능한 비법정 계획으로 제시된다.

○ 마을공동체계획의 추진주체: 마을계획실천단

-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은 마을공동체 내부에서 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공동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마을 단위의 추진주체로서 마을계획실천단을 구성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 마을계획실천단의 구성원은 마을에서 직접 공개모집이나 추천을 통해 참여한 마을 주민들이며,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네 이웃

들에게 참여를 열어두는 개방적 조직으로 운영한다.

- 마을계획실천단의 역할은 동네 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논의하여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의 일정과 방향을 결정하여, 마을 현황조사, 논의와 토론을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 마을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주도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시킨다.

표 6-1. 마을공동체계획의 수립 절차

단계	과정	사업	내용	참여주체
1단계	계획주체 조직	마을계획실천단 구성 마을계획오리엔테이션	계획수립 홍보와 참여 제안	일반주민, 실천단
	계획 돌입	사전 워크샵	계획 방향과 목표 수립 계획일정, 절차 논의	실천단, 중간지원조직
2단계	마을현황 조사	마을현장답사 마을사진전 주민설문과 인터뷰 마을자원조사 마을지도만들기	마을지도 그리기 마을사진 찍기 주민인식과 이슈, 역량 파악 자료수집(마을역사·문화 이야기 등) 마을공간의 이미지 시각화	일반주민, 실천단, 행정기관, 중간지원조직
		마을현황분석	마을현황, 설문 분석 마을의 문제점·개선점 도출	실천단,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3단계	마을비전 수립	주민원탁회의	마을의 미래와 비전 논의 마을발전방향 이야기	일반주민, 실천단, 중간지원조직
	마을계획 수립	세부과제와 실행계획 도출	전문가·행정 협력방안 마을사업, 프로그램 추진방안 마을만들기 추진조직 구성 마을성장과정별 실천방안	실천단 분과조직, 중간지원조직
4단계	마을공동체 계획 확정과 발표	주민설명회 주민잔치	계획 발표와 주민의견 수렴 참여자 간 협력·실행방안 논의 행정공모사업 방안 모색 마을만들기 주민추진조직 결성	일반주민, 실천단, 행정, 전문가, 중간지원조직

< 참고: 시·군 S/W 분야 지원 사업 사례(농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

-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여 지원센터 설치와 귀농·귀촌 교육, 정보 제공, 대외홍보, 정착지원 등 시·군 단위 S/W 프로그램 수행 지원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시·군에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 지원
- 사업비 지원을 통해 상당수 시·군이 행정 또는 민간에서 지원센터를 설립·운영
- 전국 35개 시·군에서 사업 시행 중

2.

□ 취지와 목적

-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마을만들기 활동으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활동 경험이 축적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마을만들기 주민조직의 형성, 경기도 마을만들기 문화의 확산을 꾀하기 위해 추진한다.
- 마을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따른 단계별 지원의 역할을 광역행정과 기초행정이 분담하여 지원한다.
 - 시·군 행정은 마을공동체의 성장과정에서 마을공동체활동의 형성과 활성화 등 초기 마을만들기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경기도 행정은 일정 궤도의 성장단계에 도달한 마을공동체가 조직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경기도 행정은 주민 참여와 주도로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한 마을을 대상으로 계획이 적정한 수준에서 제시되면서, 동시에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지원하고, 마을주민 역량의 한계 내에서 스스로 노력과 실천으로 현실화하도록 지원한다.
 - 마을공동체계획의 ‘적정성’이란 마을이 현재 보유한 유무형의 자산과 주민역량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 * ‘적정한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가 스스로의 자율적이고 내생적인 노력 없이 지나친 행정예산 투입과 지원을 기대하는 경향을 탈피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마을공동체계획의 ‘실현 가능성’은 계획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의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를 의미한다.
 - * ‘실현 가능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의 수단과 방법은 마을의 여건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와 합의를 통한 추진조직의 구성,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에 기반을 둔 적정한 규모의 마을사업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 경기도 주민공모사업의 방향과 역할

- 경기도 마을공동체가 마을의 필요를 스스로 제시하고 선택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 필요에 따라 도·농 마을 간 연계사업, 읍·면·동 차원의 공동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활동으로 연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표 6-2.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분야 예시

분 야	활동 예시
생활환경과 장소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목수, 마을집 고치기 ■ 담장 허물기 ■ 마을 간판 정비 ■ 마을안길 경관 조성 ■ 마을텃밭 가꾸기 ■ 에너지자립 ■ 마을숲, 마을하천 가꾸기 ■ 마을쉼터, 한평공원, 산책로·둘레길 조성 ■ 차없는거리 조성
사회복지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 취약계층·사회약자 돌봄 ■ 다문화교류 ■ 어린이통학로 개선 ■ 청소년 보호프로그램·카페 조성 ■ 상가공동체, 아파트공동체 등 활성화
소득·경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공동작업장 ■ 농특산물 가공활동 ■ 농특산물 공동판매장·프로그램 ■ 로컬푸드 ■ 도농교류, 자매결연 ■ 마을시장살리기 ■ 마을체험프로그램
마을 문화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 공동체예술활동 ■ 마을축제 ■ 마을 전통놀이·풍습 복원 ■ 작은도서관 ■ 마을카페(커뮤니티북카페 등) ■ 마을미디어 활성화 ■ 마을조사(역사, 문화, 인적, 경관자원 등)

□ 추진 가능한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

-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 시 앞서 <표 6-2>에서 제시한 활동 분야와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²⁹⁾

29) 활동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5>를 참고.

그림 6-4.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들



<경기 광주시 퇴촌남중생 활문화네트워크>



<대전 유성구 모퉁이도서관>



<강원 홍천군 '언니네텃밭' 시동공동체>



<전북 진안군 백운면 간판 정비>



<충남 옥천 안남면 배바우도서관>



<제주도 가시리 신문화 공간 조성>



<진안군 백운면 '진안고원길'>



<서울 정릉동 '행복한 정릉카페'>

□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방식

- 공모사업의 기본 취지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소규모 사업비를 지원(마을당 3천만 원 수준)하는 것이다.
 - 경기도 행정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식을 모색한다.
 - 공모사업 기간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에라도, 경기도 행정이 공모사업 시행의 성과를 연계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에 참여한 마을공동체에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공모사업의 대상은 기초 지자체가 마을만들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거나 기존에 자율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속하여, 마을활동의 경험과 성과가 축적된 마을 중에서 시·군이 추천한 곳이다.
 - 기존 정부사업의 지원을 받은 마을이 정부사업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거나, 새로운 마을만들기 활동을 발굴하여 마을의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 공모사업 지원의 기본요건으로 마을공동체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 도시형 마을과 농어촌형 마을의 적정 배분을 통해 경기도 마을 여건에 따라 행정의 지원이 불균등하게 배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경기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의 선정 기준

- 마을만들기활동의 경험
 - ① 주민 자율의 마을만들기활동 혹은 정부지원을 통한 마을사업이 지속되었는지
 - ② 마을주민 차원에서 마을만들기활동에 대한 가치와 방향이 일정하게 공유되어 있는지
 - ③ 마을자산과 주민역량이 일정 정도 축적되어 있고, 마을만들기활동을 위한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있는지
- 마을공동체계획 목표의 적정성
 - ① 목표가 주민 간 충실한 논의와 의사소통으로 합의되었는지
 - ② 목표가 마을의 여건과 공동체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반영하는지
 - ③ 마을역량에 따라 현실적으로 도달가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지
- 마을공동체계획 수단의 실현 가능성
 - ① 협약과 규범을 통해 주민들의 자율적인 실천과 책임 제시
 - ② 계획 실현을 위한 주민조직과 추진체계 구성방식

③ 마을공동체와 주민의 노력과 역량으로 실행 가능한 사업방식 제시

○ 마을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

- ① 마을과 지역사회의 상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 ② 마을 상황을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방향을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

○ 기타 중요 기준

- 마을공동체계획 수립 과정이 체계적으로 기록되고 반영되었는지 여부
 - ① 계획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
 - ② 주민 의견을 논의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
 - ③ 견해 차이와 갈등이 논의되고 해결되는 과정
 - ④ 마을 리더와 활동가의 역할

□ 공모사업의 마을 선정 절차

○ 기초 지자체: 공모사업의 대상 마을 추천

- 시·군의 단체장은 관할지역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활동지역 중에서 마을공동체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마을발전 방향과 비전, 구체적인 활동방향을 제시한 마을을 공모사업의 대상으로 경기도에 추천한다.
- 시·군 행정은 해당 마을공동체와의 장기적 관계 설정과 마을만들기 행정지원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첨부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담부서

- 전담부서는 기초 시·군에서 추천한 마을을 대상으로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평가·선정하도록 전달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산하에 공모사업 평가·선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
 - * 공모사업의 구체적 선정기준과 지원방안을 결정하고, 이에 의거하여 마을을 평가·선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와 마을만들기 추진조직의 대표가 마을만들기 지원협약을 체결한다.

< 참고: 경기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지표(안) >

- 주민 역량 정도
 - 주민 조직 현황, 마을만들기 활동과 사업 추진 경험
- 공모사업비 활용 계획의 적절성
 - 마을만들기 활성화와의 연계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 마을만들기 계획 수준과 마을 발전 전망
 - 계획의 구체성, 마을 발전 비전의 적절성, 마을의 장래 발전 전망
- 기타 지원 체계
 - 지자체의 사업 지원 의지, 전문가 등의 지원체계

□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 이행과 지원 절차

- 선정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자체예산으로 선정된 마을에 3천만 원 수준의 예산을 지원한다.
 - 사업비 활용은 <표 6-2>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분야 예시”를 참고하여 마을만들기 추진조직 차원에서 결정하여 자율적으로 집행한다.
 - 주민 조직 차원에서 의사결정 시 논의와 합의 과정, 사업실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근거로 제시하였는지 여부도 중요한 선정 기준이다.
- 경기도 행정은 사업 추진 과정을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담부서가 주관하여 선정된 마을의 마을만들기 활동 과정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한다.
 - 별도의 전문가협력단을 구성하여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며, 우수사례 발굴, 개선방안 도출 등의 내용을 담는다.
 - 모니터링 결과를 평가 작업과 연계하여 주민 참여도가 높고 시·군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가 있는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차년도 이후 후속 사업을 통한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경기도 행정은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비 지원과 더불어, 모니터링과 자문, 전문가협력단 등 지원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한다.
 - * 필요할 경우 기초 행정과 광역 행정이 예산을 분담한다.
- 마을만들기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공모사업의 효과적인 추진 과정을 지원한다.
 - 소위원회는 공모사업의 평가·선정의 역할 이외에도, 선정된 마을 여건에 맞추어 지속적

인 마을만들기 활동이 가능토록 행정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협력단을 구성하여, 해당 마을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연결하여 공동체활동에 상시적인 자문과 컨설팅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마을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을 융복합으로 지원한다.

- 마을만들기활동이 일정한 성장 혹은 안정화 단계에 이를 경우 다음의 발전단계로 도약하도록 중앙정부의 국비사업을 연결한다.

- 기존 국비사업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과 연계한 마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

- * 중앙정부의 국비예산 중 인프라 정비와 시설개발 사업 등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 사후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낮거나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 이러한 경우, 기존 국비·도비 사업 중 마을의 필요에 적합한 사업을 연결하여 기존의 정체된 마을에 추가적인 발전동력을 확보해줄 수 있다.

3.

□ 배경과 목적

- 경기도의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의 지도자와 활동가,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 경기도는 타 광역 시·도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젊은 인재들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다양한 공동체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열려 있다.
 - 마을만들기 활동은 경기도의 젊은 인재들에게 사회적 활동과 재능 기부의 기회를 열어 줄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제시되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 일반 주민 대상 교육보다 마을만들기활동에 전문적인 능력과 역량이 필요한 전문가와 마을공동체 지도자와 활동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역할에 따라 교육 방식과 내용을 체계화한다.
- 장기적으로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지역사회와 마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전문가와 활동가를 직업적으로 배출하도록, 경기도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 석사과정을 비롯한 공식 교육제도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교육방향과 가치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지도자와 활동가, 전문가, 공무원이 마을만들기 활동의 정체성과 원칙을 견지하면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한다.
- “기초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서 제시된 시·군 교육체계는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체 현장중심의 밀착형 교육으로 진행되는 한편, 경기도 사업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보다 심도 있게 전망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계층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방법론, 이론을 교육하는 데 집중한다.

□ 교육대상별 교육방안 마련

- **전문가 대상 교육**은 도시계획, 건축,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예비 전문가들이 사회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사회갈등의 해결 등 마을공동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

- 젊은 예비전문가들이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마을만들기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공동체 차원의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 형성과 협력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한다.
- 자신들이 지닌 전문지식과 개념을 마을주민과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구체적인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형태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돕는다.

○ **마을공동체의 지도자와 활동가 대상 교육**은 단지 자신의 마을문제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마을이 지닌 공통의 문제를 인식하고 협력적으로 대처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유사한 상황과 여건에 처해 있는 이웃 마을들이 서로 교류하여 학습하도록 경기도 마을만들기 공동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로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공동의 협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 마을만들기 활동의 경험자들이 활동하면서 겪었던 상황들을 다른 마을의 참여자들과 공유하면서 현재 마을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사업의 한계를 색다른 시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하도록 돕고, 이를 통해 새로운 활동의 돌파구를 스스로 탐색할 수 있는 기호를 제공한다.

○ **공무원 대상 교육**은 경기도 행정공무원과 공공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활동에 대한 행정지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지역참여자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법을 교육한다.

- 공정한 공공개입의 원칙과 가치를 인식하면서, 하향식 사업집행 방식을 탈피하여, 주민을 비롯한 마을만들기 참여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 관계적이고 의사소통적 방식의 협력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한다.
- 행정과 공공기관의 마을만들기 지원방식이 사업예산지원에 대한 감시와 평가사업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지닌 사업역량을 강화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임을 이해하도록 훈련한다.

□ 교육 과정 운영 방안

○ 경기도 대학의 교수진과 베테랑 현장활동가를 전문 교육강사로 초빙하고, 경기도 평생교육원을 교육장소로 이용하는 등 기존 경기도의 교육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 대상별 교육콘텐츠와 커리큘럼, 교육방식 등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교육 참여자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서비스를 누리도록 지원한다.
- 교육 방식은 교육 대상별 필요한 이론과 방법론 교육, 현장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이론 교육: 공동체계획과 참여계획, 커뮤니티디자인 등 마을만들기 개념의 이론적이고 철학적 배경과 역사를 교육하고, 영국과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를 체계적으로 이해한다.
 - 방법론 교육: 마을사업진행방식, 커뮤니티디자인 기법, 주민참여프로그램, 공동체 차원의 의사소통과 합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 등 마을만들기 활동 전반의 방법론을 교육한다.
 - 현장 교육: 교육 과정의 마무리에 전문가와 마을지도자, 활동가, 공무원이 공동팀을 구성하여 실제 마을이 겪고 있는 현장의 여건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해당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접근 방식과 실행 방식을 찾아가면서, 구체적인 해결 과정에 기반을 둔 마을 진단과 마을공동체계획을 교육 과정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평생교육체계와 사후관리 방안을 갖추도록 체계화한다.
 - 교육 과정이 일회성 사업으로 종료되지 않도록, 심화된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거나, 교육 종료 이후에 교육생들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실제로 참여하도록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조직과의 연계를 지원한다.

4.

4.1.

□ 기존 정부지원사업의 지속성 부족과 사업효과 저하

○ 기존 정부 지원사업이 시행된 마을들의 상당수는 자생력을 갖추지 못해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 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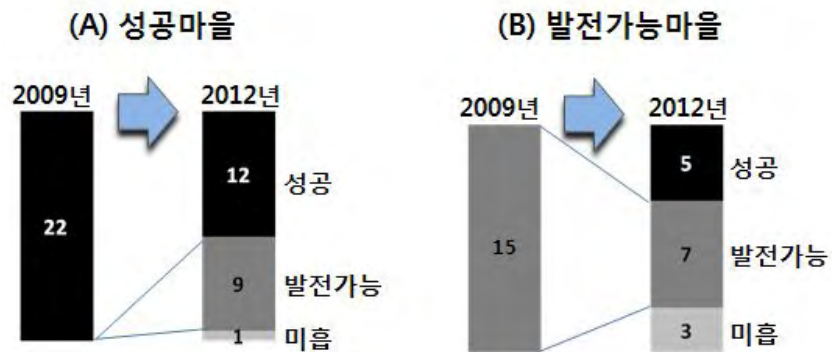
－ 예를 들어 농촌체험마을사업 등에서 성공마을로 평가된 경우라도 정부 지원이 중단된 이후에는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 농식품부 '09년도 체험마을 평가³⁰⁾에서 '성공마을'로 분류된 마을들 중에서 마을사무장 지원이 중단된 경우 '12년 평가³¹⁾에 다수 마을의 등급이 하락했다.

※ ('09) 22개 성공마을 ⇒ ('12) 성공 12, 발전가능 9, 미흡 1

그림 6-5. 농촌 체험마을 평가 결과 변화

단위: 개



○ 불요불급한 하드웨어 시설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다수의 유휴시설이 양산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마을들도 나타나고 있다.

－ 주민 조사³²⁾('12년 KREI 시행) 결과 최근 조성한 각종 소득시설과 도농교류시설일수록 경우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 정보화센터나 체험관, 숙소나 안내센터 등 마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 활용도가 높다는 응답 비율은 40%대에 머물고 있다.

30) 농식품부(2009)

31) 농식품부(2012)

32) KREI(2012)

- 최근에 조성된 마을 시설의 상당수는 하드웨어 시설 설치 시에 국비가 지원되지만 사업 완료 후에 지자체와 주민이 운영비를 부담하지 못해 유희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 이처럼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의 유희화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6-3.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현황

단위: %

시설 명	마을별 조성 비율	시설 활용 현황				
		활용도 높음	활용도 낮음	이용 않음	타기능전환	합계
마을회관	89.8	72.1	15.1	2.7	10.1	100.0
경로당	81.8	83.4	9.6	1.3	5.7	100.0
건강관리실/목욕탕	20.3	77.2	15.8	5.3	1.8	100.0
정보화센터	16.2	40.9	45.5	2.3	11.4	100.0
체험관/체험학습장	24.5	47.9	43.7	4.2	4.2	100.0
체험시설 내 숙소	18.4	49.1	41.5	5.7	3.8	100.0
안내센터	9.2	45.8	41.7	8.3	4.2	100.0

* 자료: 김광선, 이규천(2012)의 농촌주민조사 결과 재구성.

4.2.

□ 각종 마을사업의 활로 모색을 위한 도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경기도 행정 차원의 마을만들기 지원 협력체계를 통해 경기도의 전략과 정책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 실·국 간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마을만들기 활동을 유기적으로 지원한다.
- 기존 사업이 시행되어 일정 정도 역량 수준을 갖춘 마을에 대해 국비와 도비 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 마을만들기 활동 역량이 축적된 마을에 중앙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이 연계 지원되도록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는 다양한 정부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는 경향이 강한 농촌 지자체

체는 도 단위에서 난립한 사업들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많다.

- 경기도 행정은 일선 사업부서 간 상시적 행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중앙정부 부처의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연계하도록 추진한다.

○ 이미 마을개발사업이 시행된 마을을 사후 관리하기 위한 연계지원방안을 모색한다.

- 중앙정부사업 지원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마을의 활로를 부서 간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모색한다.
- 특히 현재 지역사회에 투자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시설과 인프라 자원을 재활용하는 창의적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여러 사업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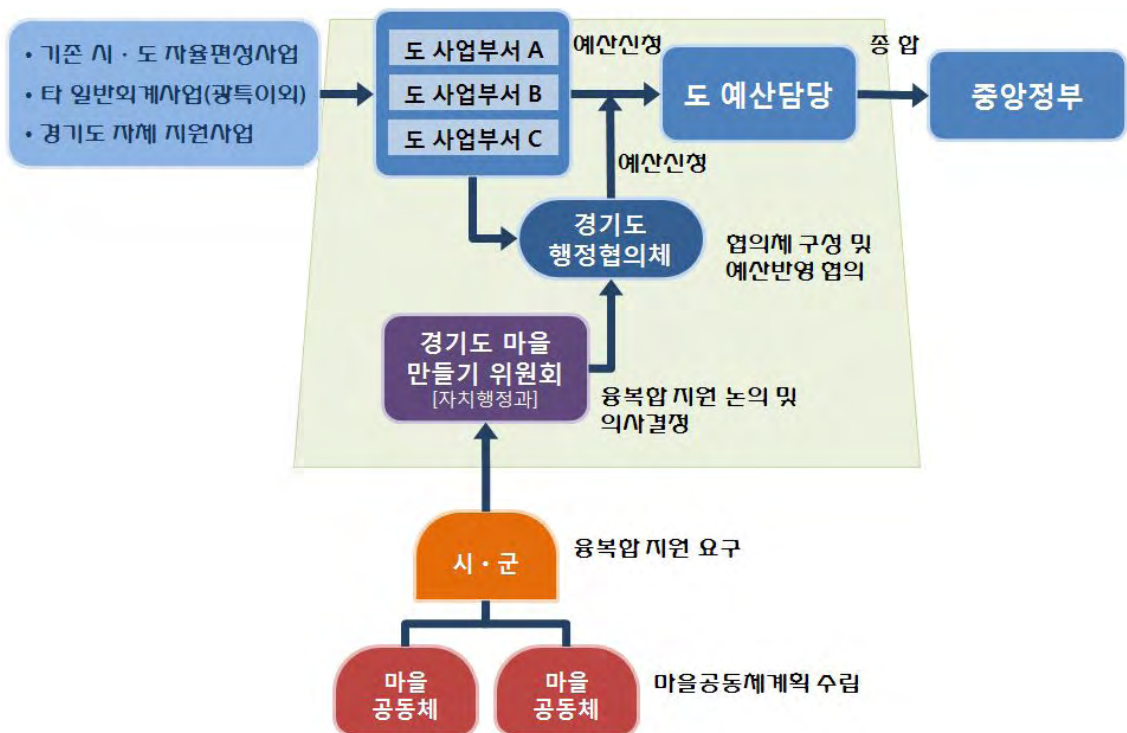
□ 경기도 부서 간 융복합사업을 통한 지원방안

표 6-4.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현황

부처	포괄보조 사업명	보조율	'13년 예산 내역사업
문화부	①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	40%	■ 박물관, 문예회관 등(14개)
	② 관광자원 개발	50%	■ 관광지 개발 등(3개)
	③ 체육진흥시설 지원	30%	■ 생활체육공원 등(3개)
	④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50%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등(4개)
문화재청	⑤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50%	■ 남해안관광벨트 등(4개)
농식품부	⑥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등(12개)
	⑦ 농업기반정비	80%	■ 밭기반 정비 등(4개)
해수부	⑧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 어촌어항 관광개발 등(4개)
	⑨ 어업기반정비	80%	■ 지방 어항 등(12개)
	⑩ 해양과 수자원 관리	50%	■ 연안정비 등(3개)
농진청	⑪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50%	■ 농촌지도기반 조성 등(5개)
산림청	⑫ 산림경영자원 육성	80%	■ 임산물 수출촉진 등(3개)
	⑬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50%	■ 휴양림, 수목원 등(6개)
산업부	⑭ 지역특성화산업 육성	50%	■ 패션산업 지원 등 (19개)
중기청	⑮ 전통시장과 중소기업물류 기반 지원	60%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2개)
여가부	⑯ 청소년시설 확충	30~88%	■ 청소년수련시설 등(2개)
환경부	⑰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리 (도서지역식수원 개발사업 포함)	70%	■ 생활용수공급 등(4개)
	⑱ 자연환경 보전과 관리	50%	■ 자연환경보전 등(3개)
국토부	⑲ 대중교통 지원	90%	■ 물류단지 지원 등(9개)
	⑳ 지역거점 조성지원	100%	■ 국민임대산단 조성 등(3개)

- 각 부서별 추진사업을 연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 여러 사업부서별로 추진 중인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
 - 광특회계 이외 각종 국비 지원사업
 - 경기도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사업 부서들을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에서 사업부서별 차년도 예산을 취합하기 이전 단계에서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지원 방향을 사전 논의·결정하고, 행정협의체를 통해 마을사업 연계지원 방안을 협의하여 차기 예산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한다.
 - 지원 대상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우수 마을로 설정한다.
 - 공모사업 추진 시 수립한 마을공동체 계획에 입각하여 지원 아이টে을 도출하며, 마을만들기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부서별 사업 지원이 가능토록 협조 절차를 진행한다.

그림 6-6. 마을만들기위원회를 통한 융복합 사업 지원 결정 절차



여 백

마을만들기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체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치·운영
2. 마을만들기 상시 지원체계 구축
3. 마을만들기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4. 경기도 마을만들기 5개년 계획 추진 로드맵

여 백

제7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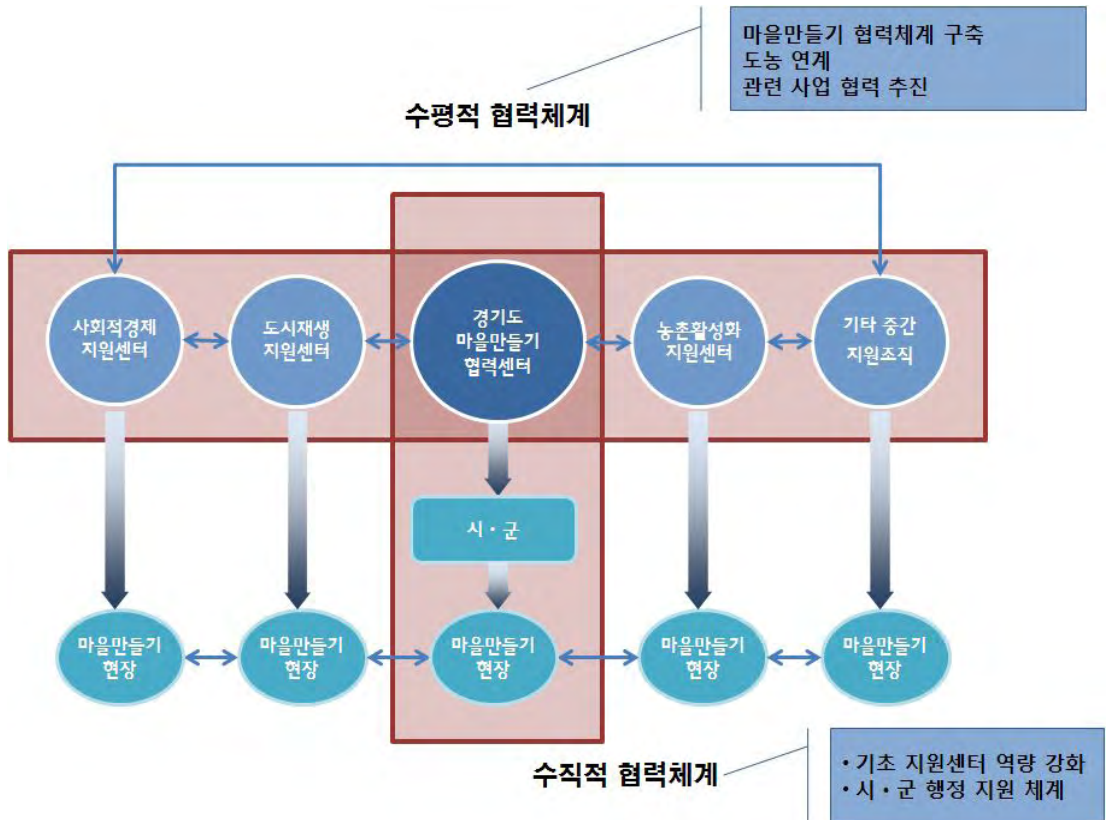
1.

1.1.

- 마을사업 종료 이후에 기존 사업의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주민활동 유도 및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광역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구성되어 시·군 차원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연결하여 경기도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협력을 증진하도록 역할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 협력센터는 각 시·군의 마을만들기 역량과 성장과정, 지역별 특성이 상이하여 경기도 전반에 일률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므로, 각 시·군의 상황에 적합한 지원 방식으로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마을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 지원을 정부 각 부처의 여러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과 사업 특성과 목적에 맞도록 적절히 연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협력센터와 경기도청의 유기적 협력방안과 역할 분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을 기획하고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맞게 마을공동체를 선정하고 관리, 평가하는 역할을 체계적으로 전담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경기도 마을공동체의 마을 현황, 마을 자원, 인적 역량, 정부 지원 사업 등 성장 과정에 대한 구체적 정보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마을공동체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활동이 마을별 고유한 상황과 여건을 충실히 고려하면서도 상황

식 주민 참여와 자율성 등 경기도 마을만들기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취지와 방향을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와 같은 중간지원조직 도입 필요성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1.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위상과 기능



1.2.

- 협력센터는 마을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경기도 마을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년 공모사업의 주제와 방향을 기획하고, 마을 선정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한다.
 - 공모사업 기획: 마을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 공모사업 관리: 공모사업 마을 선정·관리·지원·평가
 - 사후 모니터링: 사업마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피드백
- 경기도 마을들이 공통으로 당면하거나 개별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문제를 서로 협

- 력하여 해결하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한다.
- 마을협력: 마을 간 연계활동
 - 도농교류: 도시-농촌 마을 간 호혜적 사회·문화·경제 교류(로컬푸드 등)
 - 권역협력: 권역별 마을 간 연계·교류 활동 매개와 촉진
- 경기도 마을별 공동체활동의 과정을 꾸준히 기록·축적하고, 마을이 처한 상황별로 실현가능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등 조사·연구 역할을 강화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에서 제시된 가치와 방향이 세부시행계획을 통해 현실화되도록 구체적인 추진방법을 제시
 - 경기도 마을별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와 정부지원사업 조사·평가
 - 경기도 마을 유형별 마을만들기 활동모델 정립
 -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개발과 거버넌스 협력모델 제시
- 행정과 시민사회를 매개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
- 농촌활성화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협력 추진
 -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마을만들기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조직의 활동과 연결
- 협력센터가 마을만들기활동에 관여하는 시민사회 협력네트워크에 일원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협력자들이 마을공동체에 유기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 경기마을넷, 지방의제21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소통·협의채널 형성
 - 행정과 시민사회, 풀뿌리 주민공동체, 전문가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 협력하도록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을공동체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풀(pool) 관리
 - 마을과 전문가 연결과 활동 관리
- 경기도 마을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마을 정보가 필요한 주민, 공동체가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 경기도 마을 현황·자원·사업·역량 등 종합적 DB를 구축하여 마을공동체별 종합정보 제공

- 시·군 지자체가 마을만들기 지원에 대한 자체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 경기도 협력센터와 시·군 지원센터 간 연계협력과 역할분담
 - 시·군 지원센터 간 네트워크와 공동 협력활동 지원
 - 시·군 지원센터 인큐베이팅과 육성
- 경기도 마을에 공동체문화를 확산하고, 주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도록 교육·홍보사업을 진행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문화 확산과 마케팅
 - 마을만들기 교육자료·사례집 발간

표 7-1.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역할

역할		세부역할
마을공모사업 관리	공모사업 기획	■ 마을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
	공모사업 관리	■ 공모사업 마을 선정·관리·지원·평가
	사후 모니터링	■ 사업마을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피드백
마을협력	마을협력	■ 마을 간 연계활동
	도농교류	■ 도시-농촌 마을 간 호혜적 사회·문화경제 교류(로컬푸드 등)
	권역협력	■ 권역별 마을 간 연계·교류 활동 매개와 촉진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사·연구		■ 마을만들기활동과 정부지원사업 조사 ■ 마을만들기 활동 분석과 평가 ■ 경기도 마을만들기 활동모델 정립 ■ 마을만들기 지원정책 개발과 거버넌스 협력모델 제시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		■ 다양한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협력 추진 - 농촌활성화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 마을만들기 수요를 파악하여 다양한 지원조직의 활동과 연결
시민사회 협력네트워크 형성		■ 시민사회 네트워크와 소통·협의채널 형성 ■ 참여자들이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에 협력하도록 지원 - 행정·시민사회·풀뿌리공동체·전문가 등
마을만들기 전문가 관리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풀 관리 ■ 마을과 전문가 연결과 활동관리
경기도 마을DB 관리·활용		■ 경기도 마을 현황·자원·사업·역량 등 종합적 DB 구축 ■ 마을공동체별 종합정보 제공
시·군 역량강화 지원		■ 기초 중간지원조직과 협력과 역할분담 모색 ■ 경기도와 기초 시·군 지원사업의 연계협력 추진
교육·홍보사업		■ 경기도 마을만들기 문화 확산과 마케팅 ■ 마을만들기 교육자료·사례집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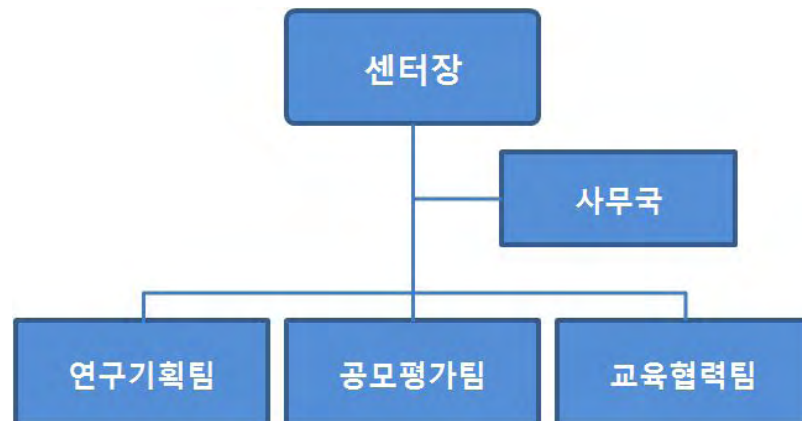
1.3.

□ 협력센터의 설립방안

-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는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지원 및 협력’과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의 실행’을 비롯하여, 앞서 <표 7-1>에 예시한 역할을 수행한다.
- 광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은 마을단위의 마을만들기 활동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경기도 마을 간 연계협력과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시·군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역량을 강화하도록 배후 지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 협력센터의 조직구성

그림 7-2.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의 조직체계



- 협력센터의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여 경기도 각 시·군별로 구성되어 있는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 시민사회 협력네트워크 등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 협력센터의 사무국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조직활동을 위한 예산, 인사, 총무업무를 비롯하여, 경기도청과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와의 연계업무를 수행한다.
- 연구기획팀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와 지원계획에 의거하여 센터의 세부업무계획을 기획하고, ‘경기도 마을만들기 조사·연구’와 ‘경기도 마을DB 관리·활용’ 업무를 담당한다.

- 공모평가팀은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공모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할한다.
 - 모니터링과 평가작업 수행: 경기도 주민공모사업에 지원한 마을공동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작업을 수행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심의·결정 지원: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산하의 '공모사업 선정·심의 소위원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올바른 의사결정을 통해 심의하고 결정하도록 지원한다.

- 교육협력팀은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과 경기도 전문가협력단 운영·관리, 시·군 및 시민사회와 연계협력을 담당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교육 콘텐츠를 체계화하여 제시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협력단 운영·관리: 도시계획, 건축, 조경, 공공예술, 커뮤니티 비즈니스, 지방자치, 사회운동 등 다양한 학계·시민사회의 전문가들이 기초 지자체, 마을공동체와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을만들기활동에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협력과 공동협력사업 추진: 경기도 시·군 중간지원조직과 행정전담팀과 협력하여 경기도 마을만들기 공동협력사업과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 시민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성: 경기도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풀뿌리 마을·지역공동체와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필요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 참고: 중간지원조직 운영비 현황(마을지원/공모사업비용 제외) >

- * 서울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13.5억 원 규모(26명 채용, '13년 기준)
- * 전북 마을만들기협력센터: 4억 원 규모(4~5인 채용, 포괄보조금 2억 + 도비매칭 2억)
- * 수원 마을르네상스센터: 5억 원 규모(5인 채용)
- * 안산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2~3억 원 규모(4~5명 채용)

2.

2.1.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 내실화와 협력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명실상부한 협력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시민사회, 풀뿌리 자치조직,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다양한 정부 부처와 경기도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지원과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마을공동체에 한해 행정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체계를 마련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는 행정과 시민사회, 풀뿌리 주민공동체 사이의 협력거버넌스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협치기구이다.
 - 민관 협력거버넌스: 행정과 시민사회단체, 풀뿌리 주민공동체, 전문가 등 마을만들기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고, 마을만들기와 연관되는 중요한 의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제도화한다.
 - * 경기마을넷을 비롯한 시민사회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협의 채널을 확보하여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한다.
 - 행정 협력거버넌스: 경기도와 시·군 사이의 연계협력 확보와 경기도 내 여러 기초 시·군 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한다.
 - * 행정은 위원회를 통해 공적으로 논의하고 의사결정사항을 실현하기 위한 실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반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기구와 민관협력기구로 내실화한다.
 - 2016년 이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민간협의회와 민·관협력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농어촌마을권역, 도시재생, 도농교류, 정보화마을, 안전마을, 주민자치회 등

□ 부문별 소위원회 구축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다양한 부문별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위원들에게 실질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 부문별 소위원회는 마을만들기 위원, 행정부서, 경기도 협력센터, 전문가, 정치가 등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한다.
- 해당 부분에 대한 전문가들이 마을만들기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기도 전문가협력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 **[공모사업 심의·선정 소위원회]** 경기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에 응모하는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활동의 취지와 활동방식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 **[마을기업 소위원회]**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 단위의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고, 이들의 활동이 지역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한다.
- **[교육복지 소위원회]** 마을공동체가 미래세대인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배려하고 공동으로 함께 키우는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공동육아·보육과 교육, 어린이·청소년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안전마을 소위원회]** 주민 참여와 주도를 통해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공동체활동으로 실현하도록 지원한다.
- **[문화예술 소위원회]** 마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창작과 문화향유의 장소가 되도록 공공예술프로젝트와 창작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예술가 자활과 주민-예술가 교류활동,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형성을 장려한다.
- **[도농교류 소위원회]** 도시 마을과 농산어촌 마을이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결핍을 보완하는 순환체계를 형성하도록 도시와 농촌 공동체 사이에 로컬푸드와 재능기부, 사회약자돌봄 활동을 장려한다.
- **[커뮤니티디자인 소위원회]** 지역 주민과 마을공동체가 건축·조경·예술 전문가의 도움으로 골목길, 한평공원, 주민쉼터, 거리가구 등의 개선·조성 활동 등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디자인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2.2.

□ 마을만들기 총괄부서 역할에 대한 여러 모델 고려

○ 서울시 모델: 별도 총괄지원조직 구성

- 시장 직할 '서울혁신기획관'에 소속된 마을공동체담당관이 주관하여 13여 개 실국, 2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 총괄 부서에서 일부 사업을 직접 수행하면서, 더불어 타 실·국 사업들을 연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 마을공동체담당관실에서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시민사회와 행정 간의 소통을 매개하면서,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민관협력을 강화한다.
- 관련 사업부서 업무 조정을 위해 연찬회를 개최하며, 수시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행정부서 간 사업융합을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다.
- 마을공동체 위원회와 산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시민사회와 풀뿌리 주민조직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병행한다.

○ 전라남도·제주도 모델: 마을사업 관련 부서를 단일 조직에 구성

- (전남) 안전행정국 행복마을과에서 도 자체의 행복마을사업과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마을 관련 사업을 총괄한다.
- (제주)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의 마을발전지원담당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권역사업, 체험휴양마을 등 일련의 마을 관련 사업들을 주관한다.

□ 마을만들기 총괄부서 역할 정립 방안

○ 경기도의 제약점을 고려하여, 여건에 맞는 총괄부서의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체 사업과 중앙정부 사업들이 담당 실·국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으며, 부서 간 연계·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공식적·비공식적 기반을 확보하기 어렵다.
- 개별 기초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역 차원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 경기도의 행정여건상 도시, 농산어촌, 접경지역 등 기초생활권이 복합적으로 분포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 차원의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는 방식이 시·군별로 매우 다르다.

○ 총괄부서의 역할은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의 민관협력과 합의 형성, 행정협의체의 효과적인 작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 향후 마을만들기 여건 변화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원조직을 각종 사업을 관할하는 기존 실국과 독립된 단체장 직속의 총괄조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3.

□ 경기도 우수 마을공동체의 발굴과 홍보

- 경기도는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여 다른 공동체가 참조하도록 홍보하면서, 마을만들기 활동 방식과 문화가 경기도 전역에 확산되도록 노력한다.
-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하는 광역·기초 행정과 전문가, 시민사회, 마을공동체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교류하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 단순한 일회성 홍보사업에 그치지 않고,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이 구체적인 사업 방식과 협력교류 방식,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익히고 훈련하도록 다양한 주민·공동체 교육과 연계한다.

□ 세부 추진사업

- 경기도 주민 매뉴얼과 정기잡지, 웹진 등을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주민들이 구체적인 마을사업을 찾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 마을주민들이 마을의 여건과 주민의 필요에 따라 적합한 마을활동을 모색하도록 지원하면서, 의사소통방식과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마을만들기 사업방식을 홍보한다.
 - 마을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참여와 자치의식이 높으며, 자율적인 마을만들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를 널리 홍보한다.
 - 경기도 행정지원사업과 분야별 전문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한다.
- 2014년 구축예정인 경기도 마을만들기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여, 경기도와 시·군, 시민사회, 마을 간 지식교류와 정보교환, 의사소통의 장으로 적극 활용한다.
 - 마을공동체별 교류활동: 마을별 활동과 상황을 정기 공유하면서, 여러 마을 간에 교류하도록 하고, 마을 활동의 방식과 문화를 서로 이해하여 공동으로 협력하도록 지원한다.

- 마을-행정 교류활동: 행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지속 갱신하여 마을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수시 연결하도록 지원한다.
- 전문가 지식장터: 도시·지역계획, 조경, 설계, 공공예술, 복지, 사회운동, 지역퍼실리테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을만들기 전문가들이 이들의 활동과 전문분야에 맞게 마을공동체와 직접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 서울시 찾아가는 마을 강좌 >

○ 찾아가는 마을 강좌

- 마을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사례 등 원하는 강좌를 주민 5명 이상이 신청 가능
-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마을주민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주민맞춤형 강좌

○ 교육개요

- 신청자격 : 5인 이상 50인 이하의 서울시민 모임
- 신청방법 : 공고에 따라 정해진 신청기간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선정기준 : 선착순 선정
- 지원내용 : 신청모임 당 1회 강좌 강사 파견 지원
 - * 강좌당 강사료 17만 원씩 최대 96개 강좌 지원

○ 교육내용

- 마을공동체의 이해, 마을만들기 사례, 마을만들기활동의 필요성
 - * 추후 마을의제찾기 워크샵, 마을조사기법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법 개설 예정
- 교육강사: 마을강사(마을강사전문교육 인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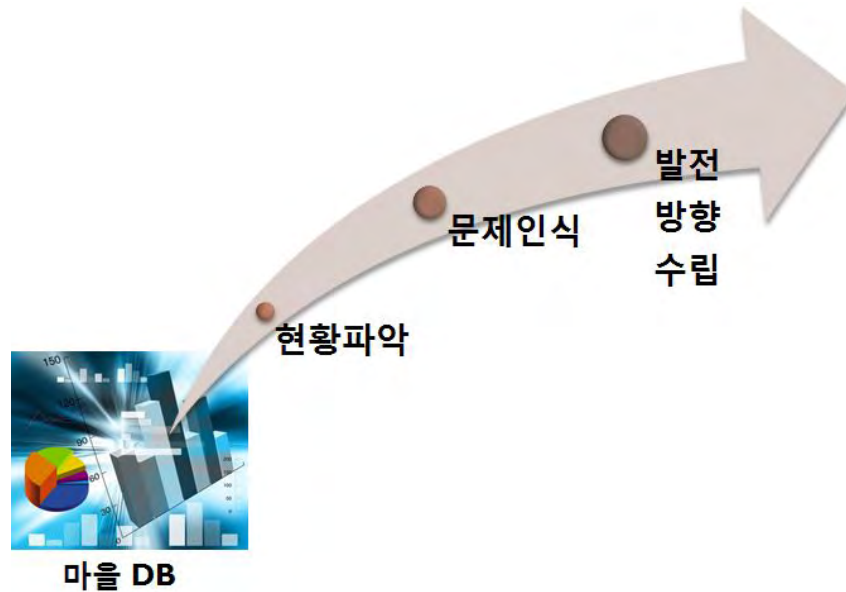
2.4. DB

▣ 경기도 마을 DB 활용 방안

- 경기도 마을 DB로 마을의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여건과 주민 자치역량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당면한 지역 문제와 주민들이 제기하는 마을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 방식을 선택한다.

- 경기도 마을 DB는 주민이 쉽게 이해하여 접근 가능한 마을 밀착형 통계자료를 생산하여, 마을공동체 차원에서 마을공동체활동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경기도 협력센터와 시·군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다양한 부문에서 활용되도록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온라인 마을지도를 통해 손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웹과 모바일 등을 통해 서비스되며, 전문가 대상이 아닌 일반 주민이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생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일회성 자료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DB 관리(수정·갱신)를 통하여 마을의 변화를 기록하여 그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 마을 DB를 통해 주민들은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식하여 발전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그림 7-3).
 - 마을 DB는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인지하고 마을에 알맞은 발전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마을 DB의 기초 자료는 마을이 가진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마을의 발전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마을 DB를 통해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만들기 콘텐츠를 개발하고 발전 방향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 마을 DB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마을 공모 사업을 평가할 때 평가자가 마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
 - 하지만, 이때 마을 DB는 평가의 요소가 아니라 마을의 현황과 사업 추진 실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참고자료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마을만들기를 위한 마을 현황 기초자료발급시스템으로 활용한다.
 - 통계 자료 수집과 분석에 있어 접근이 어려운 일반 주민들에게 마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
 - 마을의 기초 현황 자료를 마을 DB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 마을공동체발전계획 수립에 활용되도록 손쉽게 접근 가능한 자료발급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림 7-3. 마을 DB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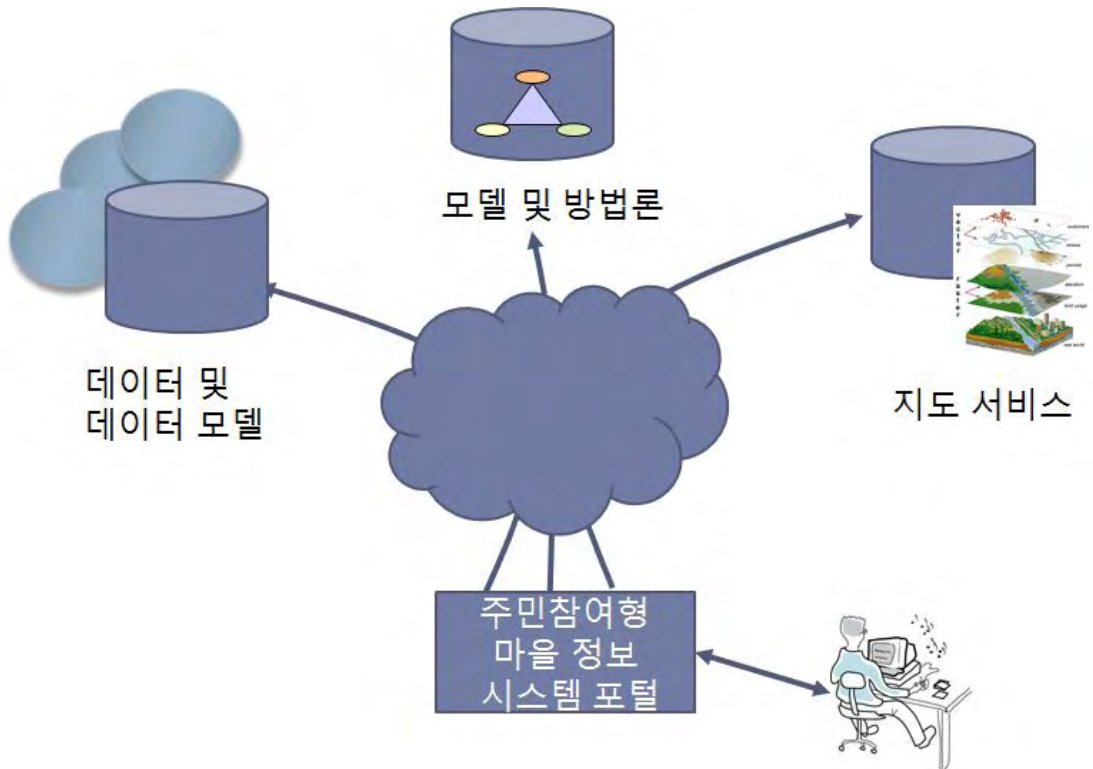


□ 마을 DB 발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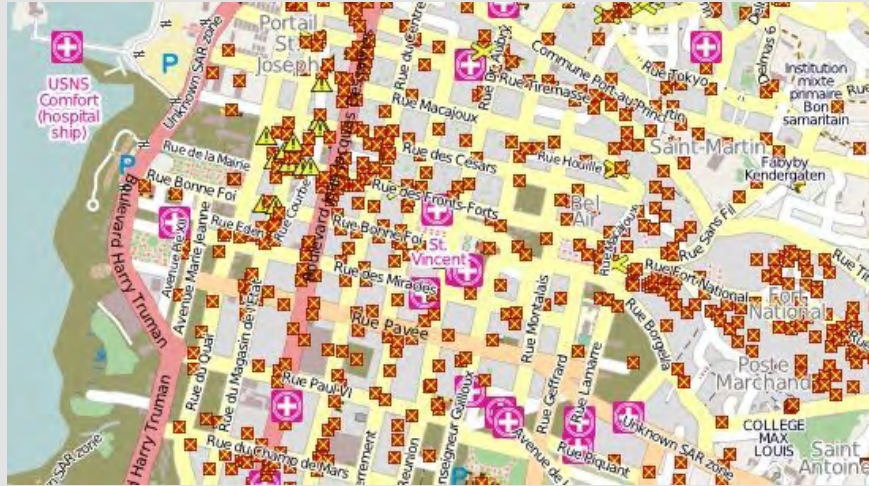
- 마을 DB는 행정의 일방적 정보제공시스템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술하고 의견을 토의하는 개방형 DB(주민참여형 경기도 마을만들기 정보 시스템 구축)로 구축한다(그림 7-4 참조).
 -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3.0 개념에 부합하며, 창조적 마을만들기에 기여한다.
- 데이터는 고정된 형태로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마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갱신하고 문제점을 기록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로 구현될 필요가 있다.
 - 일방적인 자료 제공(one-way system)이 아니라 주민이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수정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확인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two-way system)으로 구현해야 한다.
 - 예컨대 특정 지점에 대한 문제점을 기술할 수 있는 위치기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하여 마을 현황과 문제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한다.

- 지리정보 방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한다.
 - 해독하기 어려운 표나 도표보다는 인지하기 쉽고 비교가 용이한 지도형의 정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마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손쉽고 편리한 검색도구와 분석 방법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사용자(주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마을의 현황이나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는 일련의 모델 및 방법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어려운 통계나 기법을 배울 필요 없이 마을의 문제를 수치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마을 주민 스스로가 생산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간편한 프로세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절차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의 프로세스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어 마을 발전 계획이나 마을사업 계획을 주민 스스로 수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림 7-4. 주민참여형 마을 정보 시스템 포털의 개념도



< 참고: 위치기반시스템을 사용한 아이티 지진 복구 프로그램 >



- 2010년 아이티 지진 후 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우선 파손된 주택과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
- 스마트폰 등에 내장된 장치를 통해 생성된 위치기반 자료를 사용하여 주민 및 자원봉사자들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진복구프로그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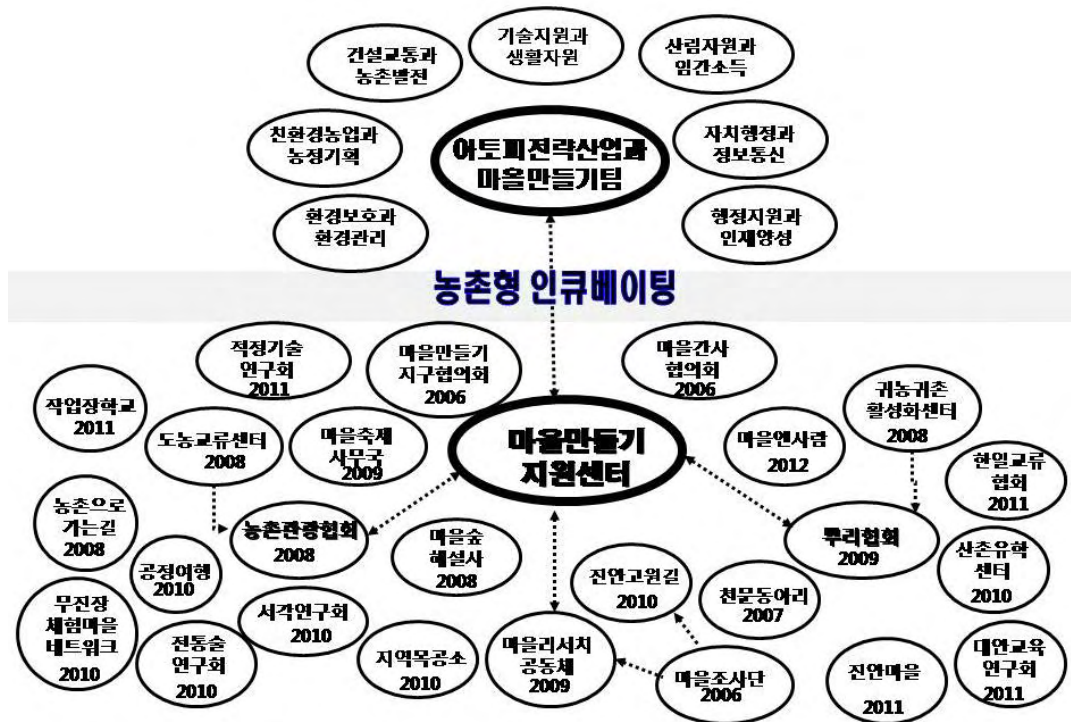
□ 대부분 지역에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야 할 민간 부문이 미약

- 마을만들기 활동을 계기로 일부 지역에서는 자발적인 주민 조직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행정의 파트너로 활동할 수 있는 민간 부문 주체의 역할이 미약한 실정이다.
 - 읍·면·동 단위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나 이장단 등 전통적 조직들이 구성되어 있지만, 대체로 형식적이고 정례적인 모임에 그치고 있다.
- 각종 마을사업 등을 시행할 경우 민간 주체들로 이루어진 추진기구가 구성되지만, 일부 주체에 한정되어 활동하거나 행정의 부수적인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기도 한다.
 - 행정과 파트너를 이루어 마을만들기 활동을 추진할 만한 대등한 위치의 민간 주체들이 만들어지지 못하여 민관협력은 형식에 머무르고 있다.

□ 마을만들기를 계기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파트너십 형성

- 행정의 주도하에 추진되던 기존 사업 추진 방식과는 차별화되는 경기도형 마을만들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초기에는 개별 마을 수준의 주민활동 지원에서 출발하되, 이를 확대하여 단일 마을 범위를 넘어서는 지역공동체 차원의 민간 주체 육성에 초점을 두며,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지역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 단순히 행정을 대행해서 사업 수행 역할을 맡는 민간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마을만들기를 처음 추진할 당시 민간 부문의 역량이 부족했던 진안군은 행정에 속한 마을만들기 총괄조직에서 각종 사업들을 조직하였으나,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기능 조직들을 구성하여 역량을 키우는 것을 지향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관협력을 중시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그림 7-5. 진안군의 민관협력에 기반한 마을만들기 추진체계



* 자료: 진안군청 내부자료; 성주인·박문호(2013) 재인용.

- 특히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개별 마을 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마을들을 연계한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도록 한다.
- 참고로 영국은 근린계획인 패리쉬계획 수립을 지원하였으며, 계획과정에서 주민대의회구를 통해 의견수렴과 계획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 참고: 영국의 패리쉬계획과 주민 대의기구 형성 >

- 영국 패리쉬계획(Parish Plan)은 2000년 농촌백서(Rural White Paper)에서 제안됨
- 전원청(Countryside Agency)이 제안한 개념으로, ‘활력있는 마을계획’(Vital Villages scheme) 아래 패리쉬계획 수립을 지원
-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포함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계획을 수립. 이는 패리쉬 주민들이 지역을 바라보는 관점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권위를 가진 성명(authoritative statement)’으로 볼 수 있음
- 커뮤니티의 참여에 바탕을 둔 계획 수립과 정책 과정을 강조하는 흐름은 최근 들어 패리쉬계획에 이어 논의되는 근린계획(Neighbourhood Plan)으로 발전. 현 연립정부는 Localism Act 2011(지역특성화법)에 의해 Neighbourhood Planning의 권한을 새롭게 부여

- 지역공동체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한 단위로 읍·면·동 수준에서 민관협력적 추진체계를 갖추는 데 역점
 - 마을만들기 거버넌스는 다양한 수준의 행정구역 단위에서 형성될 수 있으나 읍·면·동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구축하도록 한다.
 -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들이 소속감을 지닐 수 있는 공간 단위는 읍·면·동 범위가 적합하다.
 - 특히 읍·면·동 단위는 기존 지역사회의 전통적 주민조직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종 기초적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들이 분포하고 있는 주민들의 일상적 생활공간이다.
 - * 옥천군 안남면의 경우 면 단위에서 주민 대표로 이루어진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의기구 역할을 담당토록 하고 있다.
 -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사업 등과 연계하여 민관협력 추진체계 구축을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 기존 마을 리더나 지역 유지 중심에서 확대하여 일반 주민과 마을만들기 활동가 등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만들거나, 별도의 마을만들기 추진기구를 읍·면·동 단위에서 구성하는 방안 등 다양한 거버넌스 모델을 시도하도록 한다.

< 참고: 주민 대의기구로 활동하는 옥천군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 >

- * 안남면 지역발전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컨설팅, 주민의견 수렴, 각종 지역개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역할을 수행
- * 위원회는 관내 12개 마을에서 각각 이장과 마을총회에서 추천한 1명이 참여한 당연직 24명, 위원회에서 추천한 선출직 12명으로, 총 36명의 위원이 참여
- * 안남면은 대청댐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매년 5억 원 가량의 주민지원사업비를 배정받는데, 지역발전위원회가 매년 지원금의 30~40% 상당을 지역의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지역사업에 활용되도록 의사결정하는 역할을 수행
- * 작은도서관 운영, 면 순회버스 도입·운영, 각종 지역개발사업 결정 등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대의기구 역할을 담당하며, 행정의 파트너로서 활동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협력단 구성

- 경기도가 전문가협력단을 구성하여 전문가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마을에 적절히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관리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협력단은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도시·지역계획, 건축, 조경, 공공예술, 시민단체, 지역퍼실리테이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 시민단체: 사회갈등과 이해관계 조정, 주민권익보호
 - 건축·조경전문가: 커뮤니티장소 디자인·설계, 주민참여 설계·시공기법 개발
 - 도시·지역계획가: 주민참여 공동체계획, 지역재생·개발기법 개발
 - 공공예술·미술가: 지역문화·예술창작활동 활성화, 공공예술프로그램 운영
 - 행정전문가·공무원: 마을만들기활동에 공공개입, 국가지원정책 연계
 - 지역퍼실리테이터: 지역자산조사, 주민공동체 활성화, 의사소통 매개
- 경기도 협력센터는 전문가협력단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분야와 역할별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기초 지자체 혹은 마을공동체와 상시적으로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4.

5

□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립과 운영

- 2014년과 2015년에 센터 설립을 위한 사전협의를 이끌고, 활동방향을 모색한다.
 - 협력센터의 운영방식·주체·역할·예산확보·조직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설립방안과 더불어, 경기도청과 협력센터, 마을만들기위원회 3자 간 협력·분담 방안을 모색한다.
 - 경기도 행정전담부서에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과 지원사업을 실행하여 초기 운영경험을 축적하여 협력센터 설립 이후에 해당 업무를 이관한다.
- 2016년 상반기에 협력센터를 설립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 '16년도에 최소 4억 원 수준의 운영예산을 확보(자체 경상비 기준)하여 센터장과 사무국을 포함하여 연구기획팀과 공모평가팀, 교육협력팀의 4개팀을 운영하며, 최소 6인의 직원을 고용하도록 한다.
 - 주민교육과 마을컨설팅, 각 시·군 마을만들기 협력네트워크의 역할에서 출발하여 점차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 2016년 하반기 이후에 경기도 광역차원의 협력센터 활동 기반을 안정화한다.
 - 시·군별로 설립되고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량과 역할을 고려하여 역할분담과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기초-광역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관계를 모색한다.
 - 수원, 안산 등 마을만들기 지원체계가 안정화된 시·군과 이외의 시·군에서 여건 차이에 따른 역할을 구체적으로 모색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 2014년부터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한다.
 - 시·군의 마을만들기 교육사업을 이수한 마을이나 마을공동체활동이 정착되어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 2014년은 마을당 3천만 원 수준의 지원비를 15개 마을에 지원한다.
- 2015년 이후, 주민공모사업을 마을공동체의 여건과 주민역량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시행한다.
 - 마을공동체의 성장 과정에 따라, 시·군의 소규모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과 경기도의 중규모 공모사업의 역할을 단계별로 분담한다.

- 2016년부터 경기도 협력센터가 주민공모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 ▣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사업
- 2015년: 시·군 대상 공모사업 추진
 - * 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 구성에 대한 의지와 역량이 있는 시·군을 3~4개 선정하여, 매년 1억 5천만 원 수준의 도예산을 지원하여 3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 * 시·군 차원의 중장기 마을만들기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 * 필요 시 중앙정부의 포괄보조사업을 통한 시·군 자치단체 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한다.
 - 2016년 이후
 - * 매년 3~4개 시·군을 선별 지원하여, 2018년까지 경기도 대다수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행정지원체계 구축과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둔다.
 - * 시·군 차원에서 자체 예산을 매칭하여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성,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협력거버넌스 구축, 마을공동체계획 수립 지원 등에 활용한다.
- ▣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거버넌스 구축
-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시민사회 활동가와 전문가, 학자 등 각계 각층이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중요한 의제의 논의 및 의사결정과 더불어,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한다.
 - 2015년부터 경기도 마을만들기위원회의 소위원회 기능을 부여한다.
 - 경기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심의·선정시 소위원회를 가동하여, 주민공모사업에 필요한 의사결정과 평가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 이외에 부분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든 위원들이 소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소위원회 체계별로 지속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 소위원회 구성: 마을기업, 교육복지, 안전마을, 문화예술, 도농교류, 커뮤니티디자인 등
 - 2017년 이후, 마을만들기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의 제도적 기구로 활성화되도록, 마을만들기 주요사업 방향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중요한 논의와 의사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발전시킨다.

그림 7-6. 경기도 마을만들기 추진 로드맵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설립과 운영	협력센터 설립 준비 • 운영방식과 주체 • 역할, 조직체계 • 예산확보 방안		협력센터 설립 • 예산확보: 4억 수준 확보 • 주민교육과 컨설팅 역할	협력센터 활동 기반 안정화 • 시·군 지원센터와의 관계모색 및 역할분담 • 협력센터 운영 예산 지속 확대	
경기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경기도 주민공모사업 • 마을활동이 정착된 마을의 자율 사업 지원	유형 별 마을 공모사업 추진 • 지원 대상 마을 단계적 확대			경기도에서 200개의 성장마을 관리
경기도 마을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	경기도 마을DB 활용 • 경기도 마을 현황에 대한 체계적 실태 조사 • 마을현황, 정부사업, 공동체활동, 마을자원, 사회자본		경기도 마을DB 도민서비스 도입 • 주민이 스스로 마을의 현황과 자산, 문제점을 인지 • 마을공동체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 별 정보 제공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인력 양성과정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교육과정 • 경기도 청년 예비전문가 교육과정 • 경기도 공무원 마을만들기 교육과정 • 경기도 마을 지도자, 활동가 대상 전문교육과정		교육과정 2년차 평가 후 사후 지원체계 마련 • 심화교육과정 마련 • 경기도 마을만들기 전문가추진단에 편입	
기초 시·군 마을만들기 역량강화 지원 사업		기초 시·군 대상 공모사업 추진 • 기초 시·군 3-4곳 선별 지원 • 선별 지원한 지자체 지원을 3년 간 계속사업으로 유지 • 매년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15-17년 사업 추진 후 향후 운영방향 결정
경기도 마을만들기 협력거버넌스 구축	마을만들기 위원회 내실화 • 시민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 위원의 실질적 역할책임 부여	주제 별 소위원회 운영 • 주제 별 민간협의회 구성 • 민·관협력체 구성 • 주제 별 광역-기초 행정 간 유기적 협력체계 강화		협력거버넌스 활성화 • 협력거버넌스를 통한 의사소통 및 결정 시스템 구축 • 경기도 마을만들기의 주요사업방향 및 전략 수립	

정책 제안 8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여 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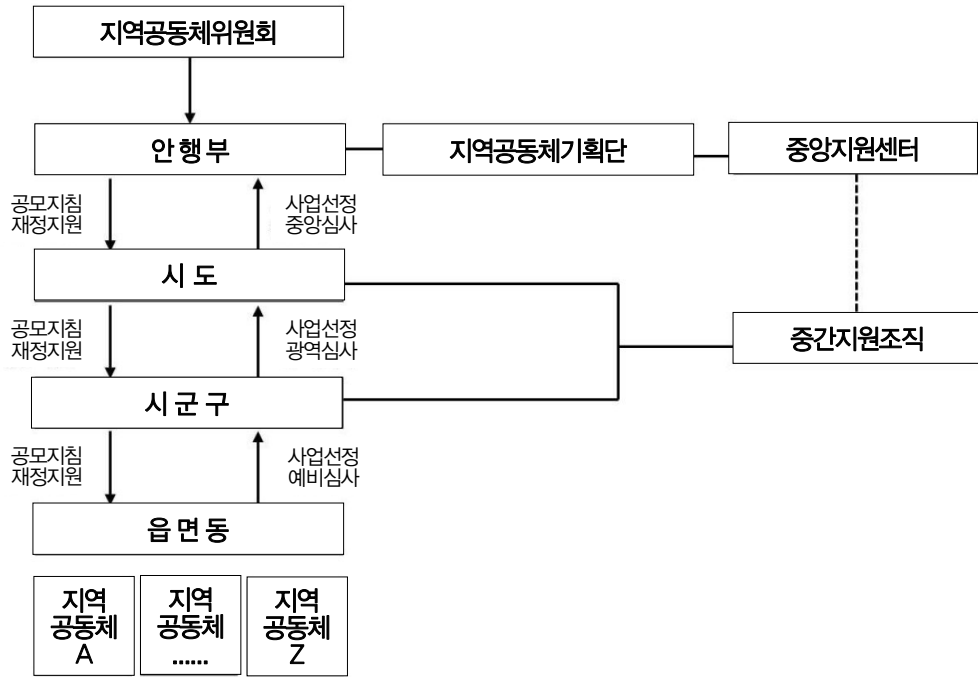
제8장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 마을만들기 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광역 지자체 역할 정립

- 현재 여러 부처별 특성이 반영된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이 각기 추진되고 있으며, 유사한 입법이 제정되었거나 제정을 추진 중인 상황이다.
 - (국토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12.5 시행)
 - (농식품부) 농촌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국회 상임위 상정 중)
 - (안행부)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법안(국회 상임위 상정 중)
- 마을만들기 관련 법률들마다 시·도와 시·군의 계획 수립, 관련 지원기구 설립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일선 지자체에 중복 업무로 인해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국토부) 도시재생전략계획
 - (농식품부) 시·도 및 시·군 농촌마을만들기 활성화 계획
 - (안행부) 시·도 및 시·군 지역공동체 활성화 계획
- 각각의 법률에 제시한 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여 시·도에서 도시재생, 농촌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관련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거나 관련 실국간 협력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특히 중앙부처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마을만들기에 대한 총괄 역할은 지역 여건에 맞도록 광역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실제 사업은 시·군과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추진하는 등 상향식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예컨대 안전행정부에서는 여러 부처와 자치단체에서 분산 추진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공동체위원회와 지역공동체기획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 하지만 이와 같은 기구가 설립되더라도 중앙부처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마을만들기를 추진하는 상향식 체계를 갖추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림 8-1.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체계(안)



* 자료: 안전행정부(2013).

□ 지역별 창의적인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광특회계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유연화

-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광역 지자체 차원에서 발휘할 수 있는 자율성의 폭이 크지 않은 실정이다.
 - 기존에 200여 개에 이르던 세부 사업들을 포괄보조금 제도 도입과 함께 24개 사업군으로 통합한 바 있다.
 - 하지만 시·도 단위에서는 각 부문별로 사업군이 구분되어 있어 지자체가 재량을 발휘할 여지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 기존 20개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포괄보조사업군 외에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율사업 계정을 마련하여 시·도 단위에서 20 + a 체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육성, 사회적 경제 지원, 지역균형발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시·도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 기존 신활력사업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로 결정하되 시·도 단위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 기존 시·도 자율편성사업 재원 이외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보태어 추진함으로써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기초생활권 정책 관리 시 부처 간 협력 강화와 통합적인 관리 체제 도입

- 기초생활권 유형별로 소관 부처가 구분되어 있어 부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이 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수요가 높은 사업인데도 소관 부처가 달라 추진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도시활력증진지역에 속한 용인시의 경우 농촌 지역에서 권역사업이나 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 특수상황지역인 과주시, 포천시, 연천군 등에 다수의 농촌 마을이 분포하지만 역시 해당 사업들을 추진할 수 없다.
- 마찬가지로 일반농산어촌지역에 속하는 이천시 동부의 시가지 권역에서는 과거 국토부 소관이던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 특히 경기도의 경우 그러한 부처별 분산 관리로 인한 제약이 더욱 크다.

- 따라서 도 차원에서 나름의 기준에 의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 부처별 분산 관리 문제가 제기되는 기초생활권 정책 추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요구된다.

- 현행 3+1의 기초생활권 지역 구분을 유지하되,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지역발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관련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중장기적으로는 3개 부처로 분산된 기초생활권 정책 관리 주체를 현재보다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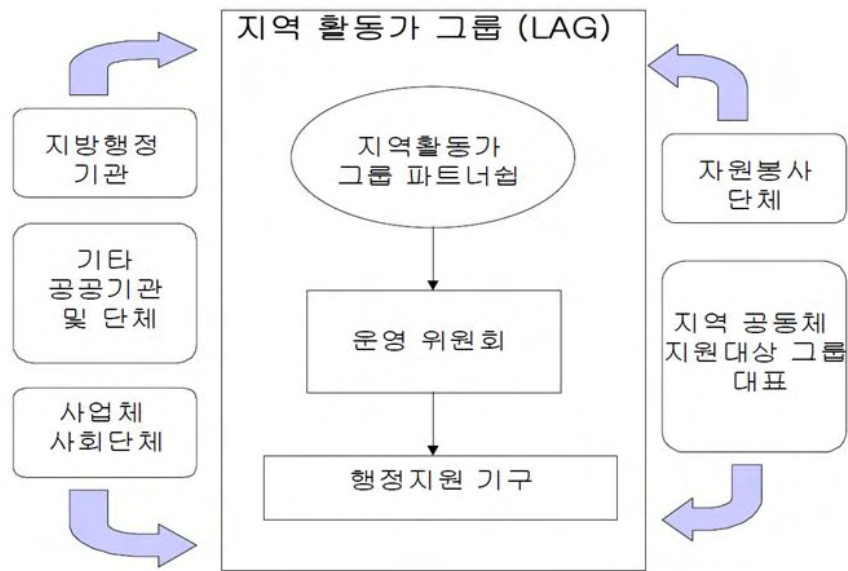
□ 기존 마을개발사업 시행 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근거 확보

-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하드웨어 시설이 조성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각종 문화·복지·소득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지방 이양 사업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입각하여 국비로 지원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다.

- 시설 조성 이후의 관리·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기존 법률 보완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시설과 연계한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보조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장기적으로는 EU의 리더프로그램과 같이 민간 부문 주체들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는 별도 사업을 개설하고, 현행 지역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을 이 속으로 흡수시키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 지역 주체들이 수립한 계획 내용에 입각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현행 지역개발사업 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림 8-2. 지역활동가 그룹 파트너십 사례(EU 리더프로그램)



- 마을만들기 분야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의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
 -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활동할 현장 전문가의 양성이 요구되지만, 대학 등 현 제도권 교육 과정에서는 이러한 인력을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 도시, 건축, 조경, 지역개발 등의 분야를 전공한 대학 졸업생이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활동하려는 의향이 있다 하더라도, 이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 경험을 축적할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

- 마을만들기 분야에서 활동하려는 희망자들이 민간단체나 현장 컨설팅 업체 등을 통해 관련 경험을 얻기도 하지만, 마을만들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 수요에 비해 활동가들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그러한 제약이 더욱 크다.
- 도시와 농촌 공통적으로 마을만들기에 관한 현장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리라 예상되는바, 이러한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현장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참고로 EU는 리더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농촌 애니메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정착시키고자 관련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2009년부터 농촌 애니메이터를 위한 유럽 석사과정(EMRA: European Masters Programme For Rural Animators)을 제도화하여 농촌 애니메이터에 전문직종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 * 농촌 애니메이터 석사과정은 농촌지역 발전에 대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슈와 실천방안을 폭넓게 이해하면서, 농촌의 종합적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여 백

부록

경 | 기 | 도 | 마 | 을 | 만 | 들 | 기 | 지 | 원 | 계 | 획 | 및 | 실 | 행 | 방 | 안 | 연 | 구

1. 경기도 주민 대상 설문조사표
2. 경기도 시·군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표
3. 경기도 주민 조사 결과
4. 경기도 시·군 공무원 조사 결과
5. 마을만들기 활동 사례

여 백

부록 1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1. ()

[응답자 일반사항]

LOC1. 선생님께서는 현재 경기도 내 어느 시·군에 거주하고 계십니까?**LOC2.** 선생님께서는 동·읍·면 지역 중 어디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동 ② 읍 ③ 면

SEX. 성별 ① 남자 ② 여자**AGE1.**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세**AGE2.** 연령대 ① 30대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⑤ 70세 이상

[마을만들기 설명]

마을만들기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력을 높이는 활동을 말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도 마을공원과 골목길 조성, 공동육아와 청소년 돌봄활동, 로컬푸드와 마을기업 육성 등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 일반]

1. 선생님께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2.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잘 모른다 ③ 보통 ④ 대체로 안다 ⑤ 매우 잘 안다

3. 선생님은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몇 번 참석해 보았다 ③ 가급적 참여하려 노력했다
 ④ 열심히 참여했다 ⑤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마을 인식 및 태도]

4. 다음 각 사항에 대해 “①매우 그렇지 않음 ②대체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 ④대체로 그러함 ⑤매우 그러함”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 무응답
1) 나는 우리 마을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⑥
2) 우리 마을은 육아와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⑥
3) 우리 마을은 문화와 여가 환경이 양호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⑥
4) 우리 마을은 이웃 사이에 교류와 친교 활동이 활발하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⑥
5)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⑥

5. 앞서 응답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선생님은 살고 계시는 마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6. 살고 계시는 마을에서 노후·불량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의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뉴타운사업 등 전면 재개발 ② 현재개량방식으로 낙후환경정비
 ③ 행정 관여 없이 주민 자율로 정비해야 함 ④ 잘 모르겠다
 ⑤ 기타()

7.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매우 불필요 ②대체로 불필요 ③보통 ④필요 ⑤매우 필요

8.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정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몇 개 마을을 선정하여 활동 초기부터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
 ② 가급적 많은 마을에 소액 예산을 골고루 지원
 ③ 마을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경기도가 예산 지원 없이 정책과 제도로만 지원
 ④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
 ⑤ 기타()

9. 살고 계시는 마을은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일반적인 주거지역
- ② 상업과 주거가 혼합된 지역
- ③ 공장지대와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
- ④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농촌과 혼재된 지역
- ⑤ 기타()

10. (9번 문항에서 ①번 응답자의 경우) 살고 계시는 마을은 어떤 주거지역입니까?

- ① 아파트가 대부분인 마을
- ② 연립, 빌라 등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인 마을
- ③ 저층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마을
- ④ 위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마을
- ⑤ 기타()

11. 선생님의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를 중요한 순서 대로 두 개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
- ②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 ③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
- ④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
- ⑤ 문화, 여가 여건 개선
- ⑥ 마을경관과 자연환경 가꾸기
- ⑦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 ⑧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

12. 선생님의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활동에 부정적이다 ② 관심이 없다 ③ 가급적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⑤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

13. 선생님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함께 할 주민들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아파트단지 혹은 인근 골목에 사는 주민들까지
- ② 같은 행정동에 사는 주민들까지
- ③ 같은 도시 주민들
- ④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누구나
- ⑤ 기타()

14. 다른 분야의 지출을 더 줄이더라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 자원과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② 대체로 반대 ③ 보통 ④ 대체로 찬성 ⑤ 매우 찬성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1. 선생님의 현재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경영/관리 ⑥ 전문/기술직 ⑦ 주부 ⑧ 무직/퇴직, 기타
⑨ 모름/무응답

2. 직장이 위치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3. 현재 마을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습니다?

- ① 1년 이하 ② 2년~4년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⑤ 20년 이상

2. (.)

[마을만들기 일반]

1. 선생님께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십니까?
 ①전혀 모른다 ②잘 모른다 ③보통 ④대체로 안다 ⑤매우 잘 안다
2.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전혀 모른다 ②잘 모른다 ③보통 ④대체로 안다 ⑤매우 잘 안다
3. 선생님이 살고계신 마을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보화마을 등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③잘 모르겠다

[마을 인식 및 태도]

4. 다음 각 사항에 대해 “①매우 그렇지 않음 ②대체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 ④대체로 그러함 ⑤매우 그러함”으로 나누어 말씀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지 않음	대체로 그렇지 않음	보통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모름/ 무응답
1) 나는 우리 마을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우리 마을은 육아와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우리 마을은 문화와 여가 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우리 마을은 이웃 사이에 교류와 친교 활동이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앞서 응답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선생님은 살고 계시는 마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불만족 ② 대체로 불만족 ③ 보통
 ④ 대체로 만족 ⑤ 매우 만족
6. 살고 계시는 지역에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마을만들기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불필요 ② 대체로 불필요 ③ 보통
 ④ 필요 ⑤ 매우 필요

7.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정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한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몇 개 마을을 선정하여 활동 초기부터 예산을 집중 지원
- ② 가급적 많은 마을에 소액 예산을 골고루 지원
- ③ 마을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경기도가 예산 지원 없이 정책과 제도로만 지원
- ④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
- ⑤ 기타()

8. 살고 계시는 마을은 어떤 지역입니까?

- ① 주민 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어촌마을
- ② 공장, 창고 등의 생산시설이 늘고 있는 마을
- ③ 읍·면 소재지 등 상업활동이 우세한 마을
- ④ 기존 농어가와 최근 이주한 도시민들이 함께 모여 사는 마을
- ⑤ 기타()

9. 살고 계신 마을에서 다음 중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를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
- ②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 ③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
- ④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
- ⑤ 문화, 여가 여건 개선
- ⑥ 마을경관과 자연환경 가꾸기
- ⑦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 ⑧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

10. 선생님의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참여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 ① 활동에 부정적이다
- ② 관심이 없다
- ③ 가급적 참여하도록 노력하겠다
- ④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 ⑤ 기획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

11. 선생님은 마을만들기 활동을 함께 할 주민들이 어느 범위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같은 자연마을 주민들까지
- ② 같은 행정리 주민들까지
- ③ 같은 읍·면 주민들까지
- ④ 같은 시·군 주민들까지
- ⑤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누구나
- ⑥ 기타()

12. 다른 분야의 지출을 더 줄이더라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에 자원과 예산을 더 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반대
- ② 대체로 반대
- ③ 보통
- ④ 대체로 찬성
- ⑤ 매우 찬성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DQ1. 선생님은 현재 직업이 무엇입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④ 생산/기능/노무직
- ⑤ 사무/경영/관리 ⑥ 전문/기술직 ⑦ 주부 ⑧ 무직/퇴직, 기타
- ⑨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2. 직장이 위치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인 시·군을 물어볼 것)

DQ3. 자녀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영유아 ② 초등학생 ③ 중·고등학생 ④ 대학생 혹은 사회인
- ⑤ 없음 ⑥ 모름/무응답

DQ4. 마을에서 다음 직책을 맡고 있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이장 ②마을사무장 ③마을총무 ④마을사업 대표(추진/운영위원장 등)
- ⑤마을사업 운영진 ⑥청년회장 ⑦부녀회장 ⑧작목반장
- ⑨기타()

DQ5. 현재 마을에 얼마나 오래 거주하셨습니다?

- ① 1년 이하 ② 2년~4년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⑤ 20년 이상

부록 2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1. 귀 시·군에서는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2.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②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③ 대략만 알고 있다
 ④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⑤ 잘 알고 있다

[지역의 마을만들기 여건]

3. 귀 시·군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주민과 지역사회가 마을만들기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까?
 ① 전혀 관심이 없다 ② 대체로 관심이 없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관심이 있다 ⑤ 매우 관심이 높다
4. 귀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개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① 노후·불량주택, 폐가 등 주택 개량과 정비
 ② 소득 기회 및 일자리 창출
 ③ 범죄·치안 문제 해결
 ④ 육아·교육 환경 개선
 ⑤ 문화·여가 여건 개선
 ⑥ 자연·생태환경 보전
 ⑦ 보건·복지 여건 증진
 ⑧ 주변 환경 및 (마을)경관 가꾸기
 ⑨ 기타()

5. 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과 정책(정부 사업 제외)이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르겠다

5-1. 만일 있다면(①번 응답자일 경우), 사업 명칭과 간단한 사업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_____)

6. 귀 시·군은 향후 마을만들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현행 유지 ④ 불확실하다

7. 귀 시·군이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마을만들기 업무 추가로 인한 담당자의 업무 부담 증가
 ② 마을만들기 현장 활동가와 지도자 부족
 ③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
 ④ 중앙부처 사업 난립으로 인한 시·군청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연계 부족
 ⑤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예산 부족
 ⑥ 기타(_____)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올해부터 경기도청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도시부문),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농어촌부문) 등 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시범사업이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자율적 활성화라는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광역 단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마을공모사업과 시범사업 등 경기도 자체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사업 강화
 - ② 중앙부처 정책난립에 따른 부서업무조정, 사업예산통합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③ 경기도 차원의 교육·홍보, 전문가 지원, 컨설팅 등 배후지원을 강화
 - ④ 개별 시·군 주도의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예산확보와 행정지원 주력
 - ⑤ 기타()
14. 귀 시·군에서 마을만들기는 어느 부서가 총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 성격과 유형 별로 개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 ② 특정 부서를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함
 - ③ 개별 부처별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실·과 간 협의체 혹은 TF팀을 구성
 - ④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혹은 민·관 협력 추진기구 등을 구성하여 총괄하도록 함
 - ⑤ 기타()
15. 귀 시·군의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를 촉진·지원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역할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②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필요하다
 - ⑤ 매우 필요하다
16. 현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어느 단위에서 설립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모두 필요하지 않음
 - ② 경기도 광역 단위
 - ③ 개별 시·군 단위
 - ④ 인접 복수 시·군을 연계한 권역 단위
 - ⑤ 경기도와 시·군 동시 필요
 - ⑥ 기타()
17. 경기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경기도청이 공무원조직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적절 활용
 - ② 경기도청이 공무원조직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 민간전문가를 채용
 - ③ 경기도청이 책임 운영하면서, 공무원조직과 민간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별도 지원기구를 설립
 - ④ 경기도청의 직영보다 민간·시민단체 혹은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 ⑤ 기타()
18. 경기도가 자체예산으로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경우, 귀 지자체는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19. 앞으로 경기도가 주민역량이 충분히 성장한 마을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귀 시·군은 경기도의 취지에 맞추어 마을공동체의 기초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20. 끝으로 마을만들기 추진에 관한 제안, 문제점 등 귀하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귀하의 일반사항입니다.

성함		연락처	
성별	① 남 ② 여	연령	만 ()세
담당부서	_____ 시/군 _____ 실/과 _____ 팀/계		
담당 업무			
직위/직책	① 국장/실장/과장 ② 팀장 ③ 담당 ④ 직원 ⑤ 기타()		
근무기간	전체 재직기간	_____ 년 _____ 월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 수행기간	_____ 년 _____ 월	

부록 3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전혀 모른다	53.7	41.5	49.5
잘 모른다	24.5	27.6	25.6
보통	10.9	13.4	11.8
대체로 안다	9.4	13.4	10.8
매우 잘 안다	1.5	4.2	2.4
전 체	100.0	100.0	100.0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시책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전혀 모른다	61.2	49.6	57.1
잘 모른다	24.3	29.5	26.1
보통	6.0	7.0	6.3
대체로 안다	7.0	11.1	8.5
매우 잘 안다	1.5	2.8	1.9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 활동 참여 경험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있다	7.0	22.3
없다	92.8	46.0
모름/무응답	0.1	31.8
전 체	100.0	100.0

* 주: 읍·면 지역 주민의 경우, 마을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정보화마을 등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으로 질문함.

□ 거주 마을에 대한 인식

(1) “나는 우리 마을에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670)	도농복합시·군 (n=359)	전 체 (n=1,029)
전혀 그렇지 않다	4.3	4.5	4.4
대체로 그렇지 않다	6.6	5.3	6.1
보통이다	43.1	41.2	42.5
대체로 그렇다	22.7	18.7	21.3
매우 그렇다	20.3	22.8	21.2
모름/무응답	3.0	7.5	4.6
합 계	100.0	100.0	100.0

(2) “우리 마을은 육아와 교육 환경이 양호하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670)	도농복합시·군 (n=359)	전 체 (n=1,029)
전혀 그렇지 않다	5.8	12.3	8.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7	19.5	15.7
보통이다	34.2	30.9	33.0
대체로 그렇다	21.2	18.1	20.1
매우 그렇다	8.1	5.3	7.1
모름/무응답	17.0	13.9	15.9
합 계	100.0	100.0	100.0

(3) “우리 마을은 문화와 여가 환경이 양호하다 ”

단위: %

구 분	일반시 (n=670)	도농복합시·군 (n=359)	전 체 (n=1,029)
전혀 그렇지 않다	8.2	17.8	11.6
대체로 그렇지 않다	20.4	26.2	22.4
보통이다	31.9	30.9	31.6
대체로 그렇다	25.4	12.8	21.0
매우 그렇다	8.2	7.2	7.9
모름/무응답	5.8	5.0	5.5
합 계	100.0	100.0	100.0

(4) “우리 마을은 이웃 사이에 교류와 친교 활동이 활발하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670)	도농복합시·군 (n=359)	전 체 (n=1,029)
전혀 그렇지 않다	13.3	9.5	12.0
대체로 그렇지 않다	24.5	18.9	22.5
보통이다	31.8	30.4	31.3
대체로 그렇다	13.0	20.9	15.7
매우 그렇다	6.0	11.4	7.9
모름/무응답	11.5	8.9	10.6
합 계	100.0	100.0	100.0

(5)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마을문제 해결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670)	도농복합시·군 (n=359)	전 체 (n=1,029)
전혀 그렇지 않다	10.1	7.2	9.1
대체로 그렇지 않다	21.6	15.9	19.6
보통이다	29.6	29.5	29.5
대체로 그렇다	13.7	21.4	16.4
매우 그렇다	4.9	13.9	8.1
모름/무응답	20.0	12.0	17.2
합 계	100.0	100.0	100.0

□ 마을에 대한 상기의 항목별 인식을 종합할 때, 마을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체 (N=1,029)
매우 불만족	2.7	2.5	2.6
대체로 불만족	8.7	8.9	8.7
보통	45.7	49.6	47.0
대체로 만족	34.3	29.2	32.6
매우 만족	7.9	8.1	8.0
모름/ 무응답	0.7	1.7	1.1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에서 노후·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방식(동 지역)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뉴타운사업 등 전면 재개발	19.4
현재개량방식으로 낙후환경정비	32.2
행정 관여 없이 주민 자율로 정비해야 함	17.5
잘 모르겠다	6.9
기타	24.0
전 체	100.0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통한 마을만들기의 필요성 인식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전혀 불필요	2.1	1.7	1.9
대체로 불필요	6.6	5.8	6.3
보통	26.9	21.4	25.0
대체로 필요	36.6	36.5	36.5
매우 필요	19.7	25.3	21.7
모름/ 무응답	8.2	9.2	8.6
전 체	100.0	100.0	100.0

□ 경기도가 마을만들기 활동에 예산을 지원할 경우 선호하는 지원 방식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몇 개 마을을 선정하여 활동 초기부터 예산을 집중 지원	16.6	19.8	17.7
가급적 많은 마을에 소액 예산을 골고루 지원	55.8	50.4	53.9
정책과 제도로만 지원하고 마을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함	13.3	10.9	12.4
마을만들기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없음	4.9	3.3	4.4
기타	1.3	0.8	1.2
모름/무응답	8.1	14.8	10.4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통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1순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주택, 도로 등 주거와 기반시설 정비	14.8	18.7	16.1
마을소득과 일자리 창출	10.7	14.5	12.1
범죄와 치안 문제 해결	18.7	8.9	15.3
육아, 교육, 복지서비스 개선	11.9	10.6	11.5
문화, 여가 여건 개선	11.5	12.5	11.9
마을경관과 자연환경 가꾸기	8.8	8.1	8.6
마을공동체 복원과 활성화	6.0	4.2	5.3
보건과 의료 여건 증진	9.6	9.7	9.6
모름/무응답	8.1	12.8	9.7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 활동에 참여할 의향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이다	4.2	1.7	3.3
관심이 없다	18.7	15.3	17.5
가급적 참여하겠다	64.2	56.5	61.5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0.3	23.7	15.0
기획과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관여하겠다	2.7	2.8	2.7
전 체	100.0	100.0	100.0

□ 타 분야의 지출을 더 줄이더라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예산을 확대하는 데 대한 의견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70)	읍·면 지역 (N=359)	전 체 (N=1,029)
매우 반대	3.9	1.4	3.0
대체로 반대	10.9	6.4	9.3
보통	34.8	27.6	32.3
대체로 찬성	30.9	39.8	34.0
매우 찬성	11.6	17.0	13.5
모름/무응답	7.9	7.8	7.9
전 체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 활동을 함께 할 주민의 공간 범위

단위: %

동 지역(N=670)		읍·면 지역(N=358)	
참여 주민 범위	응답 비율	참여 주민 범위	응답 비율
같은 아파트단지 혹은 인근 골목에 사는 주민들까지	25.4	같은 자연마을 주민들까지	15.1
같은 행정동에 사는 주민들까지	26.9	같은 행정리 주민들까지	11.7
같은 도시 주민들까지	9.7	같은 읍면 주민들까지	22.6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누구나	31.2	같은 시군 주민들까지	3.6
모름/무응답	6.9	행정구역에 상관없이 뜻을 함께 하는 누구나	32.7
전 체	100.0	모름/무응답	14.2
		전 체	100.0

* 주: 농촌 주민 응답 중 1개 '기타' 응답('아파트별로')을 제외한 결과

□ 거주 마을의 성격

단위: %

동 지역(N=472)		읍·면 지역(N=359)	
구 분	응답 비율	구 분	응답 비율
일반적인 주거지역	70.4	주민 다수가 농어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	46.8
아파트가 대부분인 마을	60.2	공장, 창고 등의 생산시설이 늘고 있는 마을	15.6
다세대 주택이 대부분인 마을	18.2	읍·면소재지 등 상업활동이 우세한 마을	25.1
저층 단독주택이 대부분인 마을	12.9	농촌관광과 도·농교류가 활발한 마을	7.5
위 세 가지가 섞여 있는 마을	8.5	기타	5.0
기타	0.2	전 체	100.0
상업과 주거가 혼합된 지역	19.1		
공장지대와 주거지가 혼합된 지역	4.9		
그린벨트로 묶여있거나 농촌과 혼재된 지역	5.2		
기타	0.3		
전 체	100.0		

□ 마을 내 귀농·귀촌한 도시민들이 거주하는 정도

단위: %

구 분	읍·면 지역(N=359)
상당수 살고 있다	11.4
일부 있다	28.4
거의 없다	54.3
모름/무응답	5.8
전 체	100.0

부록 4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 공무원 조사 개요

-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경기도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인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인식과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경기도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한 항목은 ①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② 지역의 마을만들기 여건, ③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④ 경기도청의 마을만들기 방향과 추진체계, ⑤ 응답자 특성 등이다.
- 조사는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한 우편 발송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 경기도 시·군청의 마을만들기 담당 부서 및 자치행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도시재생, 주민생활지원 등 마을만들기 업무 관련 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 114명이 응답하였다.
 - 일반시 공무원이 61명(53.5%), 도농복합시 및 군 공무원이 53명(46.5%) 응답하였다.
 - 시·군 유형에 따른 응답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공무원 조사 응답 지역>

구 분	응답 지역	응답 수(명)	응답 비율(%)
일반시 공무원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61	53.5
도농복합시 및 군 공무원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양주시, 용인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연천군	53	46.5
전 체		114	100

[마을만들기에 대한 인식]

□ 시·군에서 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필요성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전혀 불필요	0.0	1.9	0.9
대체로 불필요	4.9	5.7	5.3
보통	29.5	28.3	28.9
대체로 필요	44.3	50.9	47.4
매우 필요	21.3	13.2	17.5
합 계	100.0	100.0	100.0

□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 마을만들기 지원 정책(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시범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전혀 모른다	0.0	5.7	2.6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	14.8	17.0	15.8
대략만 알고 있다	37.7	24.5	31.6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2.8	37.7	35.1
잘 알고 있다	14.8	15.1	14.9
합 계	100.0	100.0	100.0

[지역의 마을만들기 여건]

□ 타 지역과 비교하여 시·군에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전혀 관심이 없다	0.0	0.0	0.0
대체로 관심이 없다	16.4	15.1	15.8
보통이다	39.3	41.5	40.4
대체로 관심이 있다	31.1	32.1	31.6
매우 관심이 높다	13.1	11.3	12.3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당면한 과제(1순위)

단위: %

구 분	동 지역 (N=61)	읍·면 지역 (N=53)	전 체 (N=114)
노후·불량주택, 폐가 등 주택 개량과 정비	9.8	17.0	13.2
소득 기회 및 일자리 창출	37.7	41.5	39.5
범죄·치안 문제 해결	6.6	3.8	5.3
육아·교육 환경 개선	8.2	9.4	8.8
문화·여가 여건 개선	14.8	17.0	15.8
자연·생태환경 보전	6.6	7.5	7.0
보건·복지 여건 증진	3.3	1.9	2.6
주변 환경 및 (마을)경관 가꾸기	11.5	1.9	7.0
기타	1.6	0.0	0.9
전 체	100.0	100.0	100.0

□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과 정책 여부(정부 사업 제외)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있다	39.3	28.3	34.2
없다	24.6	35.8	29.8
잘 모르겠다	36.1	35.8	36.0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에서 향후 마을만들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확대할 계획	29.5	28.3	28.9
확대하지 않을 계획	4.9	3.8	4.4
현행 유지	24.6	20.8	22.8
불확실	41.0	47.2	43.9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에서 마을만들기 추진 과정에서 겪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가장 큰 애로사항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 체 (n=113)
마을만들기 업무 추가로 인한 담당자 업무부담 증가	21.3	17.3	19.5
마을만들기 현장활동가 및 지도자 부족	21.3	17.3	19.5
마을만들기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	26.2	19.2	23.0
중앙부처 사업 난립으로 인한 시·군 부서 간 업무 혼선과 연계 부족	14.8	30.8	22.1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예산 부족	13.1	11.5	12.4
기타	3.3	3.8	3.5
합 계	100.0	100.0	100.0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평가]

□ 현재 추진 중인 경기도 시범사업이 주민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의 자율적 활성화라는 마을만들기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인식

단위: %

구 분	일반시 (n=24)	도농복합시·군 (n=21)	전 체 (n=45)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1.6	0.0	0.9
부합하지 않는 편이다	13.1	11.8	12.5
보통이다	54.1	47.1	50.9
대체로 부합한다	29.5	37.3	33.0
매우 부합한다	1.6	3.9	2.7
합 계	100.0	100.0	100.0

□ [시범사업 참여 시·군] 경기도 시범사업을 통한 시·군의 변화

(1) “경기도 시범사업이 주민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기존 사업방식과 차별화되고 있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24)	도농복합시·군 (n=21)	전 체 (n=45)
전혀 그렇지 않다	4.2	9.5	6.7
대체로 그렇지 않다	4.2	4.8	4.4
보통이다	70.8	57.1	64.4
대체로 그렇다	12.5	23.8	17.8
매우 그렇다	8.3	4.8	6.7
합 계	100.0	100.0	100.0

(2) “경기도 시범사업 실시 후 마을만들기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24)	도농복합시·군 (n=21)	전 체 (n=45)
전혀 그렇지 않다	4.2	14.3	8.9
대체로 그렇지 않다	25.0	0.0	13.3
보통이다	29.2	47.6	37.8
대체로 그렇다	29.2	38.1	33.3
매우 그렇다	12.5	0.0	6.7
합 계	100.0	100.0	100.0

(3) “경기도 시범사업 실시 후 마을만들기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이 높아졌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24)	도농복합시·군 (n=21)	전 체 (n=45)
전혀 그렇지 않다	4.2	0.0	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8.3	0.0	4.4
보통이다	37.5	52.4	44.4
대체로 그렇다	37.5	42.9	40.0
매우 그렇다	12.5	4.8	8.9
합 계	100.0	100.0	100.0

(4) “경기도 시범사업 실시가 행정조직에서 마을만들기 지원 체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24)	도농복합시·군 (n=21)	전 체 (n=45)
전혀 그렇지 않다	12.5	9.5	11.1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7	23.8	20.0
보통이다	41.7	33.3	37.8
대체로 그렇다	29.2	33.3	31.1
매우 그렇다	0.0	0.0	0.0
합 계	100.0	100.0	100.0

(5) “경기도 시범사업에 참여한 마을에서 주민역량이 향상되고 있다”

단위: %

구 분	일반시 (n=24)	도농복합시·군 (n=21)	전 체 (n=45)
전혀 그렇지 않다	0.0	4.8	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6.7	14.3	15.6
보통이다	37.5	57.1	46.7
대체로 그렇다	37.5	19.0	28.9
매우 그렇다	8.3	4.8	6.7
합 계	100.0	100.0	100.0

□ [시범사업 미참여 시·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 분	일반시 (n=37)	도농복합시·군 (n=33)	전 체 (n=70)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알지 못했다	32.4	30.3	31.4
지역사회의 호응과 관심이 부족했다	16.2	24.2	20.0
단체장의 관심이 부족했다	2.7	0.0	1.4
시·군 행정 차원의 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	29.7	39.4	34.3
도 시범사업이 마을만들기 취지와 방향과 다르다고 판단하여 응모하지 않았다	13.5	3.0	8.6
기타	5.4	3.0	4.3
합 계	100.0	100.0	100.0

□ 경기도 시범사업 종료 이후, 향후 경기도청이 주도하여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에 참여할 의향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 체 (n=113)
적극 참여할 예정	27.9	17.3	23.0
도의 예산·행정 지원 확대 시 참여	37.7	46.2	41.6
도 사업에 참여 않고 시·군 자체 사업 추진	6.6	3.8	5.3
향후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 결정	23.0	32.7	27.4
기타	4.9	0.0	2.7
합 계	100.0	100.0	100.0

[경기도청의 마을만들기 방향과 추진체계]

□ 향후 경기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서 마을을 선정하는 방식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역량과 경험이 확보된 소수 마을(연간 10~20개 수준)을 선별하여 집중 지원	34.4	41.5	37.7
다수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소액 활동비 지원	14.8	11.3	13.2
초기단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액 활동비를 지원하되, 향후 예산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24.6	28.3	26.3
경기도 자체 사업보다 시·군 차원의 지원역량 강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행정 지원	26.2	17.0	21.9
기타	0.0	1.9	0.9
합 계	100.0	100.0	100.0

□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광역 단위의 가장 중요한 역할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 체 (n=113)
마을공모사업과 시범사업 등 경기도 자체예산을 통한 직접 지원사업 강화	19.7	28.8	23.9
중앙부처 정책난립에 따른 부서업무 조정, 사업예산 통합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24.6	28.8	26.5
경기도 차원의 교육, 홍보, 전문가 지원, 컨설팅 등 배후지원 강화	18.0	19.2	18.6
개별 시·군 주도의 자체 마을만들기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지원 주력	37.7	21.2	30.1
기타	0.0	1.9	0.9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에서 적합한 마을만들기 총괄 부서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사업 성격과 유형 별로 개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16.4	11.3	14.0
특정 부서를 지정하여 총괄하도록 함	18.0	26.4	21.9
개별 부처 별 수행을 원칙으로 하되 실·과 간 협의체 혹은 TF팀을 구성	24.6	24.5	24.6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혹은 민·관 협력 추진기구 등을 구성하여 총괄하도록 함	37.7	37.7	37.7
기타	3.3	0.0	1.8
합 계	100.0	100.0	100.0

□ 시·군의 지역사회에서 마을만들기를 촉진·지원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필요성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전혀 불필요	6.6	1.9	4.4
대체로 불필요	4.9	0.0	2.6
보통	18.0	28.3	22.8
대체로 필요	42.6	43.4	43.0
매우 필요	27.9	26.4	27.2
합 계	100.0	100.0	100.0

□ 현 상황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적합한 공간 단위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 체 (n=113)
모두 불필요	4.9	5.8	5.3
경기도 광역단위	27.9	38.5	32.7
개별 시·군 단위	36.1	21.2	29.2
복수 시·군 단위	6.6	7.7	7.1
도와 시·군 동시 필요	23.0	26.9	24.8
기타	1.6	0.0	0.9
합 계	100.0	100.0	100.0

□ 경기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될 경우, 적합한 운영 방식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경기도청이 공무원조직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적절 활용	21.3	11.3	16.7
경기도청이 공무원조직 중심으로 직접 운영하면서, 별도 민간전문가를 채용	8.2	9.4	8.8
경기도청이 책임 운영하면서, 공무원조직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는 별도 지원기구를 설립	45.9	54.7	50.0
경기도청의 직영보다 민간·시민단체 혹은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	24.6	24.5	24.6
합 계	100.0	100.0	100.0

- 경기도가 자체예산으로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설립을 지원할 경우,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의향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2)	전 체 (n=113)
전혀 의향 없음	6.6	5.8	6.2
대체로 의향 없음	9.8	3.8	7.1
보통	19.7	51.9	34.5
대체로 의향 있음	34.4	26.9	31.0
매우 의향 있음	29.5	11.5	21.2
합 계	100.0	100.0	100.0

- 앞으로 경기도가 주민역량이 충분히 성장한 마을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하는 방향으로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한다면, 경기도의 취지에 맞추어 마을공동체의 기초 활성화를 위한 주민활동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의향

단위: %

구 분	일반시 (n=61)	도농복합시·군 (n=53)	전 체 (n=114)
전혀 의향 없음	0.0	1.9	0.9
대체로 의향 없음	4.9	3.8	4.4
보통	21.3	41.5	30.7
대체로 의향 있음	55.7	37.7	47.4
매우 의향 있음	18.0	15.1	16.7
합 계	100.0	100.0	100.0

부록 5

경기도 마을만들기 지원계획 및 실행방안 연구

1.

■ 마을 간판이 담은 풍경: 진안군 백운면

- 진안군은 지역 전체를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에코뮤지엄 사업의 일환으로 간판 개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 마을지도 그리기 활동을 주민과 함께 진행
 - 2007년 문화관광부 '지역 통째로 박물관(에코뮤지엄)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간판 개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 * 에코뮤지엄: 제한된 공간에 전시하는 박물관과 달리 개방적인 지역 전체를 하나의 생태문화박물관으로 설정하고, 홍보-관리-운영을 마을공동체가 추진하는 지역문화사업
- 진안군과 전주대학교 도시환경미술연구소가 협정
 - 전주대 도시환경미술학과 교수들이 백운면 소재지의 먼 간판 정비를 기획, 진안군청 공무원과 마을 주민들이 협력하여 추진
- 사업의 성과로 백운면 원촌마을의 24개 상점 간판을 새로 제작하여 마을의 경관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자원으로 지역사회의 이미지를 개선



* 자료: 송미령 등(2013).

■ 마을을 디자인하다: 양평 서종면

- 2012년 11월 NPO 조직으로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를 조직하고, 주민 스스로 마을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마을디자인운동을 시작
 - 주민 참여와 주도를 강조하며,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아름다운 보도 만들기, 문호천 아름답게 가꾸기 등 다양한 마을 디자인사업을 추진
 - 서종마을 디자인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전국 최고의 문화예술마을을 만들고 마을을 문화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
- 서종마을은 현재 마을디자인에 대한 주민 인식을 환기하고 역량을 배양하면서, 마을활동을 추진하는 기반을 닦아가는 과정에 있음
 - 마을 주민들이 마을간판과 공동체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공동학습하는 기회를 마련
 - 특히, 아름다운 간판만들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를 열었음
- 2013년 경기도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문호리를 중심으로 가로디자인, 집중거리 공공디자인과 간판정비, 문호천 수변의 경관디자인에 대한 마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
- 2014년 2월, 서종디자인운동본부가 서종면사무소 마당에 제1호 쌈지공원인 ‘한뼌공원’을 조성하는 등 마을주민이 활용하는 커뮤니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마을가꾸기 활동을 추진



<간판 강의>



<한뼌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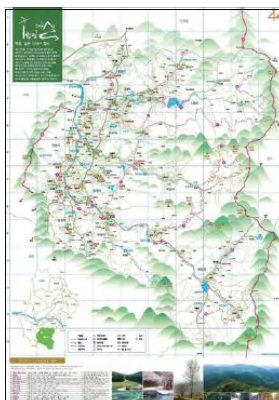


* 자료: 경기도(2013).

* 사진: 양평저널(<http://www.ypp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http://sejongdesign.org/xe/s5_2).

■ 마을공동체가 가꾸는 둘레길: 진안 백운면 진안고원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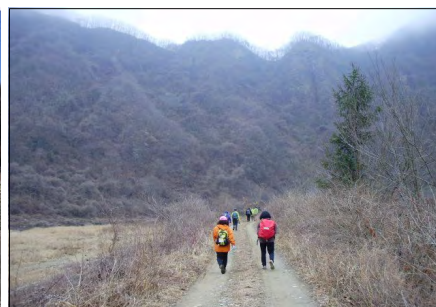
- 진안군 마을만들기 활동이 알려져 도보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마을조사단이 발굴한 지역자원 중 ‘길’에 착안하여 ‘진안고원길’ 조성 활동으로 발전
 - 도보여행길, 스토리텔링, 대안여행, 에코뮤지엄, 지역마케팅 등의 개념이 결합된 활동으로,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
- 2008년 7월 시범사업으로 마을조사단이 ‘구름땅마실’이라는 제목으로 백운면 답사지도 제작
 - ‘구름땅마실’은 2년에 걸쳐 마을조사단이 조사한 마을정보를 활용하여, 백운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 물, 풍속 등을 이야기로 엮어 답사자가 쉽게 활용가능하도록 종합정보 지도로 정리
- 진안고원길은 행정과 밀접히 결합되어 추진하면서도, 마을조사단이 주도하여 지역의 마을만들기 활동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
 - 토박이 주민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활동을 공유하고 연결하고자 노력
 - 시설 정비를 최소화하여 지역이 지니는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16개 구간(216km) 중에서 위험구간, 제초구간을 최소로 정비하여 진행
 - 장기적으로 지역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도서 발간과 현수막·전단지 제작, 이정표 작업 등에 있어 질 높은 디자인 작업을 추진하여 농촌사업과 질적 차별을 추구



<구름땅마실 지도>



<진안고원길의 이정표 작업>



* 자료 및 사진: 송미령 등(2013).

■ 마을이 소중히 가꾸는 문화유산: 수원시 행궁동마을

- 수원시의 행궁동 마을만들기는 2007년 수원시가 화성행궁광장을 설치하면서 마을진입로를 폐쇄하려 하자, 이를 반대하기 위해 ‘행궁길사람들’이 조직되어 활동하다가, 이후 주민, NGO단체, 전문가(미술작가 등 예술인)로 ‘행궁길발전위원회’로 발전
 - 화성운영재단, 화성사업소, 도시대학, 푸른경기21 친환경마을만들기 등 유관기관과 NGO가 연대하여 참여
- 2008년 도시대학 프로그램(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주최, 5주 과정)에 참여하여 지역발전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
 - ‘200년 전통과 현재 삶의 공존’, ‘작가가 살고 있는, 주민이 창작자인 마을’, ‘365일 행사가 있는 마을’을 전략으로 제시하여 그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행궁동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실행
 - * 한데우물 창작촌: ‘07년 가로정비와 거리안내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미술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위해 상설작업실인 한데우물 창작촌을 열어 지역의 문화예술거점으로 활용
 - * 문화공간 한데우물: 최소 경비로 사용 가능한 상설 미술전시관으로, 주민강좌, 영화 상영, 공연 등도 가능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 * 빈집 미술관: 빈집에 예술작품을 전시하거나 빈집 미술관으로 활용하여 지역의 문화역량을 강화
 - * 한데우물길 정비사업: 작가들이 참여하여 한데우물 주변, 도로 포장, 가로등, 문주 등을 디자인(2009년)
 - * 나혜석 생가거리 미술제: 행궁동에서 나고 자란 나혜석 선생을 기리기 위해 성 안의 8개 갤러리와 지역 내 골목길 3곳에 미술작가 전시회와 체험프로그램을 진행
- 한데우물길 일대의 빈 가게에 찻집, 공방, 갤러리 등 문화업종이 입주하고, 한데우물창작촌과 레지던시 등 작가들의 창작공간을 마련하면서, 갤러리와 빈집전시관, 거리미술제 등 문화 창조자와 향유자가 만나는 마을로 탈바꿈
- 행궁동의 장소적 매력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교류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장소로 변모

<문화공간 한데우물>



<빈집 미술관 전시회>



<나혜석 생가거리 미술제>



* 자료 및 사진: 이제준 등(2013), 행궁길발전위원회수원KYC(2010).

■ 주민이 고쳐 잘사는 마을: 장수마을

- 장수마을은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 1가 300번지 일대에 위치
 - 북동향의 급경사 구릉지로 토지의 64%가 국공유지이며, 건물은 대부분 노후도가 심한 무허가 주택지역
 - 서울성곽(사적 제10호)과 삼군부 총무당(서울 유형문화재 제37호)등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서울 주요 문화재 주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
- 2008년부터 주민 설문조사, 워크숍,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NGO활동가 뿐 아니라 장수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로 전환하고, 성북구와 장수마을대안개발연구회 간 사업지원 협약식을 체결
- 주민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마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면서 지역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적 재생방식을 모색하고 실천
 - 전면재개발 대신 주택 개보수로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커뮤니티를 재생하기 위한 방안 탐색
 - 마을기업인 동네목수가 중심이 되어 마을가꾸기와 고치며 살기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
- 오래된 골목을 통해 형성된 자율적인 주민공동체가 마을만들기 활동의 기초단위이자 의사소통의 통로로 활용되면서, 마을을 생태적이고 자치적으로 개선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자율적인 노력이 꾸준히 진행

<장수마을 마을쉼터 조성>



<장수마을 마을회의>



* 사진: 장수마을 웹사이트(<http://www.jangsumaeul.com>)

■ 마을공동체가 가꾸는 쾌적한 저층주거지: 서원마을³³⁾

- 서원마을은 강동구 암사동 102-4번지 일원의 저층밀집주거지역으로 주민 참여로 주거지 재생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시도
 - 2009년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2011년 주민협정을 체결하여, 주민 참여와 합의를 통한 주거지 재생방식으로 마을의 공간환경과 사회조직을 보존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도록 시도
- 서원마을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매월 워크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노력
 - 마을 주민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 대학(경원대 디자인과)가 참여하여 서원마을을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형성 과정을 진행하여, 신축건물의 높이를 2층으로 제한하여 저층주거지로 보존하도록 주민협정을 체결
 - 담장 허물기와 노후주택 개선, 골목길 가꾸기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마을 이웃 간 교류와 소통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도움
- 서울의 낡은 저층주거지를 고밀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자연문화 환경과 공동체를 보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주민과 행정, 학계의 합의와 공동 협력을 이끌어냄

<서원마을 항공사진>



<서원마을 전경>



* 사진: (좌) 네이버 항공사진, (우) 헤럴드경제 기사(2011.12.6).

33) 장근태(2012)

■ 어르신이 참여하는 도시 숲속 공동체: 개미마을

- 서대문구 홍제3동의 개미마을은 6·25 전쟁 이후 새로 정착한 피난민이 중심이 되어 무허가 건물을 짓고 모여 살면서 형성된 마을로, 마을 주민의 70% 이상이 60세 이상 노인층으로서, 이른바 ‘인디안 촌’으로 불리던 서울 도심부의 저소득층 주거지
- 현재 실버카페 등 마을공동체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면서 마을 노인들 간의 공동체 형성과 노인일자리사업 등을 모색
 - 인왕산 기슭의 산비탈에 위치해 있으며, 쇠락한 노후주택이 대다수인 마을의 여건을 감안하여, 주민 스스로 집과 주거지를 고쳐 생활하고자 노력
 - 금호산업이 사회공헌활동으로 마을벽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벽화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면서 마을 내부의 갈등이 완화되고 주민 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음
- 서울 도시에 위치하나 전통적 저소득층 노인 중심의 주거지역에 주민들이 스스로 자활을 모색하고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면서 마을공동체 차원의 참여와 공동활동을 모색
 - 마을이 보유한 자산인 인왕산 기슭의 마을숲과 등산로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문화활동과 생활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진행 중

<개미마을 전경>



* 사진: 서울특별시(2012).

■ 마을공동체가 노력하는 주거지 재생: 산새마을

- 산새마을은 서울시 은평구 신사2동 237번지 일대를 일컬으며, 2010년부터 전면철거를 통한 도시재개발을 반성하면서 주민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주택관리와 개보수를 통한 주거지 재생운동으로 시작
 - 2010년 10월, 은평구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두꺼비하우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에 (주)두꺼비하우징을 설립하게 되면서, 산새마을을 두꺼비하우징 시범단지(237세대, 719명)로 선정
- 마을 주민들이 산새마을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마을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과 결정에 대한 주요 통로로 활용
 - 주민들이 마을지킴이를 조직하여 자율방범활동을 벌이고, 텃밭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마을텃밭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거지 개선사업과 연결되는 다양한 마을사업 진행
 - 두꺼비하우징 주도로 마을사랑방을 개설하여 산새마을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공동체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민 자율에 의해 운영하고 관리하는 장소로 운영
 - 마을만들기 활동에 관심있는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마을학교를 운영하여 마을활동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두꺼비하우징의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의사소통하면서 마을활동의 방향과 과정에 대해 논의하면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주민참여방식을 제시
- 이미 존재하는 마을의 공간환경과 사회조직을 전면 철거하고 획일적인 아파트단지로 바뀌 버리는 철거형 도시개발을 탈피하여, 공동체를 보존하고 되살리면서 주거지를 재생하는 방식의 중요성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을 환기하는 사례



* 자료: 서울특별시(2012).

■ 담장허물기가 일구어낸 마을공동체: 대구 삼덕동마을³⁴⁾

- 삼덕동마을은 대구시 중구 삼덕동 일대에 위치하며, 1997년 가출청소년 쉼터 마련, 1998년부터 담장허물기 운동, 녹색가게 활동을 통해 마을만들기활동이 출발
 - 삼덕동은 1960년대 대구 최고의 부촌으로 번영하다 현재는 쇠퇴하는 구도심 지역이며, 노년층과 전세입주자가 주로 거주하는 주거지역임
- 1998년부터 담장허물기 운동이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시킨 발상지
 - 담장허물기운동은 주차문제 해결과 골목가꾸기를 통해 지역사회의 익명성을 극복하고 일상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1999년에 녹색가게를 개소하여 중고물품교환센터로 활용하고, 2001년에 한옥을 매입하여 동네 사랑방과 국악원 등으로 만드는 등 커뮤니티장소를 점차 늘리면서,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있음
 - 2006년부터 개최된 인형마임축제, 자전거 만들기와 자전거 보관대 만들기, 담장꾸미기, 벽화그리기와 같은 다양한 마을활동을 전개
- 한 전문가가 마을에 장기간 활동하면서 마을의 변화를 관찰하고 의미를 읽어내고자 노력하면서, 마을 주민 간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기획을 제시

<삼덕동 담장허물기 활동>



<삼덕동 인형마임축제>



* 사진: 김경민(200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사례발표 워크숍 자료집(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사례).

■ 에너지자립 생태마을: 독일 보봉마을³⁵⁾

-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프라이부르크시에 속한 보봉마을은 프랑스와 스위스의 접경 지로,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92년까지 연합군(프랑스군) 주둔지였으나, 1993년 지구 계획(38ha)을 수립,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에 완료한 신주거지역
- 1995년 프라이부르크시가 연합군 철군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자치 모임인 보봉 포럼이 출범하면서 주거지 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
 - 1995년 보봉 포럼에 참여한 30여 명의 시민들이 교통, 에너지, 주민공동시설, 주거환경 등 주제별 소모임을 만들어 미래의 주거환경과 생활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전문가가 참여하여 구체화된 실현방안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시작
 - 2004년 이후 보봉 포럼은 마을 조성, 자치적 규범과 규약 등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등 지역사회를 형성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후 보봉마을의 주민자치조직인 보봉 시민자치조합으로 발전적 해체
- 보봉마을은 에너지자립마을을 목표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동을 통한 생태·사회·경제·문화적 통합전략과 구체화된 실현방안을 제시
 - 생태적 에너지자립마을로 발전하기 위해, 에너지 고효율 조건을 만족하는 저에너지 하우스, 패시브 하우스 등을 건립하였고, 주택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플러스 하우스 건축을 시도
 -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거지역 내 차량주차 금지(통과나 상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정차 가능), 공동주차장 건립, 트램(지상전차) 정기이용권을 활용한 시내와의 접근성 증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
 - 차량 없이 거주하려는 주민에게는 일년 간 프라이부르크 대중교통의 무료이용과 기차표 50% 할인혜택을 주며, 12대 이상의 자동차 나눠타기(Car-sharing) 차량 시스템 구축

<보봉마을의 트램 대중교통체계>



<태양광 발전 에너지절약주택>



* 사진: 심재현(2014).

35) 심재현(2014).

2.

■ 다문화 교류: 횡성 다문화음식점 ‘다림촌’

- 다림촌은 횡성에서 노인과 결혼한 이주민여성이 함께 운영하는 다문화음식점으로, 농촌 다문화가정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가정생활을 안정화하면서,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 다림촌(多林寸)은 서로 다른 개인들이 어울려 작은 마을을 이룬다는 의미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를 실현한다는 뜻을 담고 있음
 - 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베트남과 태국, 중국, 일본, 캄보디아 등 문화권의 요리를 경험할 수 있음
- 다림촌은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출신의 결혼이민여성 5명을 중심으로 창업했으며, 결혼이민여성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2010년 9월 시범 영업을 시작하여, 2011년 5월에 정식 개업
 - 2010년 5월 횡성군청과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공동으로 용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다림촌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확보
 - 2010년 6월 금융감독원 지정 기탁, 서울시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7천만 원으로 음식점의 시설·설비 및 취·창업전문교육, 음식조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2013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 중



* 자료: 박대식 등(2011).

■ 임대주인과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공존: 방화6 영구임대아파트단지³⁶⁾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방화6 영구임대아파트단지는 방화6종합사회복지관과 도시연대가 공동으로 임대·분양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디자인 활동을 통해 마을만들기활동을 시작
- 영구임대주택단지에 저소득층과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가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야기되는 실업과 음주폭력, 어린이·청소년 방치, 임대·분양 아파트 주민 간 갈등과 적대, 사회적 배제 등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 삼정초등학교 어린이통학로 한평공원, 복지관 옥상의 어린이 숲속도서관, 커뮤니티북카페 등 커뮤니티장소를 조성하여 임대아파트단지 주민들의 공동체활동을 증진하는 데 활용
- 공동육아모임 ‘난마마’와 어린이 하모니카 연주단 ‘하모니’, 숲속도서관 주민사서모임 ‘숲속지기’, 지역주민 공동체 소모임 ‘다소니’ 등 다양한 공동체활동에 지역주민과 임대아파트단지 주민이 함께 활동하고 교류
- 임대아파트의 종합사회복지관이 단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역량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
- 마을 주민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직시하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사회적 약자인 영구임대단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서로 돕기 위해 노력
 - 마을만들기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되기 쉬운 임대단지 주민들이 주변의 분양아파트단지 주민들과 교류하고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임대단지 주민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활을 모색

<복지관 옥상 숲속도서관>



<방화6 커뮤니티 여행 북카페>



36) 정문수 외(2012)

■ 작은도서관과 커뮤니티 북카페: 대전 유성구 모퉁이도서관

- 작은도서관은 독서문화를 확산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 보통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는 공공도서관은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한계
 - 마을도서관 만들기 운동에 힘이 실리면서 전국적으로 4천여 개 작은도서관 운영
- 대전 유성구의 모퉁이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마을 공동체 도서관으로, 아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로 1998년에 개관
 - 2000년 유성구 전민동의 작은 지하 건물로 이전해 10년을 보낸 뒤 2010년에 평생학습센터(문지동)로 이전하면서 보다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됨
 - 보유도서는 2만 3천여 권으로 작은 도서관으로서 상당한 규모의 장서를 갖추고 있음
 - 최근에는 마을 청소년을 위한 참여프로그램을 시도
- 주민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활동가들이 직접 사서를 맡아 인건비를 절감
 - 용인 느티나무도서관이 매년 많은 양의 도서와 운영비를 지원
- 작은도서관과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면서 활동에 참여했던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점차 시작되는 분위기 조성



* 사진: WEEKLY공감(<http://koreablog.korea.kr>).

■ 작은도서관으로 일구어낸 지역공동체: 옥천 안남면 배바우도서관

- 주민이 스스로 논의하고 실행하여 만들어진 안남 배바우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어린이가 이용하는 도서관이자, 마을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의 폭을 넓히고 있음
 - 2007년, 안남면 주민 10명이 참여하여 '안남면 작은도서관 설립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안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실천
- 도서관은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마을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공동으로 돌볼 수 있도록 방과후 놀이방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주민교육토론회의 회의장 등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동체활동에 참여하는 장소로 활용
- 적극적 모금 활동을 벌이고 군청 각 실과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걷힌 회비를 통해 도서관을 운영
 - 안남농협이 기부한 부지를 활용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으로부터 2억 원을 지원받음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 월요일은 휴무) 열고, 안남면의 어머니 2명이 번갈아 가며 도서관을 맡아 운영
- 배바우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도서관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고 상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이곳에 오기를 낯설어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사랑방과 같은 공간으로 활용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비누만들기, 서예방, 종이접기, 총극 연습, 교육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안남면 배바우 도서관>



* 자료: 성주인 외(2008).

■ 장애인 돌봄 공동체: 이탈리아 마라칸다의 장애인 미술복지·돌봄

- 이탈리아의 마라칸다(MARAKANDA)는 장애인들에게 미술복지를 통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 장애인, 유치원, 청소년,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인 COOPAS에 속해 있으며, COOPAS에는 장애인 관련 4개 단체가 있음. 마라칸다는 이 중 하나로, 간단한 작업이 가능한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마라칸다 등 COOPAS의 장애인 기관은 ‘슬로우 프로덕션(Slow Production)’의 철학을 가지고 있음
 - ‘슬로우 프로덕션(Slow Production)’ 슬로건은 ‘모든 사람의 속도가 다르고 다른 종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도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이 만든 것도 높은 질의 제품이나 활동들로 연결된다’는 의미
- 지역 장애인들은 마라칸다에서 바느질, 디지털 프린트, 세라믹, 조소공예 등의 미술활동에 참여
 - 장애인들이 미술활동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은 대부분 재활용품으로, 가령 오래된 가구를 칠해서 다시 판매
- 미술활동은 ‘장애인들에게 소통의 한 수단(하나의 다른 언어)’으로, 교육자는 테크닉만 가르쳐주고 작품을 만드는 활동은 온전히 장애인들이 수행
 - 단순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직접 디자인해서 제작하며, 장애인들이 만든 작품으로 전시회를 진행하기도 하고, 만든 작품이 전시회 관람객이나 단체의 방문객에게 판매
 -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한 사람도 인형에 넣을 속재료를 자르는 등 단순하지만 작품을 만드는 데 쓸모 있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함
- 코프 아드리아티카(Coop Adriatica)와의 협력 프로젝트로, 포장이 약간 손상되거나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음식 등 팔지 못하는 제품을 시에서 정한 취약계층 가정으로 장애인들이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진행



* 자료 및 사진: 성주인 외(2014).

■ 취약계층·사회약자 돌봄 사례: 이탈리아 몬테벨로의 장애인 농업복지·돌봄

- 이탈리아의 몬테벨로(Montebello)는 ‘밭에서 가꿔 테이블까지’를 모토로, 장애인들이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요리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에 대해 정부기관에서 받는 수당으로 운영
- 장애인들이 텃밭농사와 산지관리(우천 시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라벤더 등 식재) 활동을 하고, 재배된 작물로 직접 요리
 - 라벤더 작물은 산지관리와 판매, 텃밭은 자체 먹거리에 활용될 작물 재배
 - 재배한 라벤더는 직판(파머스마켓 등)하거나 직접 사러 오는 방문객들에게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은 아니며 판매수익은 부분적임)
- 장애인들이 지도교사와 함께 직접 음식을 준비하며, 작은 행사에서 요리를 준비해본 경험을 토대로 향후 케이터링(catering) 서비스 활동을 구상 중에 있음
- 장애인들은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이곳에 머무르며 활동
 - 몬테벨로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 3~4명은 기관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버스로 자발적으로 이동
- '유제아(EUGEA)'라는 환경단체와 협력 사업으로, 벌들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꽃밭을 조성하고, 농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꿀벌 외에 다른 종류의 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등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꽃밭을 설치
 - 꽃밭의 그림은 이곳의 장애인이 그리고, 패널(panel) 제작은 볼로냐대학에서 맡아줌



<건물 앞 쪽의 텃밭>



<라벤더 재배 농장>



<벌에 대한 안내 꽃밭>

* 자료 및 사진: 성주인 외(2014).

3.

■ 완주 로컬푸드

- 완주는 지역 농업의 침체와 영세화, 전주시와의 불균등발전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돌파구로 ‘로컬푸드’를 핵심의제로 설정
 - 완주군은 핵심농정과제로 완주군과 전주시를 연결하여 순환하는 로컬푸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축적된 마을공동체사업과 농산물가공사업의 성과를 연계 노력
 - 지역의 영세한 소농의 생존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판로를 로컬푸드가 담당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척
 - 지역 소농을 조직화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지역 먹거리 순환의 전 과정을 지역 사회가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운영하도록 완주군청과 농협,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출자한 사회적 협동조합인 완주로컬푸드를 출범하여 운영
- 용진농협 직매장을 1호점으로 개장(2012.04)한 이후, 완주와 전주 일대에 효자, 모악, 하가 지점을 차례로 개장하여 지역 주민이 지역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
 - 2012년 2월부터 법인설립 준비팀이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농가조직화를 추진
 - 지역 소농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농가들의 매장 신설 요구가 커지자 2012년 10월 전주에 로컬푸드 효자점을 개설하고, 2013년 6월 모악본점을 개장
 - 완주군과 전주시 간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전주시는 장소 제공과 리모델링(유휴자산인 주민자치센터 옛건물 활용), 완주군은 매장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로 추진
 - 주중 1일 1500만 원, 주말에는 1일 3000만 원 매출을 달성하고 있으며, 2013년 10월에는 농가 레스토랑을 개점하여 운영
- 완주군의 생산 거점별로 농민이 직접 생산물을 가공·유통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동시에 품목 다양화를 꾀하도록 고산면을 비롯한 6개 면 권역에 완주군 직영 거점농민가공센터를 설치·운영

<완주 로컬푸드 직매장>



■ 상인이 지켜낸 문화상권: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

-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는 시장 상인과 노점상이 공동으로 시장을 살리기 위한 활동 전개
 - 부평시장 주변에 대형유통마트가 진입하면서 전통시장의 상권이 붕괴될 상황에 처하자, 1998년 상인 스스로 6천만 원의 기금을 모아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서 부평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작
- 시장의 상인들이 기존에 갈등하고 경쟁하던 노점상과 함께 상생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이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전통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연대와 함께 한평공원 사업, 커뮤니티디자인 사업 등을 전개하면서 '차없는 거리' 및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
- 기존에 갈등하던 부평시장 상인과 노점상이 공동으로 '문화의 거리 발전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마을만들기 활동을 벌이는 등 공동체의 주체로 성장
- 상인의 노력으로 시장경관이 개선되고 안전한 거리로 발전하면서 주변의 대형유통마트 입점에도 불구하고 상권을 스스로 노력으로 지켜내었을 뿐 아니라, 전통시장의 문화를 형성하고 다양한 시장 구성원이 상생하는 전통을 만들어 내고 있음

<문화의 거리 상설공연>



<문화의 거리 분수대>



* 사진: 걷고싶은도시(2011).

■ 예술가와 노동자가 협업하는 산업예술공동체: 문래예술공단

- 문래예술공단은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 지역으로 예술가와 산업노동자가 공동의 노력으로 예술-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활동을 시작
 - 서울의 대표적인 금속공업공단지역이던 문래동 일대가 쇠퇴하면서 빈터가 생겨나고, 2000년대 초부터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온 예술인들이 정착
 - 현재 문래예술공단에는 주간에 철공소를 비롯한 금속공업업체가 활동하고,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예술가가 활동하면서, 장소를 시간대별로 나누어 공동으로 사용할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서로 예술창작을 협업하는 순환생태계가 형성
- 지역 금속산업업체들과 함께 금속공예·예술·생산이 연계된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면서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예술작품과 활동이 협업을 통해 탄생
 - 2007년에 경계없는 예술센터가 '경계없는 예술축제'를 개최하고, 온앤오프 무용단이 '문래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예술가들의 문화활동이 활발
 - 현재 80여 개의 창작실에 미술, 공예, 음악, 공연, 문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200여 명의 예술가들이 모여 활동
 - 지역에 모인 예술가들이 자발적인 재능기부와 공익나눔 활동을 벌이면서, 지역 주민과 지역금속산업 노동자들과 공동전시, 옥상텃밭공사 활동을 함께 하고 있음
- 예술가와 산업노동자 간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예술가와 산업노동자, 지역 주민이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공동체가 탄생
 - 기존 도시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비워진 공간을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예술활동으로 채워가면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예술이 서로를 돕는 산업생태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쇠퇴한 도시를 개선하고 재생하는 에너지가 되고 있음

<건물의 공동주소판 제작>



<문래예술공장>



■ 치즈로 일군 마을공동체: 임실 치즈마을

- 임실 치즈마을은 임실군 임실읍 금성리에 위치하며, 1967년, 임실성당의 지정환 신부(본명: 디디에 세스테벤스)가 열악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임실치즈를 개발하고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
- 임실치즈를 지역브랜드로 육성하여 치즈 특산품을 생산하고, 산양체험장·치즈아카데미 개최 등 체험관광을 발전시키고, 임실치즈를 통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 마을 차원의 경제적 자활을 모색
- 치즈만들기, 산양체험, 피자 및 떡거리 만들기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에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주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
- 임실치즈 브랜드 마을사업 외에도, 마을의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우렁이농법과 오리농법을 통해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스테비아 농법을 도입하는 등 지역경제를 자활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일구고 있음
- 임실치즈의 생산과 체험을 마을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활을 추진하는 동시에, 마을의 젊은 세대를 마을공동체 발전과 혁신을 위한 인적기반으로 활용

<치즈의 문>



<치즈체험장>



* 자료: 임실치즈마을 웹사이트

■ 여성농업인들의 공동작업: 흥천 ‘언니네텃밭 시동공동체’

- 흥천군 남면 시동에 위치한 ‘언니네텃밭’은 8명의 생산자 조합원과 20명의 주변 생산자가 키운 먹거리를 농산물 꾸러미로 만들어 160~170명의 소비자 회원에게 주 1회나 격주 1회로 배송
 - ‘언니네텃밭 시동공동체’는 유치리, 시동리, 신대리 마을 주민들을 주축으로 설립
 - ※ 제철꾸러미사업은 강원 흥천·횡성, 경북 안동·상주, 전북 김제, 전남 순천·나주, 제주 등 12개 지역 공동체의 110여 명 생산자 회원이 도시의 1천여 명 소비자 회원에게 공급
 - ※ 농촌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를 연결하는 역할은 전국여성농민회가 맡고 있음. 소비자에게 꾸러미 전달, 회원 관리, 소식지 발행 등 개별 농가가 직접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담당
-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언니네 텃밭 생산지 체험 활동에 연 1회, 소비자 공동체 지역 모임에 연 1회의 참가를 소비자의 의무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소비자가 1년에 1번은 자신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을 만나야 한다는 의미
- 외국 종자 산업에 빼앗긴 토종 종자를 되살려 우리의 종자로 우리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도 주요 목적
 - 조그맣고 못 생겼지만 우리의 몸에 이로운 토종 농산물을 복원하려고 노력
- 텃밭농사를 통해 전통적인 친환경 농업을 복원하고자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되어 있는 텃밭 농사를 통해 소규모 친환경 농사로 환경과 생태계를 살리면서도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방식을 지향
- 2010년 6월에 활동을 시작하여, 2011년 7월 영농조합법인으로 전환, 수익금 재투자와 노인·다문화가정 이주여성 등 여성 농업인 일자리 창출
 - 2011년 3월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응모하여 선정
- 현재 매주 70개 정도의 꾸러미를 만들고 있으며, 연 매출 8천만 원 규모



* 자료: 흥성희망신문(http://hs.chamhope.com/news/bbs/board.php?bo_table=hc_news&wr_id=315), 정책프리핑 정책뉴스 보도자료(<http://www2.korea.kr/newsWeb/m/reportList.do>) 송미령 외(2013).

■ 동백나무로 일구어낸 마을: 제주 동백마을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표선면 동백마을(신흥2리)은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 27호인 동백나무 군락을 중심으로 마을자원을 발굴·활용하는 공동체사업을 추진
 - 동백마을은 220여 가구, 250여 명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13년 기준), 주민 대부분이 감귤농사에 종사
- 2007년 설촌 300년을 맞이하여 마을 청년들이 설촌 터에 있는 동백군락지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동백마을 만들기가 시작
 - 같은 해 2월 청년회 산하에 결성되었던 '동백고장보전연구회'가 4월에 마을회 임시총회에서 공식 마을기구로 승인되고, 5월에는 '동백마을' 선포식 개최
 - '동백고장보전연구회'를 조직(2013년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마을공동체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2008년에 농촌건강마을 및 제주형 6차산업베스트마을사업, 2009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의 정부지원사업을 추진
- 동백고장보전연구회는 동백나무군락지 공유화 사업을 비롯하여, 마을 전체를 동백숲으로 조성한다는 목표 아래 매년 500그루의 동백나무를 심고 마을 내 빈터 곳곳에 동백 묘목을 심는 사업을 추진하여 '13년까지 식재된 동백나무가 15km에 이룸
- 2009년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온저장고와 가공시설을 갖춘 약 90㎡ 규모의 '동백마을 방앗간'을 건립하고, 동백고장보전연구회 소속 주민들이 동백 열매·꽃잎을 가공하여 동백기름을 생산
 - 동백씨를 이용한 제품을 2009년 식용 기름에서 2010년에는 비누, 2014년에는 미용 오일로 확대
 -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과 동백원료 구매 협약을 맺어 생산한 동백기름이 원료로 납품되하면서 사업이 안정화
-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인 동백 꽃과 열매의 채집작업을 노인 일자리로 제공
 - 낙과 및 낙화를 수거하는 동백 채엽은 작업 난이도와 작업량이 노인들에게 적합하고, 정해진 채엽량이 없이 개인의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



* 자료: 송미령 외(2013), 제주일보(2014.01.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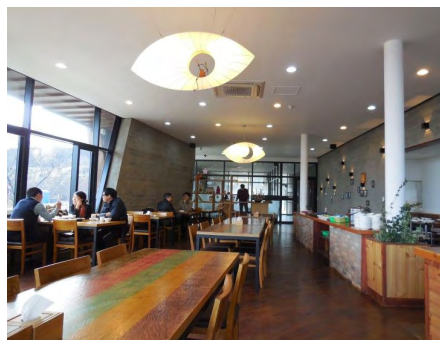
* 사진: 송미령 외(2013), 제주동백마을 웹사이트(<http://www.jejudongbaektown.com>).

■ 농민이 운영하는 농가레스토랑과 커뮤니티카페: 완주군 비비정마을

- 완주군은 신문화공간조성사업(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을 활용하여 삼례읍 비비정 마을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
- 완주군 삼례읍의 비비정 마을에서는 신문화공간조성사업을 통해 비비정 신문화공간을 조성하고(2012년 12월 개소), 주민 주도로 신문화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주민사업을 기획·추진
 - 신문화공간(13,183㎡ 규모)은 농가레스토랑, 커뮤니티카페, 야외공연장, 전망대 등으로 구성
 - 농가레스토랑: 마을에서 직접 기른 농산물을 사용한 시골밥상 판매
 - 커뮤니티카페: 식혜, 수정과 등의 전통차와 커피 판매(바리스타)
 - 야외공연장: 카페테리아 외부공간에 형성, 각종 체험과 연계한 공연, 영화 상영, 방과후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
- 주민들은 농가레스토랑과 커뮤니티카페를 운영한 경험을 발전시켜 지역사회 문화거점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학습, 음식 만들기(음식문화창업팀), 술 만들기(작은양조장) 교육,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정원텃밭 조성, 공동경작(마을공동체자두)등 추진 준비
- 그 외에 마을에서는 문화예술교육(예술텃밭학교), 마을공정여행, 화백밴드&건달시스터즈, 비비정마을신문 등 각종 문화활동도 전개



마을신문



농가레스토랑 비비정



카페 비비낙안

* 자료: 송미령 등(2013).

* 사진: 비비정마을 웹사이트(<http://www.bibijeongin.com>).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clearsea80?Redirect=Log&logNo=110181332459>).

■ 슬로푸드 체험마을: 경기 양평군 보릿고개마을

- 양평 용문면 연수리의 보릿고개마을은 1960년대 묵은 곡식은 바닥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아 식생활이 매우 어렵던 음력 4~5월 경의 춘궁기를 테마로 콩보리밥과 호박밥, 나물밥, 쫄래떡, 보리개떡 등 추억의 먹거리로 특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보릿고개마을은 80여 가구, 16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 마을사업 초기에 전문업체(‘바라기닷컴’)와의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 2004년 경기도 슬로우푸드(slow food)체험마을로 지정되었으며, 보리를 직접 빵아 보리떡과 호박밥 등을 지어 먹어보는 웰빙(well-being) 음식문화 체험, 농산물 캐기,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
 - 계절별 농산물 수확, 보리개떡 만들기, 두부 만들기, 농두렁 축구, 뗏목타기, 맨손 송어잡기 등의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
 - 딸기따기 등 마을 내 부족한 자원은 인근 마을(용문)의 농가와 연계 진행
 - ※ 2004년 경기도 슬로푸드체험마을, 행정안전부 정보화마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2011년 경기도 농촌체험마을 선정
- 허기를 면하기 위해 마련했던 음식들이 몸의 균형을 바로잡는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심신의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찾는 체험마을로 유명해짐
- 마을의 대동회, 부녀회와 별도로, 체험프로그램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슬로푸드체험마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슬로푸드체험마을을 운영
 - 마을 주민 중 지원자를 모집하여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
- 식사 준비에 사용되는 식재료는 최대한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을 통해 구매
 -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전량 소비되고 있으며,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판매한 경우 판매액의 10%를 체험마을 운영비로 환원



* 자료: 민석 외(2011).

* 사진: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30925&cid=4758&categoryId=4796>),
네이버 지식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7899&cid=775&categoryId=1894>).

■ 와인체험을 통한 마을부흥: 독일 볼츠부르크(Vogtsburg)시³⁷⁾

- 볼츠부르크 시는 포도재배, 와인생산, 체험관광 등 농업을 기반산업으로 둔 인구 6천 명의 소도시로 농업의 침체와 인구 과소화로 쇠퇴하는 지역이었으나, 주 정부의 MELAP PLUS 시범사업을 통해 도시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
- 주 정부의 MELAP PLUS는 낙후되고 침체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 노후주택과 낡은 농경지를 개선하도록 교육, 생산·판매시설, 주택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시범사업임
 - MELAP PLUS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볼츠부르크 시는 정주 중심지를 육성하기 위해 주변에 산재한 숙박시설, 학교, 유치원 등을 중심지에 개발하고, 주거개발지에 분양주택을 건설
 - 볼츠부르크 시에 속한 아카렌 게마인데(마을공동체 수준의 독일 행정단위)의 경우, 농업이 침체되고 마을이 과소화되며 생필품 구입도 어려운 낙후지역이었으나, MELAP PLUS 사업에 응모한 이후,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게마인데 중심지를 강화하고 학교, 유치원 등 공공기관을 일체화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
- 볼츠부르크 시의 MELAP PLUS 사업은 지자체 공무원과 전문가가 주도하여 정주지 육성을 위한 세부사업을 추진한 이후 시민워크숍을 통해 주민의 의견과 참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추진
 - 사업 추진의 결정권한은 지역의 지자체장과 전문가 소위원회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공동 협력 추진으로, 기초 지자체 차원의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 아카렌 지역에 지원된 예산은 80%는 주 정부, 20%는 시 자체에서 부담함(집을 헐고 새로 짓는 경우 30% 최대 2만 유로까지 지원, 내부공사 등 리모델링은 30% 4만유로까지 지원)
- 볼츠부르크 시의 지역 활성화는 인구 감소와 농업 침체로 활력을 잃고 과소화, 공동화되는 지역을 재생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자율적 노력을 강조

<아카렌 게마인데의 정주 중심지>



<아카렌 재생 계획>



■ 마을을 박물관으로: 독일 배드 뒤르헤임(Bad Dürrhein) 마을³⁸⁾

- 배드 뒤르헤임 마을은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해발고도 700m에 위치한 중산간마을로서 온천을 비롯한 관광산업이 발달
 - 프라이부르크시 인근에 있으며, 도나우에싱엔의 북쪽 8km, 흑림(Black Forest)의 동쪽 지역에 인접한 마을
 - 마을 인근에 암염 지질층이 존재하여 19세기부터 소금생산이 발달했으나, 현재는 쇠퇴하여 소금생산시설이 많이 남아 있음
- 과거 발달했던 소금 산업시설을 문화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금창고를 개조한 마을박물관을 조성하고, 소금과 관련된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등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전개
- 1994년 온천이 발견되면서 이를 개발하여 온천 휴양관광산업을 일으켜 세웠으며, 지방정부가 직접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기존의 마을 기간산업이 붕괴되어 낙후되는 농촌 지역이 기존 산업시설을 재생하여 마을주민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에코뮤지엄으로 조성하였으며, 새로 발견된 온천 자원을 관광자원화하여 마을발전을 추진

<소금창고를 개조한 마을박물관>



<소금을 형상화한 조소작품>



<배드 뒤르헤임 마을의 온천 휴양단지>



38) 심재현(2014).

4.

■ 마을미디어 활성화: 퇴촌남중생활문화네트워크

- 퇴촌남중생활문화네트워크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의 문화공동체
- 2012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 생활문화공동체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달팽이신문’과 ‘달팽이라디오’를 제작하기 시작
- 달팽이라디오는 지역과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룸
 - 새로 생긴 가게 소개, 지역의 유명인 인터뷰, 마을 행사 등 소개 및 참여 유도, 동네의 인터넷 육아카페 운영자가 출연해 엄마들의 고민을 나누기도 함
 - 이들 매체는 중·장년층이 대부분인 마을 주민들 간에 소통의 장으로 역할
- 인구가 2만 명이 되지 않는 퇴촌면의 문화공동체는 학부모 모임으로부터 출발
 - 지역의 청소년들이 문화적으로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학부모들이 함께 청소년 문화활동을 시작했고, 2010년 ‘청소년 어울마당’을 처음으로 개최,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음악 밴드와 노래 공연 등을 직접 기획하고 연습하면서 교우 관계가 넓어지는 것을 지켜보고 성취감을 느낌
 - 이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장년층 주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고, 청소년 위주로 시작된 문화활동이 지역주민 전반으로 확대
- 퇴촌은 인구 절반 이상이 타지에서 온 주민들로 구성되어 주민 간 갈등을 겪기도 했으나, 문화공동체 활동이 지역사회에 확대되면서 이주민과 원주민을 구분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고 평가됨
 - 전원생활이나 귀농 희망자들이 많아지면서 외부인들이 다수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 퇴촌에서 달팽이신문과 달팽이라디오는 지역 소식을 접하고, 공동체에 더 빨리 적응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



* 자료: WEEKLY공감(<http://koreablog.korea.kr>).

■ 주민이 만드는 마을신문: 수원시 칠보산마을

- 경기도 수원시 서부의 칠보산 자락에 있는 칠보산마을(금곡동, 호매실동 일원)은 마을신문 발간과 공동육아 등 마을만들기활동을 통해 공동체 연대 강화를 추구
 - 1998년 3,2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입주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일을 고민하면서 공동육아가 시작되었고, 이후 일부 주민들이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모임을 조직
 - ※ 공동육아 어린이집, 공동육아 방과후, 생태수업을 하는 '도토리교실',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두꺼비논', 대안초등학교인 '칠보산 자유학교', 청소년 교육나눔공동체 '뚝방', 장애중등대안학교 '마당', 생협 마을모임, 한살림 마을모임, 한살림 초록장터, 칠보농약전수회, 전통주 만들기모임 등
 - ※ 2011년 수원시 마을만들기 최우수사업 선정, 2012년 마을르네상스사업 하반기 공모사업(주민들의 자발적 동아리활동 진행을 위한 희망공간 지원 등)
- 칠보산 마을신문을 운영하기 위해 '칠보산 마을신문모임'을 조직하여 활동
 - 2010년 11월에 '칠보산 마을신문 창간준비호'를 발행하여 지역의 성당, 교회, 사찰, 아파트 입구, 상가,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등에 배포하면서 지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12년 3월에 '칠보산 마을신문 창간호'를 발행
 - 지역의 7개 단체(공동육아 어린이집, 공동육아 방과후, 방과후 명예방, 청소년 나눔교육 뚝방, 도토리교실, 한살림, 수원칠보산 자유학교)가 협력하고, 공동체를 일궈온 사람들, 지역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 마을의 여러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 마을신문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
 - 개별 공동체가 처한 구체적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쌓여갈 때 마을만들기가 함께 진행됨을 인식
 - 공동체모임의 소식을 나누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주민에게도 지역 소식을 전하여 공동체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



<칠보산 마을신문 창간준비호>



<주민기자학교 수료식>

* 자료: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2012).

* 사진: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2012),
마을르네상스센터(<http://www.maeulcenter.or.kr/ml/index>).

■ 주민과 행정의 함께 만드는 신문화운동: 제주 가시리마을

- 2009년 농림수산물식품부 ‘신문화공간조성사업’에 선정
- 문화공간을 위해 단순히 건축물을 짓는 것을 벗어나, ‘주민 중심 공간’과 ‘방문자 중심 공간’, ‘양쪽을 엮는 공간’을 구상하고 각각의 공간에 맞는 콘텐츠를 담기 위해 노력
 - 주민 중심 공간으로 ‘문화센터’, 방문자 중심 공간으로 ‘조랑말 박물관’, 양쪽을 엮는 공간으로 ‘창작지원센터(Artist-in-Residency)’ 조성
 - 레지던시 작가들의 커뮤니티예술이 공동체 활성화 측면에서 마을에도 영향을 주고, 작품 감상 등 외부 방문자들과도 연결고리를 갖게 됨
- 문화센터는 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위해 조성
 -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가시리의 중심부에 위치
 - 연습실 겸 녹음실, 세미나실, 로컬푸드 식당 등 마련(총 150평 규모)
 - 주민 문화활동 시설이므로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 유지·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녹음실의 음향기기를 임대하거나 마을잔치나 지역 내외부의 회의 장소로 세미나실을 임대



* 사진: 제주특별자치도(2012).

■ 마을이 함께 만드는 문화카페: 서울 ‘행복한 정릉카페’

- 카페는 정릉과 재래시장인 아리랑시장 인근의 오래된 단독주택 단지에 위치하며(정릉2동), 주변 마을 재개발로 동네 상권 쇠퇴와 공동체 약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 2001년 정릉 마을 주민이 모여 ‘성북구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설립함. 이 협동조합은 공동체 형성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마을에 대한 관심을 계기로 공동체에 뜻이 있는 신·구 조합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복모임’을 결성
- ‘행복모임’은 2012년 성북구청에서 시행한 ‘성북구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72만 원의 지원금과 자부담 1,666만 원을 들여 카페를 조성
 - 어른들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 배움과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
 - 2012년 8~9월 동안 정릉 주민의 사랑방 공간을 만들
- 카페는 지역 주민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공간이면서, 지역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재능 기부로 전시회, 영화제, 미니콘서트 등이 열리기도 하는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



문의 070.8955.2667

**아이들은
놀이 위해
세상에
온다**

부모커뮤니티강좌
놀이운동가 편해온 선생님의 놀이 이야기

"만약 아이들이 병들었다면,
그것은 마음껏 놀지 못할 것에
대할 복수다"
- 에리히 프롬

"하루를 잘 노는 아이는 짜증을 모르고
10년을 잘 노는 아이는 병들었다"
- 아이들은 놀이가 밥이다 부

12.27(목) 오후 3시
행복한 정릉 카페
5천원 (음료계금)

행복한 정릉카페 ● 구민역입

행복한 정릉 카페 문화주간

만나요, 우리

드라마가 실용한 소설같은 줄거리에 따뜻한 여인네의 사랑나는 계를
마찬가지로 놀면서 정희의 사랑을 받고 싶을때
고향은 어차피 어둠으로 안친한 줄거리를 드물게
안노오, 우리(아리랑에서 안노오)

<p>아리랑 당아오</p> <p>안화보 눈 받 10/27 (토) 저녁 8시</p> <p>"지상의 불처방" 김희, 주연 어리호 간</p>	<p>왕은 왕이다</p> <p>우리동네 아티스트 11/12 ~ 11/17</p> <p>"금속공예를 만나다" 금속공예가 이용부</p>
<p>왕은 한 번 사귀면 간다</p> <p>10/29 ~ 11/10</p> <p>"행동, 위험다운 날의 기억" 사진작가 임효용</p>	<p>문화주간 이야기</p> <p>반박 바자회 11/18(일) 오후 1시~4시</p> <p>"행동을 이기는 반박 배지하"</p>

1호점 | 행복한 정릉 카페 | 2호점 | 서울구로문화재단지원센터

* 자료: 서울특별시(2013).

❑ 쇠퇴하는 도심의 문화부흥: 부산 보수동 책방골목

- 보수동 책방골목은 부산광역시 중구의 보수동 일대에 동, 서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책방골목길로 책방 40여 곳이 운영되고 있음.
 - 초·중고 참고서와 문제집, 교과서, 방송교재, 아동도서, 소설, 교양도서, 사전류, 기술도서, 만화, 잡지, 외국도서 등의 중고서적이거나 새 책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구입한 서적을 되팔 수 있는 책방골목임
- 한국전쟁 당시 부산이 임시수도가 되었을 때 피난민들이 가져온 책을 생활을 위해 팔기도 하고 천막학교에서 배우던 학생들이 교과서를 구하는 등 책을 사고파는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헌책방골목이 만들어졌고, 현재 전국 최대 규모의 헌책방골목으로 책을 주제로 한 볼거리와 문화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1960~70년대를 전성기로 영업 서점 규모가 70여 곳에 달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구 도심 쇠퇴와 지역상권 침체로 현재는 규모도 40여 곳으로 줄고 상당수 서점은 신간서적을 취급하는 등 헌책방 골목의 의미가 변화하고 있기도 함. 그러한 시점에서 책방골목을 재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4년부터는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고, 2005년부터 해마다 문화행사를 개최함
 - 책방 주인들이 상가 번영회(보수동책방골목번영회)를 만들고, 점차 사라져 가는 책방을 살리기 위해 1996년부터 보수동 책방골목축제와 헌책방사진전시회, 작은음악회 등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음
- 보수동책방골목을 활성화하고 책방골목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상설 및 기획전시, 강연과 공연, 북카페, 어린이 책사랑방, 하늘정원 등 책과 관련한 문화콘텐츠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12월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이 개관·운영되고 있음
 - 비영리 민간단체인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부산시 중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함
 - ※ 부산광역시 중구청이 지원한 '전통문화거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 자료 및 사진: 보수동책방골목 웹사이트(<http://www.bosubook.com>), 서울신문(2013.07.24).

■ 공동육아와 성미산살리기 활동으로 꽃피운 문화공동체: 성미산마을

- 서울시 마포구 성미동 일원에 위치한 성미산마을은 1994년 젊은 부모 30여 세대가 단독 주택을 구입해 공동육아를 위한 우리어린이집을 열면서 시작
 - 현재까지 30~40대 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400여 가구 1,000여 명이 함께 공동체활동을 지속하며 가족 중심의 생활공동체를 형성
- 2001년 부터 시작된 ‘성미산 살리기’ 활동을 통해, 마을 뒷산인 성미산을 지키기 위한 사회운동의 경험이 주민들을 결집시키면서 마을의 삶터와 공동체를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
- 현재 성미산마을은 마포두레생활협동조합, 성미산숲속학교 등 교육, 문화, 마을기업, 복지 돌봄 등 마을공동체활동을 다양하게 벌이면서, ‘동네부엌’, ‘작은나무’, ‘성미산밥상’, ‘소행주’ 등 주민출자에 의한 마을기업 또한 다양한 주민조직을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 주민들 간에 장기간 축적된 사회적 신뢰와 활동의 경험이 공동육아협동조합, 두레생활협동조합 등 협동조합운동 및 마을만들기 활동과 결합하였으며, 마을공동체를 소중히 아끼고 성장시키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로 지속적 노력



* 사진: 국토연구원(2012).

■ 예술가와 문인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부산 감천문화마을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의 감천문화마을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저소득층 중심의 마을로,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사업에 지역의 예술가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응모하여 공동으로 노력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시작
- ‘미로미로 골목길 가꾸기 사업’(2010), ‘자립형 공동체 사업’(2010), ‘사회적기업 지원사업’(2010), ‘생활환경 개선사업’(2011~2012) 등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
- 지역의 예술가와 문인이 주민들과 함께 참여하여 벽화와 공공예술작품을 제작하고, 마을 노인들도 공동체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음
- 마을이 커피숍과 아트숍, 공동작업장을 운영한 수익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지역사업에 환원하고자 노력
- 지역예술가와 문인들이 주축이 되어 마을의 독특하고 고유한 경관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
- 감천동 문화마을운영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운영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구체적 사업을 전개

<감천문화마을 전경>



<감천문화마을 벽화와 장식>



* 자료: Dynamic Busan 문화관광 웹사이트(<http://busantravel.net/>).

■ 역사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문화공동체; 북촌한옥마을

- 북촌한옥마을은 종로구 경복궁 동측의 가회동, 계동, 삼청동, 원서동, 재동 일대를 일컬음
 - 조선의 한양 천도 이후 서울의 중심부였으며, 1920년대 도시한옥이 집합적으로 건설되면서 형성된 북촌 마을
- ‘북촌가꾸기’ 운동은 역사문화경관과 삶의 방식이 한옥 멸실과 다세대주택의 건축 확산 등으로 인해 해체될 위험에 처하자 2001년부터 마을 주민과 도시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시작
- 북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북촌문화마을가꾸기회 등 자발적인 마을모임을 조직하여 활동
 - 한국 내셔널트러스트, 도시연대, 북촌문화포럼, 아름지기 등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북촌 한옥 보존과 주거환경 개선, 역사문화 지키기, 마을만들기, 북촌문화투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 ‘북촌 가꾸기 계획’(2000년)과 ‘북촌 지구단위계획’(2010년)이 한옥 주거지 재생과 경관 보호를 목표로 수립되면서 마을 주민이 계획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지역사회에 북촌의 역사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2000년대 이후 북촌 한옥이 마을자산과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님을 주민들이 스스로 인식하게 되면서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전개되었고, 주민공동체의 역량이 형성
 - 그러나, 북촌마을의 관광상품화로 인해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고 주거지를 대체하여 상업 시설이 입지하기 시작하면서, 마을에 거주민들이 물러나게 되고 지역사회와 문화, 공동체가 침체되는 현상 발생

<북촌 한옥마을 전경>



* 자료: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http://korean.visitkorea.or.kr/>).

■ 예술가와 노인이 함께 가꾸는 마을문화: 부산 매축지마을

- 매축지마을은 부산시 동구 범일5동에 위치하며, 일제시대 매립하여 조성한 마을로 부산항 옆에 인접하여 생활환경이 낙후된 주거지역
 - 마을의 주택이 대부분 노후하고 열악할 뿐 아니라, 노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아 공가와 폐가가 늘어나는 등 점차 쇠퇴하고 있음
- 2011년부터 마을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예술가들이 동네 주민 중 솜씨좋은 노인들과 문화상품을 함께 제작하여 판매하면서 마을활동이 시작
- 마을기업 인사이트영을 중심으로 마을의 문화적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한 다양한 예술문화작업을 진행
 - 지역작가들이 노인들과 공동으로 수공예 액세서리와 천연염색 제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류전, 마을벽화사업, 지역축제 등 문화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음
 - 현재 마을의 빈 공간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직접 텃밭을 일구고 마을텃밭 상설장터를 여는 등 텃밭공동체를 일구고 있으며, 특히 물탱크를 재활용하여 텃밭상자로 변형시키고 이동식 도시텃밭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도시농업을 지속하고 있음
- 예전 마을에 한복집이 많아 손재주 좋은 할머니들이 많은 동네 특성을 활용하여 예술가들과 협업으로 수공예상품을 ‘매축지 할매’ 브랜드로 생산
 - 수공예품 제작을 통해 예술가와 어르신 등 지역사회 내부의 세대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해지고, 마을 내부의 자존감과 존재감이 점차 향상될 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 인문학 교육 등 주민학교를 운영하는 등 마을 공동체가 꾸준히 회복되는 중

<매축지 마을벽화 활동>



<수공예 액세서리>



* 자료: 국토연구원(2012).

연구보고서 및 학술지 논문

- 강종원. 2010.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보완·발전 방안」. 강원발전연구원.
- 강종원. 2006.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평가와 개선방안”.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현황과 발전전략 워크숍.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강원도청.
- 경기도. 2013. 「2013년도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 우리는 경기도 마을에 산다」.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012. 「마을하기, 성미산마을의 역사와 생각」.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3.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지원센터. 2012. 「이웃과 함께하는 도시·마을 만들기」. 창조적 도시재생 시리즈 32. 국토연구원.
- 김광선·이규천. 2012. 「농촌 공동시설의 유희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대식·전택기·배승중. 2010. “농촌마을단위의 정주환경진단 지표 개발.” 농촌계획 16(3). 27-41.
- 김정섭·마상진·권인혜. 2009. 「농촌개발사업 참여 주체의 역량 강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의자료.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제12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현장자료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축산식품부. 2012. “농촌체험마을 평가”. 농식품부 내부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09. “농촌체험마을 평가”. 농식품부 내부자료.
- 도시연대. 2007. “대구 삼덕동 마을만들기와 재개발 움직임”. 「견고싶은도시」. 3-4월호.
- 도시연대. 2006. “그들이 허문 것이 담장뿐이었을까?”. 「견고싶은도시」. 7-8월호.
- 대한건축학회. 2012. 「살기좋은 서원마을 만들기」. 장근태(서원마을 회장) 발표.
- 민석·신경희. 2011. 「서울형 슬로시티 만들기: 서울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박대식·마상진·권인혜. 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전행정부. 2013. 「주민행복 마을공동체 발전사업 추진 매뉴얼」.
- 안전행정부. 2013. 「현대적 지역공동체 모델정립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2013. 「서울 마을이야기 1」.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과 거버넌스의 과제(유창복)」. “마을공동체 1년, 성과와 과제” 시민토론회.
-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및 예산 현황”. 서울시 내부 자료.
- 서울특별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울특별시. 2012. 「서울, 마을을 품다」.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2013년 주요업무계획」.

- 성주인·권인혜. 2014. “이탈리아 국외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성주인. 2013. “면 중심지 활성화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옥천군 안남면의 지역 공동체 활동 사례”. 농식품부 내부 세미나 자료.
- 성주인·권인혜. 2008. “충북 옥천군 출장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성주인·박문호. 2013.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업전망 2013(II)』, 809-838.
- 성주인·송미령·김영단·권인혜. 2011.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체계 개선방안 연구: 농어촌 계획 제도 정립방안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성주인·박대식·조미형·한영광. 201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 심층평가: 농어촌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지역발전 역량 강화 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민자혜. 2013. 「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박시현·이규찬·성주인. 2002. 「도농 통합형 농촌 정주기반 구축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성주인·권인혜. 2013.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례 분석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송미령·김광선·성주인·채종현·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현. 2014. “영국, 독일 국외출장보고서”. 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이영아. 2009. “지역역량 강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참여 요소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2), 261-272.
- 이재준·김도영·박상철. 2013.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연구 - 일본 나오시마와 수원시 행궁동 사례를 중심으로”. 『국토지리학회지』 제47권 1호, pp. 23~35.
- 이현선. 2013. 「도시공동체와 마을만들기 발표자료」.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정문수·김연금·박영석·정유진. 2012. “지역공동체 형성과 변화에서 커뮤니티디자인의 역할과 의미: 방화5·6단지 커뮤니티디자인을 사례로”. 서울연구원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연구지원사업.
- 정천섭·안대성·나영삼·정환열. 2013. “완주군 농정혁신 5년 성과 및 과제: 로컬푸드와 마을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
- 지역발전위원회.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전국사례발표 워크숍. 2007. “대구 삼덕동 마을 만들기 운동”. 김경민(대구YMCA 중부지회 관장) 발표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보완]」.
- 제주특별자치도. 2013. 「제주형 커뮤니티비즈니스마을사업 연도별 추진현황(’08~’12년)」.
- 제주특별자치도. 2012. 「제주의 마을을 품다: 서로 다른 꿈을 키워가는 열두 마을 이야기」.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주민조사.
- 행궁길발전위원회·수원KYC. 2010.08.30. 「불꺼져가는 문화재보호구역 행궁동 새로운 100년을 디자인하는 사람들」. 행궁동마을만들기 안산마을포럼 발표자료.

보도자료 및 기사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4.2.6. “사회서비스 제공 농촌 공동체 사례집 「농업·농촌에 희망을 담다」 발간”.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3.10.02. “농식품부, 효율성에 기초한 소통과 배려의 중장기 농정방향 제시”.
-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11.10.06. “농어촌 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농어촌 현장포럼’ 추진”.
-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3.2.4. “아이키우기, 동네안전 지키기, 일자리 등 생활현장의 문제 마을공동체로 풀어간다”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 2012. 마을르네상스 소식지 제2호.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10.15. “우리 지역 안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갑니다: 안행부, 10개 안심마을 시범사업 보고대회 가져”.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9.6. “우리 마을 안전은 우리가 책임진다: 안전행정부, 안심마을 시범지역 10개 읍·면·동 최종 선정”.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6.4. “마을안전·지역복지, 우리 손으로 만들어요”.
- 안전행정부 보도자료. 2013.5.17. “올해 안에 마을기업 1,200개로 늘어난다”.
-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2013.5.10. “어촌개발의 뉴패러다임, 주민역량강화로 시작한다”.
- 제주일보. 2014.1.26. 온라인기사. “동백씨로 연매출 1억3000만원, 동백마을로 초대합니다”.
- 서울신문. 2013.7.24. 온라인기사. “세월을 품은 책, 미래를 품은 골목”.
- 양평방송. 2014.2.18. 온라인기사. “서종주민이 만든 ‘한뼉공원’ 주민이 가꿔”.
- 헤럴드경제. 2011.12.6. 온라인기사. “첫 휴먼타운 서원마을 집값 ‘들썩’”.

웹사이트

-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보도자료(<http://www2.korea.kr/newsWeb/m/reportList.do>)
- 대한민국 WEEKLY공감(<http://koreablog.korea.kr>)
- 부산시 보수동책방골목 웹사이트(<http://www.bosubook.com>)
- 부산시 Dynamic Busan 문화관광 웹사이트(<http://busantravel.net/>)
- 서울시 장수마을 웹사이트(<http://www.jangsumaeul.com>)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센터(<http://www.maeulcenter.or.kr/ml/index>)
- 수원시 칠보산 마을신문 카페(<http://cafe.daum.net/chilbonews>)
- 완주군 비비정마을 웹사이트(<http://www.bibijeongin.com/>)
- 양평군 농촌나드리(<http://www.ypnadri.com/>)
- 양평군 서종마을디자인운동본부 웹사이트(<http://www.sejongdesign.org/xe/>)
- 양평저널(<http://www.ypj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3>)
- 전라남도 행복마을 홈페이지(<http://www.happyvil.net/>)

전라북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제주도 동백마을 웹사이트(<http://www.jejudongbaektown.com>)

충청남도 충남넷(<http://www.chungnam.net/>)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http://korean.visitkorea.or.kr/>)

횡성희망신문(http://hs.chamhope.com/news/bbs/board.php?bo_table=hc_news&wr_id=315)

미국 메릴랜드주, Howard County(<http://www.howardcountymd.gov/Home.aspx>)